

제 13 호 / 2004 · 9 · 1



13

조정남 [®]편

교 양 사 회

민족연구

2004. 9. 1 통권 13호

본 지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를 중심적인 연구 과제로 하고 있는 한국민족연구원(원장 : 조정남)의 기관지로, 현대의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모색하는 논의의 광장이다.

특 집

‘동북공정’의 해부

제 1 부 동북공정의 전개

‘동북공정’의 발전과정과 정치적 성격 나영주 6

제 2 부 동북공정의 논리

“한민족은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도용해 갔다” / 光明日報 33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정권” 李大龍 50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개방과 변영의 6년” 孫進己 54

周恩来总理谈中朝关系 <外事工作通报> 85

제 3 부 동북공정의 분석

민족정책과 정치전략에 의한 역사왜곡 강권찬 98

제 4 부 동북공정에 대한 반응

역사적 진실 왜곡에 대한 비판과 반성 김인성 123

논 단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분석 江振昌 180

포커스

구 유고제국에 날뛰는 민족주의의 그림자 잔 아르노 디란스 ... 189

민족학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정책 이유신 192

국제적 양자결연을 위한 다국간 룰을 강화하라 아산 카프스타인 208

민족일지 송중호 215

(2004. 2 ~ 2004. 7)

특집 '동북공정'의 해부

제 1 부 - 동북공정의 전개

“동북공정”의 발전과정과 정치적 성격 - 나영주

제 2 부 - 동북공정의 논리

“한민족은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도용해 갔다” / 光明日報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정권 - 李大龍

중국 고구려사연구 “개방과 번영의 6년” - 孫進己

周恩来总理谈中朝关系 <外事工作通報>

제 3 부 - 동북공정의 분석

민족정책과 정치전략에 의한 역사왜곡 - 강권찬

제 4 부 - 동북공정에 대한 반응

역사적 진실 왜곡에 대한 비판과 반성 - 김인성





‘동북공정’의 발전 과정과 정치적 성격

“새역사 만들기”냐, ‘새로운 역사 왜곡’ 인가?

나 영 주 (고려대 강사, 중국정치)
< yz08@yahoo.co.kr >



동북공정의 논란을 경험으로 삼아
우리는 주변국의 상황변화와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를 여러 차원에서
새삼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머리말

지난 2004년 7월 1일 중국 쑤저우(蘇州)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WHC)는 중국과 북한이 개별 신청한 고구려의 유산을 세계의 유산으로 비준하였다. 등재된 고구려 유산의 목록은 북한의 경우 강서대묘 등 벽화고분 16기를 포함해 평양, 평안남도 남포, 황해도 등 5개 지역 고분 63기를 묶은 고구려 고분군이 주종이었다. 중국의 경우는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 장군총, 무용총, 염모총(冉牟塚) 등 고구려 초기 도읍터와 무덤 등 43곳을 망라한 고구려의 수도와 왕릉, 그리고 귀족의 무덤 등이었다. 우리 역사로 알고 있는 고구려의 유적들

이 각기 북한과 중국이라는 실제국가의 이름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등재형식에서 북한은 단순 고분군인 반면에 중국은 무덤을 포함한 수도 관련 왕성등 도읍지 공간 개념을 중심으로 신청했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쪽 고구려 유산이 북한쪽 유적을 개념상 포괄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위한 기본틀이 국제적으로 공인된 것이라는 우려감도 논의되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 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금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정권이었음을 명백히 하였다. 특히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팔괘도는 고구려 문화가 중국의 증원 문화와 일맥상 통한 중요한 고고학적 증거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¹⁾

북한 소재의 고구려 유적의 세계 유산 등록은 등재과정에서 약간의 우여곡절이 없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²⁾, 중국은 이른바 국가적 사업인 “동북공정”(東北工程)의 일환으로 이런 작업들을 신속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초중등의 국정 역사교과서를 통해 고구려의 역사가 분명 우리의 귀중하고 대륙적 기상을 지닌 웅혼한 역사라고 배운 것은 반쪽 진실이거나 거짓으로 내몰릴 참이다. 이제 고구려는 중국 변방의 소수민족이 세운 그다지 별 볼일 없는 나라였으며 중국 증원의 변방에서 무수하게 명멸해간 한낱 지방정권에 불과한 것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값싼 민족주의적 감정을 불러들여 완강하게 고구려 역사를 빼앗겼음을 성토했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렇다고 분명 우리 것인데,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것인데, 분명 그렇게 알고 있는데, 눈앞에서 당연한 우리 것이 없어지는 것을 그냥 바라보고 있자니 숙명적으로 한반도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처지에 후손으로서 그렇고,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국민으로서도 그렇고, 시민으로서도 할 짓이 못된다.³⁾ 그렇다고 중국과 일전을 불사하겠다고, 그래서 잃어버린 만주 광야를 회복해야 한다고 날뛰자니 평화를 애호하는 점잖은 성격과 문화를 가진 민족의 처지에서도 그렇고, 냉혹한 국제관계의 현실적인 이익계산상으로도 몸을 함부로 놀리기가 쉽지 않다. 한반도에 불어 닥친 모든 국제적 사건들이 그 명운으로 볼 때 비참한 것이 많았지만 동북공정 역시 쉽게 생각하고 쉽게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 워낙 중국이 용의주도하게 준비해왔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역사전쟁”, “제2의 나당전쟁”으로까지 일컬어지고 있는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에 관한 최근 중국의 일련의 움직임은 “동북공정”이란 이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 글은 중국이 수행하고 있는 “동북공정”이 어떤 목적의 사업이며 그것의 발전과

1) '專家首次透露在高句麗古墓壁畫中發現中國最早的八卦圖實圖' http://js.xinhuanet.com/zhuanti/2004-07/02/content_2421646.htm(검색일:2004.7.3)

2) 2002년 등재를 먼저 신청했던 북한 '고구려 고분군'의 경우 2003년 총회에서 심의되었으나, 중국의 뒤늦은 등재 신청과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의 부정적 권고 등으로 등재가 보류되었다.

3) 여기서 인간의 존재 조건, 소유욕에 대한 생득성 여부, 진리의 인식과 같은 철학적 문제는 일단 차치해 두자.

정과 중심 내용에 대한 개괄을 통해 동북공정의 성격과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동북공정이 현상적으로는 고구려사 왜곡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과거 역사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의 궁극적 목표는 한중간의 미래의 역사문제에서 정통성과 연고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과 의도를 가진 문제라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동북공정의 개념과 실제

먼저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 알고 있는 “동북공정”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 “동북”은 통칭 동북 3성, 즉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재중동포인 조선족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조선조의 백성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고향을 떠나 농지를 개간하여 정착한 곳이며, 일제 치하 재외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지역이다. 국정교과와 역사책에서 배운 대로 한 때 고구려의 영토이기도 한 곳이다. “공정”(工程)은 사전적 의미로 “공사”(工事)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렇다면 동북공정은 사전적으로는 동북 지역을 지역적 근거로 하거나 동북 지역과 관련이 있는 공사 혹은 사업이라는 다소 건조한 일차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의 정식 명칭은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로서 학술사업이다. 학술 사업 초기에는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경사지연구중심이 주관하여 실시된 중국의 변경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사업으로 소박하게 출발하였다가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발본적인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대책과 예측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와 성격이 확장되었다 볼 수 있다. 즉 “동북공정”은 단순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동북지방의 진흥책과 연계된 다차원적이고 다목적인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것이지만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등장하면서 덩샤오핑(鄧小平)과 장쩌민(江澤民) 시대의 연해안 중심의 불균등 발전 전략에서 낙후 지역의 균형발전 전략이 강조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국가적 관심도 서부개발과 동북지방의 발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지난 2002년 11월 중국공산당 16대 대회 보고서에서 동북 지역의 발전전략이 제기되었고, 2003년 3월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정부공작보고회에서 이런 정책이 정식으로 제안되었다.⁴⁾

동북공정의 정치적 성격의 목적은 동북공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섯 가지 의식을 강화할 것이 요구되는 대목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⁵⁾ 첫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 정치의

4) <http://www.eastasianstudies.org/technote/read.cgi?board> (검색일: 2004. 6. 28)

식(政治意識)이다. 즉 동북공정의 직접 목표는 국가의 오랜 기간의 통치와 안녕을 위한 것이고,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변강지역의 안정이라는 대목표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대세를 파악하는 의식(全局意識)이다. 동북공정은 동북변강이 연구 주체가 되지만 동북변강은 중국의 변강의 일부분이며 동시에 통일 다민족 국가의 불가분의 구성 부분이라는 것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동북변강지역은 동북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북변강지역의 전략 구조에 대한 연구는 현재 동북아 전체 전략 구조의 연구와 동떨어질 수 없다. 더 나아가 동북아 전략 구조의 연구는 세계 구조 및 21세기 전체 세계 구조의 파악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통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른바 전체 정세를 고려하는 의식은 통일다민족국가의 전체 형세를 고려하는 것이며 세계의 전체 형세를 고려하는 의식을 말한다. 셋째는 책임의식이다. 동북공정에 참가하는 사회과학자들은 마땅히 국가, 인민, 역사에 책임을 진다는 사명감을 지님으로써, 엄격하게 정치적 실용주의를 배격하고 비과학적 연구를 근절해야 한다. 넷째는 일류의식을 갖는 것이다. 동북공정의 연구성과는 중국정부의 정책결정에 자문을 제공하고 동시에 후세에 변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연구 성과는 시간상의 검증은 통과해야 할뿐 아니라 학술논쟁의 시험도 통과해야 한다. 다섯째는 성실과 신용의 의식을 말한다. 동북공정의 연구항목을 책임지는 연구자들은 “자율”과 “성실”의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과제의 책임을 맡은 연구의 요구에 따라 질과 양적 측면에서 연구를 책임 보장하고 제 때에 책임을 완수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의식 강화 내용 중에서 연구자의 소명을 강조하는 세 가지의 의식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의식은 이 동북공정이 어떤 맥락에 놓여 있는 사업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정치의식의 강화인데, 변강지역의 장기간의 안녕과 통치에 대한 고려로서 시작된 동북공정이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통일과 민족의 단결, 변강지역의 안정이라는 정치적 목적에서 기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과 사실을 중시하는 학술적 사업의 기본이 이러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해 처음부터 왜곡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강조되고 있는 이른바 전체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와 정치적 중요성이 동북공정 사업에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즉 통일다민족 국가를 이루고 있는 중국에서 동북공정 사업이 갖는 전략적 중요성과 가치가 고려되어야 하며, 동북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 형세의 전반적 변화까지도 이 사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 있을지는 몰라도 동북아의 핵심지역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제 세력 구조의 변화, 즉 한미동맹 뿐만 아니라 남북한의 통합, 미

5) <http://www.chinabo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24>(검색일:2004.7.2)

국과 일본과의 제 관계의 변화, 극동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이해관계 등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맥락에서 세계의 극 구조(polar structure) 및 동북아 형세의 변화와 이에 따른 동북지역의 정치적, 전략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가 내재한 작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정치적,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입장과 위상 및 역사적 사실을 합리화하거나 방어하는 성격의 연구 작업이 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예측 가능한 것이다.

모든 학술적 작업은 본래는 국가와 민족의 이해관계를 떠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측면에서 국가와 민족을 떠난 학술작업이 거의 없다는 것도 사실이다. 동북공정의 사업이 비록 “학술문제의 정치화”를 반대하고 있지만⁶⁾ 이미 동북공정은 그 사업의 시작에서부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은 동북공정에 소요되는 예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동북공정”의 예산은 국내에 보도되는 액수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지만 5년간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억 위안(元, 한국 화폐로 환산할 경우 약 2조 원가량 됨) 정도라고 한다.⁷⁾ 단순한 연구와 조사의 비용으로는 상당히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예산은 연구와 조사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의 새로운 유적의 발굴과 정비, 주민들의 소개에 따른 부대비용 등까지 포함되는 비용일 것이다.⁸⁾ 한편 2004년 고구려 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이후 중국당국은 현지 고구려 유적 관광 안내원들에게 고구려 정권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보수교육을 시행하였다. 개편되는 중국의 역사 교과서에도 이런 일련의 “역사 만들기” 작업에서 획득한 성과물들이 삽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미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을 소개하는 글에는 “고구려” 글자를 지워버렸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작업의 수준을 넘는 것이다. 비록 학술작업으로 시작했더라도 이런 학술적 작업의 성과물을 근거로 정치적, 행정적

6) 동북공정의 전문가 위원회는 동북공정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다섯 가지의 관계’를 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 번째가 정치와 학술간의 관계이고, 두 번째가 연구와 정책결정간의 관계, 세 번째가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와의 관계, 넷째가 개인연구와 공동연구와의 관계, 다섯째가 사업의 질적 제고와 사업 결과의 대중 보급 문제와의 관계이다.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24\(검색일:2004.7.2\)](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24(검색일:2004.7.2))

7) 『중앙일보』, 2003. 7. 14: “동북공정”의 경비관리방법(經費管理辦法) 제2조에 의하면 동북공정의 경비의 재원은 재정부 특별항목 경비, 중국사회과학원 중대과제 경비 및 하이룽장, 지린, 랴오닝성위원회가 공동 조달하는 특별항목경비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다. 5년의 사업기간 중 재정부가 총 1000만 위안(元), 사회과학원이 125만 위안, 동북 삼성위가 공동 조달하는 특별항목경비가 375만 위안으로 총 1500만 위안(약 22억 5000만원)을 예산으로 명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비는 말 그대로 학술적 사업만의 경비인 것이며, 여타 다른 비용은 계상하지 않은 것이다.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經費管理辦法”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2100.htm?siteid=1&lmid=2100\(검색일:2004.8.1\)](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2100.htm?siteid=1&lmid=2100(검색일:2004.8.1))

8) 고구려 유적이 집중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지안시의 경우 고구려 유적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2003년 여름부터 2004년까지 1년여 동안 유적지 정비와 주변 정리 작업으로 중앙정부의 지원 예산이 2억 위안(한화 300억원)이 쓰여졌다고 한다. 『한겨레』, 2004. 7. 20.

9) “‘동북공정’의 과제 관리 방법”의 제3조는 이런 동북공정이 과제연구(즉 학술적 연구)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에 대한 자료수집 및 정리와 관련 자료의 번역, 관련 정보의 홈페이지 플랫폼 구축(信息庫網頁平台), 영화와 텔레비전을 통한 성과의 과학적 보급(科普影視)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管理辦法”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2100.htm?siteid=1&lmid=2100\(검색일:2004.8.1\)](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2100.htm?siteid=1&lmid=2100(검색일:2004.8.1))

수단을 동원하여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역사 왜곡과 날조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요컨대 “동북공정”은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고대사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사업의 명칭이지만 그 진행과 전개 과정은 중국의 패권주의적 중화관과 팽창주의적 민족주의를 엿볼 수 있는 중국 동북 지역의 발전전략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에서 ‘동북은 통칭 동북 3성, 즉 랴오닝성(遼寧省), 지린성(吉林省), 헤이룽장성(黑龍江省)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며, 한 때 고구려의 영토이기도 한 곳이다. ‘공정’(工程)은 사전적 의미로 ‘공사’(工事)라는 의미를 갖는다.

동북공정의 발전 과정

동북공정의 추진 배경

역사는 현재의 측면에서 재발견되거나 재해석된다. 다차원의 정책적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는 “동북공정”은 처음에는 점잖게 학술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이런 동북공정을 배태한 여러 배경을 두고 많은 추측과 분석을 해볼 수 있겠지만 본 글에서는 먼저 중국 측이 주장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필요성, 즉 배경을 그들의 자료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¹⁰⁾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변강지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조밀하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여기는 또한 전략적 위상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신중국 건설 이전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동북지역의 역사가 상당정도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다. 신중국 건설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따라 많은 학술적 성과가 있어 200여종의 학술서적이 발간되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제환경에서 상당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변경지역의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동북지역에서는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일본, 미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북한, 한국, 몽고 등과 같은 국가들과 쌍무적, 다변적 관계에서 큰 변화가 발생했으며 또한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 더군다나 근래 10년 사이 동북아 정치, 경제적 위상이 나날이 상승하였으며 동북아 지역이 세계의 주목받는 핵심지역이 되었다. 중국의 동북변강지구는 동북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형세하에서 일부국가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방면의 연구 사실을 왜곡하였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몇몇 정객들은 공개적으로 오류를 선전하고

10) 중국 변경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 “동북공정”란의 “동북공정의 간략한 소개”(東北工程簡介)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hinabo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24>(검색일:2004.7.2)

혼란을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 방법이 무수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의 학술연구에 일련의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었다. 따라서 동북변강지역의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 변강지역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사회과학의 신성한 사명이다. 즉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의 학술연구를 강화하고 동북변강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것은 도의상 거절할 수 없는(義不容辭) 사회과학의 책무이다.

동북공정에 관한 위의 언급들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한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그들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동북변강지역은 제국주의와의 투쟁시기에 상당정도 그 역사적 사실에서 왜곡이 있었다. 그러나 신중국 성립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이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무수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그럼에도 점차적으로 동북지역에 대한 관심과 전략적 위상이 중요해짐에 따라 이 지역에 대한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었다. 동북지역의 전략적 중요성과 더불어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여러 도전을 제압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중요한 역할이요 책무라는 것이다.

완곡하게 언급한 동북지역에 대한 여러 국가들과의 관계 변화와 불순한 정치적 의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사실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고구려와 발해의 유적지에 대한 현지 관광이 가능해지면서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이 현지 여행 중에 “고토수복, 만주회복” 등의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구호를 외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행위는 다민족 통일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곤혹스러운 것일 수도 있다.¹¹⁾ 그 중에서도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 것은 1990년대 중후반 대규모 탈북사태로 발생한 중국 동북지역의 소요 현상과 관련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이 분란 예상 지역으로 예측되어질 수 있는 요인과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은 첫째, 조선족 자치구가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조선족은 중국의 55개 소수 민족 중에서 배후에 그들의 모국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조선족들은 “코리아안 드림”에 들떠 있는 상황이었다. 한반도에서 정세변화가 있을 경우 이들이 법적 조국인 중국보다는 모국인 한국에 더 애정과 애착을 보이는 여러 상황을 가정해 볼 수도 있으며, 한반도에서 정세변화가 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둘째, 북한의 경제난과 정정 불안으로 인한 대규모 탈북난민들의 유입이다. 이들은 중국의 조선족과 연계되어 남한으로의 탈출을 시도함으로써 동북지역의 불안과 남한-북한-중국의 우호적 관계에 파열음을 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셋째, 역사적으로 아직

11) 중국을 경유하여 백두산 천지를 관광하는 경우 중국 당국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극기를 소지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여 태극기를 휴대하거나 게양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시키고 있다.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한반도와의 변경 문제가 남아있다. 이른바 20세기 초 일본과의 간도협약으로 대충 처리된 한반도와의 국경분쟁은 언젠가는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쉽게 진화될 수 없는 분쟁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중장기적 측면의 예상이지만 김정일 혹은 포스트 김정일의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한반도의 분란 상황과 정세의 변화 및 남북한의 통일에 대비한 정치적 역사적 정지작업의 필요성 때문이다.

따라서 동북공정의 현실적 배경은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과 그에 연접한 동북지역, 특히 조선족 자치주에 미치는 파장과 같은 중국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해서 기획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고구려사 왜곡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현실적으로 동북지역의 소요와 혼란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민족 분열과 국경분쟁에 대비하여 역사적 연고권과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지작업에 다름 아니다. 이런 이유로 동북공정은 역사적 차원의 쟁점을 넘어 정치적 성격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중국으로서는 새로운 역사 만들기라고 볼 수 있으나, 한국 쪽 입장에서는 엄연한 역사적 겁탈이 되는 셈이다.

동북공정의 추진 과정

1997년 북-중 변경지역의 현지 조사

앞서 언급한 동북공정의 배경의 실마리가 되는 연구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연구소 인 중국변경사연구중심에서 1997년 구체적으로 실시되었다. 사실 중국의 변강사지의 연구는 역사적 연구이기도 하면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경지역에 대한 체계적 연구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즉 영토적으로 분쟁지역이거나 분쟁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통하여 그 영역에 대한 정통성을 선점하거나 연고권이 중국에게 있다고 하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단적인 예가 변경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명백히 언급되어 있는 분쟁지역초점(熱點聚焦)의 소개이다. 변강사지 중심에서 문제로 언급하고 있는 지역은 고구려문제, 탕누우리아하이(唐努烏梁海)¹²⁾, 동돌궐문제(東突問題)¹³⁾, 난샤군도문제(南沙群島問題)¹⁴⁾, 디아오위따오문제(釣魚島問題)¹⁵⁾를 언급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그들의 영토로 점유하고 있거나 점유하고 싶어하는 분쟁지역들이다. 이 중 고구려 문제는 동북공정의 주요한 연구대

12) 현 러시아연방의 투바(Tuva)자치 공화국 지역을 말한다.

13) 중국 신장웨이우얼(新疆維吾爾)자치주 남서쪽으로 타림분지 지역을 말한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인접하는 지역이다. 1759년 청에 복속된 후 신장(新疆) 혹은 서역(西域)신장 지역으로 불리는 곳으로 현 중국 정부가 이 지역의 민족주의 발흥에 노심조사하고 있는 지역이다.

14)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과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스프라틀리(Spratly)제도라고도 불린다. 대량의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일본, 대만 등과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는 지역으로 일본명으로 센카쿠(尖閣, せんかく) 열도라 불린다.

상의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 고구려 문제는 과거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혹은 미래에 불거질 정치적 문제에 대한 역사적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극히 현재적 문제라는 것이다. 중국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게 만든 배경에는 1990년대 후반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증가로 인한 북한의 정세 불안이 주요한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동북공정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변강사지중심에서 수행하여 작성한 1998년의 “한반도형세의 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정에 미치는 충격”(朝鮮半島形勢的變化對東北地區穩定的衝擊)이라는 보고서 작성은 그 사정의 일단을 엿보게 한다.

1990년대 “당대중국의 변강 지역에 관한 조사연구 시리즈”(當代中國邊疆系列調研)를 수행하던¹⁶⁾ 변강사지연구중심은 중국 동북지역의 연구 주제를 한반도의 형세 변화가 동북지역, 특히 지린성 엔벤(延邊)자치주와 랴오닝성 단둥(丹東) 지구의 안정에 미치는 충격에 주목하였다. 연구할 과제로는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한반도의 동란 상황과 그 난민들의 유입상황, 둘째, 현재 북한(조선)과 지린성의 국경 현상 등이었다. 주제의 선정에서 보듯이 1997년 당시 북한의 대규모 식량난으로 인한 탈북자들의 증가와 맞물려 그것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주어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위의 연구를 위해 변강사지연구중심은 1997년 하반기부터 두 가지 연구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첫째가 중국공안부 변방국과 동북지역의 유관기관의 지시를 받아 지린성 북한-중국의 변경지역을 조사 연구하게 된다. 두 번째는 지린성 공문서보관소(檔案館)에서 소장하고 있던 청(淸)대의 조선과 중국의 관계에 관한 문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것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1997년 7월 구체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변경지역에 대한 현지 조사연구를 실시하였고, 지린성 공문서 보관소에서 소장하고 있는 조선과 중국 관계에 대한 문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였다. 1997년 당시 동북지역에 대한 초기 조사연구 작업은 지린성, 지린시, 지안시, 엔벤주, 훈춘(琿春)시 관계부처의 도움을 받았을 뿐 아니라, 변강사지연구중심을 비롯하여 지린성 사회과학원역사연구소, 동뽤이사범대학동북아연구센터, 지린사범대학교적(古籍)연구소, 중국인민대학 청사(淸史)연구소 등 학술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위의 학술기관들의 주관하에 “조선한문고적정리와 연구”(朝鮮漢文古籍整理與研究)라는 관련 학술회의를 1997년 7월에 지린시에서 개최하기도 하였다.

동북공작기구(東北工作站)의 결성

이런 조사와 예비적 작업 이후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1998년 3월 12일 북한의 전시동

16)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소개 사이트 참조 http://www.cass.net.cn/chinese/s32_bjzx/new_page_2.htm(검색일:2004.7.2)

원상태로의 진입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됨으로써¹⁷⁾ 조사연구의 내용을 확대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이 중앙관계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당시 보고서의 내용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민감한 현안을 다루고 있었고, 역사적 연구뿐만 아니라 한반도 현상의 변화추이까지를 조사 연구하는 것이었다. 당시 조사연구의 증점은 첫째, 한반도 정세의 추이 연구, 둘째, 중국과 한반도 사이의 역사상 논쟁이 되는 문제 - 예를 들어 기자조선, 위씨 조선, 고구려, 발해, 중국과 한반도 국경의 형성과 국경교섭, 19세기 후반 조선 난민들의 중국 입국, 중국 조선족의 형성 등의 역사, 셋째, 당면하고 있는 동북지구의 마약(毒品) 문제, 종교문제, 민족관계문제 등 쟁점 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넷째, 현재 직면하고 북한 난민들의 출현 가능성과 대책 등이었다.

동북지역은 중국의 중요한 변강지역으로서 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조밀하며 문화가 발달한 지역이다. 여기는 또한 전략적 위상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신 중국 건설 이전 제국주의의 침탈로 인해 동북지역의 역사적 기록이 상당정도 왜곡된 점이 없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초기 변강사지연구중심이 계획했던 동북변강지역의 연구의 범위와 역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변강사지연구중심 단독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역량 부족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변강사지연구중심은 동북지역에 대한 연구를 자체 연구 인력으로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외부의 연구 인력에 연구 과제를 주는 개방적 성격의 연구작업으로 전환하였으며 동북지역의 연구에 관계하는 연구진들의 협조를 얻어내기로 하였다. 변강사지연구중심은 동북지역의 과학적 연구조사를 위해 1996년 10월 “중국변강지구의 역사와 사회연구를 위한 운남공작 기구”(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雲南工作站)을 운영한 경험을 살려 1999년 “중국 변강 지구의 역사와 사회 연구를 위한 동북공작 기구”(中國邊疆地區歷史與社會研究東北工作站)을 조직하여 연구의 시급성에 부응하는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동북공작기구는 이후 “동북공정”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조직으로 이해된다. 그 조직은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의 변강사지연구중심과는 또 다른 인적 구성과 연구 소재지를 가지고 운영되었다.¹⁸⁾ 이후 동북공작기구는 2000년 5월 창춘(長春)시 동베이 사범대학에서 동북공작기구의 공작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산당 지린성위원회가 연합 주관하여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세미나”(東北邊疆歷史與現狀研究工作座談會)를 창춘시에서 개최하였다.

17)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그들의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 1998년 3월 12일 북한의 전시동원상태로의 진입에 전세계가 충격(震動)을 받았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의 전시동원령은 남한의 을지훈련과 비슷한 통상적으로 실시된 전시전환 훈련이었다. 『연합뉴스』, 1998. 3.13



▲ 중국사회과학원

2001년 창춘(長春)회의와 동북공정의 추진

2001년 6월의 이 회의는 그 규모에서 중앙 및 동북지역의 지방 당정 기관 및 학술단체들이 대부분 동원된 대규모 대회였다. 일단 참여조직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참여조직으로는 중국사회과학원, 중국공산당 지린성위원회, 중국공산당 랴오닝성위원회, 헤이룽장 성위원회 선전부, 국가문물국 등 관련부문의 지도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으며,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 민족연구소, 고고학연구소, 아태연

구소, 지린, 랴오닝, 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문화관, 박물관, 고고학 및 민족연구부문, 지린대학, 동뻬이 사범대학, 엔벤 대학, 뻬이화(北華)대학, 통화(通化)사범대학 등의 지도인사 및 학자들이 참여한 규모있는 학술회의였다.

회의의 중심주제는 동북변강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연구를 어떻게 진일보 심화시킬 것인가였다. 회의는 동북지역에 관한 연구가 신중국건설 이후, 특히 개혁개방 이후 상당정도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막 걸음을 걷기 시작한 단계에 불과하며, 연구성과나 연구역량에서 상대적으로 박약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다. 기존의 연구를 인정하는 동시에 동북지역의 연구에서의 이론적 문제에서의 결함이라든가, 연구역량의 부족, 연구비의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거론되었다.¹⁹⁾ 이러한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마땅히 신속하게 “동북변경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 연구 프로젝트”(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시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로써 동북 변경의 역사와 현상연구를 학술화하고 규범화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결합하여 3-5년 내에 비교적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완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²⁰⁾

이러한 일련의 논의와 과정을 거쳐 2002년 2월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3성은 중앙의

18) 그 인적 구성을 살펴보면 변강사지연구중심에 관여하는 연구요원들 뿐만 아니라 동북지역 주요 대학의 관련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즉, 동북공작기구의 고문으로는 오랫동안 중국 변강사지에 관한 연구를 해온 마다쥡(馬大正)이 맡고 있으며 공작기구의 소장으로는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리성(厲聲, 이후 변강사지연구중심 주임)이 맡았다. 부소장이나 비서장 등 연구기구를 이끌어가는 운영위원은 동뻬이 사범대학 역사학과 교수들인 리우후유성(劉厚生), 쑤치린(孫啓林), 왕정린(王景林), 리며산(李德山) 등이 참여하고 있다. 동북공작기구의 연구소재지 역시 동뻬이 사범대학 역사학과에서 맡았다. http://www.cass.net.cn/chinese/s32_bjzx/new_page_66.htm (검색일:2004.7.2)

19) 이 회의에서 심도있게 논의된 것은 아니려니하게도 지금 중국 동북공정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과 유사한 것이었다. 즉 중국도 본격적인 동북공정 시작 전에 연구비, 연구인력의 부족 등을 상당정도 체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준을 얻어 대형 학술과제인 이른바 “동북공정”(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을 연합 조직하였다. “동북공정”은 5년 기한으로 설정되었으며, 학과, 지역, 부문을 뛰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²¹⁾

동북공정 추진 기구와 구성원

“동북공정”이 한국에 알려질 초기에 그 사업이 단순히 학술적 차원의 문제제기나 중국 일부 인사들에 의한 극우적 역사해석이 아니라 중국의 중앙정부가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 작업을 수행하는 단위가 다름 아닌 중국 사회과학원이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중국 사회과학원은 중국 국가가 직접 관장하는, 중국의 주요 국내외적인 사회 현안과 문제들을 연구하는 중앙 학술연구기관이다.²²⁾ 중국이 경제면에서 사회주의 체제와 작동방식을 탈각하려는 노력을 상당정도 기울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국가조직이나 행정조직에서 국가주도의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현저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체제의 메카니즘으로 볼 때 대규모 사업의 추진과 예산의 집행에서 국가의 관여와 영향력을 발견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더군다나 앞서 설명한 동북공정의 국가적 관심과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측면에서든 국가의 공식적 관여를 부정할 수 없다. 동북공정이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은 그들 스스로도 밝히고 있다.²³⁾

동북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²⁴⁾은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직속의 개방성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개방성 연구기관이라 함은 변강사지연구중심 내의 자체인력도 있지만 자체 연구인력만이 관련 주제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과제가 주어질 때 외부의 공모를 통해서 해당 주제에 대한 연구를 협동으로 진행한다는 의미이다. 1983년에 창건되어 왕두지엔(翁獨健), 뤼이란(呂一燃), 마다정(馬大正)이 주임을 지냈으며 2001년부터는 리성(厲聲)이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주임을 맡고 있다.²⁵⁾ 변강사지중심의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분류된다. 기초연구는 근대의 변계(邊界)연구, 고대의 강역연

20) http://www.cass.net.cn/chinese/s32_bjzx/new_page_154.htm (검색일:2004.7.2)

21)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24> (검색일:2004.7.2)

22) 중국 사회과학원은 국무원직속사업단위(國務院直屬事業單位)이다. 잘 알려지지다시피 문화혁명 직후인 1977년 5월에 중국과학원철학사회과학부를 기초하여 건립되었다. 초기 원장은 중국 공산당내 이론가인 후치아오무(胡喬木)였으며 이후 마홍(馬洪), 후성(胡繩), 리티에잉(李鐵映)이 원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천쿠이위안(陳奎元)이 원장을 맡고 있다. 현재 중국 사회과학원은 31개의 연구소와 45개의 연구센터(研究中心), 120개의 중점학문분과를 가진 명실공히 문과계통의 중국의 국책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23) 변강사지연구중심에서 소개한 동북공정의 소개에서도 이 부분은 명백히 언급되어있다. 즉 ‘동북공정은 ‘중앙의 비준을 받아’(經中央批准)...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다. 여기서의 중앙은 통상적으로 당중앙, 즉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다.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4.htm?siteid=1&lmid=24> (검색일:2004.7.2)

24) 굳이 우리말로 옮기자면 ‘중국 국경의 역사와 지리 연구센터’ 정도 될 것이나 이 글에서는 중국어 그대로 학술하여 변강사지연구중심이라고 하겠다.

구 및 중국변강연구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 근대의 변계의 변천, 중국통일 다민족 국가의 형성과 발전의 규율, 역사상 변경지역 정책의 경험과 교훈 및 중국변경연구의 역사적 유산을 중점 연구함으로써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응용연구는 당대중국변강지구의 쟁점문제와 중점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하는 것이다.²⁶⁾

한편 동북공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성원들을 살펴보면 이 사업이 얼마나 국가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들여다 보면 몇 가지 특징을 추론할 수 있다. 첫째, 중앙 정부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공산당 정치국위원과 중앙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업의 국가적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동북공정의 고문으로 자리하고 있는 리티에잉(李鐵英)²⁷⁾의 경우 권력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내 이론가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시양후아이청(項懷誠)²⁸⁾은 재정부장을 역임한 중앙의 대표적 관료이다. 동북공정 영도소조의 조장을 맡고 있는 왕뤄린(王洛林)²⁹⁾은 학자출신으로 현 사회과학원 부원장을 맡고 있는 학계의 실력자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앙과 동북공정의 해당 지방인 동북 삼성의 조직적, 행정적 연계를 파악할 수 있다. 동북 삼성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의 부서기나 부성장급 인사들이 공정에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에 대해

25) 馬大正(1938-): 상하이 출생으로 산둥(山東)대학 역사과를 졸업. 현 중국사회과학원학술위원회위원, 중국사회과학원변강사지연구중심학술위원회주임 및 연구원, 박사생 지도교수. 변강지역을 연구하는 신장발전연구중심(中國社會科學院新疆發展研究中心) 주임과 윈난공작기구(雲南工作站) 소장을 겸임하고 있다. 중국 변경사지 연구의 일인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변경사지 연구의 핵심인물이다.; 厲聲(1949-): 베이징 출생으로 시베이(西北)대학에서 수학. 신장(新疆)대학 역사학과 교수 역임. 현 중국사회과학원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주임, 연구원, 신장발전연구중심(中國社會科學院新疆發展研究中心)부주임, 동북공작기구소장(東北工作站站長) 신장공작기구소장(新疆工作站站長)을 역임. 신장(新疆)연구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의 구성원들에 대한 자세한 프로파일은 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15.htm?siteid=1&lmid=15>(검색일:2004.7.2)

26) 그런데 사회과학 홈페이지의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소개에는 기초연구를 주(主)로 하고 응용연구를 보조(輔)로 하는 방침을 견지한다라고 적시되어 있는 반면에 변강사지중심의 별도의 홈페이지에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다 같이 중시(並重)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변강사지연구중심의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과 변강사지연구중심의 입장에서 응용연구의 중시는 그만큼 이 변강사지연구중심이 당대의 변경지역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문제까지도 심도있게 연구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며, 당대 변경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예측의 필요성이 중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27) Li Tieying; 李鐵映 (1936-): 2003년 3월 10기 전인대 상위 부위원장; 1998년 3월이후 2002년까지 중공 중앙정치국 위원, 사회과학원장 역임; 湖南省 長沙(延安에서 출생); 태자당의 일원으로 중공 원로였던 李維漢(전 전인대 상무부위원장)과 金維映(鄧小平의 두 번째 부인) 사이에 태어남; 50-55년 북경사범대 제2부속중학 재학 시 중공 입당, 북경 러시아어 전문학교에서 러시아어 훈련; 55-61년 체코 Charles대학 물리학과 유학; 61년 귀국 후 대외비의 電子科技부문연구소에 배치 연구활동에 종사; 64-65. 상해외국어대에서 일어 학습; 문혁개시 후 부친의 홍색배경 보호를 받은 '자산계급 반동학술권위'로 몰려 비판; 72년 복권되어 국무원 제4기계공업부 1424실 부주임, 1447소 중공정사; 78년 요령성 심양시 과학기술위원회 부주임; 81년 중공 심양시 당위 상무서기, 정계 진출; 고급공정사 자격 취득; 82년 '제3세대'의 일원으로 중공 12기 중앙후보위원 당선; 83년 요령성 당위 서기(문교담당); 84-85년 海城縣 당위 서기를 겸임, 기층정치공작 경험; 85년 조자양의 추천으로 국무원 전자공업부장 겸 당위 서기 승진(전임부장 江澤民); 85년 중공 전국대표대회에서 중앙위원 보선; 87년 陳雲 등의 추천으로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승진(전임 趙紫陽); 87년 중공 13기 중앙위원 당선, 중앙정치국 위원; 88년 제7기 전인대에서 국무원 국무원, 국가교육위원회 주임 겸임(전임 李鵬),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사임(후임 李鵬); 92년 중공 14기 중앙위원 연임, 중앙정치국 위원 연임; 93년 제8기 전인대에서 국무원 국무원, 국가경제체제개혁위원회 주임 겸임; 97년 중공 15기 중앙정치국 위원 유임; 98년 제9기 전인대에서 사회과학원 원장 임명. http://www.eastasianstudies.org/main_who/who_1_2.html#1에서 인용(검색일:2004.7.25)

지방정부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북공정 예산의 조달에서도 재정부, 중국 사회과학원, 동북삼성이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이 단순한 학술적 사업이 아닌 국가적 성격의 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중국 중앙의 사회과학원 뿐만 아니라 지방의 사회과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 인사들이 총동원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총본산이 베이징의 사회과학원이며, 지방의 각 성 역시 사회과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의 구성인원을 볼 때 동북공정의 해당지역인 동북 3성의 사회과학원을 책임지고 있는 학계의 중요 인사들이 집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이 작업이 단순히 지방차원의 이해관계를 가진 학술 혹은 행정사업이 아닌 중앙의 직접적 계획과 후원 하에 동북지역의 각 성이 두루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중요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넷째, 학계와 정계 인사들이 골고루 포진함으로써 학술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는 중앙의 연구자들이나 지방 소재 대학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지만, 각 성의 행정을 담당하는 인사들 역시 주요 구성원으로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이 단순한 학술적 사업이 아님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³⁰⁾ 요컨대 중국 체제의 특성상 모든 조직과 사업에 국가의 영향력과 지도력이 미치는 않는 곳이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는데, “동북공정”의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인사들의 구성에서도 중앙 및 지방당정기관 뿐 아니라 중앙과 지방의 학술단체와 대학의 인사들이 다양하게 참여함으로써 이 사업이 중요한 중국의 국가적 사업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동북공작기구는 2000년 5월 창춘(長春)시 동뻬이 사범대학에서 동북공작기구의 공작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2001년 6월에는 중국사회과학원과 중국공산당 지린성위원회가 연합 주관하여 동북변강역사와 현상연구공작세미나를 창춘시에서 개최하였다.

28) Xiang Huaicheng: 項懷誠 (1939-): 16기 중앙위원, 1998년 9기 全人大에서 선임된 국무원 재정부장; 江蘇省 출신; 60년 산둥대학 증문과 졸업; 83년 중국공산당 입당; 86년 6월 재정부 부부장; 8월 국무원 삼협공정 이민시점 공작 영도소조 부조장, 중국 國債協會 회장 등 겸임, 11월 국무원 농업종합개발 영도소조 부조장 겸임; 93년 9월 국무원 주택제도개혁 영도소조 부조장; 94년 8월 국가세무총국 부국장, 재정부 부부장 사직; 97년 9월 중공 15기 중앙위원. http://www.eastasianstudies.org/main_whoswho_1_4.html#x에서 인용(검색일: 2004. 7. 25)

29) Wang Luolin: 王洛林 (1938-):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湖北省 출신; 55년 북경대학 경제과에서 공부; 78년 중국공산당에 입당; 아버지는 중국공산당의 초기 맑스주의 이론가인 왕아남(王亞南); 61년이후 하문대학 경제학과 조교수, 강사, 부교수, 학과부주임; 84년 하문대학 부교장; 87년 13기 당중앙위원회 선출; 91년 5월 하문대학 당위 서기; 92년 10월 14기 당중앙후보위원; 93년 8월 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 97년 9월 15기 중앙위원회 선출. http://www.eastasianstudies.org/main_whoswho_2_4.html에서 인용(검색일: 2004. 7. 25)

30) 이론적 작업과 더불어 행정적인 실무가 뒷받침된 작업이라는 단적인 평가는 국경도시이자 고구려 두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 위치한 지역인 지안(集安)시의 유적보호와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해 중국 행정당국이 취한 신속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위해 과거 허술한 유적보호와 관리부실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유적 부근 주민들의 신속한 소개와 더불어 불과 1년도 못되는 짧은 시간 내에 해당 유적 주변 정비 사업을 단행하였다.

동북공정의 추진 과제와 내용³²⁾

동북공정이 주요연구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는 것은 ① 고대중국강역이론연구 ② 동북지방사연구 ③ 동북민족사연구 ④ 고조선, 고구려, 발해, 발해사 연구 ⑤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사연구 ⑥ 중국동북변강 및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경제관계사연구 ⑦ 동북변강사회의 안정화 전략 연구 ⑧ 한반도의 형세변화 및 그것이 중국 동북 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등이다.³³⁾ 이 중에서 동북변강사회의 안정화 전략 연구와 한반도의 형세변화 및 그것이 중국 동북 변경의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과거사의 문제이기 보다는 당대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정치적 문제로서 응용연구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3년도의 동북공정의 학술적 작업의 지침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하나는 순수 연구와 관련된 주제이고 다른 하나는 공문서류 및 문헌정리와 번역물에 관한 것이다. 순수 연구는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로 분류되는데 기초연구는 동북변강 지역의 역사에 관한 이론적 연구를 의미하며 응용연구는 이런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지금 현실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예측을 전망하는 연구하고 할 수 있다. 즉 기초연구는 현실적 논리 개발을 강구하는 응용연구의 이론과 토대를 제공한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표-2와 표-4에서 보듯이 응용연구는 변강사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없었는데

〈표-1〉 동북공정(東北工程) 조직기구명단³¹⁾

고문(顧問)



리티에잉(李鐵峽)
中央政治局委員,
中國社科院院長 역임



상후이청(項懷誠)
中央委員, 財政部部長 역임

영도소조(領導小組)



조장(組長)
왕뤄린(王洛林)
中央委員,
中國社會科學院副院長

31) 2004. 7월 현재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사이트에 소개되어 있는 '동북공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요 구성원들의 면면들이다. 아마 동북공정이 출범했을 때의 구성원으로 현재에는 그 구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2105.htm?siteid=1&lmid=2105>(검색일:2004.7.2)

32) 중국 동북공정이 추진한 학술적 사업의 구체적 내용은 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일련의 학술적 사업의 연구지침과 외부공모의 구체적 현황과 실태가 아직 남아있어 그 내용을 주로 참조하였다. 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는 표4에서 동북공정의 학술적 사업으로 선정된 이들의 각각의 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엿보는 연구계획서도 〈項目紹介〉란에서 일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변강사지연구중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003년도의 연구지침에 제시되어 있으며 2004년도의 연구과제 지침역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http://www.chinaboderland.com/cn/company/page024.htm?siteid=1&lmid=24>(검색일:2004.7.2)



부조장(副組長)
양광홍(楊光洪)
黑龍江省委副書記



부조장(副組長)
치엔쩌주(全哲洙)
吉林省副省長



부조장(副組長)
자오신량(趙新良)
遼寧省副省長



부조장(副組長)
마따정(馬大正)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研究員



비서장(秘書長)
리성(厉聲)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主任,
研究員

전문가위원회
(專家委員會)



주임(主任)
마따정(馬大正)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研究員



부주임(副主任)
친치밍(秦其明)
中國社科院副秘書長, 研究員



부주임(副主任)
리성(厉聲)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主任,
研究員



리쯔쑤(李傳勛)
黑龍江大學俄羅斯研究所
所長, 研究員



웨이춘청(魏存成)
吉林大學文學院東北邊疆歷史與疆域
研究中心主任, 教授



후위하이(胡玉海)
遼寧大學歷史系主任, 教授

구성원(成員)



청총더(成崇德)
中國人民大學歷史研究所
所長, 教授



왕정(王正)
中國社科院科研局副局級學術秘書,
研究員



하오시위엔(郝時遠)
中國社科院民族所所長, 研究員



왕웨이(王巍)
中國社科院考古所副所長, 研究員



위페이(于沛)
中國社科院世界史所副所, 研究員



판춘리양(潘春良)
黑龍江省宣傳部副部長

부핑(步平)
黑龍江省社科院副院長, 研究員



공커(弓克)
吉林省宣傳部副部長



빙정(邢正)
吉林省社科院院長, 研究員



창웨이꾸어(常衛國)
遼寧省宣傳部副部長



자오쯔시양(趙子祥)
遼寧省社科院院長, 研究員



리우허우성(劉厚生)
中國邊疆歷史與社會研究
東北工作站副站長, 教授

**공정사무실구성원
(工程辦公室成員)**

주임(主任)
리국어창(李國強)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副主任, 研究二部主任, 研究員

리우웨이(劉爲)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研究一部 副研究員 綜合處副處長

리따루(李大路)
中國社科院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綜合處副處長

민감한 주제인 까닭에 공개를 꺼리고 있는 듯하다.

그런데 동북공정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의 대부분은 표-2의 내용에서 보듯이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강역이론연구>의 연구주제의 경우는 당장 고구려사의 해석에서 조공(朝貢)과 책봉(冊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과 관련된 이론적인 대주제이다. <동북지방사연구>의 여러 주제 중 발해 유적 조사와 '간도'

〈표-2〉 동북공정 2003년도 연구과제 지침³⁴⁾

연구계열

분 류	연구 과 제
1. 중국강역이론연구	중국 '국가', "강역", "변계"이론문제연구
	고대 중국의 주변 족속, 국가에 대한 관념과 근대적변화 연구
	* 봉건시기 번속, 속국, 조공제도 연구
2.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변강역사 형성과 변천연구
	* 동북변강영토, 경계교섭, 변계조약문제연구
	* 발해 유적 현상 조사연구
	* '간도' 문제연구
	근대이래 일본, 러시아의 중국동북역사지리의 조사 및 연구
3. 동북민족사연구	* 명청시기 동북 족속과 무리의 의식과 변강사회연구
	동북변강지구의 경계를 넘나들어 분포하는 민족연구
	* 고조선역사, 족속의 근원, 문화연구
4. 조선-중국관계사연구	* 조선반도의 고 문명기원
	조선반도국, 족속연구
5.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경제관계사연구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지구민족정책 비교연구
	* 중국-러시아 동쪽 끝 변계연혁 및 국경문제연구
6. 응용연구	생략

주: * 표시는 2003년 중점연구

공문서, 문헌정리 및 번역계열

분 류	연구 과 제
1. 공문서 문헌정리	관련 동북변강사료정리 및 연구
	동북변강역사지도수집, 정리 및 연구
	동북변강역사 사진, 그림수집 정리 및 연구
2. 중요저작 번역	일문 상관 중요저작과 자료번역
	서양어 상관 중요저작과 자료번역

34) “課題指南” <http://www.chinaboderland.com/cn/company/page027.htm?siteid=1&lmid=27>(검색일:2004.7.2)

〈표-3〉 동북공정 2004년도 연구과제 지침³⁵⁾

분 류	연구 과 제
1. 중국강역이론연구	중국 '국가', "강역", "변계" 이론문제연구
	고대 중국의 주변 족속, 국가에 대한 관념과 근대적변화 연구
	봉건시기 변속, 속국, 조공제도 연구
2.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변강역사 형성과 변천연구
	동북변강영토, 국경교섭, 변계조약문제연구
	역대동북변변강이민과 이민정책연구
3. 동북민족사연구	명청시기 동북족속과 무리의 의식 및 변강사회연구
	고조선역사, 족속의 근원, 문화연구
4. 조선-중국관계사연구	고구려 족속의 근원과 이동연구
	고구려 귀속문제연구
	발해족의 족속의 근원과 이동연구
	발해국 귀속문제연구
5. 조선-중국관계사 연구	조선반도 고문명의 기원
	조선반도의 국가, 족속연구
6.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경제관계사연구	중국동북변강과 러시아(소련) 원동지구 민족정책 비교연구

문제 연구의 경우는 발해사의 중국사 귀속 시비와 한중일 간에 명쾌하게 정리되지 않은 간도 땅에 관한 귀속 문제 등 한반도의 역사와 국경 문제에 참여하게 연계된 주제라고 할 것이다. 〈동북민족사연구〉의 여러 주제 중 고조선의 역사와 족속에 관한 연구는 기자 조선, 위만 조선의 역사적 사실 등과 관련되어 학술적 논란이 많은 연구이며, 고조선의 영토적 경계와 중국 중원과의 관계가 시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2004년의 경우는 이 연구를 분리하여 고구려와 발해의 연구 문제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다. 〈조선-중국 관계사 연구〉는 한반도의 문명의 기원과 족속의 유래를 주요 연구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한반도 역사의 주제와 문명의 기원을 연구 주제로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 중 북방의 역사를 배제하고 삼한과 신라로 이어지는 역사만을 인정함으로써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주제이다. 따라서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고 있는 러시아 원동지구에 대한 러시아의 민족정책 연구와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분쟁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한반도와 관련된 연구가 동북공정 연구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35)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Tmxxb101/card101.asp?tmid=271&lmid=51&siteid=1>. 2004년도 과제의 특징으로는 첫째, 연구과제에서 응용연구가 없이 기초연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둘째, 공문서 및 문헌 자료의 수집 정리와 관계 문헌의 번역 작업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연구과제들은 2003년의 연구 과제응모와 진행으로 어느 정도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연구 작업의 지침은 연구 주제의 선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선정된 기초 연구 과제
의 주제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4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가 한반도의 고대사와
근대사와 관련된 주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선정된 27개의 자료 중 한
반도 역사와 관련된 주제가 14개,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사와 민족사에 관한 주제가 13개,
러시아 극동지역과 관련된 주제가 3개이다. 중국 동북지역의 지방사와 민족사에 관한 연
주 주제도 동북지역의 고민족 연구, 동북지역 이민사, 동북지역 민족구역설치연구, 동북지
역의 통치에 관한 연구, 동북한족(漢族)인구사, 민족문화의 교류와 융합에 관한 문제 등 우
리 한반도 역사와 관계되지 않은 연구가 없다고 할 것이다. 중국으로서는 이런 일련의 체
계적 연구를 통해 중국 중원의 변강지역에 대한 정치적 장악과 문화적 영향을 확인하고 변
강지역 제민족의 중원으로의 편입과 복속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된 연구는 시기와 주제가 다양하다. 시기적으로 고조선의 해석과
관련한 기자조선과 위만조선의 연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고구려와 발해사 연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발해사의 연구에 상당부분이 할애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주
제별로는 광개토태왕비 연구, 한반도와 중국 족속의 성씨 원류에 관한 연구,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 문제, 압록강 이남 지역의 고구려 유적지 조사, 청대 압록강 유
역의 봉금(封禁)과 개벌 문제, 백두산 지역의 문화와 귀속 문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연
구와 주해 등이 포함되어 있다. 충분히 학술적 연구 대상의 문제들이지만 한반도와 중국
사이에 언젠가는 불거질 예민한 주제들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주제의
문제의식은 한반도 문명을 이룬 주류 세력과 국가들 -고조선, 고구려, 부여, 발해- 을 모
두 중국 중앙 황제권력 치하의 지방정권으로 인식함으로써 중국 동북 지역에서 이 국가들
의 역사를 전면 부정, 왜곡하고 있거나, 중국 중원과는 별개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역사
적 존재라는 사실이 잘못된 것이라는 입론하에서 논지를 계획하고 있다.

예를 들어 표-4의 6번 <기자와 기자 조선 연구>(箕子與箕子朝鮮研究) 경우는 한국과
일본 학계에서 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거나 일개 전설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상(商)나라 멸망 전후 기자의 동쪽으로의 이주 근거와 이
유를 문제제기하면서, 기자 조선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을 주제의 중점으로 삼고 있다. 더
나아가 한반도의 고문명이 중국의 십일신화(十日神話)에서 유래했음을 밝히며, 삼한(三韓)
이 고진국(古辰國)임을 지적하고, 그 고진국은 은상(殷商)의 해외 속지였다는 것을 주장하
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라는 식으로 입론과 논지를 설계하고 있다.³⁶⁾ 이렇듯 동북공정에 선
정된 대부분의 주제는 한반도와 동북지역의 고대 문명이 전부 중원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
고 그 영향 아래 전개되었음을 주장하거나, 한반도 역사의 주체와 주류 국가들이 중원 중
국의 문화와 문명 혹은 정권에 예속된 것으로 해석되거나 설명되고 있다.

표-5의 2004년도 기초연구 작업으로 선정된 주제들 역시 모두가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된 주제라고 할 것이다. 중국 청대의 교통이나 변경지역의 통치 또는 동북지역의 이민정책에 관한 주제들도 당시 조선시대 상당수의 조선인들이 만주 지역으로 대거 이주했음을 상기할 때 한반도의 역사와 무관한 연구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연구 주제들은 “조선 이조의 복진 정책과 간도 문제연구”라는 주제에서 드러나듯이 한반도와 중국 간에 언제는 불거질 예민한 영토문제를 해결할 관련 기초연구라고 할 것이다. 특히 간도 문제는 중국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장차의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는 주제이다. 나머지의 주제 역시 한반도 역사의 주류로 인식되나 중국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발해사의 도시 연구와 러시아의 발해 연구에 할애되고 있으며, 고려와 원시대 관계사도 연구 주제로 선정되었다. 역

〈표-4〉 제1차 선정 기초연구과제³⁷⁾

번호	과제명칭	신청인	완성시기
1	黑龙江通史	步平	2002.04
2	20世纪中国东北边疆文化研究	黄定天	2002.06
3	好太王碑1580年	耿铁华	2002.08
4	中国东北与俄国(苏联)经济关系史	张凤鸣	2002.09
5	渤海国史	魏国忠	2002.09
6	箕子与箕子朝鲜研究	张碧波	2002.09
7	俄国东部移民开发问题研究(1861—1917)	王晓菊	2002.09
8	渤海史论	朱国忱	2002.09
9	中国东北古民族发展史	李德山	2002.09
10	中韩相关姓氏族源考论	王雅轩	2002.09
11	民国时期东北地方政府治边研究	胡玉海	2002.09
12	近代中国东北地区的国际移民问题研究	王胜今	2002.10
13	简明高句丽史	孙玉良	2003.01
14	东北民族区域设置研究	程妮娜	2003.06
15	历朝东北治边研究	徐德源, 郑冰川	2003.09
16	国际法与中朝边界争议问题	焦润明	2003.09
17	清代边疆城镇研究	李治亭	2003.12
18	《三国史记》译注及研究	刘子敏, 朴灿奎	2003.12
19	长白山地区历史与文化及其归属问题研究	刘厚生	2004.02
20	东北汉族人口史研究	孟广耀	2004.05
21	中国历代治理东北边疆思想研究	刘信君	2004.06
22	渤海移民的治理与归属研究	武玉环	2004.06
23	清代鸭绿江流域的封禁与开发研究	张杰	2004.06
24	鸭绿江以南的高句丽遗址调查研究	徐日范	2004.08
25	俄罗斯远东地区的中国人	张宗海	2004.12
26	东北边疆多民族文化交流与融合	郝正	2004.12
27	伪满时期东北边界冲突与界务交涉研究	王庆祥	2004.12

应用研究 8项 略

36) “箕子與箕子朝鮮研究”(No.6)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Tmxxb101/card101.asp?tmid=130&lmid=53&siteid=1>(검색일:2004.7.4)

37) “課題項目”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5.htm?siteid=1&lmid=25>(검색일:2004.7.2)

〈표-5〉 2004년 선정 기초연구과제³⁸⁾

과제명칭	신청인	공작 단위
唐代渤海国五京研究	杨雨舒	吉林省社科院历史所
元朝与高丽关系研究	乌云高娃	中国社科院历史所
朝鲜李朝“北进”政策与“间岛”问题研究	孙春日	延边大学民族研究院
清代东北的交通与边政	刘文鹏	中国人民大学清史所
清代东北移民政策研究	张士尊	鞍山师范学院政史系
俄罗斯学界渤海史迹研究成果之学术史与历史文献学研究	胡凡	黑龙江大学历史系

시 주제의 성격으로 볼 때 동북공정이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역사와 관련한 제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작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6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과제로 선정된 14개의 자료 중 7개가 한반도의 고대사 혹은 남북한의 현재 상황과 관련된 자료이다. 남한과 북한 학계의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에 대한 연구 자료뿐만 아니라 한글로 된 중요자료 및 남한의 역사연구소인 백산자료원³⁹⁾의 총서 중 한반도와 중국의 변경의 역사를 다룬 자료를 번역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한반도의 상황과 관련된 문제로서 남한과 북한의 경제, 사회 상황에 대한 비교 및 한반도 현상에 관한 연구를 번역과제로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반도와 관련된 고대사 연구의 논쟁적인 연구 성과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현재 문제를 다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한 체제의 비교 문제도 중요한 관심 주제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과의 역사 논쟁의 중심에 있는 고조선을 포함하여 부여, 고구려, 발해 등 중국의 동북 지역에 근거를 둔 한반도 고대사 문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런 주제 선택으로 보아서 동북공정이 새삼스럽게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역사 왜곡을 위한 체계적 사업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연구 지침과 연구 주제의 선정과 관련해 핵심적인 질문은 지금 왜 중국이 대대적인 국가적 사업으로 동북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역사 재검토 작업을 진행하는가 이다. 동북공정의 연구 지침과 연구 과제 선정에서 동북공정의 정치적 성격을 새삼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중국 동북지역의 먼 과거의 역사적 사실과 쟁점이 연구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것의 역사는 한반도와 밀접하게 관계하는 역사인 것이다. 현재의 영토 관할에서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이지만 한반도의 역사에서 빼 수 없는 지역인 것이다. 여러 가지로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우리(조선, 한반도) 영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영

38) “要聞速遞”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tmxxb101/card101.asp?tmid=356&lmid=51&siteid=1>(검색일:2004. 8.2)

39) 한국 역사에서 북방 영토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1966년 모여 만든 역사학술 단체이다. 백산자료원은 부설 출판사이다. 만주 또는 그 인접지역과 한민족과의 오랜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학회의 목적으로 삼았기에 간도 및 북방 영토에 조어(造語) 깊은 학술단체이다. 당연히 중국으로서는 이 학회에서 나온 자료의 논거를 참고하고 싶었을 것이다.

〈표-6〉 제1차 번역과제 일람표⁴⁰⁾

번호	주관인	심사수정인	과제명칭
1	孙启林	顾铭学	朝鲜韩国史学界的古朝鲜、夫余研究论著选编
2	权赫秀	顾铭学	朝韩学界高句丽的研究文献
3	郑永振	朴灿奎	国外渤海史研究资料汇编
4	张琏瑰	于翠红	朝文相关重要著作和资料翻译
5	高敬洙	许能洙	中朝边境史——白山资料院丛书选译
6	张英	曹丽琴	朝鲜半岛现状研究
7	吴建华	朴成浩	韩国和朝鲜的经济、社会状况比较
8	赵立枝	徐昌汉	21世纪俄罗斯东部发展战略和规划
9	张宗海	赵立枝	阿穆尔沿岸地区的中国人
10	张宗海	陈本裁	90年代上半期的中国与俄罗斯远东——地区合作问题
11	王复士	徐昌汉	条约条款业已确定
12	宿凤林	郝建恒	俄中与苏中经济贸易关系史
13	王晶	高文凤	资本主义时代旅俄华工在远东
14	林树山	姚风	大黑瞎子岛上的女真考古遗存

〈표-7〉 제1차 공문서류과제 일람표⁴¹⁾

번호	주관인	소재단위	과제명칭	완성시기
1	吴元丰	中国第一历史档案馆	东北边疆历史档案选编·珲春衙门档汇编	2005.12
2	赵焕林	辽宁省档案馆	东北边疆历史档案选编·辽宁卷	2003.12
3	刘凤楼	吉林省档案馆	东北边疆历史档案选编·吉林卷	2003.12
4	田汝正	黑龙江省档案馆	东北边疆历史档案选编·黑龙江卷	2003. 9

토적 논란이 가능한 지역이다. 거기다가 북한의 정치적 실정으로 인한 탈북자 문제와 재중 동포인 조선족의 정체성 논란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지역이다. 탈북자 문제는 남한 북한 중국의 현재 관계를 곤혹스럽게 하는 현안이며, 조선족은 통일 한국을 상정할 경우 배후에 강력한 모국을 지니고 있는 유일한 소수민족인 되는 것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는 주의를 요하는 지역이고 미래에는 위험지역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장차 대규모의 정세 변화- 특히, 북한의 붕괴, 혹은 남북한의 통일로 인해 발생하는 제 세력관계의 변화가 예측되는 한반도의 정치 상황과 정세 변화에 대한 여러 가능성에 대한 준비가 동북공정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한반도 정세 변화가 초래할 여러 가지 정치적 예측 상황에 대해 동북지역에 대한 정통성의 우위를 확보하고 확실한 연구권을 논리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그런 정세변화가 초래할 다민

40) “課題項目”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5.htm?siteid=1&lmid=25>(검색일:2004.7.2)

41) “課題項目” <http://www.chinaborderland.com/cn/company/create/page025.htm?siteid=1&lmid=25>(검색일:2004.7.2)

족의 분열 상황과 소모적인 국정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중장기적인 전략 하에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⁴²⁾

또 다른 한편으로 동북공정의 이런 학술적 작업⁴³⁾과 병행하여 현실적으로 주민들의 역사재교육 작업이 바야흐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중국은 고구려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고구려 유적지의 관광 안내를 담당하는 모든 안내원들에게 고구려 정권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는 교육을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⁴⁴⁾ 이로써 학술적 작업의 이론적 논리적 뒷받침과 더불어 자국민의 역사재교육을 통해 동북지역에 대한 새로운 역사 왜곡과 날조를 강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국은 자국의 역사교과서에 이러한 고대사의 쟁점 부분을 중국의 입맛에 맞게 개작함으로써 대대적으로 자국민을 세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학술적 작업이 동북공정의 주요한 모티브였고 계기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즉각적이고 현실적인 역사 왜곡 행위는 명백히 정치적인 의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총체적인 중국 동북지역의 새로운 역사 날조 행위가 “동북공정”의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

역사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의해서 재발견되는 것이라면 모든 역사의 해석은 어쩌면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 살펴본 대로 동북공정은 학술적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그 학술적 사업의 배경은 현실적이고 정치적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 중국 내부의 불균형 발전의 해소, 중국 동북 지역 국경지역에서의 잠재적 소요와 분란의 예방, 인접 한반도 정치상황의 불안정한 진행에 대한 대비 등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할 것이다. 동북공정은 개혁 개방 이후의 중국의 경제적 발전과 뒤늦은 근대화의 진행에서 민족주의적 요소를 강화하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란과 소요의 예방과 더불어 안정적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나름의 심모원려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동북공정은 궁극적으로 반패권주의와 반제국주의에 당의 정체성과 근거를 두었던 중국 공산당의 영락의 실체요,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 수가 장고(長考)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악수(惡手)임에는 분명하다.

첫째는 평화를 저해하고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동맹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온 북한과 중국, 한국과 중국과의 현 관계를 주시하더라도 역사 날

42) 2003년 9월 북한과 중국의 국경을 경비하고 있던 무장경찰을 인민해방군으로 바꾼 것 역시 이런 일련의 국경 지역에서의 여러 분쟁 상황을 예상하고 취해진 조치로 파악할 수 있다. "China Moves Troops to Area Bordering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September 16, 2003.

43) 2004년 2월의 “동북공정” 소식에 의할 것 같으면 상당정도의 연구가 진척되어 2003년에 선정된 연구 중(본문 표4 참조) 3, 4, 7, 8번의 연구가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고 한다.

44) 『한겨레』, 2004. 7.17.

조와 왜곡은 이 관계에 심각한 파열음을 낼 수밖에 없다. 동북지역의 역사왜곡에 남북한이 일사분란하게 대처하지 못하리라는 계산을 했을지도 모르나 '주체'를 정권의 생명으로 삼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동북공정의 결과가 공식적인 역사 교과서로 삽입되는 중차대한 국면에서는 새삼스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나 한국의 시민단체가 이것을 그냥 넘어가리라고 생각했다면 그것 역시 오산이다. 중국 그들의 주장대로 현재는 과거 조공과 책봉의 시대가 아니다. 힘의 논리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국제관계상에서 엄연한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의 관계인 것이다. 더군다나 일부 민족주의적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고구려사를 포함한 한반도의 북방사는 한국과 북한으로서는 어쩌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반도의 귀중한 역사이다. 그런데 이 역사를 날로 빼앗겼다는 것은 국제정치의 힘만 알았지 배면의 대의명분의 존재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며 극악한 팽창주의적 파쇼적 사고에 다름 아니다.⁴⁵⁾ 중국의 인민들도 그랬지만 한반도의 인민들 역시 극악무도한 팽창주의에 견고하게 저항한 누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는 동북공정은 중국이 그 동안 제3세계에서 구축한 반제국주의 반 패권주의의 외교적 노선에 대한 전면부정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굴기(平和崛起)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이다. 사회주의 국가로서 중국은 냉전시기에서는 미국과 소련 중심의 외교를 탈각하여 제국주의, 팽창주의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국가로서 제3세계의 지도국으로서 나름의 도덕적 우위를 지켜 왔다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 탈냉전 시기에는 전략적 요인이 다분하지만 중국의 경제발전과 부국강병을 위하여 분란의 예방과 현상유지를 우선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구축해 왔다. 물론 경제성장과 더불어 1990년대부터 국방비의 두 자리 수 증가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대만해협에서 보여주는 일련의 갈등은 역내 국가들에게 현실적으로 "중국위협론"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의 부상과 지도자적 역할에 걸림돌이 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한반도와의 국경지역 문제가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북공정은 '중국위협론'의 문제제기가 마냥 허구가 아님을 보여주는 또 다른 일례가 되고 있는 셈이다. 주변국들과 이런 식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이 얻는 이해가 무엇인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더 부유하고 그 영향력은 더 커졌을지 모르지만 명분과 의리를 갖춘 도덕적 국가로서의 이미지는 한없이 실추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도 이러한 수는 무리한 패착인 것이 명백하다. 한반도에서 중국에 대한 경계는 오히려 더 강화될 것이며 이런 역사 왜곡은 동북아 다자 안보와 동북아의 경제공동체의 노력을 무산시킬 것이다. 세계

45) 한반도와 중국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마오쩌둥과 함께 현대 중국 건국의 중심 인물로서, 중국 외교 관계의 총책임자였던 저우언라이(周恩來)가 1963년 6월 북한 과학원 대표단을 접견하면서 북한 중국관계를 언급하는 대목에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周恩來總理談中朝關係," 『外事工作通報』, 第10期(1963); 이 문건의 원문과 번역은 <http://www.sh21.or.kr/> 참조.

화와 블록화로 특징지어지는 지금의 추세에서 동북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새삼 착목함으로써 발단된 동북공정이 오히려 진술하지 못한 접근과 폐쇄적 민족주의로 동북지역, 동북아, 동아시아의 평화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중국의 도덕적 위신을 실추시키고 있는 것이다. 잘못 맞춘 동북공정의 화는 고스란히 중국이 떠안게 될 것이다.

주제별로 광개토대왕비 연구, 한반도와 중국 족속의 성씨 원류에 관한 연구, 한반도와 중국의 국경 문제, 압록강이남 지역의 고구려 유적지 조사, 청대 압록강 유역의 봉금(封禁)과 개발 문제, 백두산 지역의 문화와 귀속 문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연구와 주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동북공정에 대한 초기 인식은 지극히 낭만적이고 신사적이었다. 구체적인 정치적 현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동북공정을 통한 역사왜곡의 사단이 발생하자 학술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004년 초 “고구려연구재단”을 만든 것도 중국의 역사왜곡의 수위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학자들의 국가적인 대비책 요구에 따라 정부가 뒤늦게 대응해준 것이며 주도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다가 2004년 7월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유적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난 후 중국 관영 언론의 고구려사 왜곡과 중국 정부의 외교부 홈페이지의 “고구려” 삭제 건을 목도하고 나서야 다급해진 느낌을 갖기 시작한 것 같다.⁴⁶⁾ 어쩌면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북한의 경우는 공식적 입장을 자제해 오고 있다.⁴⁷⁾ 중국과의 특수한 정치적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경제 원조뿐만 아니라 핵문제를 해결을 포함하여 체제의 안보문제를 상당히 의존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문제로 굳이 중국과 꺾으려울 필요가 있는가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주체”를 공화국의 핵심적 정체성으로 인정하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곤혹스러울 것이다. 사태를 좀 더 관망하는 형세일 수도 있으나 친북한계 신문인 조총련의 『조선신보』朝鮮新報는 고구려사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 고조선, 부여, 발해까지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중국의 동북공정은 명명백백한 역사왜곡이라 언급하고 있다.⁴⁸⁾ 중국의 중원에 원(元)나라를 세워 통치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몽골의 경우 중국의 동북공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주한몽골대사는 “(현재

46) 우리는 정부는 동북공정 연구는 학술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뜻을 중국 측으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행위가 발생하자 우리 정부는 중국이 학술적 문제는 학술적으로 해결하자는 신사협정을 중국이 어긴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47) 북한이 중국의 역사왜곡에 대해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신문>이나 <역사과학>등에 중국 측의 역사왜곡을 비판하는 글을 실고 있다. 다만 정치적 문제로까지 비화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듯하다. 『연합뉴스』, 2003. 12.14.

의 중국 땅에 세워졌던 원(元)나라도 몽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고, 그 역사는 몽골의 역사이며 고구려의 역사도 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다”며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볼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⁴⁹⁾

중국의 만행적인 역사왜곡에 대해 좀 더 강경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역사문제에 대한 남북공조의 강화와 긴밀화를 우선적으로 거론할 수 있겠다. 북한의 고구려 고분의 세계 문화 유산 등재에 남북이 협조하였듯이 한반도 문제의 민족 공조를 주장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 문제만큼은 전면적 공조를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다만 북중 관계의 현실정치의 논리가 없을 수 없으나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로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고구려사의 왜곡 문제를 비롯한 동북지역의 역사문제는 자칫 중국과 한반도의 문제로 국한됨으로써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와는 달리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정당하고 올바른 문제제기를 통해 적어도 학술적 차원에서 만큼은 국제적 교류와 관련 국제학술세미나를 통하여 이 이슈를 세계화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국내 연구 인력의 충분한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연구 인력의 육성과 확보뿐만 아니라 고구려사를 포함한 고대사의 일대 정비 작업을 통하여 학술적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료 및 사료 발굴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으로 중국의 학술적 동북공정의 준비 작업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준비는 현실정치의 작동 논리 속에서도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공정의 논란을 경험으로 삼아 우리는 주변국의 상황변화와 통일 이후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를 여러 차원에서 새삼 점검해 보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향후 한국의 “민족”과 “민족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대책 없는 민족감정에 근거한 감상적이고 만용적인 민족주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지만, “NO라고 말할 수 있는 한국”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 중국, 일본 등에 더 이상 휘둘리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는 새로운 역사의식, 민족의식이 새삼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가 어느 시인의 비장한 절규처럼 “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⁵⁰⁾의 예지를 발휘해야 할 때이다.

48) <http://www.korea-np.co.jp/news/ArticlePrint.aspx?ArticleID=11872>(검색일:2004.7.20)

49) 『연합뉴스』, 2004. 7. 14.

50) 이육사의 『광야에서』에서 인용. 전문은 “까마득한 날에/하늘이 처음 열리고/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모든 산맥들이/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끊임없는 광음(光陰)을/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지금 눈 내리고/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다시 천고(千古)의 뒤에/백마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한민족은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도용해 갔다”

边众

中國『光明日報』(2003년6월 24일자)



试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

边众

高句丽，也简称为高丽，是西汉到隋唐时期东北地区出现的一个有重要影响的边疆民族。

高句丽的先人周秦时期一直生活在东北地区。公元前108年，汉武帝设四郡管辖辽东及朝鲜半岛北部，其中玄菟郡高句丽县就是高句丽人的聚居地。公元前37年，夫余人朱蒙在玄菟郡高句丽县辖区内建立政权，起初定都纥升骨城（今辽宁桓仁县城附近），公元3年（汉平帝元始三年）迁都国内城（今吉林集安市）。公元427年迁都平壤城（今平壤市）。高句丽鼎盛时期其势力范围包括吉林东南部、辽河以东和朝鲜半岛北部。公元668年，高句丽被唐王朝联合朝鲜半岛东南部的的新罗所灭，在历史上持续了705年之久。

鉴于高句丽存在的700多年间，其主要活动范围都在中国中原王朝管辖地区，并与中原王朝保持着隶属关系，高句丽政权的性质应是受中原王朝制约和地方政权管辖的古代边疆民族政权。当然，这种管辖关系随中原王朝控制力的消长而时疏时密。现就高句丽历史研究中的几个相关问题略述见解，以就教于学界同仁。

一、高句丽是我国东北历史上的少数民族政权

周秦之际其先人就生活在浑江、鸭绿江流域，中心区域在今辽宁省桓仁县、新宾县，吉林省集安市、通化市一带。我们认为高句丽民族是我国东北历史上的一个民族，高句丽政权是我国东北历史上的边疆民族政权，主要基于以下几方面原因：

第一，从高句丽民族起源看，我国学者目前研究情况尽管存在一些分歧，大体上有秽貊说、夫余说、高夷说、商人说、炎帝说等，但无论何种说法，都充分肯定高句丽民族的先人的活动范围在周秦之际就在我国东北地区之内。周人一直认为“肃慎、燕、亳，吾北土也”（《左传》昭公九年）。由此可见，周武王克商以后，周人对东北地区的经营是很明确的，势力已超越今日东北的范围。

多年的考古调查与发掘表明，浑江流域一些新石器时代晚期至青铜时代的文化遗存，如桓仁县台西沟遗址、姚山遗址、凤鸣遗址，集安市大朱仙沟遗址、二道崴子遗址、东村遗址，通化市王万发拨子遗址等都应该都是高句丽政权出现前的文化遗存。这一地区文化的叠压关系明确，下层为新石器晚期至青铜时代文化，其上面叠压着汉代文化，再上层则为高句丽政权出现后的文化。

第二，从高句丽政权建立情况看，国内外学者大都认同公元前37年（西汉元帝建昭二年）建都于纥升骨。今辽宁桓仁县城附近有一座平原城下古城子，还有一座山城五女山城，考古调查与发掘证明，这里是高句丽的早期都城，当时属汉玄菟郡管辖范围。

远在高句丽政权出现前，西汉王朝就已开始对东北广大地域实施行政管理，公元前108年（汉武帝元封三年）起，先后置玄菟、乐浪、临屯、真番四郡，管辖范围包括我国东北和朝鲜半岛北半部。后来四郡治辖地域有变化，玄菟郡郡治迁徙至高句丽县。在玄菟郡内高句丽县附近建立起的高句丽政权先后臣属于汉玄菟郡、辽东郡，不断上表称臣、朝贡，也从玄菟、辽东郡领回汉朝赏赐的官服等。同时，在高句丽政权出现前后也有大量的汉族人加入到这一政权中。

1975年至1976年，在对集安国内城进行考古调查与试掘时，在高句丽石筑墙垣内发现了汉代土筑城垣，出土了汉代铁器、陶器等文物。高句丽政权存在的705年间，曾向玄菟、辽东、乐浪等地扩张，几迁都城，无论是都纥升骨、国内城，还是平壤城，都在汉四郡的范围之内，高句丽都是我国东北历史上的边疆民族政权。

第三，自汉至唐，我国历代王朝，包括分裂时期的各王朝都认为高句丽是边疆民族政权。

高句丽居地在商末至汉初是箕子朝鲜的辖地，而箕子朝鲜是周朝的地方诸侯，进入汉代之后为卫氏朝鲜取代，但依然是汉朝的藩属。公元前108年（元封三年）汉灭卫氏朝鲜设置乐浪等四郡，在包括朝鲜半岛中部以北地区实行了和中原地区相同的统治方式。自汉至唐，尽管各王朝对高句丽的管理方式不一，但历代的统治者都认为高句丽的活动区域是中国的传统领土。隋朝的统治者认为“高丽之地，本孤竹国也。周代以之封于箕子，汉世分为三郡，晋世亦统辽东。今乃不臣，别为外域，故先帝疾焉，欲征之久矣”（《隋书·裴矩传》）；唐太宗也认为：“辽东旧中国之有，自魏涉周，置之度外。隋氏出师者四，丧律而还，杀中国良善不可胜数。今彼弑其主，恃险骄盈，朕长夜思之而辍寝。将为中国复子弟之仇，为高丽讨弑君之贼。今九瀛大定，唯此一隅，用将士之余力，平荡妖寇耳。然恐于后子孙或因士马强盛，必有奇决之士，劝其伐辽，兴师遄征，或起丧乱。及朕未老，欲自取之，亦不遗后人也。”（《册府元龟·帝王部·亲征二》）所谓“旧中国之有”、“九瀛大定，唯此一隅”，无疑反映着唐太宗视高句丽地区为中国的传统疆域，实现对高句丽的统一是完成“九瀛大定”的最后一项使命，这也是隋唐两朝不惜倾全国之力完成统一高句丽的重要原因之一。

第四，高句丽也没有“自绝”于中国之外。

在长达7个世纪的时间里，高句丽称雄东北边疆地区，但给自己的定位都是中央王朝的边疆地方政权，主动和中央王朝，包括三国两晋南北朝分裂时期的各政权建立臣属关系，不仅接受册封、纳贡、纳质，《通典·边防·高句丽》载“自东晋、宋至于齐、梁、后魏、后周，其主皆受南北两朝封爵”即言此。唐朝建立后，高句丽“上封域图”更是表明了其对唐朝的认同，并没有自绝于中国之外。正因为有着这样的认识，所以在唐朝统一高句丽后，有一大批高句丽人不仅没有对唐朝抱有“亡国”之恨，反而为维护唐朝的统一大业立下了汗马功劳，青史留名，诸如泉男生、高仙芝、王毛仲、王思礼、李正己等两唐书都留有其传记。

第五，从灭亡后高句丽人的流向看，公元668年（唐高宗总章元年）高句丽灭亡后，唐凡收其民“户六十九万”（《新唐书·高丽传》）。这应该是当时高句丽的总户数，其中包括许多非高句丽族户。高句丽族户数大体上在十五万左右。他们的流向，学者们认为有四个方面：迁居中原各地，投入新罗，投奔靺鞨（渤海），散入突厥。我国学者最近研究成果表明，高句丽灭亡时，高句丽族人约有七十万人，迁居中原各地近三十万人，投归新罗的约十万人，投奔靺鞨（渤海）的十万以上，散奔突厥万余人，凡五十多万人。再加上散居辽东等地“遗人”，战争死亡人，总数与高句丽族人数基本一致。其中只有投入新罗、留居半岛今龙兴江以南的约十万余高句丽族人融入半岛民族，而大多数都融入了汉族人中。从这一点看，把高句丽民族作为东北历史上的边疆民族是符合历史事实的。

二、王氏高丽并不是高句丽的继承者

首先是两个政权建立的时间悬殊、历史发展归属不同。高氏高丽建立于公元前37年，最初为西汉玄菟郡高句丽县管辖，后逐渐强盛，但并没有断绝和中央王朝的臣属关系。进入隋唐时期，高句丽奉行扩张政策，并阻塞朝鲜半岛其他政权入贡中原王朝的道路，导致了隋唐两朝的征讨。公元668年，高氏高丽终于为唐朝统一。高氏高丽的辖境最初完全由唐朝安东都护府（治所最早在今平壤）管辖，几十年后有一部分辖境为我国历史上的另一个地方政权渤海占据，一部分划归了兴起于朝鲜半岛南部的的新罗政权，一部分仍然由安东都护府管辖。高句丽族则绝大部分被唐朝迁徙到了内地，后与汉族融合，小部分融入周围各族之中，后其王族也绝嗣，立国7个世纪之久的高氏高丽最终消失在了中国历史发展的长河中。

王氏高丽立国于高氏高丽灭亡250多年之后的公元918年，935年取代了朝鲜半岛的另一个政权新罗，翌年又灭亡了后百济国，统一了半岛中南部大部地区。至公元1392年，王氏高丽的大臣李成桂废王自立，并在1393年以“朝鲜、和宁等国号奏请”明朝，明赐李成桂为朝鲜王，王氏高丽遂改号朝鲜，学界一般称之为李氏朝鲜或简称李朝。此即我国明清时期的朝鲜国。

其次是辖境内居民构成不同。高氏高丽辖境内的居民以高句丽族为主。高句丽族的族源是我国上古时期古老民族秽貊人东迁后的夫余、高夷、沃沮、小水貊、东秽等，后又融合了卫氏朝鲜遗民的后裔、汉人、鲜卑人等。这些来自于不同民族的成员在长期的共同生活中逐渐融合一体，史书和学界一般以高句丽族称之。王氏高丽辖境内的居民以新罗人为主。王氏高丽兼并新罗和后百济之后，新罗人和百济人成为了王氏高丽的主要居民。新罗人主要是源于朝鲜半岛南部地区的辰韩和弁韩人，高氏高丽灭亡后虽然有一部分高句丽人加入其中，但不是新罗人的主源。百济则主要是源于朝鲜半岛南部的马韩人。也就是说王氏高丽的主要居民以来源于朝鲜半岛南部的“三韩”人为主，大量的史书记载也表明，王氏高丽人和我国古人是把王氏高丽看作“三韩之旧”的。在王氏高丽数百年的历史发展中，这些成员逐渐融合为一族，史书和学界一般称之为高丽族。王氏高丽为李氏朝鲜取代后，朝鲜也因此取代高丽，成为其族称，并沿用至今。

最后是王氏高丽非高氏高丽后裔，王氏高丽的王族也并非是高氏高丽的后裔。关于王氏高丽建国者王建的族属，《高丽史》的作者认为“高丽之先，史阙未详”。但据我国学者考证，王建极有可能是西汉乐浪郡汉人的后裔，因为王氏是当时乐浪郡的望族，且人户很多。王建在临死时亲授的《十训要》中，并未言自己是高氏高丽后裔，而是说自己出身平民，同时称“赖三韩山川阴佑”，统一了马韩、辰韩和弁韩“三韩”，其后代也多以拥有“三韩”自居。以常理分析，如果王建是高氏高丽后裔，出于统治的需要，定当会大肆宣传。也可反证王氏不是高氏的后裔。

因此，王氏高丽并不是高句丽的继承者。汉代兴起于朝鲜半岛的马韩、辰韩、弁韩发展为新罗、百济；百济为唐朝灭亡，新罗又为王氏高丽取代；后李朝取代王氏高丽，最终发展为李氏朝鲜。这些政权的疆域从来就没有超出过朝鲜半岛。

三、高句丽、王氏高丽历史混淆的原因

人们之所以将王氏高丽错误地看作是高句丽的继承者，和我国的史书记载有一定关系。在我国正史中，班固所著《汉书》是第一个记载有关高句丽事迹的史书，而陈寿《三国志》则是第一个为高句丽立传的史书。至《旧唐书》和《新唐书》，诸史多在《东夷传》或《蛮夷传》中为高句丽立传。应该说，这些史书尽管在具体事件的记载上存在一些误差，但对高句丽的历史定位是准确的，只是到了宋代之后史书的记载开始出现了混乱，乃至明显的错误。

王氏高丽立国于公元918年，1392年为李氏朝鲜取代，时跨我国五代中期至明朝初期，故《旧五代史》、《新五代史》、《宋史》、《辽史》、《金史》、《元史》、《明史》都有《高丽传》或《朝鲜传》，并都将高氏高丽的历史略述于前。综观这些史书记载，《旧五代史》和《新五代史》是最早将高氏高丽写入王氏高丽传的，《宋史》则是“王建承高氏之位”一语的始作俑者，这三部史书的记载直接影响到了以后的几部史书。

《旧五代史·高丽传》共约240个字，其中“及唐之末年，中原多事，其国遂自立君长，前王姓高氏”一段之前记载的全部是高氏高丽的事情，之后记载的则是王氏高丽的事情。

《新五代史·高丽传》共约280余字，除开头“高丽，本扶余人之别种也。其国地、君世见于唐，比佗夷狄有姓氏，而其官号略可晓其义。当唐之末，其王姓高氏”外，其余全部是王氏高丽的记事。

《旧五代史》的监修是北宋人薛居正，修成于北宋初期的公元973年至974年，当时长达半个世纪的分裂局面尚未结束，统一战争仍在进行。也正是因为如此，《旧五代史·高丽传》的记载不仅简略，而且也存在错误之处，尤其是“及唐之末年，中原多事，其国遂自立君长，前王姓高氏”一语。断定其错误的理由有二：一是，查其他史书，包括朝鲜的汉文史书，并没有高氏在唐朝末年建立高丽政权的记载；二是，宋人司马光在编撰《资治通鉴》时也没有采纳其说法，显见这一记载是错误的，薛居正也无法确切写明二者的关系，但这一错误却得到了《新五代史》作者欧阳修的发挥。欧阳修撰写《新五代史》时采用了许多小说、笔记的资料，对人物和事件的描述插入了很多生动的情节，故而将《旧五代史·高丽传》关于高氏高丽的记述精简而作为了王氏高丽建国来源的追述，《旧五代史·高丽传》中的“及唐之末年，中原多事，其国遂自立君长”一语则精简为“后稍自国”，置于其后所撰《新唐书·高丽传》中，而《旧唐书·高丽传》中不仅没有这一记载，却有“高氏君长遂绝矣”，表明高氏高丽王族已经绝嗣。

《宋史》为元人脱脱等撰写，书中为高丽传单列一卷，称：“高丽，本曰高句丽。禹别九州，属冀州之地，周为箕子之国，汉之玄菟郡也。在辽东，盖扶余之别种，以平壤城为国邑。汉魏以来，常通职贡，亦屡为边寇。隋炀帝再举兵，唐太宗亲驾伐之，皆不克。高宗命李征之，遂拔其城，分其地为郡县。唐末，中原多事，遂自立君长。后唐同光、天成中，其主高氏累奉职贡。长兴中，权知国事王建承高氏之位，遣使朝贡……”此后记述的是王氏高丽和宋朝交往的史实。由内容上看，《宋史·高丽传》在前面综合了新、旧五代史的记述，并在此基础上把两书作者没有明确的王氏高丽和高氏高丽之间的关系，直接明确表述为“王建承高氏之位”，使二者变成了前后相接的继承关系。《辽史》、《金史》也为元人脱脱等撰写，其中存在类似的错误也就不足为奇了。

之后的史书基本上沿袭了这些错误记述,《明史》则较前几史有了一个更大的发展,为对明王朝册封李成桂为朝鲜国王有一个合理的解释,不仅承袭了上述错误,而且为李氏朝鲜政权的沿革作出了一个完整但是错误的交代:箕子朝鲜—卫氏朝鲜—汉四郡—高句丽—东徙复国—王氏高丽—李成桂改号前的高丽—李氏朝鲜,将属于我国历史的箕子朝鲜、卫氏朝鲜、汉四郡、高句丽都纳入到了朝鲜史中。

我国史书出现上述错误的原因是多方面的,但战乱导致的文献失散及王氏高丽的误导是其主要原因。据《续资治通鉴长编》卷323宋元丰五年(1082)二月己巳条载:“史馆修撰曾巩言:‘窃考旧史,高句骊自朱蒙得纥升骨城居焉,号曰高句骊,因以高为氏,历汉至唐,高宗时其王高藏失国内徙。圣历中,藏子德武安东都督,其后稍自为国。元和之末尝献乐工,自此不复见于中国。五代同光、天成之际,高丽王高氏复来贡而失其名。长兴三年乃称权知国事王建遣使奉贡,因以建为王。建子武,武子昭,昭子[イ由], [イ由]弟治,治弟诵,诵弟询,相继而立。盖自朱蒙至藏,可考者一姓九百年,传二十一君而失国。其后,复自为国,而名及世次兴废之本末,与夫王建之所始,皆不可考。’”其后王氏高丽向宋朝奉上了一个将王氏高丽和高句丽连接起来的“高丽世次”。由此可知,宋人对王氏高丽和高句丽的认识已经很模糊,而王氏高丽所呈现的“高丽世次”又进一步起到了误导作用,以致我国史书记载出现了明显错误。其结果不仅“高丽”这一我国古代边疆民族使用的称号,为源出于三韩的新罗的继承者王氏政权冒名顶替,而且作为王氏政权继承者的李朝,又将箕子朝鲜所用的“朝鲜”戴在了自己的头上。由此也带来了今人在认识我国古代东北地区边疆政权沿革状况方面,出现了许多混乱和错误的看法。

资料是研究赖以进行并不断深化的基础。对汉文史籍有关高句丽记载的考辨,杨保隆《各史〈高句丽传〉的几个问题辨析》(刊《民族研究》1987年第1期)在这方面做了有益尝试,但应做、可做的工作还很多。

坚持将高句丽历史研究纳入正常的学术化研究轨道,是我们的一贯主张。我们反对在高句丽历史研究中将历史问题现实化,学术问题政治化的倾向和做法。高句丽历史既是中国历史上、也是朝鲜半岛历史上一个有待继续深入研究的课题。潜心研究,将科学的研究结论提供给学坛,进而推动和深化高句丽历史研究是学人的职责。至于研究结论的差歧,完全可以通过符合学术规范的规则开展学术交流与争鸣,即使一时不能取得共识,在互相尊重的前提之下还可以求同存异。果能如是,高句丽历史的研究在各国学者的共同努力之下,必能有一个大的进展。



“한민족은 고구려와 기자조선을 도용해 갔다”

- 周나라 이후 중국은 동북지역 관할했다.
- 隋와 唐은 고구려 상대로 “통일전쟁” 시도
- 고구려는 中原 왕조로부터 독립하려 하지 않았다
- 고구려는 漢나라 안에 있던 지방정권
- 고구려인은 唐에 대해 ‘亡國의 恨’ 품지 않았다
- 패망한 고구려인 절대 다수는 중국에 同化
- 왕건이 세운 고려는 三韓을 계승했으므로 고구려와 무관
- 왕건은 낙랑군에 있던 漢族의 후예
- 三韓의 후예는 한번도 한반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 元나라인 탈탈 등이 ‘宋史’ 쓰며 ‘고려는 고구려의 후예’로 잘못 기술
- 기자조선부터 고구려까지 몽땅 조선사로 편입시킨 ‘明史’의 실수
- 왕건은 ‘高麗’를 도용, 이성계는 기자조선의 ‘朝鮮’을 도용
- “고구려사 연구에서 발생하는 학술문제를 정치화하지 말라”



위와 같은 역사왜곡을 주요 내용으로한 광명일보의 시론은 중국의 역사자료를만 ‘일방적’으로 인용해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이 시론의 결론이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니 정치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 것은 이 시론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작성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편집자)

中原 왕조와 종속 관계

고구려의 선조는 주나라와 진나라 시기 줄곧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생활했다. 기원전 108년 한 나라 무제는 요동과 한반도 북부에 4군을 설치했는데 그 중에서 현도군에 있던 고구려현이 바로 고구려인이 살았던 곳이다.

기원전 37년 부여 사람이인 주몽은 현도군 고구려현 관할구역에 정권을 세우고 흘승골성(紇升骨



▲ 중국 통거우 무용총에 그려진 남방계 미인형.



▲ 수산리 고분의 북방계 미인형.

城 : 지금의 요녕성 환인현성 부근. 그러나 한국 역사학계는 광개토태왕비문을 근거로 주몽이 졸본에 도읍을 정했다고 보고 있다(을 수도로 정하였다).

서기 3년(한나라 평제 원시 3년) 고구려는 국내성(지금의 길림성 집안시)으로 수도를 옮겼다가 서기 427년 평양성(지금의 평양시)으로 천도하였다. 전성기 때의 고구려는 길림성 동남부와 요하(遼河 : 중국 동북지방 남부를 가로질러 서해로 흐르는 1400km의 강) 동쪽,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뻗었다. 이로부터 서기 668년 한반도 동남부에 위치한 신라와 연합한 당나라 왕조의 공격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고구려는 705년의 역사를 유지했다.

고구려가 존재한 700여 년의 시간을 살펴보면 고구려는 중국의 중원 왕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며 중원 왕조와 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 고구려 정권은 중원 왕조의 제약을 받았고 중국 지방정권의 관할하에 있었으므로 고대 중국에 있었던 변방의 민족정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고구려와 중원 왕조의 관계는 중원 왕조의 제압력이 강해지거나 약해짐에 따라 밀접해지기도 했고 소원해지기도 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에 이뤄진 고구려 역사연구에 대해 약술한다. 학계연구자들의 지도편달을 바란다.

1.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출현했던 소수민족 정권이다

주(周 :殷나라 다음에 건국해 秦나라에 멸망당할 때까지 수백년간 이어온 중국 고대 왕조) 나라와 진(秦: 기원전 221~207년)나라 시절 고구려인의 선조는 주로 혼강(渾江: 중국 요녕성을 흐르는 강)과 압록강 유역에서 생활하였다. 이들이 살았던 중심구역은 지금 요녕성의 환인현과 신빈현, 길림성의 집안시와 통화시 일대였다.

우리는 고구려 민족이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한 민족이었고, 고구려 정권은 중국 동북지역 역사에 등장한 변경민족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구려 민족의 기원을 살펴보자. 현재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중국학자들은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대하여 예맥(濊貊: 중국 漢나라 시절 압록강과 혼강 유역에 살았다는 한민족의 근

간이 되는 부족)설과 부여(夫餘: 고조선이 무너진 후 북만주 일대에 웅거한 부족국가)설, 고이(高夷: 만주에 있던 고대 종족)설, 상인(商人: 商은殷나라를 뜻한다. 은나라가 주나라에 패해 동쪽으로가 고구려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 商人설이다)설, 염제(炎帝)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중국 '史記'에는 중국의 黃帝가 염제·치우 등과 싸워 천자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후 중국에서는 치우를 '군신'으로, 염제는 '불의 신' 혹은 '태양신'으로 받들었다).

이런 여러 학설에 공통점이 있다면 고구려 민족은 주나라와 진나라 때에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이다.

좌전(左傳: '춘추좌씨전' 혹은 '좌씨춘추'의 다른 이름. 춘추 시대 노나라의 좌구명이 편찬했다. 기원전 722~481년의 춘추시대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의 소공(昭公) 9년 조를 보면 주나라 사람들은 내내 "숙신(肅慎: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고대 종족)과 연(燕: 周나라 昭公 奭의 후예로 전국 시기에 왕으로 칭한 철웅 중의 하나. 지금의 중국 하북성 지역에 있었다. 고구려 장수왕의 공격에 의해 멸망했다), 그리고 박(朴: 은나라 탕왕이 도읍한 곳. 지금의 하남성 귀덕부 상구현)은 우리의 북방 영토였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고구려는 나라 안에 있던 지방정권

여기서 우리는 주나라의 무왕이 상(商:殷나라)을 점령한 후 주나라 사람들이 동북지역을 경영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주나라 때의 세력 범위는 지금의 동북지역보다 훨씬 넓었다. 환인현의 태서구 유적과 요산 유적·봉명 유적, 집안시의 대주선구 유적과 이도외자 유적·동촌 유적, 통화시의 왕만 발발자 유적 등에 대해 오랫동안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이 이뤄졌는데 이 조사에서 이 유적들은 모두 고구려 정권이 출현하기 전의 문화 유물이라는 것이 분명히 밝혀졌다. 이 지역 유물의 지층을 조사해 보면 하층은 신석기시대 말기부터 청동기시대의 문화이고, 그 위층은 한대 문화이며, 그보다 더 위층은 고구려 정권이 출현한 후의 문화임이 명확히 드러난다.



▲ 고구려 연주성(백암성)

두 번째는 고구려 정권 건립 상황에 관한 것인데 중국 학자들과 외국 학자들은 대부분 고구려가 기원전 37년(서한 원제 건조 2년)에 흘승골을 수도로 해 세워졌다는 점에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요녕성 환인현성 부근(환인현성 서쪽으로 4km 떨어진 혼강 맞은편 쪽)에는 평원성(平原城: 평야에 세워진 성. 산성의 반대 개념)인 '하고성자(下古城子)'가 있으며, (환인현성 동북으로 8.5km 떨어진 혼강 맞은편의 오녀산 정상에는) '오녀산성(五女山城)'이 있다.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에 의하면 이곳은 한나라 현도군의 관할 범위 안에 있던 고구려의 초기 수도였다고 한다.

고구려 정권이 출현하기 전 중국의 서한(西漢) 왕조는 광대한 중국 동북지역을 상대로 행정을 펼치고 있었다. 한나라 무제 원봉 2년인 기원전 108년 이곳에는 잇따라 현도군·낙랑군·임둔군·진변군의 네 군이 세워졌는데, 네 군(세칭 漢四郡)이 관할한 범위

는 동북 지역과 한반도 북부에 이르렀다. 그 후 한사군의 관할 지역에 변화가 있어, 현도군의 행정수도가 고구려현으로 이전하였다.

고구려현 부근에서 건립한 고구려 정권은 처음에는 현도군, 이어서는 요동군에 속하게 되었는데 고구려 정권은 끊임없이 표(表: 신하가 자기 생각을 서술해 황제에게 올리는 글)를 올려 신하를 칭하고 조공을 받쳤다. 그리고 현도군에 이어 요동군을 거치며 한나라 왕조가 하사한 관복 등을 받아갔다. 이 시기 많은 한(漢)나라 사람이 고구려 정권에 흘러들었다. 1975년부터 1976년까지 중국 집안시 국내성 지역에서는 고고학적 조사와 발굴이 있었는데, 이때 고구려의 석축(石築) 안에서 한나라 때 만들어진 흙으로 쌓은 벽(土築城垣)이 발견되었다. 여기서 한나라 시대의 철기와 도기 등 여러 유물이 출토된 바 있다.

705년간의 역사를 이어오며 고구려는 현도·요동·낙랑 등지로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다. 그러나 흘승골이든 국내성이든 평양성이든 고구려의 수도는 모두 한사군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러니 고구려는 중국 역사에 출현한 변방의 민족 정권인 것이다.

705년간의 역사를 이어오며 고구려는 현도, 요동, 낙랑 등지로 영토를 확장시켰으며 여러 차례 수도를 옮겼다. 그러나 흘승골이든 국내성이든 평양성이든 고구려의 수도는 모두 한사군 지역 안에 있었다. 그러니 고구려는 중국 역사에 출현한 변방의 민족 정권인 것이다.

周到에 기자 봉하고, 漢대에 4군 설치

세 번째, 한나라에서부터 당나라 때까지 중국은 분열해 있었지만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모두 고구려를 변방의 민족 정권으로 생각했다는 점이다.

상(商: 은나라) 말기에서 한나라 초까지 고구려인의 거주지는 기자조선(箕子朝鮮: 은나라 말기 기자가 조선에 와 단군조선에 이어 세웠다고 하는 나라)의 관할 구역 안에 있었는데, 기자는 주나라 시대 지방 제후 중 하나였다.

한나라 시대에는 위씨조선(衛氏朝鮮: 한국에서는 '위만조선' 이라고 한다. 한나라 고조는 중국을 통일한 후 노관에게 연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노관이 반란을 일으켜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이때 노관의 부관으로 있던 衛滿이 1000여 명을 이끌고 패수를 건너 고조선의 準王을 찾아가 몸을 의탁했다. 그 후 위만은 준왕을 쳐 왕위를 빼앗고 도읍을 왕검성으로 옮겼는데 이를 위만조선이라고 한다. 위만조선은 한나라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역 안정을 도모하고 이웃한 진번군과 임둔군 등을 복속시켜 고조선 역사상 가장 융성했던 나라가 되었다)이 기자조선을 대신했는데, 위씨조선은 여전히 한(漢) 왕조의 종속국이었다.

기원전 108년(원봉 3년) 한나라는 위씨조선을 멸망시키고 낙랑 등 4군을 설치해 한반도 중부 이북을 포함한 동북지역을 중국의 중원(中原) 지역과 같은 방식으로 통치하였다(한나라의 무제는 기원전 108년 위만조선을 멸망시킨 후 바로 낙랑·임둔·진번 3군을 설치하였고 그 다음해 현도군을 추가해 4군을 만들었다). 한나라로부터 당나라 때까지 고구려에 대한 중국 각 왕조의 관리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중국의 통치자들은 고구려의 활동지역을 중국의 전통적인 영토로 생각하였다.

수나라 때 만들어진 '배구전(裴矩傳)이라는 책을 보면 "수나라의 통치자는 '고구려의 영토는

원래 고죽국(孤竹國 :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땅)이다. 주나라 때 이 땅을 기자에게 봉했다가 한나라 때는 3군으로 나눴다. 진(晉)나라 시절에도 여전히 요동(요하 동쪽으로 동북과 같은 말이다) 지역은 진나라의 관리를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신하로 칭하지 않고 별개의 외지가 되었다. 그래서 선제(先帝)께서는 이를 못마땅히 여겨 고구려를 계속 정복하고 싶어했다'고 말했다"는 대목이 있다.

또 '책부원귀(冊府元龜) 제왕부(帝王部) 친정이(親征二)에는 "당 태종 또한 '요동은 원래 중국의 토지인데 주나라 때부터 위나라 때까지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수나라의 왕은 일찍이 네 번이나 군대를 파견해 공격한 적이 있으나 모두 패하고 돌아왔고 고구려인은 많은 중국 평민을 죽였다. 지금 고구려인은 국왕을 살해하고 굉장한 자만에 빠져 있다. 나는 밤새 이 일을 생각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죽은 중국 사람들의 자녀를 위해 복수할 것이다. 고구려인들을 도와 왕을 죽인 자들을 토벌할 것이다. 지금 비록 중국 대부분의 토지는 평정되었지만 단 하나 이곳만 평정되지 않았다.

우리는 또 한번 남은 병사의 힘으로 그 땅을 소탕하여 평정할 것이다. 후대의 우리 자손 중에는 강한 군대가 나올 것이고 반드시 재능 있는 인재가 나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설득하여 반드시 요동을 토벌하러 가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직 늙지 않았으니 내가 직접 토벌하러 가고 싶다. 이렇게 하면 우리 후손들에게 그 일을 시키지 않아도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다"는 내용이 있다('책부원귀'는 서기 1005년 송나라 정종 때의 왕흠약과 양역 등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한 유서이다). "원래는 중국 것이다" "비록 중국 대부분의 토지가 평정되었지만 단지 이 한곳만 평정되지 않았다"는 말은 당 태종이 고구려 지역을 전통적인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와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곧 "중국의 영토를 평정한다"는 최후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수나라와 당나라의 왕조가 전력을 기울여 고구려와의 통일을 이룩하려고 한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책봉받고 조공 바친 고구려

네 번째, 고구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 700여년 동안 고구려는 동북 변방지역에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구려가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위치는 중국 중앙왕조의 변방정권이었으며, 고구려는 중국이 3국시대(蜀漢·魏·촉나라로 나뉘어 소설 "삼국지"의 배경이 된 시기)와 양진시대(兩晉: 魏나라의 신하로 있던 사마염이 조조의 후손인 조환으로부터 황제의 자리를 빼앗아 265년 지금의 낙양에 쫓나라를 세웠다. 그러나 쫓나라는 4대 만에 흉노 등 북방민족의 공격을 받아 326년 멸망하였다. 그 이듬해 사마염은 동쪽으로 옮겨가 지금의 남경에 다시 쫓나라를 세웠는데, 이 쫓나라는 419년까지 존속하였다. 사마염이 세운 진은 西晉, 사마염이 건국한 진은 東晉이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兩晉'이라고 한다), 그리고 남북조 시대(東晉 이후 지금의 남경에는 차례로 宋·南齊·梁·陳나라가 건국되었다. 반면 북쪽에서는 北魏·東魏·西魏·北齊·北周가 들어서 대립하게 된다.

이렇게 남북으로 갈린 상태에서 여러 나라가 멸망하고 대립한 때를 남북조 분열시대라고 한다. 남북조 분열시대를 통일한 것이 隋나라다)로 크게 분열돼 있을 때도 스스로 중국의 중앙왕조에 대해 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뿐 아니라 고구려는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바쳤으며 질자(質子: 인질)를 보냈다.

'통전(通典) 변방(邊方) 고구려를 보면 고구려의 왕은 동진(東晉)과 송(宋)·제(齊)·양(梁)·후

위(後魏)·후주(後周) 시대까지 중국 남북의 두 왕조로부터 작위를 책봉받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통전’은 당나라 때 두우가 黃帝부터 당나라 현종까지의 문물제도 전반에 대하여 기술한 책).

‘亡國의 恨’ 품지 않은 고구려인

당나라가 세워진 후 고구려는 당으로부터 책봉을 받았으니 이는 고구려의 왕조가 당의 승인을 분명히 받았다는 증거이고 중국으로부터 자주 독립을 하지 않으려 했다는 뜻이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통일하자, 많은 고구려인들은 당나라에 대해 ‘망국(亡國)’의 한을 품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고구려인들은 당나라에 통합된 후 당나라의 통일 대업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까지 하였다. 신·구 ‘당서(唐書)’에 이름을 남긴 천남생(泉男生)·고선지(高仙芝)·왕모중(王毛仲)·왕사례(王思禮)·이정기(李正己) 등이 그들인데, 신·구 ‘당서’에는 이들의 전기가 기록돼 있다.

다섯 번째로 멸망 후 고구려인의 이동 방향을 살펴보자. 고구려는 당 고종 총장 원년인 서기 668년 멸망했는데 ‘신당서’ 고려전에는 고구려를 멸망시킨 당나라가 고구려 난민 ‘69만호’를 받아들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숫자는 당시 고구려의 총 가구수였겠지만, 여기에는 비고구려인 가구도 적잖이 포함돼 있었다. 당시의 고구려족 가구는 15만호 정도였기 때문이다.

학자들은 고구려가 패망한 후 고구려인들은 네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보고 있다. 중원 각지로 유입된 고구려인이 있었고, 신라로 간 고구려족이 있었으며, 말갈(발해)에 의탁한 고구려인이 있었고, 돌궐로 거주지를 옮긴 고구려인도 있었다.

중국 학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에 의하면 멸망시 고구려인 숫자는 대략 70만명 정도였는데 이 가운데 30만명이 중원 각지로 유입되었다고 한다. 신라에 귀의한 사람은 10만 정도였고, 말갈(발해)에 의탁한 사람은 10만 이상, 돌궐로 옮겨간 고구려인은 1만여 명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략 50만명 정도가 네 방면으로 이주한 셈이 되는데, 나머지 20만명은 요동 각지로 흩어져 유민(遺民)이 되고, 전쟁 와중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를 더하면 대략 70만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인은 용흥강(함경남도를 흘러 동한만 쪽 동해로 흘러드는 강) 이남의 한반도로 유입돼 살던 10만여 명이었는데 이들은 신라로 유입돼 반도 민족에 융화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고구려인은 한족(漢族)에 융화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고구려 민족을 중국 동북지방에 등장했던 변방민족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2. 왕씨(王氏) 고려는 결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다

서기 918년 한반도에서 ‘고려’라는 이름의 정권이 출현하였다. 그 통치자의 성(姓)이 왕씨였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이를 ‘왕씨 고려’라고 부른다. 비록 왕씨 고려는 고구려의 칭호를 계승했지만, 고구려의 승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고구려가 패망하고 고려가 세워지기까지는 큰 시간 차이(250년)가 있을 뿐 아니라 역사 발전과

연원도 크게 다르다. 기원전 37년에 세워진 '고씨 고려(고구려)'는 서한(西漢)의 현도군 고구려현 관할하에 있었다. 그후 점차 강성해졌지만 중국 중앙왕조와의 종속관계를 끊지 않았다. 수·당 시기로 접어들어 고구려는 영토 확장정책을 실시해 한반도에 있는 기타 정권(삼한과 신라·백제 등)이 중원의 왕조에 조공하는 통로를 가로막아, 수·당 두 왕조로부터의 토벌을 불러들였다.

서기 668년 당나라는 마침내 '고씨 고려'를 통일함으로써, 고씨 고려의 영토는 당나라 안동도호부(최초의 행정중심은 지금의 평양)에 의해 관할되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고씨 고려가 관할하던 구역에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지방정권인 '발해'가 들어섰고, 고씨 고려가 관할한 다른 일부분 지역은 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난 신라 정권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안동도호부에 의해 관할되었다.

고려는 三韓을 이었다

대부분의 고구려족은 당나라에 의해 내지(內地: 중국)로 옮겨져 한족과 융합되었으며 나머지 고구려인은 주위의 각 민족에 융합되었다. 이로써 고구려 왕족은 후계자가 끊겼으니 고구려는 나라를 세운지 700여 년 만에 드디어 중국 역사발전의 긴 강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왕씨 고려가 건국한 것은 고씨 고려가 멸망한 때로부터 250년 후인 서기 918년이었다. 왕씨 고려는 서기 935년 한반도에 있던 신라 정권을 대치하였고 그 이듬해에 후백제를 멸망시켜 반도 중남부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

그러다 서기 1392년에 왕씨 고려의 신하인 이성계(李成桂)가 왕을 폐위하고 스스로 왕위에 올랐다. 1393년 이성계가 "조선과 화녕(和寧) 중에서 어느 것을 국호로 해야 하는가"라는 주청을 올리자, 명나라 왕은 이성계에게 조선 왕을 하사하였다. 그리하여 왕씨 고려는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이를 '이씨 조선', 줄여서 '이조(李朝)'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명(明)·청(淸) 시기의 조선국이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왕씨 고려와 고씨 고려는 관할 구역 내의 주민 구성이 다르다는 점이다. 고씨 고려 관할지역 내의 주민은 고구려족이 주력이었다.

고구려족의 연원은 중국 상고시대부터 있었던 민족인 예맥족이 동쪽으로 이동해 부여·고이·옥저·소수맥(小水貊: 압록강의 북쪽에 있는 혼강에 고구려를 세운 종족. 주몽을 따라 나라를 세운 종족을 맥족이라고 하는데 그중에서大水인 압록강 유역의 맥족을 대수맥, 小水인 혼강 쪽의 맥족을 소수맥이라고 한다)·동예(東濊: 동해안 지역에 거주한 고구려족의 일파) 등이 되었는데 그후 위씨조선의 후예와 한족(漢族)·선비(鮮卑: 고대 남만주 몽골 등지에 살았던 유목 민족)족 등이 들어가 융합하였다. 많은 민족으로 구성됐지만 이들은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점차 융화돼 하나가 되었다. 역사서(史書)와 학계에서는 이들을 일반적으로 고구려족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왕씨 고려 관할지역 내의 주민은 신라인 위주였다. 왕씨 고려는 신라와 후백제를 병합하였으므로, 신라인과 백제인이 왕씨 고려의 주요 주민이 되었다. 대부분의 신라인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진한과 변한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씨 고려 멸망 후 비록 일부 고구려인이 신라로 유입되기는 했으나 이들은 신라의 주력을 이루지는 못했다.

백제인은 대다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왕씨 고려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삼한인(三韓人)'이 중심이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역사서들은 왕씨 고려인과 중국의 옛 사람들이, '왕씨 고려는 삼한의 후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백

년간 계속된 왕씨 고려 왕조의 역사 발전 속에서 구성원들은 점차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되어가는데, 역사서와 학계에서는 이들을 ‘고려족’으로 부르고 있다. 왕씨 고려가 이씨 조선으로 이어졌으므로 조선은 민족 명칭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왕건은 낙랑군에 있던 漢族의 후예

마지막으로 왕씨 고려는 고씨 고려의 후예가 아니다. 왕씨 고려의 왕족은 고씨 고려의 후예가 아니었다. ‘고려사’를 쓴 사람은 왕건(王建)의 족속에 관해서 “고려의 선조는 역사에서 상세히 설명돼 있지 않다”라고 적었다. 그러나 중국학자가 고증한 바에 의하면 왕건은 서한(西漢) 시절 낙랑군에 있었던 한인(漢人)의 후예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한다.

그 근거로 왕씨는 낙랑군의 명문 귀족이었고 가호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왕건은 임종시에 남긴 가르침인 ‘십훈요(서기 943년 고려 태조 왕건이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열 가지 유훈, ‘훈요십조’라고도 한다)에서 자신은 고씨 고려의 후예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건은 자신은 평민 출신이며 ‘삼한 산천의 보호에 의지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한·진한·변한을 통일한 것이니 후계자들 또한 삼한을 소유하길 바랐던 것이다.

왕건이 고씨 고려의 후예였다면 그는 통치를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치인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씨 고려가 고씨 고려의 후예가 아니라는 좋은 반증이다. 왕씨 고려는 결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었다. 한대(漢代) 한반도에서 일어난 마한·진한·변한은 신라와 백제로 발전해갔고, 백제는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신라는 왕씨 고려가 대신하게 되었다.

그후 이조가 왕씨 고려를 대신해 최종적으로는 이씨 조선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권들의 강역(疆域: 영토) 범위는 한 번도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3. 고구려와 왕씨 고려의 역사가 혼돈된 원인

사람들이 왕씨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자로 잘못 보게 된 이유는 중국의 역사기록과 깊은 관계가 있다. 반고(班固: 후한 초기의 역사가, 서기 32~92년)가 쓴 ‘한서(漢書)’는 중국 정사(正史) 중의 하나로 고구려의 사적에 대해 제일 처음 기술했다. 진수(陳壽: 중국 서진의 역사가, 서기 233~297년)가 편찬한 ‘삼국지’는 처음으로 고구려를 ‘전기(傳記)’에 넣은 역사서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이르기까지 많은 역사서는 ‘동이전’ 혹은 ‘만이전(蠻夷傳)’ 속에 고구려의 전기를 기술하였다. 이 역사서들은 비록 구체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데 있어 약간의 실수를 범하고 있지만, 고구려의 역사 위치를 명확히 정해놓고 있다. 그런데 후대에 이르러 사서의 기록이 혼란스러워지면서 명백한 실수가 나오기 시작했다.

왕씨 고려는 서기 918년에 나라를 세우고 1392년 이씨 조선으로 교체되었는데, 이 시기는 중국

대부분의 고구려족은 당나라에 의해 내지(內地: 중국)로 옮겨져 한족과 융합되었으며 나머지 고구려인은 주위의 각 민족에 융합되었다. 이로써 고구려 왕족은 후계자가 끊겼으니 고구려는 나라를 세운지 700여 년 만에 드디어 중국 역사발전의 긴 강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 무용총 벽화

의 오대(五代) 중기에서 명나라 초기에 해당한다(五代는 五代十國의 약어로 당나라가 멸망한 907년부터 송나라가 통일한 960년 사이의 약 70년간 중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되었던 시기다). 따라서 '구오대사(舊五代史)'와 '신오대사' '송사(宋史)' '요사(遼史)' '금사(金史)' '원사(元史)' '명사(明史)' 등의 역사서에는 모두 '고려전'이나 '조선전'이 등장한 반면 고씨 고려에 대한 기록은 그 이전의 역사서에 비해 약술하게 되었다.

'舊五代史'로부터 시작된 오류

이러한 역사서의 기록을 종합해보면 '구오대사'와 '신오대사'는 가장 먼저 고씨 고려를 왕씨 고려전에 기록한 책이었다. 그리고 '송사'는 '왕건이 고씨의 자리를 계승하였다(王建承高氏之位)'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책이다. '구오대사'와 '신오대사' 그리고 '송사'에 등장하는 이 기록은 그 후에 나온 여러 역사서의 기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다. '구오대사'의 고려전은 약 240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당나라 말년 중국에서는 내란이 많았다. 그래서 고려인은 스스로 군장(君長: 왕이나 우두머리)을 세웠는데 이들의 이전 왕(前王)의 성은 고씨였다"라고 적었다. '구오대사'는 고려인이 군장을 세웠는데 전왕은 고씨였다고 묘사한 후 바로 왕씨 고려에 대한 기록을 이어갔으니, 왕씨 고려가 고씨 고려를 잇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를 만들어준 것이다.

'신오대사'의 고려전은 약 280자로 돼 있는데 그 첫머리에는 "고려는 본래 부여인의 별종(別種)이다. 그 나라와 군주 등에 관한 기록은 '당서(唐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들은 다른 이적(夷狄: 오랑캐)과 달리 성씨가 있었고 관직의 호칭을 대략적이거나 알 수 있었다. 당 나라 말년에 (이들은) 왕씨 고려가 되었다"라고 서술한 후 모두 왕씨 고려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이러니 왕씨 고려는 고씨 고려를 잇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의미임).

'구오대사'는 북송(北宋) 사람인 설거정(薛居正)이 감수하여 북송 초기인 서기 973~974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반세기 동안이나 분열 국면(5대10국)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통일 전쟁도 진행되고 있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구오대사' 고려전의 기록은 간략해졌을 뿐만 아니라,

잘못 기재된 곳이 많았다. “당나라 말년 중국에서는 내란이 많았다. 그래서 고려인은 스스로 군장을 세웠는데 전왕의 성은 고씨였다”는 기록이 바로 그런 예에 해당한다. ‘구오대사’ 고려전에 나오는 이 기록을 오류로 단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는 조선에서 나온 한문 역사서를 포함한 어떠한 역사서를 찾아봐도 고씨가 당나라 말년에 고려 정권을 세웠다는 기록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둘째로는 송나라 사람인 사마광(司馬光: 중국 북송 때의 정치가이자 사학자. 서기 1019~1086년)이 ‘자치통감(資治通鑑)’ 편찬할 때 위에 언급한 글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사마광이 이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이 기록들이 잘못된 것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구오대사’를 감수한 설거정은 고씨 고려와 왕씨 고려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밝히지 못했는데 이러한 오류는 ‘신오대사’의 저자인 구양수(歐陽脩: 송나라의 정치가이자 문인. 서기 1007~1072)에 의해 해결되었다.

구양수는 ‘신오대사’를 편찬할 때 많은 소설(小說)과 필기자료를 참고하여 사람과 사건에 대한 묘사를 생동감 있게 집어넣었다. ‘구오대사’ 고려전은 고씨 고려에 관해 간략히 기술하였으며 왕씨 고려의 건국 근원을 밝히고 있다. ‘구오대사’ 고려전에서 “당 나라 말년에 중국에서는 내란이 많았다. 그래서 고려인은 스스로 군장을 세웠다”는 단락이 ‘신오대사’ 고려전에서는 “조금 후에 스스로 나라를 세웠다”로 간소화되었다.

그후 ‘신오대사’가 나온 이후 편찬된 ‘신당서’ 고려전과 ‘구당서’ 고려전에는 이러한 기록이 없�지고 오히려 ‘고씨 왕족이 사라졌다’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는 고려 왕족의 후계가 끊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宋史’가 잘못 기록

원나라 사람 탈탈(脫脫) 등이 편찬한 ‘송사’는 고려전을 따로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해놓고 있다. 여기에는 “고려는 본래 고구려이고 땅은 구주(九州: 중국 전토. 夏의 시조인 禹가 중국을 아홉 개 주로 나누었다는 데서 유래)와 달라 기주(冀州: 중국의 동북지방)의 땅에 속한다. 주나라 때는 기자(箕子)의 국토였고, 한나라 때는 현도군이었다. 고구려인은 요동에서 생활하였는데 대개 부여인의 한 별종이었으며 평양성을 수도로 삼았다. 한나라 이래로 늘 중국에 공물을 바쳤다.

그러나 자주 변경에서 난을 일으켜 수 양제는 두 번 군사를 일으켰고 당 태종도 직접 토벌하러 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당 고종은 이적에게 고구려를 정복하도록 명령하니 이적이 드디어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군현(郡縣)으로 나누었다. 당나라 말년 중국에 내란이 많아지자 고려인은 스스로 군장(君長)을 세웠다.

후당(後唐) 동광(同光) 천성(天成) 때 고려 국왕 고씨는 자주 후당 왕에게 공물을 바쳤다. 후당 장흥왕 때 권지국사(權知國事: 아직 왕호를 인정받지 못하는 동안 우선 임시로 국사를 맡아 다스린

변경에서 수양제는 두 번 군사를 일으켰고 당 태종도 직접 토벌하러 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당 고종은 이적에게 고구려를 정복하도록 명령하니 이적이 드디어 성을 함락시키고 그 땅을 군현(郡縣)으로 나누었다. 당나라 말년 중국에 내란이 많아지자 고려인은 스스로 군장(君長)을 세웠다.

다는 뜻의 칭호) 왕건이 고려의 왕위를 계승하였고 사신을 중국으로 파견하여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이 내용 다음에는 왕씨 고려가 송 왕조와 교류한 것에 대한 사실이 기록돼 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송사’ 고려전은 앞부분에서 ‘신·구오대사’의 기술을 종합하고 이러한 기초 위에 두 역사서의 작자가 명확히 밝히지 않았던 왕씨 고려와 고씨 고려 간의 관계를 “왕건이 고씨 고려왕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함으로써, 고씨 고려와 왕씨 고려가 계승 관계에 있는 것처럼 기술했다. ‘요사’ ‘금사’도 원나라 사람 탈탈 등이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잘못이 발견된다.

그후에 나온 역사서들은 이렇게 잘못된 기술을 답습하였다. ‘명사(明史)’는 이전에 나온 잘못된 역사서보다 한 발 더 나갔다. ‘명사’는 명 왕조가 이성계를 조선의 국왕으로 책봉한 것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을 하려다 보니 앞의 몇몇 역사서가 저지른 오류를 답습했을 뿐만 아니라, 이씨 조선 정권의 연혁에 대해서도 아주 잘못된 계통을 세워주었다(‘명사’는 청나라 때 장정옥 등이 칙령을 받아 1679년부터 1735년에 걸쳐 기전체로 편찬한 336권의 역사서).

기자조선~고구려 넘겨준 ‘明史’

즉 ‘명사’는 “기자조선-위씨조선(위만조선)-한사군-고구려-동사복국(東徙復國: 패망한 고구려의 후예들이 동쪽으로 옮겨가 세웠다는 나라. 대체로 발해로 이해되고 있다)-왕씨 고려-이성계가 국호를 바꾸기 전의 고려-이씨 조선”으로의 계통을 세워줌으로써, 중국 역사에 속하는 기자조선과 위씨조선·한사군·고구려를 모두 조선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렇게 중국 역사서에서 기술에 오류가 발생한 이유는 다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란으로 문헌이 유실된 데다 왕씨 고려에 대한 오도(誤導)가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겠다. ‘속자치통감장편(續資治通鑑長編)’의 권 323, 송 원풍 5년(서기 1082) 2월 기사(己巳)일에는 이런 내용이 실려 있다.

사관수찬인 증공은 “내가 사서를 고찰해 보니 주몽은 흘승골을 수도로 한 후 국호를 고구려”로 정하였다. 고구려의 왕은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 당나라 고종 때 고구려 왕인 고장(高藏: 고구려의 마지막 왕으로 보장왕으로 불림. 재위 기간은 642~668년)은 국가를 잃고 서쪽으로 천도했다.

당나라 성력(서기 698~699년) 시기에 고장(보장왕)의 아들인 고덕무(高德武)가 스스로 국가를 세웠다(고덕무는 699년 당나라가 만든 안동도호부의 안동도독에 임명되었는데, 그가 소고구려를 세운 시조라는 주장도 있다). 고구려는 원화(元和) 말년까지 악사를 중국에 보내왔으나 그 이후로는 그러한 기록이 중국 역사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오대 동광(同光)·천성(天成) 시절 고씨 성을 가진 고려 왕이 와서 다시 조공을 하였으나 그 이름은 알지 못한다.

장흥 3년 권지국사(權知國事)인 왕건이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하였고 이로 인해 왕건을 왕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왕위를 왕건의 아들인 왕무(王武: 혜종)를 거쳐 왕무의 아들 왕소(王昭: 광종), 왕소의 아들 왕유(王由: 경종), 왕유의 동생 왕치(王治: 성종), 왕치의 동생 왕송(王誦: 목종), 왕송의 동생 왕순(王詢: 현종) 등으로 이어갔다. (이렇게 왕씨들이 왕위를 이어갔기 때문에) 고구려는 주몽에서 고장까지의 21대에 걸쳐 700년간 고씨 성을 이어간 후 멸망한 나라였음을 고증할 수 있다. 고구려는 국가를 잃은 후 또 하나의 국가(소고구려 등을 말하는 듯)를 세웠다. 하지만 왕의 이름과 순서, 흥망의 본말(本末)과 왕건이 나라를 세웠을 때의 일들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 후 왕씨 고려는 송 왕조에게 왕씨 고려와 고씨 고려를 연결해달라는 하나의 ‘고려세차(高麗

世次: 고려 왕의 차례)’를 바친다. 여기서 송나라 사람들은 왕씨 고려와 고씨 고려에 대한 인식이 모호해졌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왕씨 고려가 바친 고려세차는 한 걸음 나아가 사실을 오도하는 작용을 했다.

‘고려’와 ‘조선’이라는 명칭을 도용

중국 사서들이 명백한 오류를 범함으로써 중국의 고대 변방민족이 사용하던 ‘고려’라는 명칭을 삼한(三韓) 신라의 계승자인 왕씨 정권이 도용하게 되었고, 한 발 더 나아가 왕씨 정권의 계승자인 이조(李朝)는 기자조선이 쓰던 ‘조선(朝鮮)’이라는 이름을 또 도용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중국 고대 동북지역에 있었던 변방정권의 연혁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많은 혼란과 잘못된 견해를 갖게 되었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료이다. 양보룡(楊保隆)은 1987년 제1기 ‘민족연구(民族研究)’에 게재한 “고구려전을 신고 있는 여러 역사서에 대한 몇 가지 문제 판별 방법(원제 各史高句麗傳的幾個問題辨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매우 유익한 연구를 시도했다. 그러나 앞으로 해나가야 할 연구과제는 많기만 하다.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를 정상적인 학술연구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우리는 고구려사 연구에서 발견되는 역사 문제를 ‘현실화하는 것’과, 학술문제를 ‘정치화하려는’ 경향과 작태에 대해 반대한다(고구려를 중국 역사로 분류하려는 중국측의 고구려사 연구에 한국측이 반대한다는 뜻인 듯). 고구려사는 중국 역사는 물론이고 한반도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계속해서 깊은 연구를 요구하는 과제이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은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학계에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고구려사를 연구하고 이를 심화하는 것은 학자의 책임이다. 연구한 결과에 대한 차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통일된 결론을 도출할 수 없을지라도, 학술 규범에 부합하는 규칙으로 학술 성과를 교류하고, 상호 존중하는 가운데 학술상의 논쟁을 벌여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 나라의 학자가 고구려 역사에 대한 연구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큰 진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정권”

李大龍 (중국 변경사지연구중심 편집부 주임)



高句丽是古代中国的一个地方民族政权

(撰稿人：李大龙)

高句丽，我国史书也称高句骊、高骊、高丽，是公元前37年出现在东北地区的边疆民族政权，至公元668年为唐朝所灭，存世7个世纪。

关于高句丽的政权归属，尽管过去我国学术界存在着一些不确切，甚至错误的看法，但目前高句丽是古代中国的地方民族政权已经成为我国学术界多数学者的共识，主要基于以下几个方面的原因：

第一，高句丽是我国境内的民族建立的地方政权。

高句丽政权是西汉时期玄菟郡高句丽县境内的边疆民族建立的地方政权。史书和碑刻资料记载显示，高句丽政权是夫余的一支南下和西汉高句丽县境内其他边疆民族共同建立的，之后又有沃沮、东秽、小水貊等其他秽貊族系的成员，以及汉人、鲜卑人、肃慎人等民族的成员加入，逐渐融合形成了高句丽民族。也就是说，高句丽政权的民族构成虽然来源众多，但这些民族都是西汉时期活动在东北边疆地区的民族，并早在周朝时期就和中央王朝建立了密切关系，至西汉时期他们活动在西汉玄菟郡，接受着西汉王朝的有效管辖，就是高句丽政权建立初期西汉对高句丽仍然是具体的直接管理，《三国志·魏书·高句骊传》载“汉时赐鼓吹伎人，常从玄菟郡受朝服衣帻，高句骊令主其名籍”，说明玄菟郡总理高句骊事务，提供官服，高句骊县令掌管高句骊国的“名籍”即户口，负责处理高句骊的具体事务。唐朝继隋朝之后不断兴兵统一高句丽，理由之一就是高句丽的活动区域很早即是前代实施统治的地区。

值得说明的是，尽管在高句丽民族起源问题上还存在着秽貊说、夫余说、高夷说、商人说、炎帝说等不同的看法，但这些民族也都是古代中国境内的民族，并不能改变高句丽民族的归属性质。

第二，高句丽的活动中心几经迁徙，但并没有超出汉四郡的范围。

高句丽政权建立后，随着其势力的发展，都城几度迁徙，纥升骨城、尉那岩城、丸都城、平壤城、长安城都曾经是高句丽的都城。一般认为今辽宁省桓仁县城附近的五女山城是高句丽的早期都城；尉那岩城在今吉林省集安市霸王朝山山城；丸都城位于今天吉林省集安

市；平壤城、长安城则位于今天朝鲜平壤附近。尽管高句丽后期将都城迁徙到了今天我国疆域之外，但高句丽兴起之前，西汉在东北地区的玄菟、乐浪、临屯、真番等郡，其管理范围包括了今天我国东北和朝鲜半岛北部地区，因而高句丽的活动中心并没有超出原西汉四郡的管辖范围。

第三，高句丽一直和我国历代中央王朝保持臣属关系，并没有自绝于“中国”之外。

一方面，受国内形势的影响，历代王朝对高句丽的管理经历了一个由直接到间接，再由间接到直接的发展过程：两汉王朝对高句丽的管理是直接的；三国两晋南北朝时期中原内乱，高句丽势力有所发展，除邻近的政权之外，多数中国分裂政权仅仅是要求和高句丽保持臣属关系；隋唐时期，中国结束了分裂，隋唐王朝再不满足于对高句丽实施间接统治，公元668年经过隋唐两朝的努力，高句丽终于又被纳入到了唐朝安东都护府的直接管辖下。尽管管理方式不同，但历朝各代的统治者都认为高句丽的活动区域是中国的固有领土。隋朝的统治者认为“高骊之地，本孤竹国也。周代以之封于箕子，汉世分为三郡，晋世亦统辽东。今乃不臣，别为外域，故先帝疾焉，欲征之久矣”（《隋书·裴矩传》）；唐太宗也认为高句丽乃“故中国地，而莫离支（高句丽的官名）贼杀其主，朕将自行经略之”（《新唐书·东夷高骊列传》）等等，也正是有如此认识隋唐两朝才不惜动用全国的力量统一高句丽。

另一方面，高句丽也没有自绝于“中国”之外，在长达7个世纪的时间里，和每个中国王朝，就是在三国两晋南北朝中国处于大分裂时期的各分裂政权也都保持着密切的臣属关系，唐朝建立后高句丽“上封域图”及《通典·高句丽传》载“自东晋、宋至于齐、梁、后魏、后周，其主皆受南北两朝封爵”即言此。也正是因为没有自绝于“中国”之外，在唐朝统一高句丽后有一大批高句丽人为维护祖国统一立下了汗马功劳，青史留名，诸如泉男生、高仙芝、王毛仲、王思礼、李正己等。

第四，高句丽灭亡后主体部分融入到了汉族之中。

据学者研究，高句丽原有人口70余万人，唐朝统一高句丽后这些高句丽人的去向大致有四：其一是迁居中原。唐太宗、高宗两朝有近30万人被迁徙到了中原，占全部高句丽人的近一半，分布地点包括今天的北京、河南、安徽、江苏、湖北、山西、陕西、甘肃、四川等众多省区，这些高句丽人逐渐融合到了汉等民族之中。其二是投入新罗（今朝鲜族的先民建立的政权）。通过投奔、被俘、并入等途径进入到新罗的高句丽人大约有10万人左右。其三是亡入靺鞨（渤海）。渤海国建立后，留居在故地的部分高句丽人投奔了渤海，人数大致在10万以上，这些高句丽人后来成为了渤海族的组成部分，在金代又逐渐融合于女真族之中，金朝灭亡后大多融入了汉族之中。其四是散入我国古代北方突厥等民族之中，人数在万余人左右。这些人加上在战争中死亡的人数，和高句丽原有的人口大致相合。由此我们可以看出，高句丽灭亡后绝大部分高句丽人融入到了中华民族之中。

综合以上各点，认为高句丽是古代中国的地方民族政权是符合历史事实的，高句丽的都城一度迁徙到今天中国领土之外，以及有小部分高句丽人融合到了境外民族之中并不能改变高句丽政权的归属性质。



◀ 고구려 마상
공술 훈련모습-
덕흥리 벽화고분
'마사희도'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 민족정권”



▲ 고구려의 제천행사.

고구려는 일찍이 고대 중국에 있어서 출현한 일개 민족으로 이들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700여 년 동안 유지하여 왔던 바, 고대 중국의 변방에 위치한 일개 지방정권이였다. 고구려사 연구는 하나의 학술 문제로서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므로 연구 범위에 따라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논쟁을 전개하고 있다. “같은 것은 같다(能同則同)”고 하지만, 즉 “원칙적이고 일치되는 의견은 취하지만, 비 원칙적이고 부차적인 것은 보류(不同則求同存異)”하고 있다. ‘高句麗’는 중국의 사서(史書)에서 ‘高句驪’ ‘高驪’ ‘高麗’라고도 칭하였던 바, 기원전 37년 동북 지역의 변경민족정권으로 출현하여 기원 668년 당조(唐朝)에 의해 멸망하기까지

7세기 동안 존재하였다. 고구려 정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비록 중국 학술계에 부정확한 (심지어는 착오적인) 견해가 존재하기는 하나, 현재 고구려는 고대중국의 지방민족정권이라는 견해가 이미 대다수 학자들에게 의해 공히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원인에 의거한다.

첫째, 고구려는 중국 영역 내의 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다. 고구려 정권은 서한시기 현토군 고구려 현 영역 내의 변경민족이 건립한 지방정권이다. 사서와 금석문 자료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바, 고구려 정권은 부여의 일파가 남하하여, 서한의 고구려 현 영역 내에 기타 변경민족이 공동으로 수립하였고, 또한 이 후로 동예·소수맥 등 기타 예맥 족 계통의 성원 및 한인(漢人)·선비·숙신 등의 민족이 그 구성원으로 유입되어 점차 고구려 민족으로 융합·형성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고구려 정권의 민족구성이 비록 그 원류에 있어서는 다양하지만, 이들은 모두 서한시기 동북변경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으로, 이미 주대(周代) 시기에 중앙왕조 건설에 화합하여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서한시기에 이르러 이들은 서한 현토 군에서 활동하였는데, 서한 왕조의 효율적인 관할을 받아들이고 있었고, 고구려 정권의 건립 초기에도 서한은 고구려에 대하여 여전히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관리를 하였다. 『삼국지』위서 고구려 전을 보면, “漢時賜鼓吹技人, 常從免帑郡受朝服衣幘, 高句麗領主其名籍”이라 하여, 현토 군에서 고구려에 대한 사무를 관리하였고, 의복을 제공함은 물론 고구려 현령은 고구려국의 ‘명적’, 즉 호적을 관장하고 고구려의 구체적인 사무를 책임지고 처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조는 수(隋)왕조를 계승하여 끊임없이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를 통합하였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고구려의 활동 지역이 매우 이른 시기, 즉 전대(前代)로부터 중국이 통치를 실시한 지역이었기 때문이었다. 분명한 사실은 비록 예맥 설, 부여 설, 고이 설, 상인 설, 염제 설 등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이들 민족들은 모두 중국 영역의 민족으로서 고구려 민족의 귀속성질을 절대 변화시킬 수는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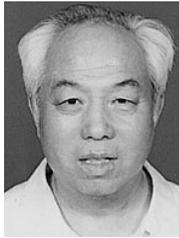
둘째, 고려의 활동 중심이 이동하며 그에 따라 몇 번의 천도가 있었으나, 결코 한사군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고구려 정권은 건립 후, 세력의 전개에 따라 몇 차례 천도를 하였는데, 홀승골성, 위니암성, 환도성, 평양성, 장안 성 등이 모두 고구려의 도성이었다. 일반적으로 현재의 요녕성 환인현성 부근의 오녀산성은 이른 시기 고구려의 도성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니암 성은 현재 길림성 집안 시 패왕조산(霸王朝山)산성에 있으며, 환도성은 현재 길림성 집안 시에 위치하고 있다. 이밖에 평양성, 장안성은 현재 조선의 평양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비록 고구려 후기의 도성이 현재 중국의 영역 밖으로 옮겨갔지만, 고구려

의 흥기 이전 서한시기부터 동북 지역에는 현토, 임둔, 진번 등의 군이 있었고, 그 관할 범위가 현재 중국 동북 지역과 조선반도 북부 지역을 포괄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의 활동 중심은 서한의 사군이 관할하고 있었던 원래의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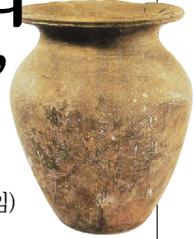
셋째, 고구려는 줄곧 중국 역대 중앙왕조와 군신관계를 유지하였고, ‘중국’의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그 관계를 스스로 끊지 않았다. 이 부분은 중국 정세의 영향을 받는데, 고구려에 대한 역대왕조의 관리는 직접에서 간접으로, 다시 간접에서 직접으로 변화 과정을 겪었다. 양한(兩漢)왕조는 직접적으로 고구려를 관리하였다. 삼국·양진·남북조 시기 중원에서 내란이 발발하고 고구려의 세력이 발전하게 되자, 주변의 정권을 제외한 중국의 다수 분할 정권들은 고구려와 화친하여 신속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수당시기에 이르러 중국이 분열을 매듭짓자, 수·당 왕조는 다시 고구려에 대해 실시하고 있던 간접통치에 만족하지 못했고, 서기 668년 수당 양 왕조의 노력을 통하여, 고구려는 결국 안동도호부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된다. 비록 관리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역대 왕조의 통치자들은 고구려의 활동 영역을 중국의 고유한 영토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수대의 통치자들은 “高驪之地，本孤竹國也。周代以之封于箕子，漢世分爲三郡，晉世亦統遼東，今乃不臣，別爲外域，故先帝疾焉，欲征之久矣”(『수서』「배구전」)라고 인식하였다. 당 태종 역시 고구려에 대하여 “古中國地，而莫離支賊殺其主，朕將自行經略之”(『신당서』「동이고려열전」)라 하였으니, 이와 같은 인식처럼 수당 양 왕조는 확실히 고구려의 통합을 위하여 온 국가의 역량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고구려 또한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관계를 끊지 않았다. 7세기에 걸친 기나긴 시간 동안 고구려는 각각의 중국 왕조와 화친을 하였는데, 특히 삼국·양진·남북조시기 대분열의 기간에 처한 중국의 각개 분할 정권들은 모두 밀접한 신속관계를 유지하였다. 당조의 건립 후 고구려는 “上封域圖” 및 『통전』 「고구려 전」에 기록된 바, “自東晉，宋至于齊，梁，後魏，後周，其主皆受南北兩朝封爵”이라 하였다. 역시 ‘중국’ 밖으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관계를 끊지 않았기 때문에 당조가 고구려를 통일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고구려인들은 중국이 통일 국가를 세우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특히 천남생, 고선지, 왕모중, 왕사례, 이정기 등과 같은 사람들은) 전공을 세우고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넷째, 고구려 멸망 후에 그 주체 집단은 한족에 융합되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고구려의 원래 인구는 70만 명이었는데, 당 왕조가 고구려를 통일한 후 이들 고구려인들은 크게 4부분으로 이동하였다고 한다. 첫 번째로 중원으로 천거하였다. 당 태종, 고종 왕조 때에는 3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중원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는 전체 고구려인의 절반에 가까운 수를 접하며, 그 분포 지는 오늘날의 북경, 하남, 안휘, 강소, 호북, 산서, 섬서, 감숙, 사천 등의 다양한 지역을 포함한다. 이들 고구려인들은 점차로 한족 등의 민족으로 융합된 경우이다. 둘째는 오늘날 조선의 선민이 건립한 정권인 신라에 유입되었다. 스스로 찾아가거나, 포로로 잡히거나, 편입되는 등의 방식을 통하여 신라에 들어간 고구려인들은 대략 10여 만 정도가 있었다. 세 번째는 말갈, 즉 발해로 망입 한 경우이다. 발해국이 건립된 이후 옛 고구려 땅에 유거하였던 고구려인들은 발해로 찾아들어 갔다. 그 수는 대략 10만 이상에 다다르며, 이들 고구려인들은 이후 발해족의 구성을 이뤘지만, 금대에 이르러서는 점차로 여진족에 융합되고, 금조의 멸망 후 대다수가 한족으로 유입된다. 넷째는 중국 고대 북방에 있었던 돌궐 등의 민족에 산입되는 것으로, 그 수는 만여 명 정도이다. 전쟁 중에 사망한 인구를 이들에 더하면, 고구려의 원 인구수와 대체로 상합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고구려 멸망 이후 절대다수의 고구려인들이 중화민족의 일부로 융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각 부분을 종합해 보면,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지방 민족정권이었음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며, 고구려가 오늘날 중국의 영역 밖으로 도성을 이동하였음은 물론, 일부분의 고구려인들이 중국 영역 밖의 민족에 융합되었다는 것은, 고구려 정권의 귀속성질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라 인식된다.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개방과 번영의 6년”



孫進己 (심양동아연구중심 주임)

中国的高句丽史研究长期以来被一些单位的人为禁区所束缚，发展非常艰难，许多中国学者一再呼吁要求真正实现“研究无禁区”。1998年终于实现了学者的愿望，对高句丽研究的障碍被冲破了，学者们可以各抒己见、百花齐放、百家争鸣了，这样带来了中国高句丽史研究的开放和繁荣的新时代。从1998—2003年，这六年中，中国学者组织了多次高句丽的学术讨论会，发表了数百篇学术论文，写出了十余本高句丽史的专著，每年发表有关高句丽的论文是以前每年发表的十多倍，专著也是以前百余年总数的十余倍。同时中国学者也是在这几年参加了国际交流，总数达数十人次，开始让国际上听到中国学者的声音，中国近年高句丽史的这种繁荣是学术进一步开放、学者各抒己见的结果，很难想象如果仅用一个单一的框式去研究高句丽会有今天这种繁荣的局面。

由于对以前的高句丽研究已有大量的文章综述介绍^①，在这里就不再重复了，下面仅把自己所知的目前中国对高句丽史研究的几个主要问题的不同观点评述于下，供国外学者参考。

一、对高句丽史归属的不同看法

大家都知道，长期以来中国学者对高句丽归属就有不同看法。一种认为高句丽史是朝鲜史的一部分，与中国史无关；另一种观点则认为高句丽史是中朝共有的。从1998年以来，又产生了一种新的观点，认为高句丽史全属中国，与朝鲜无

^① 孙进己：《高句丽历史研究综述》，《社会科学战线》2001年5期；孙进己：《高句丽考古研究综述》，《韩国》《高句丽遗迹发掘和遗物》，学研文化社2001年版；孙进己：《高句丽历史地理研究综述》，《东北历史地理理论丛》摘刊，哈尔滨出版社2002年版；孙进己：《高句丽研究综述》《历史上政权、民族归属理论研究》1999年征求意见稿；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论丛·研究篇》，黑龙江教育出版社2001年版；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2003年版。

关。这几种观点，一直争论不下。从目前看，认为高句丽史全属朝鲜的学者不多，主要有蒋菲菲、王小甫等人^①。而主张高句丽史全属中国的学者也不多，主要有马大正、耿铁华、张碧波等人^②。主张高句丽史为中朝共有的，则有孙进己^③、姜孟山^④、刘子敏^⑤、徐德源^⑥、朴灿奎^⑦等。

下面重点介绍一下我个人的看法。我认为应把现实继承和历史归属两个问题区分开来，不久前我曾应韩国中央日报所请，按此观点写了一篇文章，名为《正确认识高句丽史的现实继承和历史归属》，但发表时中央日报被改为《中国继承了高句丽三分之二土地》，与我原来所要表达的意见完全不一样了，并评论认为这表明了中国的霸权主义野心。我不理解，中国怎样才算没有霸权野心，难道中国必须从现有边界后退，把古高句丽的土地全部让给朝(韩)，才是没有野心吗？可这又置在中国的高句丽子孙于何地？难道他们就不应继承古高句丽的土地吗？

高句丽的现实继承是由中朝(韩)的现实国界所决定的。中朝(韩)的国界是近千年历史长期发展形成的，是现今两国政府共同签约承认的。两国政府和人民谁也不想也不可能改变这一国界。因此，这一国界就自然划定了古代高句丽土地、人民的归属。高句丽大约有三分之二的土地、四分之三的人口是在现今中国的土地上，是由中国所继承的。高句丽大约有一分之一的土地、四分之一的人口则是由朝(韩)所继承了。谁也无法否认高句丽由两国共同继承的历史事实。因此说“一

^① 蒋菲菲、王小甫：《中朝关系史·古代卷》，社会科学文献出版社 1998 年版。

^② 马大正：《试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高句丽历史知识》，吉林文史出版社 2003 年版，边众之文同此；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 2002 年版；耿铁华、杨春吉：《高句丽归属问题研究》，吉林文史出版社 2000 年版；张碧波：《关于历史上民族归属与疆域问题的再思考》，《黑土地的古文明》，远方出版社 2000 年版。

^③ 孙进己：《当前高句丽归属研究的几个问题》，沈阳公元 3—10 世纪文化学术研讨会学术报告，《东疆学刊》2001 年 3 期；孙进己：《让渤海史研究成为促进东北亚各国友好的桥梁》，宁安渤海史 2001 年会议学术报告，《博物馆研究》2002 年 3 期；孙进己：《再论高句丽归属的研究》，通化高句丽史学术会议交流；孙进己：《中国疆域形成发展理论研究》，乌鲁木齐中国民族史学术会 2002 学术报告，《中南民族大学学报》2003 年 2 期；孙进己：《关于高句丽渤海研究中的一些问题》，延边高句丽渤海会议报告 2003 年 8 月。

^④ 姜孟山：《高句丽的归属问题》，《黑土地的古文明》，远方出版社 2000 年版。

^⑤ 刘子敏：《关于高句丽政权及其领域的历史归属问题的历史回顾及我见》，《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论文集》。

^⑥ 徐德源：《关于朝鲜早期史研究经受误导的思考》，《全国首届高句丽学术研讨会论文集》1999 年 6 月；徐德源：《高句丽历史与疆域归属问题补议》，《社会科学战线》2001 年 5 期。

^⑦ 朴灿奎：《浅谈高句丽历史归属研究的几个问题》，延边高句丽、渤海问题学术研讨会，2003 年。

史两用”是可以的，但是应各用各的部分。

中国继承了鸭绿江、图们江以北高句丽的土地和人民的历史及文化遗产，朝(韩)继承了鸭绿江以南高句丽的土地、人民的历史及文化遗产。没有理由片面强调高句丽史归属某一个国家，而排斥对方的继承，应彼此互相关心共同祖先留下的文化遗产。

至于高句丽的历史归属于何国，这纯粹是一个历史上的学术问题，因为无论当时高句丽属于何国，都距今已千余年。谁也无法依据千余年前的归属来要求改变今天的国界。因此，学者可以各持己见、心平气和地讨论，不必因此而损伤两国的友好。相信，在讨论中可以求同存异，逐渐达到一致。

我认为讨论高句丽的历史归属，不必涉及过多无关的问题，如高句丽起源于何民族?建立在哪国的土地上?这说的都是高句丽以前的归属，不能用来说明高句丽存在时期的归属。又如高句丽的土地以后属于谁?人民以后属于谁?这说的是高句丽灭亡后的归属，也不能用来证明高句丽存在时期的归属。高句丽在历史上的归属只能用当时高句丽在政治上归谁来管辖决定，与高句丽在经济上、文化上与谁有联系、或与谁相同无关。

从当时高句丽接受中国中央政府册封为高句丽王的同时，还册封为中国的中央和地方官吏，如征东大将军、平州刺史等，就可以证明高句丽在历史上是隶属中国的。世界历史上没有一个国家的首脑自愿兼任别国的中央和地方官吏，还能称为独立国家。所以，我不是认为只要有册封就是中国的地方政权，而是指高句丽当时这种特定的册封关系证明了高句丽归属中国。以后王氏高丽、李氏朝鲜仅接受高丽国王和朝鲜国王的册封，不再担任中国的中央和地方官吏，就不再算作中国的地方政权了。

同时，在历史的漫长的过程中，地方政权会有时臣服、有时叛乱，这就只能依据它主要是臣服?还是主要是独立?来确定它的归属。之所以说高句丽是中国的地方政权，就因为在其整个历史中是以归属为主的。之所以我不认为新罗、百济是中国的地方政权，就因为他们虽也在一定时期接受了中国中央和地方的官职，但在它们整个的历史中只是暂时的。

所以，我还是这句话，高句丽的土地和人民哪国继承多少，已由历史决定了，没有讨论的余地，历史上高句丽当时属中国还是朝鲜，是千余年前的历史学术问

题，这方面的不同意见不影响现实边界，没有必要把学术问题上升为政治问题。

二、高句丽的民族来源和流向的研究

传统的对高句丽起源的认识，一般都认为高句丽出自于夫余，而夫余是貊的一种，因此也就出自貊^①。近年来，中国出现了一些新说，这是由于两方面探讨的结果。一方面是认为高句丽的起源仅探索到夫余是不够的，还应更进一步往上探索，就产生了高句丽起源于肃慎说^②、起源于商人说^③、起源于炎黄说^④、起源于高夷说^⑤、起源于高阳氏说^⑥。一方面是认为朱蒙到高句丽带来的人并不多，因此要了解高句丽的族源，还应从探索高句丽早期活动地区的考古文化着手，因而在分析考古文化的基础上，提出了高句丽起源于夷的一支貊人说^⑦、高句丽起源于土著民族说^⑧、高句丽起源于貊、夷、汉三源说。^⑨

我认为这方面的研究有两个问题必须提出：

其一，是从证据出发，而不是从愿望出发，我认为目前有许多新说，都不是从证据出发，而是从主观愿望出发，为了要把高句丽说成和华夏同源，就抓到一、两条史料牵强地论证。如高云曾自言出自高阳氏，这仅是他个人假托之言，却被作为有力根据，认为高句丽出自高阳氏；或牵强地认为夫余的语言和番徐音通，就认为夫余出自炎帝族系，高句丽因此亦出自炎帝族系；或仅从文献上有高夷就马上确指即高句丽先人。这种研究方法是不可取的，也得出科学的结论。根据掌握的一、两条史料提出一些假设供讨论是可以的，但要让假设成为科学的

^① 金毓黻：《东北通史》；张博泉：《东北地方史稿》，吉林大学出版社 1985 年版。

^② 王健群：《高句丽族属探源》，《学习与探索》1987 年 6 期。

^③ 范型：《高句丽族属探源驳议》，《高句丽研究文集》，延边大学出版社 1993 年版。

^④ 李德山：《高句丽族源及其族属考辨》，《社会科学战线》1992 年 1 期。

^⑤ 刘子敏：《高句丽最早的源头高夷》，《高句丽历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 1996 年版。

^⑥ 耿铁华、杨春吉：《高句丽归属问题研究》，《高句丽归属问题》，吉林文史出版社 2000 年版；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 2002 年版。

^⑦ 王绵厚：《关于汉以前东北貊族考古学文化的考察——兼论大石棚和石棺墓文化的族属与时代》，《文物春秋》1994 年 1 期。

^⑧ 金旭东、安文荣、杨立新：《探索高句丽早期遗存及起源》，《中国文物报》2000 年 3 月 19 日。

^⑨ 孙进己、孙泓：《高句丽族史》1999 年征求意见稿；孙进己：《高句丽的起源及前高句丽文化的研究》，《社会科学战线》2002 年 2 期。

定论，则还要收集更多的资料，做更科学的论证。

其二，是认识不到民族是多源的，认为民族是单源的，把高句丽族起源中的某一源和其他源对立起来，否定其他源的存在。如有的根据已发掘的万发拨子遗址得出结论，认为高句丽文化起源于鸭绿江流域的土著遗存，就认为高句丽源于北夫余的观点难成定论。事实上，朱蒙出自北夫余，这有大量史料证实，这可以是高句丽族的一源，而万发拨子文化，与旅大地区考古文化相近，很可能属夷系文化，是高句丽族的另一源，而万发拨子遗址四期文化中的汉文化因素，则可能反映了高句丽族的又一源。

因此我认为从对前高句丽文化的全面分析可以确定高句丽的起源至少分三个，夫余(貊)、夷、汉。是由这三支人融合而成高句丽人，高句丽的五部就可能分属不同族源，桂娄部、绝奴部可能出自夫余(貊)，万发拨子文化有可能是顺奴部的遗存，属于夷系。消奴部即沸流部，也属夷系的遗存，有可能即高夷。灌奴部则可能是汉人所组成，三者融合形成了高句丽族，没有必要强调某一源排斥另一源。当然这还仅是一个假设，要最后定论还需进一步综合文献记载、考古遗存，并参考人类学、语言学、民俗学各方面的资料，最后才能定论。

但是，韩国有些学者认为高句丽和新罗、百济属同一民族，高句丽出自古朝鲜，却更没有根据。高句丽和新罗、百济中间隔着汉晋的乐浪郡、带方郡，如何能成为同一个民族？同时，新罗出于辰韩和秦人，百济出于夫余和马韩，也和高句丽来源不同，韩、貊并非同种。高句丽也不是在古朝鲜土地上形成的。高句丽出于貊、夷、汉，而古朝鲜是由商人、夷人、秽人组成，两者之间的夷也不同，高句丽是高夷，古朝鲜是良夷。

关于高句丽的族源是研究高句丽史中的主要问题，但它并不能证明高句丽的归属，因为它研究的是高句丽建立前的民族起源和民族归属，这并不能证明高句丽民族形成后的归属。就像今天延边的朝鲜族虽起源于朝鲜，但今天却归中国管辖，美国人虽起源于英国，今天却不归英国，新加坡人民起源于中国，今天也不归中国，因此，一个民族的起源不能用来证明以后的归属，更不应为了证明归属而勉强用无法成立的理由来使族源迎合归属。

关于高句丽民族的流向，我曾提出高句丽民族不是单一流向朝鲜，而是有四

个流向，主要归于中国各族^①，这些年来，大体上国内学术界都已接受了这一说法。

近年则对此又作进一步探索，因为当初我探索的是高句丽民族的流向，而不是高句丽全体国民的流向，同时各流向的数字也均属估计，而没有精确数字，所以就有人试图作精确统计。^②

但事实上，这件事是很难精确计算的。例如有些人计算战争中死亡人数，俘虏人数，但这些死亡和被俘的人不一定是高句丽族人，也可能有汉人及高句丽统治下的靺鞨。这就要涉及到对高句丽所有民族人数及去向的探讨。高句丽灭亡时是 69 万多户，350 万左右人，其中汉人从陈大德报告“殆将半焉”至少有 20 余万户，被高句丽统治的靺鞨各部、粟末、白山、越喜、拂涅等，当有十余万户，被高句丽统治的沃沮和东秽人有数万户，被高句丽统治的新罗百济人，也应有数万高句丽族人，据《三国遗事》卷一：“高丽全盛之日，二十一万五百八户”，这应是高句丽族的人口数，高句丽亡后，为高句丽统治的汉人除被迁回中原部分外，当仍居故地，有部分以后随着唐、辽等将鸭绿江、大同江以南赐给新罗、高丽，随之归入今朝鲜，大部分留居该地。中国东北靺鞨各部在高句丽亡后则纷纷自立，成为中国的一个民族，今朝鲜土地上原被高句丽统治的沃沮、秽、新罗、百济等人当然归于新罗、高丽、朝鲜，这具体数字很难精确计算，但有三点是可以肯定的。一是高句丽亡后不管是全部遗民，还是高句丽民族，都分归今中朝两国了；二是无论如何计算，归入中国的高句丽遗民和高句丽族人都是占多数；三是这些遗人都已融入今中朝各族，而且在今中朝各族总人口中都占少数。不管如何去研究，这三点结论是改变不了的。

这样一个认识虽然粗略一些，但也足够了，至少不会再有人认为高句丽人就是以后的高丽人、今天的朝鲜人。因为今天朝鲜人中只继承了当时高句丽人的一小部分，大部分高句丽人是流入了中国；当年高句丽人的后代在今天朝鲜人中也只占少数，今天朝鲜人的主要来源还是新罗和百济。当然中国学者也不会说高句丽人全流入了中国，否认今朝鲜对高句丽有部分继承。

韩国有些学者虽承认高句丽人的流向是多方面的，但却认为高句丽的主要流向是今朝鲜，理由是大同江以北高句丽人还留居不少，以后都归高丽了。但事实

^① 孙进己：《东北民族源流》，黑龙江人民出版社 1987 年版，1992 年韩文版。

^② 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丛论》，黑龙江教育出版社，2001 年版；耿铁华：《中国高句丽史》，2002 年版。

上大同江地区的高句丽人大部分早在唐代就被迁入中原，留下的部分以后分别投入新罗和中国。以后，大同江地区主要是归女真人居住。但这个分歧可以慢慢地讨论，仔细地计算，至少韩国的许多学者已经承认高句丽人不仅仅归入今朝鲜，也有相当部分的人归入了中国，这就已经使我们的认识接近了一步。

关于高句丽人流向的研究，对确定今天高句丽由谁继承具有重要意义，但它并不决定当时历史上高句丽的归属，当时历史上高句丽的归属是由当时高句丽归谁管辖所决定，它后来的流向是高句丽灭亡后的事，决定不了灭亡前的归属。

三、高句丽建国的时间和地点

关于高句丽建国的时间，以前就有三说，即建立于公元前3世纪说^①，建立于公元前1世纪说^②，建立于公元1世纪说^③。近年又有一些学者论述此事，并认为“只要有某部头领沟通之后一宣布即可，不必要经过过渡了。”^④

但从史籍上看，朱蒙公元前37年到达沸流水，他还只有为数不多的人，当时尚未遑作宫室，建城是公元前34年。沸流部是公元前36年才降朱蒙。朱蒙接统卒本夫余之时，也不是公元前37年的事。取荇人国为城邑是公元前32年的事。不知朱蒙公元前37年建国是和哪一部沟通了？是向哪些人宣布了？这是把建立国家这一艰苦创业过程，视同儿戏。要说朱蒙在公元前37年时有建立国家的企图是可能的，但不等于他当年就能实现自己的愿望，并吞周边各部，建成国家总得有若干年，我们说在太祖王时完成高句丽国家的建立，不能算推得太晚。

至于朱蒙建国前沸流部已为王，和有些学者说在朱蒙建高句丽之前已有一个国家存在的问题。我认为从当时生产发展状况看，顶多是个部落联盟，是个城邦国家，还不可能真正的国家。严格的阶级国家，还是从朱蒙以后经几代努力建

^① 张博泉：《东北地方史稿》，吉林大学出版社，1985年版；耿铁华：《高句丽起源和建国问题探索》，《求是学刊》1986年1期；李殿福、孙玉良：《高句丽简史》，韩国汉城三省出版社，1990年版；佟冬主编：《中国东北史》第一卷，吉林文史出版社1988年版。

^② 顾铭学：《魏志高句丽传考释》，《学术研究丛刊》1981年1期；孙进己、艾生武：《关于高句丽社会性质的几个问题》，《朝鲜史通讯》4期，1982年。

^③ 丁谦：《汉书四夷列传地理考证》，金毓黻：《东北通史》上；姜孟山：《试论高句丽族的源流及其早期国家》，《朝鲜史研究》5期，1983年。

^④ 孙进己、张春霞：《高句丽国史》，1999年征求意见稿。

立，因此我们把高句丽国家形成的起点定为从高句丽人进入青铜时代开始，大约在公元前3世纪，而把高句丽国家的最后建立时间定在太祖王二十年(公元72年)左右。

关于高句丽建国的时间，韩国学者也都倾向于公元前3世纪或公元前1世纪说，我认为其根本还在于何谓建国？是否建立一个部落联盟，也算建国？建立一个城邦国家是否也就算建国？还是要建成一个庞大的严格意义上的阶级国家，才算建国？同时，承不承认国家的建立有一个相当长的过程？是否有起点、终点？这不仅涉及史实，还涉及理论，大家可以慢慢讨论。

关于高句丽建国的地点，过去曾有建在今中国东北和在今朝鲜半岛的不同看法，目前已无争议了，高句丽是建立在今中国东北的土地上。关于高句丽建国的地点当时属于谁，现在大家也有了一致认识，是在中国汉玄菟郡的土地上，如果说还有分歧，仅是在高句丽所建国的玄菟郡原来是否属于古朝鲜的土地。其实这问题已经与高句丽的归属全无关系，美国本来是建立在英国殖民地之上，并没有人因此就否认以后美国是独立国家，相反建立在他国土地上的政权后来归于另一国的也有很多。根本不能用高句丽建国在何国土地上来证明高句丽当时的归属，高句丽当时的归属只能依据高句丽存在期间归谁管辖而定。

但是既然对高句丽所建立的玄菟郡以前是否归朝鲜有分歧，作为一个历史问题，一个学术问题，当然也应该讨论。目前中国大约有这几种看法：一是认为玄菟郡本为朝鲜地，因此高句丽溯其本源还是和朝鲜有关。二是认为玄菟郡虽本为朝鲜地，但箕氏朝鲜、卫氏朝鲜，本来也是中国的，因此高句丽仍是建立在中国土地上。三是认为玄菟郡本非古朝鲜地，仅卫氏朝鲜暂时略属原玄菟郡地，不过数十年，这一地区在燕秦属辽东外徼，汉属沧海郡，汉武灭朝鲜，以朝鲜地置乐浪郡、临屯郡，而以中国东北地属玄菟郡、真番郡，所以高句丽与古朝鲜根本无关，论证高句丽的归属没有必要涉及古朝鲜的归属。我们是主张后一种意见，这个问题作为历史上的学术问题可以继续讨论。

韩国也有不少学者认为高句丽是建立在古朝鲜的土地上，但古朝鲜是以泪水与汉为界，虽然学者对泪水为今何水还有不同意见，但无论泪水是今天的何水，高句丽都不是建立在泪水以南，而是建立在泪水以北。如何能得出高句丽是建立在古朝鲜土地上的结论。至于汉四郡是否都建立在古朝鲜的土地上，这也是一个

值得讨论的问题，需要大家认真梳理史料，加以考订。

四、高句丽和中国中央皇朝的关系

这是近来研究高句丽史的起点，很多专著和文章都论述了这一问题，金毓黻的《东北通史》，早就论述了这一问题^①，佟冬主编的《中国东北史》第一卷及孙进己：《东北民族史研究》，刘子敏：《高句丽史研究》也有论述^②，近年专门论述此书的有：孙进己、张春霞：《高句丽国史》、马大正、李大龙：《古代中国东北高句丽历史丛论》，耿铁华：《中国高句丽史》等，基本史实和观点都大致相近、都肯定了高句丽对中国历代皇朝存在一种政治上的隶属关系，是中国的一部分，也都提到了高句丽中间有过叛乱、割据的事实。^③但是有些具体提法，还有出入，还须进一步明确。

其一，高句丽和中国中央皇朝是不是一种宗主国和藩附的关系？有些论著一再认定高句丽和中国中央皇朝的关系是一种藩属国和宗主国的关系。^④我们认为高句丽和中国中央皇朝的关系，不是一种单纯的藩属国和宗主国的关系，它和王氏高丽对辽、宋，李氏朝鲜对明清属于纯粹的藩属国家不同。它是介于藩属国和羁縻州县之间的。因为它一方面受封为高句丽国王，一方面受封为中国的中央和地方官职，后者就是羁縻州府的特点。因此高句丽也不能简单称为外臣，它是介于外臣和内臣之间的一种过渡形态。

其二，高句丽能否称为中国的地方割据政权。孙玉良、刘子敏都称高句丽为“地方割据政权”^⑤，我们认为这提法不准确，高句丽在长朝历史中对中国中央皇朝的关系是时叛时服，从叛时来说高句丽属地方割据政权是可以的。但从服时来说，就不应称为地方割据政权，而应称为地方自治政权，而从高句丽叛服两者而

^① 金毓黻：《东北通史》上。

^② 佟冬主编：《中国东北史》第一卷，吉林文史出版社 1988 年版；孙进己：《东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 1994 年版；刘子敏：《高句丽史研究》，延边大学出版社 1996 年版。

^③ 孙进己、张春霞：《高句丽国史》1999 年征求意见稿；马大正、李大龙：《古代中国高句丽历史丛论》，黑龙江教育出版社 2001 年版。

^④ 秦升阳：《唐代对高句丽的政策及其演变》，《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 1997 年版；康德文：《高句丽何以能同“南北朝”长期和平相处》，《高句丽历史与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 1997 年版。

^⑤ 孙玉良：《高句丽政权的建立及其逐渐强盛》，《中国东北史》第一卷，吉林文史出版社 1988 年版；刘子敏：《高句丽国与南北朝的关系》，《中韩韩日关系史研究论丛》，延边大学出版社，1995 年版。

言，可以定论是以服为主，不是以叛为主，因此它的基本性质是地方自治政权，只是有时才是地方割据政权。

其三，高句丽称为中国的边疆民族政权是否可以？近年很多人都常用这一称呼来称高句丽^①。我们认为笼统地说未尝不可。但科学地说还应称为中国的地方民族自治政权，因为它和中国的正式州县、地方政权不同，也和内迁的东突厥及契丹、奚等纯属羁縻政权的民族政权有所不同。上面已说是介于藩属和羁縻政权之间、外臣和内臣之间，它的自治性较大。因此，称为中国的地方民族自治政权更确切些。

其四，公元427年高句丽迁都平壤后是否改变它的性质。过去谭其骧先生总认为427年后就属于朝鲜国家。^②我们认为今天的中朝边界是以后长期历史发展形成的，在当时并不存在这一疆界。因此不能用现在的疆界去划分古代高句丽政权的性质，427年后高句丽政权的性质。因其尚未成为独立国家，而仍是中国的羁縻政权，因此不能改变其是中国地方自治政权的属性。^③

韩国有不少学者强调高句丽的独立性，我们认为高句丽确有很大的自治性，有时还拒不臣服，因此，有些史料是可以证明高句丽有独立性的。但看历史应看整个的历史，而不应只看其中的某个阶段。高句丽在其整个历史阶段中，究竟是以独立为主，还是以臣服中国为主？不能用个别的史实来否定全部。同时，即使高句丽有时是所谓的独立国家，也不能因此得出他是朝鲜国家的结论。因为他是建立在中国的土地上的，所以，最多只能说他那时是中国的一个割据政权。

五、高句丽的疆域与都城

关于高句丽的疆域，过去谭其骧先生曾有研究，近年来中国研究者更多，主要有孙进己、马大正、耿铁华等，基本上雷同，以孙进己的论述较详。但有几个问题必须加以阐明。

其一，高句丽的疆域是否应划入中国古代疆域之内。谭其骧《中国历史地图集》第五组隋唐图，是把高句丽划在当时中国地图之外，从近年来的中国研究者的

^① 马大正：《论高句丽历史研究的几个问题》，《高句丽历史知识》，吉林文史出版社2003年版。

^② 谭其骧：《历史上的中国和中国历代疆域》，《中国边疆史地研究》1991年1期。

^③ 孙进己、张春霞：《高句丽国史》1999年征求意见稿188页。

多数看法，应该更正，将其仍划入中国隋唐疆域之中，但可以作一些特殊标志。

其二，关于高句丽疆域的论述，大都详西南，而略东北，有很多均未能具体论述高句丽后期的北界，仅孙进己，张春霞对此作了具体论述。其中最大的分歧是，过去谭其骧的中国历史地图集第五册，把粟末、白山、拂涅、肃慎等部都未列入高句丽管辖范围。但从史料看：《旧唐书·靺鞨传》：“其白山部素附于高丽”，《新唐书·渤海传》：“渤海粟末靺鞨附高句丽者”，《新唐书·地理志》以高丽降户置州 4，有拂涅州，《三国史记》有肃慎附于高丽的记载，因此，白山靺鞨(在今延边地区)、粟末靺鞨(在今吉林市一带)、拂涅部(在今拉林河流域)、肃慎部(在今牡丹江上游)都曾附于高丽。这都应按史实划入高句丽后期疆域中。因此，我们说高丽亡时，它的疆域有三分之二入中国，是包括以上这些地区的。

其三，高句丽的疆域从历史上说，基本上没有超出汉晋郡县的范围。从今天中朝国界而言，高句丽长期间疆域是在今中国疆域内，它的进入朝鲜半岛是公元 4 世纪。因此它的疆域达到今朝鲜疆域内才 200 多年，而 700 多年中的 400 多年则纯在今中国疆域内，这是应该认清的高句丽疆域的特点。

至于有些学者把高句丽疆界毫无根据地扩大到中国的河北等省，认为高句丽曾占有过中国古代的幽州，这是毫无根据的，而韩国有一本大韩帝国史，把高句丽的国土扩大到中国的大部分国土，而所根据的仅是中国的某些地名和朝鲜相同，这就不是研究历史，而是信口开河了，相信广大的韩国学者也不会支持这种观点的。

关于高句丽的都城所在，长期以来争议较大，几乎每一个都城的定点都有分歧。

1. 纥升骨城，高句丽这一早期都城，一般认为在桓仁，但也有五女山城^①和下古城子的分歧。^②近年我们又认为蜊蛤城位置更适合，正在两水之交。^③

2. 尉那岩城，早年乌居龙藏认为是今桓仁五女山城，^④近年中国学者大都认为是今集安城子山山城^⑤，我们则认为是集安霸王朝山城^①。

^① 孙进己：《东北民族史稿》1977 年本，最早提出纥升骨城是桓仁五女山城。

^② 刘永智：《论高句丽早期遗址五女山城》，《朝鲜史通讯》3 期，1981 年。

^③ 孙进己、张春霞：《高句丽国史》，1999 年征求意见稿。

^④ 乌居龙藏：《国内尉那岩城之说明》，《世界》第 108 号。

^⑤ 李殿福：《集安城子山山城考略》，《求是学刊》1982 年 1 期；李殿福：《高句丽丸都山城》，《文物》1982

3.丸都城，中国多数学者认为是今集安城山子山城^⑥，我们认为应是集安关马墙山城^⑦。

4.平壤城，过去许多学者根本不提国内地区有个平壤城，我们一再提出，现在有些学者，不得已就把平壤城和国内城合为一城，定在今集安平地城。但集安平地城不可能又是国内城，又是平地城，我们认为集安平地城是平壤城，国内城是集安城山子山城^⑧。

我们认为高句丽历代都城，《三国史记》记载极详，但有些学者对此却未认真考虑，墨守成说，不检查旧说的漏洞，因此矛盾百出。如硬把集安城山子山城按上两个城，前期是尉那岩城，后期是丸都城，却又根本找不出关于改名的记载。又把集安平地城也按上两个名，前期是国内城，后期又叫平壤城，不顾史料中两城建筑时间并非同时，是不同时间建的两个城，而且不顾公元3年，集安平地城还是王莽的玄菟亭(原汉西盖马县)，却认为高句丽已迁都于此。同时丸都纪功碑是发现在距今集安市区西北90里，因此当初白鸟库吉等《满洲历史地理》定丸都于今集安西北90里附近。关马墙山城距此相近，却为了迎合丸都在城山子山城，擅自将毋丘俭纪功碑出土地点改为距集安县西北34里，城子山山城竟以讹传讹，

年6期；魏存成：《高句丽初中期都城》，《北方文物》1985年2期；李殿福、孙玉良：《高句丽的都城》，《博物馆研究》1990年1期；李健才：《高句丽的都城和疆域》，《中国边疆史地研究报告》1981年1、2期；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

^⑥ 孙进己：《东北民族史稿》1977年本；孙进己、冯永谦：《东北历史地理》第一卷，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版；孙进己：《高句丽王国的都城》，《东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曹德全：《尉那岩城考——兼论丸都不是尉那岩城》，《高句丽探微》，香港中华国际出版社2001年版；冯永谦、孙进己：《高句丽国内城建城地点时间考辨》，《东北史研究》2004年1期。

^⑦ 李殿福：《集安城子山山城考略》，《求是学刊》1982年1期；李殿福：《高句丽内都山城》，《文物》1982年6期；魏存成：《高句丽初中期都城》，《北方文物》1985年2期；李殿福、孙玉良《高句丽的都城》，《博物馆研究》1990年1期；李健才：《高句丽的都城和疆域》，《中国边疆史地研究报告》1981年1、2期；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

^⑧ 孙进己：《东北民族史稿》1977年本；孙进己、冯永谦：《东北历史地理》第一卷，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版；孙进己：《高句丽王国的都城》，《东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曹德全：《尉那岩城考——兼论丸都不是尉那岩城》，《高句丽探微》，香港中华国际出版社2001年版；冯永谦、孙进己：《高句丽国内城建城地点时间考辨》，《东北史研究》2004年1期。

^⑨ 孙进己：《东北民族史稿》1977年本；孙进己、冯永谦：《东北历史地理》第一卷，黑龙江人民出版社1989年版；孙进己：《高句丽王国的都城》，《东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曹德全：《尉那岩城考——兼论丸都不是尉那岩城》，《高句丽探微》，香港中华国际出版社2001年年版；冯永谦、孙进己：《高句丽国内城建城地点时间考辨》，《东北史研究》2004年1期。

被称为丸都山城了。丸都碑若在 90 里外，丸都城怎么会距市区 5 里，类似的矛盾漏洞还不少，为什么大家都视而不见，不肯认真考虑一下？

韩国学者在高句丽都城的定点上，似乎没有自己独特的看法，而较多地接受了中国学术界传统的看法，但中国的这些传统的看法。也有许多的错误，所以我们建议，大家应该重新开始，认真地检验一下各说的根据，而不要轻信传统的说法。

六、高句丽文化研究

长期以来，中国学者对高句丽文化作了大量论述，论著颇多，近年又有学者继续研究高句丽文化^①，但大都是就高句丽文化的各具体方面作了一些介绍，就不一一介绍了。

这里主要介绍近年探讨高句丽文化总体性质的一些论著。如赵东艳的《高句丽文化中的汉文化因素》^②、张碧波的《高句丽文化渊源》^③、张博泉的《高句丽与中原文明》^④、孙进己的《隋唐时期高句丽文化的汉化》^⑤、2003 年，孙泓、张福有又同时提出了《高句丽文化的主体是汉文化》^⑥。这大体是反映了中国学者对高句丽文化总体性质的认识过程，从确定高句丽文化中有汉文化因素开始，进一步对高句丽文化溯源并确定其与中原文明的关系，进一步认它是高句丽文化逐渐汉化的结果，最后论定了高句丽文化已以汉文化为总体，正如孙泓文中所说：“高句丽在长期的发展过程中，融合了大量汉族，吸收了汉族的文化特色，形成了新的文化特点，并以汉族文化为其文化的主体。”这并不否定高句丽本身有其自身的民族文化，而只是论证了经过长期汉化，高句丽民族的文化渐以汉文化为其主体。

这一认识和韩国学者对高句丽文化的认识可能出入较大，韩国学者困难更多

^① 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 2002 年版；马大正等：《古代中国高句丽历史续论》，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03 年版。

^② 赵东艳：《高句丽文化中国汉文化因素》，《辽宁大学学报》1995 年 3 期。

^③ 张碧波：《高句丽文化渊源考》，《北方文物》1998 年 1 期。

^④ 张博泉：《高句丽与中原文明》，《社会科学战线》1998 年 5 期。

^⑤ 孙进己：《隋唐时期高丽王国经济文化的汉化》，《高句丽国史》，1999 年征求意见稿。

^⑥ 孙泓：《高句丽文化的主体是汉文化》，2003 年集安高句丽的学术会交流稿；同会张福有也发表了相同的文章。

地强调高句丽文化的独特的民族性格，甚至还强调高句丽文化和新罗、百济文化的共同性，但我们认为高句丽文化当然有它的独特的民族性，但决不能因此就否定它在长期发展中逐渐汉化，并最终发展到以汉文化为主体的事实，这个发展过程是客观存在的。至于高句丽文化和新罗、百济文化确实是有共性的，但这些共性不是来源于他们属同一民族，而是来源于他们共同接受了汉文化的影响，当然，也不能否认有一些来源于他们相互之间的交流影响，但还是以前者为主。

七、关于高句丽文物考古研究

长期以来，中国考古学界在高句丽考古方面做了大量工作，积累了大量宝贵资料。但缺乏系统的研究总结。仅有三本专著，而两本还都是关于好大王碑的，仅有一本较全面的是魏存成的《高句丽的考古》。但这短短八年中关于高句丽考古的专著竟出版了六本，其中有魏存成的《高句丽遗存》，耿铁华的《高句丽瓦当》，王绵厚的《高句丽古城研究》，郑永振的《高句丽渤海靺鞨墓葬比较研究》，及朴真爽和耿铁华的两本《好大王碑研究》。耿铁华的《中国高句丽史》中用大量篇幅专门论述了文物考古，其他综述高句丽的文物考古的文章也不少，如孙进己的《高句丽文物考古研究综述》，孙泓的《辽宁省高句丽文物研究综述》等，这些专著和文章提出了很多新问题和新看法，促进了高句丽文物考古研究的发展。

在高句丽古城研究方面，对高句丽古城的类型孙进己提出了分为石筑山顶式山城、山谷式山城、土筑山顶式山城、平地城，而把簸箕型山城及筑断式山城都归于山谷式山城中，认为高句丽人主要发展了前二类型，第三类型是夫余人的城制，第四类是汉人的城制，高句丽沿用了^①。魏存成则归结为簸箕型山城、山顶型山城、筑断为城型山城、左右城内外城型山城^②。王绵厚则认为山城和平地城相结合是高句丽核心建筑的特殊形式，把高句丽山城分为早期、中期、晚期^③。

我们认为需要进一步探讨的问题是高句丽国有许多民族，各民族的城制并非一致，是否都是山城？我们现在所说的高句丽山城中有没有高句丽国其他族的山城。他们有何区别？高句丽国有多少城并非山城？它们其中有高句丽沿用他族的，

^① 孙进己、孙泓：《高句丽族史》；1999年征求意见稿，201—206页。

^② 魏存成：《高句丽遗迹》，文物出版社2002年年版，106—115页。

^③ 王绵厚：《高句丽古城研究》，文物出版社2002年年版，161—166页。

但有没有高句丽新建的?总之如何对高句丽各族、各时期的古城综合分类,有待深入,由于此问题没解决,对高句丽的城数和分布认识也就很难一致。

在朝鲜也有许多高句丽山城,但其中哪些是高句丽新建的?哪些是高句丽沿用他族的?在高句丽统治时期,朝鲜半岛北部也并非仅居住单一的民族,反映在城制上也应有所区别,其区别如何?这也需要大家共同来研究。

在高句丽墓葬研究方面,魏存成、耿铁华、郑永振的研究都各有独到之处^①,但我们认为由于没有将墓葬结合其族属进行研究,有些框框就无法打破,仅把高句丽族的墓葬,如积石墓视为高句丽墓。但高句丽统治下的汉族、靺鞨族、夫余族等的墓葬如何?却至今无人论述。同时有些壁画墓明显不是高句丽人的,却也都统称为高句丽壁画墓,同时高句丽自公元5世纪改称高丽后,前期后期在墓葬形制上有何区别?也没有明确,一般仍沿用传统的三期、四期来划分,这些都有待进一步研究^②。

我们认为高句丽的墓葬有不同类型、不同形制,他们的起源和族属不一定相同。有些墓葬虽属同一形制,但也有一个各族相互影响的问题。必须认真地加以研究,分别探讨他们的源流,这对利用考古文物来研究高句丽民族及其历史具有重要的意义。同时,还应加强对高句丽时期平民墓葬的研究,这对高句丽统治下民族的了解,具有重大的意义。

在高句丽文物研究上,长期间往往以吉林省集安县的高句丽文物代表整个高句丽文物来研究,这显然是不全面的,孙泓的《辽宁省高句丽文物研究综述》^③、《吉林省高句丽文物研究文物综述》^④补充了这一缺陷,如果再有一篇《朝鲜半岛北部高句丽文物研究综述》就可比较完整地研究高句丽文物了。由于我们掌握资料的困难,很难搞得较完整,希望朝鲜的学者能做好这一工作,或也可由我们双方合作来完成。

对高句丽金石文的研究,这些年也有很大进展,但遗憾的是,至今虽出了四

^① 魏存成:《高句丽遗迹》,文物出版社2002年版;耿铁华:《中国高句丽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郑永振:《高句丽渤海靺鞨墓葬比较研究》,延边大学出版社2003年版。

^② 孙进己:《高句丽考古研究综述》,《高句丽遗迹发掘和遗物》,学研文化社2001年版;孙进己、孙泓:《公元3—7世纪集安平壤壁画墓的族属、分期与定名》,见本会稿。

^③ 孙泓:《辽宁地区高句丽遗物研究综述》,《高句丽遗迹发掘和遗物》,学研文化社2001年版。

^④ 孙泓:《吉林地区高句丽文物研究综述》,吉林省高句丽学术研讨会2002年论文。

本专著，但都是研究好大王碑的，好大王碑是有特殊的重要性，但从全面研究高句丽金石文来说，这显然是不够的。近年又出了几篇对冉牟墓志和其他墓志的研究文章，但还是显得太少。^①

总的来说，这六年是中国高句丽史研究进一步开放和繁荣的六年，虽然是百花齐放，但百家争鸣还不够，很多不同意见，还有待通过争鸣来“求同存异”，逐步取得一致。国内外有些人急于想求得一致，借助于非学术手段，这是无济于事的，学术问题只有通过学术争论来解决，才能越辩越明。用任何非学术手段，即使暂时某种意见取得上风，最终还是解决不了学者的不同认识。

我们希望国内要进一步百家争鸣，同时，我们也愿意和国外学者一起共同争鸣，相信只要是真正的学者，就不会以先入之见来代替学术研究、来代替客观事实。一切从史实出发，实事求是，根据史料能得出什么结论，就应得出什么结论，而不能主观地从某种狭隘的立场出发，把自己的愿望强加于历史。人的认识需要有个过程，暂时不能取得一致，是必然的。不必心急，只要通过“求同存异”，相信会逐步趋于一致的。

我们衷心希望各国学者能出于对共同祖先历史的关心，走到一起来，以进一步促进我们的友好协作。千万不能出现过去那种有些子孙为争祖宗遗产，打得脸红耳赤的情形，希望我们学者能比一般的人更明智一些。让我们起个带头作用，让我们成为共同促进东北亚友好合作的桥梁，而不是绊脚石。



^① 孙进己：《高句丽考古研究综述》，《高句丽遗迹发掘和遗物》，（韩国）学研文化社 2001 年版。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개방과 변영의 6년”

- I. 高句麗史 歸屬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 II. 高句麗 民族의 起源과 그 移動에 관한 研究
- III. 高句麗의 建國 시기와 위치
- IV. 高句麗와 中國 中央 皇朝의 관계
- V. 高句麗의 疆域과 都城
- VI. 高句麗 文化의 研究
- VII. 高句麗 文物의 考古學的 研究에 관하여



번역 고 광 의 (원광대 동양대학학원 교수)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는 오랫동안 관계 부서의 인위적인 제약을 받아왔으며, 그 발전이 매우 어려웠던 것은 사실이다. 많은 중국 학자들 또한 “研究無禁區”가 진정으로 실행될 것을 계속 요구해왔고 1998년 드디어 그 소망은 이루어 졌다. 고구려 연구에 대한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학자들은 각 자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그야말로 百花齊放, 百家爭鳴의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로써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개방과 변영의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1998년에서 2003까지 이 6년 동안에 중국의 학자들은 여러 차례 고구려 관련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수 백 편에 달하는 학술 논문과 10여 권의 고구려사에 관한 전문 저서를 출판하였다. 매년 발표되는 고구려에 관한 논문은 전년보다 십여 배로 늘어나고, 전문 저서 또한 이전의 백여 년 동안 보다 십여 배나 늘어났다. 동시에 이 몇 년 동안 중국의 학자들은 국제적인 학술 교류 활동에 적극 참가하였고, 그 인원에 있어서도 수십 명을 넘게 되어 국제적으로 중국 학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였다.

중국에서 최근 고구려사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영은 학술 연구의 진일보된 개방과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수 있었던 결과이다. 고구려 연구에 있어 만일 어떤 하나의 단일한 테두리에 얽매어 있었다면 이런 변영의 국면은 생각조차 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전의 고구려 연구에 관해서는 이미 많은 문장들에서 종합적으로 소개¹⁾되었기 때문에 일일이 중복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다만 필자가 생각하고 있는 현재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주요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을 서술하고자 하니 참고가 되길 바란다.

1. 고구려사 귀속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

오랫동안 중국학자들은 고구려의 귀속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 중 하나는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일부분이며 중국사와는 무관하다는 인식이다. 또 다른 하나는 고구려사는 중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역사라는 관점이다. 그리고 1998년 이후 다시 새로운 관점이 나왔는데, 바로 고구려사는 한국과 무관하게 전적으로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관점은 계속 끊임없이 논쟁이 되고 있다. 현재 고구려사가 전적으로 한국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학자는 그리 많지 않은데, 주로 蔣菲菲·王小甫 등 이다.²⁾

또한 고구려사가 전적으로 중국에 귀속된다는 학자도 역시 그리 많지 않은데, 주로 馬大正·耿鐵華·張碧波 등이 있다.³⁾ 한편 고구려사는 중국과 한국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로는 孫進己⁴⁾·姜孟山⁵⁾·劉子敏⁶⁾·徐德源⁷⁾·朴燦奎⁸⁾ 등이 있다.

여기서는 필자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실의 계승과 역사의 귀속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는 구분하여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전에 필자는 한국 중앙일보의 요청에 의해 이러한 관점을 피력한 《고구려사의 현실적 계승과 역사 귀속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자. (正確認識高句麗史的現實繼承和歷史歸屬)》라는 문장 한 편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게재된 제목은 《중국은 고구려의 3분의 2의 토지를 계승하였다. (中國繼承了高句麗三分之二土地)》라고 바꾸어 이는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전혀 달랐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론에서는 중국의 패권주의적인 야심이 표명된 것이라고 보았다. 필자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중국이 어찌해야 패권주의적인 야심이 없던 말인지? 설마 지금의 국경에서 물러나 옛 고구려의 땅을 전부 북한(한국)에 양보 해주면 비로소 야심이 없다는 것인지? 또한 중국에 있는 고구려의 후손들은 어디에 있는가? 설마 그들은 옛 고구려의 영토를 계승하지 말아야 하다는 것인가?

고구려의 현실적 계승은 중국과 북한(한국)의 현재 국경선으로 결정된 것이다. 중국과 북한(한국)의 국경은 근 천여 년 동안의 역사 속에서 장기간 발전 형성된 것이며, 현재 양국 정부가 모두 인정하는 것이다. 양국 정부와 국민들은 누구도 이를 변화시킬 수 없으며, 또한 변화시키려 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 국경선은 옛 고구려의 영토와 국민의 귀속을 자연스럽게 획정하고 있다. 옛 고구려

1) 孫進己:《高句麗歷史研究綜述》,《社會科學戰線》2001年5期;孫進己:《高句麗考古研究綜述》,《韓國》《高句麗遺迹發掘和遺物》,學研文化社2001年版;孫進己:《高句麗歷史地理研究綜述》,《東北歷史地理論叢》,哈爾濱出版社2002年版;孫進己:《高句麗研究綜述》《歷史上政權民族歸屬理論研究》1999年征求意见稿;馬大正等:《古代中國高句麗歷史論叢·研究篇》,黑龍江教育出版社2001年版;馬大正等:《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3年版.

2) 蔣菲菲·王小甫:《中朝關係史·古代卷》,社會科學文獻出版社1998年版.

3) 馬大正:《試論高句麗歷史研究的幾個問題》,《高句麗歷史知識》,吉林文史出版社2003年版,邊衆之文同此;耿鐵華:《中國高句麗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耿鐵華·楊春吉:《高句麗歸屬問題研究》,吉林文史出版社2000年版;張碧波:《關於歷史上民族歸屬與疆域問題的再思考》,《黑土地的古代文明》,遠方出版社2000年版.

4) 孫進己:《當前高句麗歸屬研究的??問題》,沈陽公元310世紀文化學術研討會學術報告,《東疆學刊》2001年3期;孫進己:《讓渤海史研究成爲促進東北亞各國友好的橋梁》,寧安渤海史2001年會議學術報告,《博物館研究》2002年3期;孫進己:《再論高句麗歸屬的研究》,通化高句麗史學術會議交流;孫進己:《中國疆域形成發展理論研究》,烏魯木齊中國民族史學術會2002學術報告,《中南民族大學學報》2003年2期;孫進己:《關於高句麗渤海研究中的一些問題》,延邊高句麗渤海會議報告2003年8月.

5) 姜孟山:《高句麗的歸屬問題》,《黑土地的古代文明》,遠方出版社2000年版.

6) 劉子敏:《關於高句麗政權及其領域的歷史歸屬問題的歷史回顧及我見》,《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

7) 徐德源:《關於朝鮮早期史研究經受誤導的思考》,《全國首屆高句麗學術研討會論文集》1999年6月;徐德源:《高句麗歷史與疆域歸屬問題補議》,《社會科學戰線》2001年5期.

8) 朴燦奎:《淺談高句麗歷史歸屬研究的??問題》,延邊高句麗渤海問題學術研討會,2003年.



▲ 황해도 안악군 안악 2호분 안 칸 서쪽 벽에 그려진 '비천상'의 모사도(평양미술관 소장).

땅의 2/3와 인구의 3/4는 현재 중국의 영토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이는 중국이 계승하였다. 그리고 고구려 땅의 1/3과 인구의 1/4은 북한(한국)이 계승하였다. 양국이 고구려를 공동으로 계승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一史兩用”은 가능한 것이며, 다만 각자가 각자의 부분을 이용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압록강과 圖門江 이북의 고구려의 영토와 국민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계승하였다. 북한(한국)은 압록강 이남의 고구려 영토와 국민의 역사 및 문화유산을 계승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사가 어느 한 국가에 귀속된다고 단편적으로 강조하고, 또한 상대방의 계승 사실을 배척하고 부인할 이유가 없다. 당연히 피차가 공동의 선조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구려 역사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는가? 이 문제는 순수한 역사상의 학술 문제이다. 왜냐하면 당시 고구려가 어느 나라에 귀속되었는지는 지금부터 천 여년 전의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천 여년 전의 귀속을 근거로 오늘날 국경의 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학자들 또한 각자의 견해를 평온한 심정으로 토론하고, 양국의 우호를 손상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토론하는 가운데 각자 다른 의견으로 논쟁이 있을 것이나 점차 일치한 관점으로 나아가리라 믿는다.

필자는 고구려 역사의 귀속 문제를 토론함에 있어 무관한 문제를 과다하게 다루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고구려가 어느 민족에서 기원하였는지, 어느 나라의 영토에 건립하였는지, 이러한 것은 모두 고구려 이전의 귀속으로 고구려가 존재하던 시기의 귀속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또 예를 들어 고구려의 영토는 이후에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국민들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 이러한 것들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의 귀속이기 때문에 또한 고구려가 존재했던 시기의 귀속을 설명할 수는 없다. 역사상에서 고구려의 귀속은 오직 그 당시 고구려의 정치가 누구의 관할에 속해 있었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고구려가 경제적·문화적으로 어디와 관계가 있고 혹은 어디와 서로 같은가는 무관한 것이다.

당시 고구려가 중국 중앙 정부로부터 고구려왕이라는 책봉을 받는 동시에, 또한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리인 征東大將軍·平州刺史 등과 같은 책봉을 받은 것은 바로 고구려가 역사상 중국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세계 역사상 한 국가의 수뇌가 스스로 다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겸한 적이 없었으므로 독립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책봉을 받는 것이 곧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구려 당시의 이러한 특정한 책봉 관계는 고구려가 중국에 귀속된 관계임을 증명한다. 그 후의 왕씨 고려와 이씨 조선은 단지 고려 국왕과 조선 국왕의 책봉만

을 받았을 뿐, 중국의 중앙 혹은 지방 관리를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것이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방 정권은 때로는 복종 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복종을 위주로 하였는지 아니면 독립을 위주로 하였는지를 근거로 하여 그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고구려의 전반 역사 속에서 귀속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와 백제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동안 신라나 백제도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수여 받기는 하였지만, 그건 단지 그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구려의 영토와 국민들을 어느 나라가 얼마나 계승하였는가는 이미 역사 속에서 결정된 일이며 토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역사 속에서 고구려가 중국에 속하든 북한(한국)에 속하든 천 여 년 전의 역사적 학술 문제에 불과한 것이다. 비록 이러한 방면의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현실의 국경을 변화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학술 문제를 정치 문제로 끌어올릴 필요도 없다.

연변의 조선족이 朝鮮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관할에 있고, 미국인이 비록 영국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영국에 속하지 않았고, 또 싱가포르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국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기원은 그 이후의 귀속을 증명하는데 이용될 수 없다.

2.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그 이동에 관한 연구

고구려의 기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은 夫餘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부여는 貊의 일종이기에 고구려의 기원을 맥으로 보기도 한다.⁹⁾ 최근 중국에서는 이에 관한 새로운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두 방면에서 연구된 결과이다. 하나는 고구려의 기원을 부여까지만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더 나아가 肅慎에서 기원했다는 설¹⁰⁾, 商人에서 기원했다는 설¹¹⁾, 炎黃에서 기원했다는 설¹²⁾, 高夷에서 기원했다는 설¹³⁾, 高陽氏에서 기원했다는 설¹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朱蒙을 따라 고구려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에, 고구려의 민족의 기원을 이해하려면 고구려의 초기 활동지역의 고고 문물과 문화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고고 문화를 분석한 것을 근거로 하여, 고구려가 夷의 한 지류인 貊人에서 기원했다는 설¹⁵⁾, 土著족에서 기원했다는 설¹⁶⁾, 貊·夷·漢족에서 기원했다는 三源說¹⁷⁾을 제시하고 있다.

9) 金毓黻：《東北通史》；張博泉：《東北地方史稿》，吉林大學出版社1985年版。

10) 王健群：《高句麗族屬探源》，《學習與探索》1987年6期。

11) 範犁：《高句麗族屬探源駁議》，《高句麗研究文集》，延邊大學出版社1993年版。

12) 李德山：《高句麗族源及其族屬考辨》，《社會科學戰線》1992年1期。

13) 劉子敏：《高句麗最早的源頭高夷》《高句麗歷史研究》，延邊大學出版社1996年版。

14) 耿鐵華、楊春吉：《高句麗歸屬問題研究》，《高句麗歸屬問題》，吉林文史出版社2000年版；耿鐵華：《中國高句麗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

15) 王綿厚：《關於漢以前東北貊族考古學文化的考察兼論大石棚和石棺墓文化的族屬與時代》，《文物春秋》1994年1期。

16) 金旭東、安文榮、楊立新：《探索高句麗早期遺存及起源》，《中國文物報》2000年3月19日。

17) 孫進己、孫泓：《高句麗族史》1999年征求意见稿；孫進己：《高句麗的起源及前高句麗文化的研究》，《社會科學戰線》2002年2期。

이러한 방면의 연구에 대하여 필자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말하고 싶다.

첫째, 반드시 증거로부터 시작되고 주관적인 소망에서 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많은 새로운 견해들은 모두 증거를 가지고 출발했다기 보다는 개인의 주관적인 소망에서 시작된 것이 많다. 고구려의 기원을 華夏와 동일시 하고자 한 두 가지의 사료를 가지고 억지스러운 논증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高雲이 말한 高陽氏 기원은 다만 가설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에서 이를 유력한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혹은 부여의 언어가 番徐의 음과 통한다고 하여, 부여를 炎黃 계통의 족속으로 보고 고구려도 염황의 족속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혹은 단지 문헌에 있는 高夷를 곧 고구려의 선조로 지칭하는 등의 연구 방법은 취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한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없다. 한 두 가지의 사료를 가지고 가설을 제기하고 토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그 가설이 정론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과학적으로 논증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민족의 다원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민족은 단일하다고 인식하여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서 어느 한 계통을 다른 계통과 대립시키는 것은 다른 계통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치 이미 발굴된 萬發拔子 유적에서 얻어진 결론을 근거로, 고구려 문화의 기원은 압록강 유역의 土著 유적이라 생각하고, 고구려의 기원을 北夫餘라고 보는 관점은 성립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사실 주몽이 북부여 출신이라는 것은 많은 사료가 증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고구려 민족의 한 계통이다. 하지만 萬發拔子 문화는 旅大 지역의 고고 문화와 비슷하기 때문에 夷 계열의 문화일 가능성이 크며, 이 또한 고구려 민족의 또 다른 한 계통이다. 그리고 萬發拔子 유적의 4기 문화 가운데 漢 문화 요소들은 고구려 민족의 또 다른 계통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상의 고구려 이전의 문화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의 기원은 적어도 夫餘(貊)·夷·漢의 이 세 지류가 융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구려 5부는 각각 서로 다른 종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桂婁部和 絕奴部는 부여(貊)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萬發拔子 문화는 順奴部の 유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夷 계열에 속한다. 消奴部 즉 沸流部 역시 夷 계열로서 高夷일 가능성이 있다. 灌奴部는 한인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세 민족이 융합하여 고구려 민족이 되었으므로, 어느 한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물론 이 또한 어디까지나 하나의 가설로서 최종적인 결론까지는 문헌 기록과 고고 유적을 비롯하여 인류학·언어학·민속학 등 각 분야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와 신라·백제는 같은 민족에 속한다고 하고, 고구려는 고조선에서 발원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오히려 더욱 근거가 없다. 고구려와 신라·백제 사이에 漢晉의 樂浪郡과 帶方郡이 존재하고 있었거늘 어찌 동일한 민족이 될 수 있는가? 또한 신라는 辰韓과 秦人에서 나왔고, 백제는 부여와 馬韓에서 나와 고구려와 그 기원이 다르고, 韓과 貊은 결코 동일한 민족이 아니다. 고구려 역시 고조선의 영토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다. 고구려는 貊·夷·漢에서 발원했고, 고조선은 商人·夷人·穢人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이 두 나라의 夷 또한 서로 달라 고구려는 高夷이고, 고조선은 良夷이다.

고구려의 민족 기원에 관한 연구는 고구려사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결코 고구려의 귀속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구려가 건립되기 이전의 민족 기원과 귀속일 뿐, 고구려 민족이 형성된 후의 귀속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마치 오늘날 연변의 조선족이 朝鮮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국의 관할에 있고, 미국인이 비록 영국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영국에 속하지 않았고, 또 싱가포르 사람들이 중국에서 기원했지만 현재는 중국에 속하지 않는 것처럼 말

이다. 따라서 한 민족의 기원은 그 이후의 귀속을 증명하는데 이용될 수 없고, 귀속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립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민족의 기원을 귀속에 영합시키는 것은 더욱 온당하지 못하다.

고구려 민족의 이동에 대하여서 필자는 일찍이 고구려 민족이 단일적으로 한국에 이동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계통이 있고 주로 중국의 각 민족에 귀속되었다고 하였다.¹⁸⁾ 이러한 견해에 대해 최근 들어 중국 내의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에 대해 좀더 진전된 연구를 시도하였다. 왜냐하면 처음에 필자가 탐색했던 것은 고구려 민족의 이동에 관한 것으로 고구려 전체 국민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아니었다. 또한 그 이동에 대한 숫자 또한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한 수치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정확한 통계를 시도하기도 하였다.¹⁹⁾

하지만 이러한 일은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기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가 전쟁 중에 사망한 사람과 포로가 된 자의 수를 계산한다고 해보자. 하지만 이러한 사망자와 포로가 된 자 모두가 반드시 고구려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그 안에는 漢人이거나 고구려 통치하에 있던 靺鞨일 수도 있다. 이는 곧 고구려의 전체 민족의 인구와 그 행방에 대한 연구와 관련된다. 고구려 멸망 당시에는 69만여 호에 350여만 인구이다. 그 가운데 한인은 陳大德의 보고에 의하면 “殆將半焉”이라 하여 적어도 20여만 호가 있다.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던 靺鞨의 각 部와 粟末·白山·越喜·拂涅 등이 10여만 호, 고구려 통치를 받았던 沃沮와 東穢 사람들이 수 만 호, 고구려 통치를 받았던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수 만 호,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당연히 고구려 민족 또한 수 만 호가 있었다. 《三國遺事》권1에 “高句麗全盛之日，二十一萬五百八戶”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연히 고구려 민족의 인구수일 것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통치하에 있었던 漢人 가운데 중원 지역으로 천거한 사람들 이외에는 옛 거주지에서 살다가 일부는 이후 隋唐·遼 등이 압록강과 대동강 이남을 신라 또는 고려에 하사해 줄 때 함께 지금의 북한(한국)에 귀속되면서 대부분이 이 곳에서 살게 되었다. 중국 동북의 靺鞨의 각 부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잇달아 자립하여 중국의 한 민족이 되었다. 현재 북한(한국) 영토에서 원래 고구려 통치를 받던 沃沮·穢·신라·백제 사람들은 당연히 신라·고려·조선에 귀속하였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은 분명하다. 첫째, 고구려 멸망 후 전체 유민이든 고구려 민족이든 막론하고 모두가 오늘날의 중국과 북한(한국) 두 나라에 나뉘어 귀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어떻게 계산하든 중국에 유입된 고구려 유민들이나 고구려 민족이 모두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 유민들은 모두가 이미 지금의 중국과 조선의 각 민족으로 융합되었으며, 또한 현재 중국과 북한(한국)의 각 민족의 총 인구에서 모두 적은 수를 점하고 있다. 어쨌든 이 세 가지 결론은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비록 대략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고구려 사람이 바로 훗날의 고려인이고 오늘날의 북한(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없게 하기에는 충분하다. 왜냐하면 오늘날 북한(한국) 사람들 속에는 당시 고구려 사람의 소수만이 계승되었을 뿐, 대부분의 고구려 사람들은 중국에 유입되었다. 또한 당시 고구려 사람의 후예들은 오늘날의 북한(한국)인 중에서도 단지 소수에 불과하고, 오늘날 북한(한국)인의 주요한 기원은 신라와 백제이다. 물론 중국의 학자들 역시 고구려의 사람들이 전부 중국으로 유입되었다고 말할 수 없고, 지금의 북한(한국)이 고구려를 부분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도 않는다.

한국의 어떤 학자들은 비록 고구려 사람들의 이동이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은 인정하

18) 孫進己：《東北民族源流》，黑龍江人民出版社1987年版，1992年韓文版。

19) 馬大正等：《古代中國高句麗曆史叢論》，黑龍江教育出版社，2001年版；耿鐵華：《中國高句麗史》，2002年版。

지만, 그 주요한 흐름은 현재의 북한(한국)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동강 이북에 고구려 사람들이 적지 않게 거주했으며, 이후 모두가 고려에 귀속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대동강 지역의 고구려 사람들 대부분은 일찍이 唐代에 벌써 중원으로 옮겨졌으며, 남아 있던 일부 사람들은 이후 신라와 중국에 유입되었다. 그 후로 대동강 지역은 주로 女真族이 생활하게 되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어쨌든 한국의 여러 학자들도 고구려 사람들이 전부 북한(한국)으로 유입되었다고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에 유입되었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는 곧 이미 우리의 인식이 또 한 발자국 가까워 졌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고구려 사람의 이동에 관한 연구는 오늘날 고구려를 누가 계승하고 있는지 확정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역사상 고구려 당시의 귀속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역사상 고구려의 귀속은 그 당시 누가 고구려를 관할하였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훗날 그 민족의 이동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의 일로서, 이것이 멸망 이전의 귀속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3. 고구려의 건국 시기와 위치

고구려 건국 시기에 대하여 이전에는 B.C 3세기 설²⁰⁾, B.C 1세기 설²¹⁾, 1세기 설²²⁾ 세 가지가 있었다. 최근 어떤 학자들이 이를 논의하면서 “只要有某部頭領溝通之後一宣布即可, 不必要經過過渡了”²³⁾라고 말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朱蒙이 B.C 37년 沸流水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이 많지 않아 궁실을 건립하지 못하였고, B.C 34년에서야 비로소 성을 건설하였다고 한다. 沸流部는 B.C 36년에 주몽에게 항복하였으며, 주몽이 卒本夫餘와 연결되었던 때는 역시 B.C 37년의 일이 아니다. 取苻人國의 성읍은 B.C 32년의 일이다. 주몽이 B.C 37년에 건국한 것은 어느 部와 소통으로 이루어졌으며, 어떤 사람들에게 선언을 하였던 것인지 모르겠다. 이는 국가가 건립되는 힘든 창업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이다. 주몽이 B.C 37년에 국가를 건립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지만, 그 해에 바로 희망을 실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주변의 각 부족을 점령하고 국가를 건설하려면, 그래도 수 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太祖王 때 이르러서야 고구려의 국가 건립이 완성되었다고 말한다고 해서 너무 늦게 추측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주몽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비류부에 이미 왕이 있어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 건립 이전에 이미 하나의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필자는 그 당시의 생산 발전 상황으로 보아 진정한 국가가 아닌 기껏해야 부락 연맹이거나 혹은 城邦 국가 정도라고 짐작하고 있다. 엄격한 계급 국가는 주몽 이후의 몇 대에 걸친 노력으로 건립된 것이다. 때문에 필자는 고구려의 국가 형성 시점을 고구려가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는 대략 B.C 3세기에 시작하여 최후 건립 시기를 태조왕 20년(72년) 전후로 보고 있다.

고구려의 건국 시기에 대하여 한국 학자들 역시 B.C 3세기 혹은 B.C 1세기 설에 많이 기울고

20) 張博泉：《東北地方史稿》，吉林大學出版社，1985年版；耿鐵華：《高句麗起源和建國問題探索》，《求是學刊》1986年1期；李殿福、孫玉良：《高句麗簡史》，韓國漢城三省出版社，1990年版；佟冬主編：《中國東北史》第一卷，吉林文史出版社1988年版。

21) 顧銘學：《魏志高句麗傳考釋》，《學術研究叢刊》1981年1期；孫進己、艾生武：《關於高句麗社會性質的??問題》，《朝鮮史通訊》4期，1982年。

22) 丁謙：《漢書四夷列傳地理考證》，金毓？：《東北通史》上；姜孟山：《試論高句麗族的源流及其早期國家》，《朝鮮史研究》5期，1983年。

23) 孫進己、張春霞：《高句麗國史》，1999年征求意见稿。

있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여전히 무엇을 건국이라 하는가? 하나의 부락 연맹 혹은 城邦 국가를 건립하였다고 하여 과연 건국이라 할 수 있는가? 아니면 하나의 엄격한 의미에서의 제급 국가의 건립이 건국인가? 또한 국가 건립에는 오랜 과정이 있는가? 건국에서 시작과 종점이 있는가? 라는 물음들에 대한 대답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언급이 필요한 문제로서 천천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다.

고구려의 건국 위치에 대하여 과거에는 중국 동북 지역과 한반도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견해가 있었지만, 현재는 이미 쟁론이 끝나 중국 동북 지역에서 건립되었다고 보고 있다. 고구려가 건국을 했던 지점이 당시 어디에 속했는지에 관하여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중국의 漢玄菟郡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약간의 이견이 있다면 다만 고구려에 건국했던 玄菟郡이 원래 고조선의 영토에 속하는가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고구려의 귀속과는 완전히 무관한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은 원래 영국 식민지 위에 건립된 국가이지만 현재 미국이 독립된 국가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와 반대로 다른 나라의 영토에 건립된 정권이 후에 또 다른 국가에 귀속되는 상황은 매우 많다. 근본적으로 고구려가 어느 나라 영토에서 건국했는가를 가지고 고구려 당시의 귀속을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당시의 귀속은 오직 고구려가 존재한 기간 동안 누구의 관할에 있었느냐에 따라 정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가 건립했던 현토군이 이전에 북한(한국)에 속했는가는 하나의 역사적인 문제이고 학술적인 문제가 되므로 당연히 논의해야 마땅하다. 현재 중국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견해가 있다. 첫째, 玄菟郡은 본래 북한(한국)의 영토로 고구려의 발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북한(한국)과 연관이 있다. 둘째, 현토군은 본래 북한(한국)의 영토이긴 하지만 箕氏朝鮮과 衛氏朝鮮은 본래 중국의 것이기에 고구려는 역시 중국의 땅위에서 건립되었다. 셋째, 현토군은 본래 고조선의 땅이 아니고 다만 위씨조선이 수십 년 동안 잠시 원래 현토군 지역에 속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지역은 燕秦 시기에는 遼東의 변경이었고, 漢 시기에는 滄海郡에 속했었다. 漢武帝가 고조선을 멸하고 나서 그 땅에 樂浪郡과 臨屯郡을 설치하였고, 중국 동북 지역에는 玄菟郡과 眞番郡을 설치하였다. 그러므로 고구려와 고조선은 근본적으로 연관되지 않으며, 고구려의 귀속을 논증할 때 고조선의 귀속을 논할 필요가 없다. 필자는 후자의 견해를 주장하며 이 문제는 역사상의 학술 문제로서 계속 논의를 할 수 있겠다.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고구려가 고조선의 땅위에서 건립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고조선은 溟水와 漢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학자들이 패수를 오늘의 何水로 보는데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를 막론하고 고구려는 패수 이남이 아닌 이북에 건립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고조선의 영토 위에 건립되었다는 견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사군이 고조선의 영토 위에서 건립된 것인가라는 문제도 더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진지하게 사료를 정리하고 고증해야 할 것이다.

고구려는 패수 이남이 아닌 이북에 건립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고구려가 고조선의 영토 위에 건립되었다는 견해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한사군이 고조선의 영토 위에서 건립된 것인가라는 문제도 더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진지하게 사료를 정리하고 고증해야 할 것이다.

4. 고구려와 중국 중앙 황조의 관계

이는 최근 고구려사 연구의 출발점으로 많은 저서와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金毓黻의 《東北通史》에서 이미 이 문제를 논술한 바 있으며²⁴⁾, 佟冬이 주편한 《中國東北史》제1권과 孫進己의 《東北民族史研究》, 劉子敏의 《高句麗史研究》에도 이 문제를 논의하였다.²⁵⁾ 최근에 이 책을 논하는 사람들은 주로 孫進己·張春霞의 《高句麗國史》, 馬大正·李大龍의 《古代中國東北高句麗歷史叢論》, 耿鐵華의 《中國高句麗史》등이 있다. 이 책들의 기본적인 史實과 관점은 거의 비슷한데, 고구려는 중국 역대 皇朝의 정치적으로 예측된 관계로 중국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고구려 시기 중간에 반란과 할거의 국면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다.²⁶⁾ 그러나 구체적인 논증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고구려와 중국 중앙 황조는 종주국과 번속의 관계인가? 일부 논저에서는 고구려와 중국 중앙 황조의 관계는 일종의 번속국과 종주국의 관계라고 보고 있다.²⁷⁾ 하지만 필자는 고구려와 중국 중앙 황조의 관계가 단순한 번속국과 종주국의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는 王氏 고려와 遼·宋의 관계, 李氏朝鮮과 明·淸의 순수한 번속국가와 달리 번속국과 靺鞨州縣의 중간 개념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방면으로 고구려 국왕의 책봉을 받았고, 한 방면으로는 중국 중앙의 지방 관직으로 임명되어, 후자는 靺鞨州府의 특징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구려는 단순한 外臣이 아닌 外臣과 內臣 사이에 있는 일종의 과도 형태를 띠고 있다.

둘째,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의 할거 정권으로 부를 수 있는가? 孫玉良·劉子敏은 모두 고구려를 “지방 할거정권”이라 부르고 있으나,²⁸⁾ 이는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기나긴 역사 속에서 고구려는 중국 중앙 황조에 대하여 반항과 복종을 거듭하였다. 그러므로 반항하던 시기는 지방 할거정권이란 칭호는 마땅하지만, 복종하던 시기는 지방 할거정권이라기 보다는 지방 자치정권이라 함이 당연하다. 또한 고구려의 반항과 복종이라는 양자를 놓고 본다면 반항보다는 복종을 위주로 하였으므로, 그 기본적인 성격은 지방 자치정권이었고 간혹 경우에 따라서 지방 할거정권이기도 했다.

셋째, 고구려를 중국의 변방 민족 정권이라 함은 어떠한가? 최근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에 이런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²⁹⁾ 대체적으로 이러한 칭호가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적인 측면에서는 중국 지방 민족의 자치정권이라 함이 더욱 정확하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중국의 정식 주현이나 지방 정권과는 다르고, 또한 내지로 옮긴 東突厥과 契丹 및 奚 등 순수 기미정권의 민족 정권과는 다르다. 위에서 이미 번속과 기미정권, 外臣과 內臣 사이에 있다고 설명을 하였듯이 고구려는 자치적 성격이 비교적 컸다. 따라서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 민족 자치 정권이라 함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24) 金毓黻：《東北通史》上。

25) 佟冬主編：《中國東北史》第一卷，吉林文史出版社1988年版；孫進己：《東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劉子敏：《高句麗史研究》，延邊大學出版社1996年版。

26) 孫進己·張春霞：《高句麗國史》1999年征求意见稿；馬大正·李大龍：《古代中國高句麗歷史叢論》，黑龍江教育出版社2001年版。

27) 秦升陽：《唐代對高句麗的政策及其演變》，《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1997年版；康德文：《高句麗何以能同“南北朝”長期和平相處》，《高句麗歷史與文化研究》，吉林文史出版社1997年版。

28) 孫玉良：《高句麗政權的建立及其逐漸強盛》，《中國東北史》第一卷，吉林文史出版社1988年版；劉子敏：《高句麗國與南北朝的關係》，《中朝韓日關係史研究論叢》，延邊大學出版社，1995年版。

29) 馬大正：《論論高句麗歷史研究的幾個問題》，《高句麗歷史知識》，吉林文史出版社2003年版。

넷째, 427년 고구려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그 성격은 바뀌었는가? 과거에 譚其驤 선생은 427년 이후의 고구려는 북한(한국)의 국가에 속한다고 보고 있다.³⁰⁾ 오늘날 중국과 북한(한국)의 변경은 이후의 기나긴 역사의 발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때문에 오늘의 국경으로 고대 고구려 정권의 성격을 정하지 말아야 한다. 427년 이후의 고구려 역시 독립된 국가로 성립된 적이 없고, 여전히 중국의 기미정권이었으므로, 그러한 중국의 지방 자치정권의 속성은 변함이 없다.³¹⁾

한국의 많은 학자들은 고구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필자 또한 고구려는 매우 강한 자치성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신복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다. 또 어떤 사료들은 고구려의 독립적 성격을 증명하기도 한다. 하지만 역사를 볼 때는 반드시 그 역사 전체를 보고 그 어느 단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고구려가 그 전체의 역사에서 과연 독립을 위주로 하였는가 아니면 중국에 신복한 것이 위주였는가? 개별적인 사료로써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설사 고구려가 소위 독립된 국가의 시절이 있었다 하여도 이로써 고구려가 북한(한국)의 국가라는 결론은 내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고구려는 중국의 영토 위에 건립되었으므로 어찌든 그 당시는 중국의 할거 정권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겠다.

5. 고구려의 강역과 도성

고구려의 강역에 관하여 과거에 譚其驤 선생이 연구한 바가 있었고, 최근에 들어서는 더욱 많은 중국의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로 孫進己·馬大正·耿鐵華 등이 있다. 이들의 기본 관점은 비슷하며 손진기의 연구가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여기서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분명히 하고자 한다.

첫째, 고구려의 강역을 당연히 중국의 고대 강역으로 보아야 하는가? 담기양의《中國歷史地圖集》제5조 隋唐圖에서는 고구려를 당시 중국 지도의 밖에 그렸다. 최근 중국의 연구자들 대다수 견해는 이를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구려를 수당의 강역 안으로 그리고 어떤 특수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고구려 강역에 관한 논술은 대부분이 서남 지역은 상세히 다루고 동북 지역을 간략히 다루어 고구려 후기의 북방 변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한 것은 매우 적다. 다만 손진기와 張春霞만이 이를 구체적으로 논술하였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차이점은 과거 담기양의《중국역사지도집》제5책에서는 粟末·白山·拂涅·肅慎 등의 부를 모두 고구려 관할 범위 안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료를 보면 《舊唐書·靺鞨傳》에는 “其白山部素附于高麗”라고 하였고, 《新唐書·渤海傳》에는 “渤海粟末靺鞨附高句麗者”라고 하였다. 또 《新唐書·地理志》에는 以高麗降戶置州4, 有拂涅州라 하고, 《三國史記》에는 숙신이 고구려에 속했다는 기록이 있다. 때문에 白山靺鞨(지금의 延邊 지역)·粟末靺鞨(지금의 吉林市 일대)·拂涅部(지금의 拉林河 유역)·肅慎部(지금의 牡丹江 상류) 등은 일찍이 고려에 속했다. 이는 모두 사실대로 고구려 후기의 강역으로 넣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려가 멸망할 때 그 강역의 3분의 2가 중국 내로 들어갔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것이다.

30) 譚其驤：《曆史上的中國和中國曆代疆域》，《中國邊疆史地研究》1991年1期。

31) 孫進己·張春霞：《高句麗國史》1999年征求意见稿188頁。

셋째, 고구려의 강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거의 漢晉郡縣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오늘날의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놓고 보면 고구려의 오랜 강역은 지금의 중국 강역 내에 있었으며, 고구려가 한반도에 진입한 것은 4세기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고구려의 강역은 200여 년에 불과하고, 고구려 700여 년 동안에 400여 년은 순전히 지금의 중국 강역 내에서 존재하였던 것으로, 이는 우리가 확실히 인식해야 할 고구려 강역의 특징이다.

어떤 학자들은 고구려 강역을 중국의 河北省까지 확대하고, 또한 고구려가 중국 고대의 幽州를 점령한 적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한국에서 출판된 大韓帝國史 같은 책에는 고구려의 국토가 중국의 대부분 국토까지 확대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단지 중국의 어떤 지명들이 북한(한국)과 서로 같다는 것 뿐이다. 이러한 태도는 역사 연구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것으로, 대부분의 한국 학자들도 이런 관점은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고구려의 도성의 소재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쟁론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거의 각 도성의 위치에 대하여도 다른 차이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1. 紇升骨城은 고구려의 초기의 도성으로 일반적으로 桓仁에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성이 五女山城³²⁾ 또는 下古城子라는 다른 의견이 있다.³³⁾ 최근에 필자는 또 나蛤城의 위치가 더욱 적합할 것으로 보았는데³⁴⁾, 이곳은 바로 두 물줄기가 만나는 곳이기도 하다.

2. 尉那岩城은 일찍이 鳥居龍藏이 지금의 환인 오녀산성으로 보았다.³⁵⁾ 최근 중국의 학자들 대부분은 지금의 集安 城子山山城이라고 보고 있다.³⁶⁾ 하지만 필자는 이를 집안 霸王朝山城이라고 생각한다.³⁷⁾

3. 丸都城은 중국의 많은 학자들이 지금의 집안 城山子山城이라고 보고 있다.³⁸⁾ 하지만 필자는 이는 당연히 집안의 關馬牆山城이라고 생각한다.³⁹⁾

4. 平壤城에 대해서는 과거 많은 학자들이 國內 지역에 또 하나의 平壤城이 있다는 것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필자가 거듭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일부 학자들이 부득이 평양성과 국내성을 하나의 성으로 보고 그 위치를 지금 집안에 있는 平地城으로 정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안의 평지성이 국내성이면서 또 한편 평지성이라는 것은 불가능하여, 우리는 집안의 평지성이 평양성이고 국내성은 집안의 城山子山城이라고 보고 있다.⁴⁰⁾

32) 孫進己：《東北民族史稿》1977年本，最早提出紇升骨城是桓仁五女山城。

33) 劉永智：《論高句麗早期遺址五女山城》，《朝鮮史通訊》3期，1981年。

34) 孫進己 張春霞：《高句麗國史》，1999年征求意见稿。

35) 鳥居龍藏：《國內尉那岩城之說明》，《世界》第108號。

36) 李殿福：《集安城子山山城考略》，《求是學刊》1982年1期；李殿福：《高句麗丸都城》，《文物》1982年6期；魏存成：《高句麗初中期都城》，《北方文物》1985年2期；李殿福 孫玉良：《高句麗的都城》，《博物館研究》1990年1期；李健才：《高句麗的都城和疆域》，《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81年1 2期；耿鐵華：《中國高句麗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

37) 孫進己：《東北民族史稿》1977年本；孫進己 馮永謙：《東北曆史地理》第一卷，黑龍江人民出版社1989年版；孫進己：《高句麗王國的都城》，《東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曹德全：《尉那岩城考兼論丸都不是尉那岩城》，《高句麗探微》，香港中華國際出版社2001年版；馮永謙 孫進己：《高句麗國內城建城地點時間考辨》，《東北史研究》2004年1期。

38) 李殿福：《集安城子山山城考略》，《求是學刊》1982年1期；李殿福：《高句麗內都山城》，《文物》1982年6期；魏存成：《高句麗初中期都城》，《北方文物》1985年2期；李殿福 孫玉良：《高句麗的都城》，《博物館研究》1990年1期；李健才：《高句麗的都城和疆域》，《中國邊疆史地研究報告》1981年1 2期；耿鐵華：《中國高句麗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

39) 孫進己：《東北民族史稿》1977年本；孫進己 馮永謙：《東北曆史地理》第一卷，黑龍江人民出版社1989年版；孫進己：《高句麗王國的都城》，《東北民族史研究》(一)，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曹德全：《尉那岩城考兼論丸都不是尉那岩城》，《高句麗探微》，香港中華國際出版社2001年版；馮永謙 孫進己：《高句麗國內城建城地點時間考辨》，《東北史研究》2004年1期。

고구려 역대의 도성에 대하여서는 《三國史記》에 상세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없었다. 墨守成이 말하기를 舊說을 상세히 검토하지 않은 실수는 이로 인하여 많은 모순을 드러낸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집안의 성산자산성을 두 개의 성으로 생각하여 전기는 위나암성, 후기는 환도성이라고 하면서도 개명한 기록에 대해서는 전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집안의 평지성을 두 개의 성으로 보고 전기는 국내성, 후기는 평양성이라 하고 있지만, 사료에 있는 이 두 성의 축조 시기가 결코 같지 않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기원 3년에 집안의 평지성은 아직 王莽의 玄菟亭(원래 漢西蓋馬縣)에 속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고구려가 이미 이곳에 천도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丸都紀功碑는 지금의 집안시에서 서북쪽으로 90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白鳥庫吉 등은 《滿洲歷史地理》에서는 丸都를 지금의 집안 서북 90리 부근이라고 하였다. 관마장산성이 이곳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데, 환도가 성산자산성에 있다는 것에 맞추기 위하여 제멋대로 卅丘儉紀功碑의 출토 지점을 집안에서 34리 떨어진 곳으로 바꾸었고, 결국 성자산산성은 와전되어 丸都山城으로 불리게 되었다. 丸都碑가 90리 밖에서 발견되었는데 어찌하여 丸都城은 교외 5리 밖에 있던 말인가? 모순과 오류가 적지 않는데 도대체 사람들은 왜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있는가? 당연히 진지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담기양의《中國歷史地圖集》제 5조 隋唐圖에서는 고구려를 당시 중국 지도의 밖에 그렸다. 최근 중국의 연구자들 대다수 견해는 이를 반드시 정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고구려를 수당의 강역 안으로 그리고 어떤 특수한 표기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구려 도성의 위치에 관하여 한국의 학자들은 독자적인 견해가 없는 것 같다.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거의 중국 학계의 전통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견해도 많은 오류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각 說의 근거를 진지하게 검토함으로써, 전통적인 주장들을 경솔하게 믿지 말기를 건의하는 바이다.

6. 고구려 문화의 연구

오랫동안 고구려 문화에 대하여 중국학자들은 많은 연구 성과물을 펴냈으며, 최근에도 계속하여 고구려 문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⁴¹⁾ 그러나 대부분이 고구려 문화의 구체적 방면에 대한 소개로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겠다.

여기서는 주로 최근에 고구려 문화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해 연구한 것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趙東艷의 《高句麗文化中的漢文化因素》⁴²⁾ · 張碧波의 《高句麗文化淵源》⁴³⁾ · 張博泉의 《高句麗與中原

40) 孫進己:《東北民族史稿》1977年本; 孫進己·馮永謙:《東北歷史地理》第一卷, 黑龍江人民出版社1989年版; 孫進己:《高句麗王國的都城》,《東北民族史研究》(一), 中州古籍出版社1994年版; 曹德全:《尉那岩城考兼論丸都不是尉那岩城》,《高句麗探微》, 香港中華國際出版社2001年年版; 馮永謙·孫進己:《高句麗國內城建城地點時間考辨》,《東北史研究》2004年1期.

41) 耿鐵華:《中國高句麗史》, 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 馬大正等:《古代中國高句麗歷史續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3年版.

42) 趙東艷:《高句麗文化中國漢文化因素》,《遼寧大學學報》1995年3期.

43) 張碧波:《高句麗文化淵源考》,《北方文物》1998年1期.

文明》⁴⁴⁾·孫進己의 《隋唐時期高句麗文化的漢化》⁴⁵⁾ 등이 있고, 2003년에 들어서는 孫泓·張福 등은 함께 《高句麗文化的主體是漢文化》를 발표하였다.⁴⁶⁾ 이러한 연구 성과들은 중국의 학자들이 고구려 문화의 전반적인 성격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 과정을 반영하고 있다. 고구려 문화 속에서 漢 문화의 요소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고구려 문화의 연원을 탐색하고 중원 문명과의 관계를 진일보시켜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이는 고구려 문화가 점차 漢化된 결과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고구려 문화는 이미 한문화로 總體化 되었다고 보았다. 바로 손홍이 문장에서 “고구려는 오랜 발전 과정 속에서 대량의 한족들을 융합하였고, 한족 문화의 특색을 흡수하여 새로운 문화적 특징을 형성하였으며, 또한 한문화를 그 문화의 주체로 삼았다.”고 한 것과 같은 말이다. 이 말은 고구려가 본래 가지고 있던 자신의 민족 문화를 결코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랫동안의 한화 과정을 거쳐 고구려 민족의 문화가 점차 한문화를 그 주체로 하였다는 것을 논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아마 고구려 문화에 대한 한국 학자들의 인식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한국 학자들은 고구려 문화의 독특한 민족 성격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고구려 문화와 신라·백제 문화의 공통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물론 우리는 고구려 문화가 당연히 그들만의 독특한 민족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이것으로 인하여 고구려 문화가 점차 한문화되고 결국 한문화를 주체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러한 발전 과정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문화와 신라·백제의 문화는 분명히 공통성이 있다. 하지만 이 공통성은 그들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한문화의 영향을 흡수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이 서로 간에 교류하면서 영향을 준 것을 배제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전자를 위주로 하고 있다.

7. 고구려 문물의 고고학적 연구에 관하여

오랫동안 중국의 고고학계에서는 고구려의 고고 방면에 대하여 많은 작업을 진행하여 중요한 자료들을 대량으로 수집하였다. 하지만 체계적인 연구의 총결은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세 권의 전문 서적이 있는데, 그나마 두 권은 모두 好大王碑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한 권은 비교적 전면적으로 다루었는데, 魏存成이 쓴 《高句麗의 考古》가 그것이다. 또 최근 8년 동안 고구려의 고고 유물에 관한 책은 6권이 출판되었는데, 그 중 위존성의 《高句麗遺存》, 경철화의 《高句麗瓦當》, 王綿厚의 《高句麗古城研究》, 鄭永振의 《高句麗渤海靺鞨墓葬比較研究》 및 朴眞奭과 경철화의 《好大王碑研究》 2권이 있다. 경철화의 《中國高句麗史》는 많은 지면을 두어 고구려의 고고 문물에 관하여 논술했다. 그리고 기타 종합적으로 서술된 고구려의 고고 문물에 관한 문장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손진기의 《高句麗文物考古研究綜述》, 손홍의 《遼寧省高句麗文物研究綜述》 등이 있는데, 이들 저서와 문장에서는 많은 새로운 문제와 관점이 제시되어 고구려의 고고 문물 연구를 촉진시켰다.

고구려 古城 연구 방면에서 손진기는 그 유형을 石築山頂式山城·山谷式山城·土築山頂式山城·平地城으로 분류하고 簸箕型山城과 筑壘式山城을 모두 산곡식산성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고

44) 張博泉：《高句麗與中原文明》，《社會科學戰線》1998年5期。

45) 孫進己：《隋唐時期高麗王國經濟文化的漢化》，《高句麗國史》，1999年征求意见稿。

46) 孫泓：《高句麗文化的主體是漢文化》，2003年集安高句麗的學術會交流稿；同會張福有也發表了相同的文章。

구려 사람들은 주로 앞의 두 유형을 발전시켰다고 보았다. 또 세 번째 유형은 부여의 축성 방법이고, 네 번째 유형은 한인의 방법으로 고구려가 이를 계속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⁷⁾ 또한 위존성은 고구려 산성을 籓箕型山城·山頂型山城·築斷爲城型山城·左右城內外城型山城으로 나누었다.⁴⁸⁾ 왕면후는 산성과 평지성이 서로 결합하는 것이 고구려 핵심 건축의 특수 형식이라고 보고 고구려 산성을 초기·중기·후기로 나누었다.⁴⁹⁾

우리가 여기서 진일보 연구해야 할 문제는 고구려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으며, 각 민족들의 축성 방식이 서로 달랐다는 것이다. 과연 모두가 산성이었을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고구려 산성 가운데, 고구려의 기타 민족의 산성은 없는가? 산성을 그들은 과연 구별해서 축조했을까? 고구려 성에는 산성이 아닌 것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 중에서 고구려가 다른 민족의 것을 계속 사용하기도 하였는데, 그렇다면 고구려가 새로 축조한 것은 없을 까? 어쨌든 고구려의 각 민족과 시기 별로 고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류는 더욱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에 고구려 성의 숫자와 분포에 대한 인식 또한 일치되지 않고 있다.

북한(한국)에도 역시 많은 고구려 산성이 있다. 그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이 고구려가 새로 축조한 것이고, 또 어떤 것이 다른 민족의 것을 연용한 것인가? 고구려의 통치 시기에 한반도 북부에서는 결코 단일한 민족만이 생활하던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성의 축성 방식에서도 서로 차이점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그 차이는 무엇인가?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

고구려 墓葬의 연구에 관하여 위존성·경철화·정영진의 연구는 모두 나름대로 특징이 있다.⁵⁰⁾ 하지만 묘장과 그 족속을 결합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어떤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고구려 민족의 묘장을 적석묘만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고구려의 통치를 받던 한족·말갈족·부여족 등의 묘장은 어떠한가? 지금까지 이에 관한 논술은 없다. 또한 어떤 벽화고분은 분명히 고구려 사람의 것이 아니지만 고구려 벽화고분으로 통칭하여 부르고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5세기에는 高麗라고 국명을 바꾸었는데, 그 전기와 후기의 묘장은 형태상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이 또한 명확하지 않다. 보통 전통적인 3기 혹은 4기의 구분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더욱 진전된 연구를 기다리는 것들이다.⁵¹⁾ 고구려의 묘장은 서로 다른 유형과 형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 기원과 족속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비록 어떤 묘장이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다하더라도 각 민족 상호간의 영향이란 문제가 있다. 때문에 반드시 더욱 심도 있는 진지한 연구가 필요하고, 그것들의 원류를 분류하여 탐구해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고고 문물을 이용하여 고구려 민족과 그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시기 평민들의 묘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며, 이는 고구려의 통치를 받던 민족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고구려의 문물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중국 길림성 집안현의 고구려 문물이 전체 고구려 문물의 대표로 이해되고 연구되어 왔는데, 이것은 분명히 불완전한 것이다. 손홍의 《遼寧省高句麗文物研究綜述》⁵²⁾과 《吉林省高句麗文物研究文物綜述》⁵³⁾은 이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다. 여기에

47) 孫進己 孫泓：《高句麗族史》；1999年征求意见稿，201206頁°

48) 魏存成：《高句麗遺迹》，文物出版社2002年年版，106115頁°

49) 王綿厚：《高句麗古城研究》，文物出版社2002年版，161166頁°

50) 魏存成：《高句麗遺迹》，文物出版社2002年版；耿鐵華：《中國高句麗史》，吉林人民出版社2002年版；鄭永振：《高句麗渤海靺鞨墓葬比較研究》，延邊大學出版社2003年版°

51) 孫進己：《高句麗考古研究綜述》，《高句麗遺迹發掘和遺物》，學研文化社2001年版；孫進己 孫泓：《公元37世紀集安平壤壁？墓的族屬？分期與定名》，見本會稿

52) 孫泓：《遼寧地區高句麗遺物研究綜述》，《高句麗遺迹發掘和遺物》，學研文化社2001年版°



▲ 무용총수렵도(소수레)

만일 다시 《朝鮮半島北部高句麗文物研究綜述》이란 논문이 한 편 있다면 고구려 문물의 연구는 비교적 완정해질 것이다. 이 방면에서 중국 학자들은 자료 수집에서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비교적 완정한 연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북한의 학자들이 이러한 작업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고 혹은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여 완성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고구려金石文에 대한 연구도 최근 많은 진전이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현재까지 모두 4권의 저서가 출판되

었지만, 모두 好大王碑에 관한 연구라는 것이다. 호대왕비는 물론 특수한 중요성이 있지만, 전면적인 고구려 금석문의 연구라는 측면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또 冉牟墓誌와 기타 묘지에 관한 몇 편의 연구 문장이 발표되었지만, 아직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⁵⁴⁾

전체적으로 본다면 최근 6년은 중국 고구려사 연구가 더욱 더 개방되고 번영한 6년이었다. 비록 百花齊放의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百家爭鳴이 부족하다. 서로 다른 많은 의견은 “求同存異”로 쟁론을 하면서 점차 일치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내외의 일부 사람들은 급하게 일치된 견해를 구하려는 마음으로 비학술적인 수단에 의지하려 하지만, 학술 문제는 결국 학술적인 논쟁으로 해결해야 비로소 분명해지는 것이다. 비록 비학술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어떤 견해가 잠시 우위를 점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학자들의 서로 다른 인식을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는 국내에서 더욱 진일보된 백가쟁명을 고대하고 있으며, 동시에 외국의 학자들과도 함께 논쟁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진정한 학자라면 선입견으로 학술 연구와 객관적인 사실을 대신하지는 아니 할 것이라고 믿는다. 일체의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한 것들은 實事求是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고, 사료를 근거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결론이라면 반드시 도출해내야 한다. 주관적인 좁은 입장에서 출발하지 말아야 하며, 자신의 희망을 역사에 강제로 투영해서도 안된다.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과정이 필요하여 잠시 그 일치점을 찾지 못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조급해하지 말고 “同求存異”로서 점차적으로 일치점을 갖게 되리라고 믿는다.

진심으로 각 국의 학자들이 공동의 선조의 역사에 대한 관심을 통하여 모이고, 더 나아가서 서로의 우호적인 협력을 촉진하길 바란다. 제발 조상의 유산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아니 될 것이며, 우리 학자들은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술선수범하여 함께 동북아 우호 합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교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절대 장애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이다.

53) 孫泓：《吉林地區高句麗文物研究綜述》，吉林省高句麗學術研討會2002年論文°

54) 孫進己：《高句麗考古研究綜述》，《高句麗遺迹發掘和遺物》，(韓國)學研文化社2001年版°



周恩来总理谈中朝关系

(摘自《外事工作通报》1963年第10期)

——1963年6月28日，周恩来总理接见
朝鲜科学院代表团时，谈中朝关系——

출처 : < <http://www.sh21.or.kr/InfoData/list.asp> >



周恩来总理谈中朝关系

今年(1963年)6月28日，周恩来总理接见朝鲜科学院代表团时，谈到了中朝关系。要点如下：

中朝关系现在密切，历史上也密切。可以分成三个时期：

第一个时期，就是中朝两国、两个民族的历史关系。

第二个时期，就是中、朝同时都遭到帝国主义侵略，你们(指朝鲜)变成日本殖民地，我们部分变成各个帝国主义的半殖民地，一部分又沦为日本的殖民地。在这个时候中、朝之间的革命关系。

第三个时期，就是现在，我们都是社会主义国家，兄弟党、兄弟国家的关系。

这三个时期的中朝两国、两党之间的关系有许多问题值得研究。对历史关系、民族关系、革命关系，经过调查研究，双方的观点、看法完全一致了，然后在文件上、书籍上写出来。这是我们历史学家的一件大事，应该搞出来。这也是我们做政治工作、党的工作的人，应该努力的方面之一。

第一个时期是从有历史记载以来，有发掘出来的文物可以证明的。两国、两个民族的关系开始，直到帝国主义侵略为止，一个很长的时间，有三、四千年或者更长。

这样一个历史年代，两国的历史学家有些记载是不甚真实的。这里面，主要是中国历史学家，许多人都是以大国主义、大国沙文主义观点来写历史。因此，许多问题写得不公道。首先对两国民族的发展，过去中国的一些历史学家的看法就不那么正确，不那么合乎实际。朝鲜民族自从到了朝鲜半岛和东北大陆以后，长时期在那里居住。辽河、松花江流域都有朝鲜族的足迹。这可以从辽河、松花江流域、图们江流域发掘来的文物、碑文得到证明，许多都有朝鲜文的痕迹。可以证明很久以来，朝鲜族居住在那里。在镜泊湖附近，有一个渤海国的古迹，还有首都。据说出土文物证明，那也是朝鲜族的一个支派。这个国家在历史上存在

了一个相当长的时期。所以，可以证明，不仅在朝鲜半岛上有朝鲜族，同时，在辽河、松花江流域，有很长一个时期也有朝鲜族在那里居住。至于朝鲜族是否在亘古的时候，有一部分是从亚洲南部漂海过来的，这是另一个问题。但一定有一部分原来就居住在半岛上。居住在图们江、辽河、松花江流域的，这是肯定的。历史记载和出土文物都证明了。

从民族的生活习惯上看，有从南亚带来的生活习惯：种稻谷、进门脱鞋、语言发音有些和我们广东沿海一带的发音接近。我们广东沿海有的居民也是从南亚移来的。这个问题，要留待历史学家进一步研究，不在我今天要讲的范围以内。不过要证明，在图们江、辽河、松花江流域，朝鲜族曾经长期居住过。对这个问题，你们有责任，也有权利到这些地方去调查，寻找碑文、出土文物，研究历史痕迹。我们有责任给你们帮助。

研究民族的发展历史最好从出土的文物来找证据，这是最科学的。郭沫若同志就是这样主张的。书本上的记载不完全可靠。有的是当时人写的，观点不对；有的是以后的人伪造的，更不可靠。因此，历史书籍是第二手材料不完全可靠。当然，对这样长的历史问题，也得研究文字记载的历史材料。但是要研究这些材料，就必须中、朝两国同志建立一个共同的观点。这个观点，就是当时中国比你们国家大，文化发展早一些，总有封建大国的态度，欺侮你们，侵略你们的时候多。中国历史学家必须承认这个事实。有时候就把古代史歪曲了，硬加上你们头上，说什么朝鲜族是“箕子之后”，硬要到平壤找个古迹来证明。这是歪曲历史的，怎么能是这样的呢？

秦、汉以后，更加经常地从关内到辽河流域征伐了，那更是侵略，随着用兵失败而归。唐朝也打过败仗，但也欺侮了你们。那时，你们有一个将军把我们的侵略军队打败了。打得好。这时，渤海国就起来了。以后，在东北就有了辽族、金族的兴起。那时，中国所遇到的问题是辽族、金族侵入中国本土的问题。以后就是蒙古族。元朝也侵略了你们，也遭到失败。最后是明朝，直接和朝鲜作战，很快就是满族兴起，占领了长白山以东到辽河流域的广大地区。

在这样一个时期，汉族也有一部分迁到东北地区居住了。满族统治者把你们越挤越往东，挤到鸭绿江、图们江以东。

满族对中国有贡献，把中国版图搞得很大。兴盛的时候，比中国现在的版图还要大一些。满族以前，元朝也一度扩张很大，但很快就丢了，那不算。汉族统治时期没有这么大。但这都是历史的痕迹，都过去了。这些事情，不是我们负责任的，是祖宗的事。当然只能承认这个现状。尽管如此，我们要替祖先向你们道歉，把你们的地方挤得太小了。我们住的地方大了。

所以，必须还它一个历史的真实性，不能歪曲历史，说图们江、鸭绿江以西历来就是中国的地方，甚至说从古以来，朝鲜就是中国的藩属，这就荒谬了。中国这个大国沙文主义，在封建时代是相当严重的。人家给他送礼，他叫进贡；人家派一个使节来同你见了面，彼此搞好邦交，他就说是来朝见的；双方打完仗，议和了，他就说你是臣服了；自称为

天朝、上邦，这就是不平等的。都是历史学家笔底的错误。我们要把它更正过来。

所以，我很希望你们科学院几位懂汉文的历史学家，来共同研究中朝关系史的问题，攻我们一下。因为，你们一读那些书，就不好受，就发现问题。我们自己读，常常不注意，就忽略过去了。比如戏剧里有一个薛仁贵，唐朝人，他就是征东打你们的，侵略你们的。我们的戏剧中就崇拜他。现在我们是社会主义国家，你们也是社会主义国家，我们不许再演，要就是对这个戏剧批判才行。

还有对越南，中国有个英雄叫马援，伏波将军，征越南。人家二才女英勇抗击失败后投河自尽，还把脑袋割下来送到洛阳。我去越南发现了，去二才女庙献了花，批判马援。我们历史上对马援是称道备至的。

现在，请你们懂汉文的历史学家来中国，或我们去，共同研究历史关系，这对我们、对你俩，都有好处。写出的历史书籍也可更全面了。

所以，有两件事要做。一是考古学家去发掘文物、碑等东西；二是研究书本的东西，研究历史。这样，就能把我们二、三千年来的关系，摆在恰当位置上了。

第二个时期，是革命时期。日本侵略你们，朝鲜变成殖民地。所有的帝国主义侵略我们，中国变成半殖民地，日本又侵占东北，使之变成殖民地。在这个时期，中朝两国人民建立了革命的同志关系。这段历史是非常丰富的。

从大的阶段划分，十月革命以前，那是我国的旧民主主义革命时期。朝鲜也有不少同志流亡到中国，参加中国的革命。这是从甲午战争到十月革命二十多年的时期。安重根行刺伊藤博文，就是在哈(尔)滨车站。

十月革命以后，我们进入民主主义革命阶段了，两国开始有了共产党，那时许多同志在朝鲜站不住脚，流亡到中国来。最大量的是在东北，中国各地也都有。因此，以后中国革命的整个历史阶段都有朝鲜同志参加。

崔庸健委员长说，那时朝鲜同志流亡到中国来，希望把中国革命搞好，搞成功，跟着可以帮助朝鲜革命取得胜利。这的确如此。在十月革命初期，朝鲜同志是抱着这样的想法来的。当时要去日本学军事很困难，受到控制。因此，不少同志就到中国来学军事。许多人坐船到南方，那里有云南讲武堂。以后，孙中山先生办黄埔军校，有不少朝鲜同志进这个学校。那是在1924-1927年，崔庸健、杨林同志当时都是教官，多数同志是当学生，学习军事。大革命最后一次撤兵的一个夜晚，广州暴动，很多朝鲜同志牺牲了。崔庸健委员长还记得，那时有一百六十多位朝鲜同志，在广州沙河、汉河里坚守一个阵地。结果，绝大部分同志英勇牺牲了。那时，崔庸健同志在那里指挥。我们这一次商量，决定在广州这个阵地上立个纪念碑，在广州烈士陵园里建立一个纪念馆。中国大革命失败以后，1928年以后，朝鲜同志在中国做秘密工作的很多，在上海、东北等地，参加工人运动、农民运动和学生运动。

的确，十月革命初期，朝鲜同志是抱着这样的革命理想来到我国的。

的确，十月革命初期，朝鲜同志是抱着这样的革命理想来到我国的。不管公开斗争、秘密斗争、政治斗争、武装斗争都参加，帮助中国革命。中国革命斗争胜利以后，再推动朝鲜革命的胜利。从1931年“九·一八”炮响以后，情况变化了。不仅朝鲜成为日本殖民地，中国东北也变成日本的殖民地。因此，虽在表面上，东北还有个傀儡政府，但那只是形式的，实际是，朝鲜和东北没有区别了，都是日本的殖民地。

这个时候，在东北发动的抗日武装斗争不能说是朝鲜同志参加了中国革命斗争了，而是中朝两国人民的共同斗争，联合斗争，这是一个新的阶段。这是我这次得到的新的认识。那时在金日成同志领导下的抗日游击战争，按历史情况和我们的观点来解释，应该认为是中朝两国人民的联合斗争、共同斗争，如东北抗日联军，应解释为中朝两国人民的抗日联军，事实也是如此。

我这次陪同崔庸健委员长、李孝淳副委员长和朴外相去东北哈尔滨、长春、沈阳各地，同抗日的老战友谈话，证实了这个看法。

当时中国党正处在立三路线、王明路线左倾机会主义路线的领导下，所以那时中国党的武装斗争方针是搞城市暴动。因为城市里没有力量，所以每搞必失败。当然同时也提出在农村搞武装斗争。而在东北农村发动武装斗争最多的是朝鲜同志。为什么？因为当时流亡到中国东北的朝鲜同志都在农村安家，同农民关系非常密切，或者到朝鲜族聚居地区。因此，很容易把农民发动起来，开展武装斗争。所以，从“九·一八”到抗日战争胜利，十多年时间，产生了许多抗日部队，几乎每一支部队都有很多朝鲜同志。

现在纪念这段历史，必须恢复这个历史真实性。抗日联军是中朝两国人民的联军，纪念馆都是这样来解释。不能象象过去那样解释，那是歪曲，说成是朝鲜同志参加中国革命，而且把朝鲜同志说成是中国的朝鲜族，不看成是多数是从朝鲜流亡来的。这是不正确的。这种观点，也是一种大国沙文主义的残余在革命队伍中的表现。要把抗日战争这段历史重新写。我们提议，东北参加过抗联的，北京也有，组织一个研究班，有时可以去朝鲜征求有关人员的意见。反过来，朝鲜同志也可来我国共同研究。这样就可以恢复历史的真实性，得到全面的材料。

除这段历史以外，解放战争、反蒋斗争中，也吸收了许多朝鲜族同志，成立了朝鲜师，以后抗美援朝，回到朝鲜去了。历史证明，他们是英雄地参加了中国的解放战争，以后，又参加抗美援朝，直至得到胜利。所以，这个革命历史阶段，双方在相互支持。而且证明，朝鲜同志支持搞中国同志的革命，比中国同志支援朝鲜的多。同时，时间也长。

从这个意义上来说，革命博物馆和军事博物馆陈列的东西还需要修正、修改的地方。现在还不够。上次陪崔庸健委员长去东北的时候，我已经找了博物馆的同志谈过这个问题。

第三个时期，现在这个时期：我们都在深入社会主义革命和社会主义建设，更需要互相学习，密切合作。

不仅在历史上，革命斗争中，双方经受了考验，反对帝国主义和反

对现代修正主义斗争中，又经受了考验。两国确实是认识一致、行动一致。的确是鲜血织成的战斗友谊、同志友谊。

我们是把你们看成是我们的前线，不仅是中国的前线，而且是社会主义阵营的东方前哨。你们应该把中国看成是你们的后方，特别是东北，更是你们近距离的后方。

我们互相学习。你们来参观我们的，我们去参观你们的。这已经一天一天发展起来了。但是，从目前看，还是你们比我俩热心。刚才我们不是举出例子来批评他们（指中国科学院张劲夫同志）了吗？你们一来四十二天，二十多人。他们去朝鲜才七人，三十余天。就是在这亦面需要向你们学习。所以，这次决定由东北局、东北三省的省委，在今年冬天组织一个参观团去学习你们的城市工作、农村工作、党的工作、总路线、千里马运动、青山里工作方法和大安工作体系。

我们东北的同志去你们那里，你们派人到东北可以发生直接联系。在平时，这样密切联系，才会一旦有事，把你们当成自己的前线，你们把我们看成后方，才不致能出隔阂和协作不灵的缺点。

不仅对你们党的工作、城市工作、农村工作、工业交通工作，还有你们的文化工作也值得学习。我们这次同朝鲜使馆的大使同志谈过，要派一个电影工作团去学习，学习创作红色宣传员的经验，要真正到农村去学习，去访问李善子的真身李信子，也要到青山里去学习。通过这个副本，这个电影，可以真正学到朝鲜人民的工作、农村生活的艰苦朴素作风、说服的经验、生产斗争和阶级斗争的经验。然后，表现在戏剧舞台上、银幕上。通过中国艺术家的介绍，使中国人民了解朝鲜人民的实际生活和战斗生活。

你们的唱歌、舞蹈也值得学习。你们有主体思想，反对洋气。我们的歌舞，就是民族化不那么强烈，有点杂乱无章。

崔庸健委员长去东北三个地方访问，我们组织了三个晚会，长春的最为失败。唱“金日成将军之歌”不像朝鲜风格；唱“东方红”听也听不懂，洋气可大了。舞蹈有一个节目，叫“两个红军舞”，一老一少。以为是民族舞蹈，结果是芭蕾舞。小红军还是女翁，托举足尖舞，不论不类。朝鲜同志看了，反映不强烈。我们看了，也不高兴。陈毅元帅说，证明是文化太低了。

朝鲜同志很直率地向我们提出来，说我们有些东西就是没有主体思想，就是东拉一点，西拉一点，盖房子、吃的菜，都有这种情况，古今中外，杂乱无章。这个批评很恰当。指出这一点非常好。

第三个时期，现在这个时期：我们都在深入社会主义革命和社会主义建设，更需要互相学习，密切合作。

不仅在历史上，革命斗争中，双方经受了考验，反对帝国主义和反对现代修正主义斗争中，又经受了考验。两国确实是认识一致、行动一致。的确是鲜血织成的战斗友谊、同志友谊。

我们是把你们看成是我们的前线，不仅是中国的前线，而且是社会主义阵营的东方前哨。你们应该把中国看成是你们的后方，特别是东北，更是你们近距离的后方。

我们互相学习。你们来参观我们的，我们去参观你们的。这已经一天一天发展起来了。但是，从目前看，还是你们比我俩热心。刚才我们不是举出例子来批评他们（指中国科学院张劲夫同志）了吗？你们一来四十二天，二十多人。他们去朝鲜才七人，三十余天。就是在这亦面需要向你们学习。所以，这次决定由东北局、东北三省的省委，在今年冬天组织一个参观团去学习你们的城市工作、农村工作、党的工作、总路线、千里马运动、青山里工作方法和大安工作体系。

我们俩东北的同志去你们那里，你们派人到东北可以发生直接联系。在平时，这样密切联系，才会一旦有事，把你们当成自己的前线，你们把我们看成后方，才不致能出隔阂和协作不灵的缺点。

不仅对你们党的工作、城市工作、农村工作、工业交通工作，还有你们的文化工作也值得学习。我们这次同朝鲜使馆的大使同志谈过，要派一个电影工作团去学习，学习创作红色宣传员的经验，要真正到农村去学习，去访问李善子的真身李信子，也要到青山里去学习。通过这个副本，这个电影，可以真正学到朝鲜人民的工作、农村生活的艰苦朴素作风、说服的经验、生产斗争和阶级斗争的经验。然后，表现在戏剧舞台上、银幕上。通过中国艺术家的介绍，使中国人民了解朝鲜人民的实际生活和战斗生活。

你们的唱歌、舞蹈也值得学习。你们有主体思想，反对洋气。我们的歌舞，就是民族化不那么强烈，有点杂乱无章。

崔庸健委员长去东北三个地方访问，我们组织了三个晚会，长春的最为失败。唱“金日成将军之歌”不象朝鲜风格；唱“东方红”听也听不懂，洋气可大了。舞蹈有一个节目，叫“两个红军舞”，一老一少。以为是民族舞蹈，结果是芭蕾舞。小红军还是女箭，托举足尖舞，不论不类。朝鲜同志看了，反映不强烈。我们看了，也不高兴。陈毅元帅说，证明是文化太低了。

朝鲜同志很直率地向我们提出来，说我们有些东西就是没有主体思想，就是东拉一点，西拉一点，盖房子、吃的菜，都有这种情况，古今中外，杂乱无章。这个批评很恰当。指出这一点非常好。



주은래총리- 중국·조선관계 대화



출처 : < <http://www.sh21.or.kr/InfoData/list.asp> >

금년(1963년) 6월28일 주은래 총리는 조선과학원 대표단 접견시 중국과 조선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현재의 중조관계는 매우 밀접하며 역사적으로도 그러했는데 다음의 세 시기로 나누어볼 수 있다.

제1시기는 중조양국과 두 민족의 역사적 관계이다.

제2시기는 중국과 조선이 모두 동시에 제국주의 침략을 당했을 때이며,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고 중국은 부분적인 일본의 식민지를 포함해 제국주의의 반식민지가 됐을 때이다. 이 시기의 중국과 조선은 혁명적 관계였다.

제3시기는 바로 현재인데,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형제당 형제국가의 관계이다.

이 세 시기의 중국·조선 두 나라와 두 당간의 관계에서 연구할만한 가치가 있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 역사관계, 민족관계, 혁명관계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쌍방의 관점과 견해를 완전히 일치시킨 다음 문건과 서적에 모두 기록하였다. 이것은 우리 역사학자의 일대 사건이고 응당 해야했던 일이다. 이것은 또한 정치활동을 하는 당 활동가인 우리들이 당연히 노력해야할 방향의 하나이다.

동북대륙을 지배 했던 조선민족

제1시기는 역사기록 이래로 발굴된 문물에 의해 증명된다. 두 나라, 두 민족 관계는 제국주의 침략으로 중지될 때까지3, 4천년 이상 매우 긴 시간이었다.

이러한 역사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되지 않는다. 이것

은 중국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쇼비니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주요원인이다. 그리하여 많은 문제들이 불공정하게 쓰여졌다. 먼저 양국민족의 발전에 대한 과거 중국 일부 학자들의 관점은 그다지 정확한 것은 아니었고 그다지 실제에 부합하지 않았다. 조선민족은 조선반도와 동북대륙에 진출한 이후 오랫동안 거기서 살아왔다. 요하(遼河), 송화강(松花江) 유역에는 모두 조선민족의 발자취가 남아있다. 이것은 요하와 송화강 유역, 도문강(圖們江) 유역에서 발굴된 문물, 비문 등에서 증명되고 있으며 수많은 조선문헌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조선족이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것은 모두 증명할 수가 있다. 경백호 부근은 발해(渤海)의 유적이 남아있고, 또한 발해의 수도였다. 여기서 출토된 문물이 증명하는 것은 거기도 역시 조선족의 한 지파(支派)였다는 사실이다. 이 나라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다. 따라서 조선족이 조선반도에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요하, 송화강 유역에서도 오랫동안 살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조선족이 더 오래전에도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일부는 아시아 남부에서 표류해 왔다고도 하나 이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선족 일부가 원래부터 한반도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이다. 도문강, 요하, 송화강 유역에서 거주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역사기록과 출토된 문물이 이미 증명하고 있다.

민족의 생활습관으로 볼 때, 남아시아에서 달려 온 생활습관도 있다. 즉 벼농사, 방에 들어설 때 신발 벗기, 언어발음은 우리나라 광동연해지역 일대의 발음과 조금 가깝기도 하다. 우리나라 광동연해의 일부 주민은 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왔다. 이 문제는 역사학자들에게 한층 심도있는 연구를 하도록 남겨두도록 하고 오늘 여기 연설 범위에 포함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도문강, 요하, 송화강 유역에서 조선족이 이미 오랫동안 거주했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고 또한 이 지방에 가서 현장조사하고, 비문과 출토문물을 찾고, 역사흔적을 연구하는 것은 또한 권리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신들을 돕도록 하겠다.

민족의 역사발전을 연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토된 문물에서 증거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바로 곽말약(郭沫若) 동지가 주장한 것이다. 서적상의 기록은 완전히 믿을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어떤 것은 당시 사람이 쓴 것이지만 관점이 틀렸기 때문이다. 또 어떤 것은 후대 사람이 위조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서는 완전히 믿을 수만은 없는 2차 자료일 뿐이다. 당연히 이렇게 긴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문자로 기록된 역사자료도 연구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자료를 연구하려면 중국과 조선 두 나라 동지들이 반드시 하나의 공통된 관점을 세워야 한다. 이 관점이란 바로 당시 중국이 여러분들 나라보다 컸고, 문화발전도 조금 더 빨랐기 때문에 항상 봉건대국의 태도로 당신들을 무시, 모욕하면서 당신들을 침략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다. 중국역사학자들은 반드시 이런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어떤 때는 고대사를 왜곡했고, 심지어 여러분들의 머리위에 조선족은 “기자자손(箕子之后)”이라는 말을 억지로 덧씌우고, 평양에서 그 유적을 찾아 증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하기도 했다. 이것은 역사왜곡이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던 말인가?

진, 한나라 이후 빈번하게 요하유역을 정벌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실패하자 그냥 돌아왔을 뿐이지 분명한 침략이다. 당나라도 전쟁을 치렀고 또 실패했으나 당신들을 무시하고 모욕했다. 그때, 여러분 나라의 훌륭한 한 장군이 우리 침략군을 무찔렀다. 이때 바로 발해가 일어났다. 이후 동북에는 바로 요족(遼), 금족(金族)이 발흥했다. 그때 중국이 맞닥뜨린 문제는 요족과 금족의 중국본토 침입문제였다. 다음은 몽고족이 문제였는데, 원나라도 역시 당신들을 침략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마지막으로 명나라는 조선과 직접 합동작전을 전개했으나 만주족이 매우 빨리 흥기하여 장백산(백두산) 동쪽에서 요하유역에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다.

이러한 시기에 한족(漢族)또한 일부가 동북지역으로 옮겨 거주하게 되었다. 만주족 통치자는 당인들을 계속 동쪽으로 밀어냈고 결국 압록강, 도문강 동쪽까지 밀리게 되었다.

만주족은 중국에 대해 공헌한 바가 있는데 바로 중국땅을 크게 넓힌 것이다. 왕성한 시기에는 지금의 중국땅보다도 더 컸었다. 만주족 이전, 원나라 역시 매우 크게 확장했지만 곧바로 사라졌기 때문에 논의로 치자. 한족이 통치한 시기에는 국토가 이렇게 큰 적이 없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모두 역사의 흔적이고 지나간 일들이다.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니고 조상들의 몫이다. 그렇지만 당연히 이런 현상은 인정해야만 한다. 이렇게 된 이상 우리는 당신들의 땅을 밀어부쳐 작게 만들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땅이 커진 것에 대해 조상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래서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한다. 역사를 왜곡할 수는 없다. 도문강, 압록강 서쪽은 역사 이래 중국땅이었다거나, 심지어 고대부터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황당한 이야기다. 중국의 이런 대국쇼비니즘이 봉건시대에는 상당히 강했었다. 다른 나라에서 선물을 보내면 그들은 조공이라 했고, 다른 나라에서 사절을 보내 서로 우호교류할 때도 그들은 알현하러 왔다고 불렀으며, 쌍방이 전쟁을 끝내고 강화할 때도 그들은 당신들이 신하로 복종한다고 말했으며, 그들은 스스로 천조(天朝), 상방(上邦)으로 칭했는데 이것은 바로 불평등한 것이다. 모두 역사학자 붓끝에서 나온 오류이다. 우리를 이런 것들을 바로 시정해야 한다.

그래서 나는 중국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는 여러분들 과학원 분들이 중국·조선관계사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 자신이 입을 때는 종종 부주의하거나 무시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었던 여러 서적을 그대로 접수하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고, 책속에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좋은 일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 연극중에 당나라 사람 설인귀가 있는데, 그는 바로 동방을 정벌해 당신들을 침략한 사람이다. 우리 연극에서는 그를 숭배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회주의국가이며 여러분나라도 역시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극이 다시 상연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이 연극은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또한 중국에는 베트남을 정벌한 두 영웅 즉 마원과 복파(伏波) 장군이 있다. 베트남의 두 재녀(才女)는 용감하게 항거하다 실패하자 강물에 뛰어들어 자진했는데, 장군은 그 목을 잘라 낙양으로 보냈다. 나는 베트남에 갔을 때 두 재녀의 사당에 현화하면서 마원을 비판했다. 그러나 우리 역사에서는 마원을 극구 찬양하고 있다.

그래서 해야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고학자들이 문물과 비석같은 유물을 발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적과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다.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 2,3천년에 걸친 관계를 제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 될 것이다.

조선과 중국은 역사적 공생·공영관계

제2시기는 혁명의 시기이다.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고 조선은 식민지가 되었다. 모든 제국주의 국가가 우리를 침략해 중국은 반식민지 상태가 되었고, 일본은 또다시 동북을 점령하여 식민지로 삼아버렸다. 이 시기에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은 혁명적 동지관계를 구축했다. 이 단계의 역사적 사실은 매우 풍부하다.

큰 단계로 구분해 보면, 10월혁명 이전은 우리나라 구민주주의혁명의 시기였다. 조선 또한 많



▲ 중국 지린성 지안의 통구 오회분 4호묘에 등장하는 농신(오른쪽)과 불의 신의 힘찬 춤.

은 동지들이 중국으로 망명하여 중국혁명에 참가하였다. 이 때는 갑오전쟁에서 10월혁명까지 20여년의 시기였다. 안중근이 이등박문을 사살한 것은 바로 하얼빈역이었다.

10월혁명 이후 우리는 민주주의혁명의 단계로 접어들었고 두 나라에서는 공산당이 탄생했으며, 그 당시 조선에서 받을 붙일 수 없었던 많은 동지들이 중국으로 망명해 왔다. 조선동지들은 중국의 각 지역 어디나 있었지만 동북지방에 가장 많았다. 그리하여 이후 중국혁명의 모든 역사단계에 조선동지가 참가하게 되었다.

최용건(崔庸健)위원장 말에 의하면, 당시 조선동지들이 중국으로 망명해 와 중국혁명을 성공시키고, 이 성공이 조선혁명을 성공시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랬다고 한다. 10월혁명 초기 조선동지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 가서 군사학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통제를 받아야만 했다. 그래서 많은 동지들이 중국에 와 군사관련 업무를 배웠다. 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남방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운남강무당이 있었다. 이후 손중산 선생이 세운 황포군관학교에 적잖은 조선동지들이 입교하였다. 그 때가 1924-1927년으로 최용건, 양림동지가 당시 교관이었고 많은 동지들이 학생으로서 군사학을 배웠다. 대혁명 때 혁명군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던 날 밤 광주(光州)에서 폭동이 일어나 많은 조선동지들이 희생되었다. 최용건 위원장은 그 때를 아직도 기억하는데, 당시 160여명의 조선동지들이 광주 사하(沙河)와 한하(韓何)의 진지를 결사적으로 지켜내다 거의 대부분이 용감하게 희생되었다. 당시 최용건 동지가 지휘하고 있었다. 우리는 한 차례 합의를 거쳐 광주의 그 진지에 기념비를 세우기로 결정하고, 광주열사능원리에 기념관을 건립했다. 중국대혁명 실패 이후 즉 1928년 이후 조선동지들은 중국에서 비밀공작에 많이 투여되었는데 상해, 동북 등지의 노동운동에 참가하거나 농민운동과 학생운동에 뛰어 들었다.

확실히 10월혁명 초기에는 조선동지들이 이런 혁명사상을 품고 중국에 왔다. 공개투쟁, 비밀투쟁, 정치투쟁, 무장투쟁을 막론하고 모두 참가하여 중국혁명을 도왔다. 중국혁명투쟁이 승리한 이후, 다시 조선혁명 승리를 추동하였다. 1931년 “9.18” 포성 이후 상황이 변했다. 조선은 일본식민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동북 역시 일본식민지가 되었다. 그리하여 표면적으로는 비록 동북에 괴뢰정부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단지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조선과 동북은 모두 아무런 차이도 없는 일본식민지가 되었다.

이 시기에 동북에서 시작한 항일무장투쟁은 조선동지가 중국혁명투쟁에 참가했다고 말할 수 없

다. 오히려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공동투쟁이며 연합투쟁으로 이것은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이것은 내가 이번에 새로 얻은 지식이다. 당시 김일성동지 영도하의 항일유격전쟁은 역사적 상황과 우리의 관점으로 해석할 때, 당연히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연합투쟁이고 공동투쟁이라 인정해야 한다. 동북항일연합군과 같은 경우 당연히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항일연합군으로 해석해야 되고 사실 역시 이와 같다.

내가 이번에 최용건위원장과 이효순(李孝淳)부위원장 그리고 박외상(朴外相)과 함께 동북 하얼빈, 장춘, 심양 등을 가서 항일혁명의 노전우들과 얘기를 통해 이런 견해를 실증하게 되었다.

당시 중국공산당은 세가지 노선이 있었는데, 왕명(王明)의 좌경기회주의 노선의 지도아래 소위 당시 중국공산당의 무장투쟁방침은 바로 도시폭동이였다. 그러나 도시에는 역량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당연히 동시에 농촌무장투쟁도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동북농촌에서 일어난 무장투쟁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이 조선동지들이였다.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당시 동북으로 망명한 조선동지들은 농촌에 안착하였기 때문에 농민과의 관계가 아주 긴밀했거나 혹은 조선족 거주지역에 살았다. 그래서 농민을 봉기시켜 무장투쟁을 전개하기가 용이했다. 그리하여 “9.18”에서 항일전쟁 승리 때까지 10여년간 많은 항일부대가 창설되었고 거의 모든 부대에 많은 조선동지들이 있었다.

현재 이 역사단계를 기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역사의 진실성을 회복해야 한다. 항일연합군은 중국과 조선 인민의 연합군이고 기념관은 모두 이 같은 해석에 따른 것이다. 과거처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된다. 즉 조선동지가 중국혁명에 참가한 것이며, 더욱이 조선동지를 중국의 조선족으로 간주하면서 다수가 조선에서 망명해 온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며 왜곡이다. 이렇게 조선에서 망명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관점은 혁명대오 중에 나타난 대국쇼비니즘 잔재의 하나이다. 만약 항일전쟁 역사단계를 새롭게 쓰려고 한다면 동북에 참가했던 항일연합군에 대해 --- 북경에도 있지만 --- 연구반을 조직하여 어떤 때는 조선에 가서 관련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제의한다. 반대로 조선동지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공동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래야만 역사적 진실성을 회복하고 전체적인 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역사단계 이외도 해방전쟁과 반장개석 투쟁과정에서도 많은 조선족동지를 흡수하여 조선사단을 구성하였는데, 항미원조(抗美援朝) 이후 조선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중국의 해방전쟁에 영웅적으로 참가했고, 이후에 또 항미원조에 참가하여 승리를 이끌었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혁명역사 단계에서 쌍방은 서로를 지지한다. 또한 조선동지가 중국동지의 혁명을 지지하는 것이 중국동지가 조선을 지원하는 것보다 많으며 시간 역시 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의의에서 본다면, 혁명박물관과 군사박물관에 진열된 물건들은 아직도 더 보충되어야 하며 수정할 부분이 더 남아있다. 지난번에 최용건위원장을 모시고 동북에 갔을 때, 나는 박물관을 관장하는 동지를 찾아 이미 이 문제를 제기하였다.

사회·문화공동체의 형제관계

제3시기는 현재를 말하는데,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의 심화단계에 있어 보다 서로를 배우고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때이다.

역사상 뿐만 아니라 혁명투쟁중에서 쌍방은 이미 제국주의와 현대수정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을 경험했고 양국은 정확히 인식의 일치와 행동의 일치를 경험했다. 더 정확하게는 피로써 맺어진 전

우이자 동지적 우의를 맺었다는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우리의 전선으로 여기고 있는데, 중국의 전선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진영의 동방전초기지로 간주하고 있다. 당신들은 당연히 중국을 당신들의 후방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며 특히 동북은 당신들의 근거리 후방으로 여겨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로 배우고 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와서 참관하거나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참관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미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 다만 지금 목전의 일을 보면, 여러분들이 역시 우리보다 더 열심인 것 같다. 방금 우리는 예를 들면서 그들(중국과학원 鄧夫원장을 가리키며)을 비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은 20여명이 42일 동안 방문했는데, 그들은 겨우 7명만이 조선에 가서 30여일만 머물렀다. 바로 이런면을 여러분에게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동북국, 동북3성 성위원회가 금년 겨울 참관단을 구성하여 여러분에게 찾아가서 도시공작활동과 농촌활동, 당내 활동, 충노선, 천리마운동, 청산리활동 방법과 대안활동체계를 배울 것을 결정했다.

우리 동북의 동지들이 여러분들에게 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동북에 사람을 파견해 연락을 직접 취할 수 있다. 평상시에 이렇게 밀접한 연결이 있어야만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당신들을 우리의 전선으로 간주하고 여러분들도 우리를 여러분의 후방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래야만 장벽이 생기지 않고 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결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당 공작활동이나 도시공작, 농촌활동, 공업교통공작 뿐 아니라 여러분의 분화활동 역시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이번에 조선대사관 대사와 이야기를 마쳤는데, 영화공작단을 파견해서 적색선전활동가의 창작경험을 배우고, 농촌에 가서 진정으로 배우고, 이선자(李善子)의 진짜 이름인 이신자(李信子) 방문하고, 청산리에 가서 또한 배우고자 한다. 이런 사본과 영화를 통해서 진정으로 조선인민의 공작을 배우고, 힘들지만 소박한 농촌생활의 작풍과 설득경험 그리고 생산투쟁과 계급투쟁의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 그런후에 연극무대와 은막에 선보이려고 한다. 중국예술가의 소개를 통해 중국인민에게 조선인민의 실제생활과 전투생활을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당신들의 노래와 춤 또한 배울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은 주체사상으로 음습한 기풍을 반대하고 있다. 우리의 춤과 노래는 민족화가 그렇게 강하지 못해 좀 잡다하고 뒤죽박죽인 편이다.

최용건위원장이 동북의 세 지방을 방문했을 때, 우리를 세차례의 만찬을 준비했는데 장춘에서 가장 실패했다.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부르는데 조선의 풍격같지가 않았다. 또한 “동방홍(東方紅)”을 들어도 서양풍이 너무 강해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홍군 춤”이라는 무도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노인과 젊은이가 등장했다. 이를 민속무용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발레였다. 젊은 홍군은 여성이었는데 발을 뽀족하게 세우는 춤이었으나 이도저도 아니었다. 조선동지들이 보고나서도 반응이 시원찮았고 우리들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것을 보고 진이 원수가 문화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조선동지가 매우 솔직하게 우리의 어떤 것들은 주체사상이 없이 동쪽에서 하나 끌어들이고 서쪽에서 하나 가져온 것에 불과하며, 침구나 먹거리 또한 옛 것, 새로운 것, 중국 것, 외국 것이 구분되지 못하고 중구난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지적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다.

지금도 대외문화위원회도 어떤 동지가 있는데, 가지고 나갈 작품에 주체사상이 없어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려고 한다. 많은 동작이 있기는 하지만 주의를 주지 않으면 그것이 어디서 온 것인지도 모르면서 좋은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조선양국 문화협정>의정서가 체결됨에 따라 우리는 가무극단을 조선에 파견하려고 한다. 하나는 역사혁명사극으로서 태평천국시대에 상해에서 영국에 대항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소

도회(小刀會)이다. 여기는 당연히 시대풍격이 있다. 다른 하나는 신화인데 유럽의 신이 아닌 중국의 신으로 역시 풍격이 있다. 우리의 신의 모습은 하느님과도 다르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문화예술은 많은 부분이 배울만한 가치가 있다.

현재 또하나의 문제는 문자에서 발생하는 간극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새로운 사건이다. 나는 예전에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황장엽(黃長燁)동지가 이 문제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다. 조선글에는 세 종류의 표준이 있는데, 그것은 평양과 서울 그리고 연변이 그것이다.

평양의 표준은 당연히 전형적인 표준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선동지 조선인민이 모두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이 표준에 따라 말하고 문장을 써야 한다. 평양에도 주음(注音)이 있지만 이미 한자를 벗어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인용했던 여러 중국성어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인용하는 조선성어는 민족화되었다.

서울의 표준은 여전히 한자이다. 남조선은 여전히 한자로 된 책을 읽고 중국성어 인용을 좋아해서 북조선인민이 알아듣지 못한다.

연변의 표준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일부 말하는 방법조차 바꿨다는 데 있다. 듣기로는 조선말과 일본말이 말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가깝다고 한다. 예를 들면 “我吃飯”을 “나는 밥을 가지고 먹는다”고 한다. 연변말은 중국말을 받아들여 변화되어 왔다. 어떤 말은 이렇게 중국말처럼 바뀌었다. 두번째는 일본통치시기에 소위 협화어라는 일본인이 썼던 한자가 복잡하게 섞였기 때문에 연변의 말이 깨끗하지 못하다. 세번째는 보다 많은 것은 많은 중국한자성어를 끌어다 쓰다보니 소리음마저도 중국음으로 발음한다. 이렇게 되어 조선동지들조차도 그들이 하는 말뜻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우리가 <흥기>라는 잡지를 조선말로 출판해서 평양에 가지고 가면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데 특히 경제용어는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문자 이 문제를 해결해 말하는 것을 알아듣게 해야 한다. 내가 걱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 하는 것을 제대로 통역했는지 하는 것이다. 역시 여러 동지를 평양에 파견에 심도있게 배우도록 해야겠다. (대외문화위원회 증영(曾瑛)동지를 가리키며)당신들이 연출하는 가무극의 자막은 반드시 평양의 표준적인 사람을 찾아 번역토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전혀 알아볼 수가 없다. 이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제3시기의 관건은 말하고 쓰는데 있다. 배워서 통하지 않으면 손해다. 그래서 먼저 번역대요를 정비해야 한다. 조선동지와 내왕하려면 반드시 평양표준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은 이번에 자연과학을 참관했는데 대략 적잖은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이다. 자연과학 자체는 계급성이 없다. 다만 우리들이 서로 교류하는 과정에서, 자연과학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을 접대하는 일 그리고 유람과정에서 여러분은 우리가 대국쇼비니즘 잔재가 남아있는지 여부를 살피도록 해 주었다. 생활, 문화오락에 주체가 조금 없이 표현된 점이나 말이 평양표준에 맞지 않는 것 등은 아마도 다음에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다만 대국쇼비니즘이 없기를 바라지만 개별적으로 일하는 사람에게서는 이를 면하기 어려움도 있다. 여러분이 다음에 다시 방문하여 서로 비교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민족정책과 정치전략에 의한 역사왜곡



강 권 찬 (한국민족연구원 책임연구원)
< kkckr@hanmail.net >



역사재구성

중국의 동북지방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래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중국 측에 따르면 기간의 연구 성과를 볼 때, 동북지방의 역사와 관련한 저서가 200여권, 논문은 수 천편에 이른다고 한다. 연구주제는 동북변경과 지방역사와 관련된 것이 중심이다.¹⁾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사회과학원 직속 변강사지연구중심(邊疆史地研究中心)에서 2002년 2월부터 동북변강사여현황계열연구공정(東北邊疆史與現況系列研究工程; 이른바 동북공정)이라는 국가적 차원의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되었다. ‘동북공정’은 그간의 연구성과를 총정리하고, 우수한 연구역량을 집중하여 역사상 의문시되어 온 문제,

1) 중국변강사중심 홈페이지(www.chinaboderland.com).

현재에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문제, 이론상의 난점을 보이는 문제를 극복하며, 총체적인 연구수준을 제고시키며, 이를 기초로 하여 계열화시키고, 권위 있는 연구 성과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²⁾

그런데, 이러한 연구과정에서 현재까지 드러난 결과들을 보자면,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사실상 한반도의 역사관계에 대한 중국의 재해석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고대사에 있어 동북지방에서의 역사적 전개자체를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를 본격화했으며 그 중심에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의 재해석이 존재한다. 동북공정의 분석에 있어 고구려사의 쟁점을 분석해야만 동북공정전체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측의 연구결과 또는 주장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면서 그 결과로서 보여지는 동북공정의 전체적인 맥락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러한 주장과 논리의 전개 이면에 민족적 내용과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민족관과 민족정책의 핵심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동북지방에 대한 중국 측의 정치적 우려와 목표를 보다 전략적으로 구체화하여 살펴보면, 현재 진행되는 동북공정의 고구려사에 대한 해석의 대략적인 방향이 보다 종합적으로 분석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동북공정의 역사적 내용에 대한 분석, 즉 고구려사와 관련한 주장 및 연구내용은 동북공정의 고구려사와 관련한 중국측의 논리를 명확히 보여주는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아직 고구려사에 대한 공식적인 연구결과가 발표된 것은 아니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그 결과물이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심 학자들의 논문이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고구려에 관한 내용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주요 텍스트로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은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향후 연구결과를 사실상 가늠해 볼 수 있는 「광명일보」의 기사가 있다. 동북공정에서 다루는 ‘고구려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자료로 분석되어야 하는 것으로 「광명일보」 2003년 6월 24일자에 실린 논문 “고구려역사 연구에 대한 몇 가지 시론”(邊衆: 필명 또는 가명일 가능성이 큼)을 가장 먼저 들 수 있다.

두 번째는 비공식적이긴 하지만 사실상 고구려사와 관련한 중국의 권위 있는 연구자의 연구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중요 연구자는 손진기(孫進己)이다. 그는 1980년대 초반이래, 고구려사와 관련한 연구를 주도하여 왔으며 현재 진행되

2) 최광식,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중국의 고구려 사 왜곡 대책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3.12

는 고구려사에 대한 연구의 기초를 제공한 주요 인물 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2002년 ‘제2회 동북변강 역사와 현상 및 고구려 학술토론회’를 정리 소개한 이대룡(李大龍)이 있긴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하게 분석될 필요가 있는 것은 동북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손진기의 최근 논문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개방과 변영의 6년」³⁾을 중심으로 역사내용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두 개의 중요 텍스트는 세부내용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거의 유사한 내용이며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자면李大龍의 글 제목 그대로 “고구려는 고대 중국의 1개 지방 민족정권”이며 고려-조선과는 연관이 없는 중국사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는 것에 있다. 비록 손진기의 주장이 현재 중국영토의 고구려사는 중국사로, 한반도영토내의 고구려사는 한국고대사로 이해하자는 이른바 一史兩用의 입장이기는 하지만 크게 보았을 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고구려사가 중국사에 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양 텍스트의 논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 중요하게 공유하는 지점에서 중국의 일반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위의 자료를 중심으로 동북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고구려사에 관한 인식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장을 분류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다.

고구려 민족의 기원과 이동에 관한 인식

두 텍스트는 공히 고구려사 내용에 있어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이동에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중국 측은 특히 한국학계의 단군조선-고조선-예맥, 부여-고구려-발해로 연결되는 역사계승의식이 비학술적 연구의 결과라며 비판하고 있다.⁴⁾ 그리고 그러한 비판에는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고대민족의 기원과 향후 이동과정을 통한 귀속이라는 문제를 전면에 부각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인다.

동북지방의 민족에 관한 연구의 진행은 고구려 이외에도 고조선과 발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중국의 민족문제를 바라보는 민족관, 역사관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중국학자들은 고구려 민족의 기원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예맥(濊貊)설과 부여(夫餘: 고조선이 무너진 후 북만주 일대에 웅거한 부족국가)설, 고이(高夷: 만주에 있던

3) 손진기의 최근 논문은 한국고대사학회가 주최한 「2004년 국제학술심포지움」에 발표한 것으로 한국측의 연구에 대한 제반박의 내용도 담고 있어 향후 동북공정의 연구결과를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텍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조법중, 동북고대종족 및 고조선연구동향과 문제점, 「고구려 사 왜곡 대책 학술발표회자료집」 2003.

고대 종족)설, 상인(商人：商은 殷나라를 뜻한다. 은나라가 주나라에 패해 동쪽으로 가 고구려의 선조가 되었다는 것이 商人설이다)설, 염제(炎帝)설 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한다.⁵⁾ 이렇게 볼 때,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형성에 관해서는 단일한 견해가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향후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중요한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때, 손진기의 이른바 ‘융합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민족은 동북지방에 존재했던 한족(漢族)을 포함한 다민족이 융합하여 나타난 민족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중국학자들이 고구려인의 기원을 한민족과 완전히 분리하기 위하여 근거가 희박한 고이설이나 상인설을 제기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비판이 국내 학계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사실상 보다 세련화된 주장은 이른바 손진기에 의해 제기된 ‘융합설’인 것이다.

「광명일보」에서 제기하는 고구려 민족의 기원과 형성은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설에 공통점이 있다면 고구려 민족은 주나라와 진나라 때에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활동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주나라의 무왕이 상(商：殷나라)을 점령한 후 주나라 사람들이 동북지역을 경영했고 한나라도 직접 경영했기 때문에 이 지역 안에서 태동한 지방민족정권으로서 고구려가 성립하였다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광명일보에 나타난 민족이동에 관련한 내용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고구려인의 이동에 있어서 고구려 멸망 후 7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전체 고구려인 중 30만 명이 중원각지로 유입되었고 신라에 귀의한 사람은 10만 정도였으며 나머지는 말갈(발해)에 10만 이상, 돌궐로 옮겨간 고구려인은 1만여 명, 요동각지로 흩어진 유민이 20만 명 정도라고 중국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있다.

즉, 신라로 유입된 고구려인은 10만여 명으로 한반도 민족에 융화되었고 나머지 대다수의 고구려인은 한족(漢族)에 융화되었기 때문에 고구려 민족을 중국 동북지방에 등장했던 변방민족으로 보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에 가장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고구려민족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통점은 고대 중국의 영향 하에 있었던 동북지방의古민족이 고구려민족을 형성하였고 또한 멸망 후 유민의 귀속에 있어서는 대부분이 중국과 요동으로 흡수되었기 때문에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논리로 연결되고 있다.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관련해서 예족, 맥족, 예맥족 등이 주목되어왔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고구려의 종족기원에 대해서도 예족설, 맥족설, 예맥족설, 예맥족에서의 분화설, 원래는 예족인데 명칭상 맥족이라는 설 등을 설정할 수

5) 「광명일보」 2003년 6월 23일자 기사. 「신동아」2003년 9월호에서 기사전문을 번역하고 해설을 달아두었다.

있는 가능성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어느 하나로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한국 측의 연구(중국학자의 일부도 인정하는)는 최소한 만주와 한반도 일대에서 농경을 영위하던 예맥족과 연관되어 있음은 명확하다는 것이다.⁶⁾ 앞서서도 밝힌 것처럼 이에 대해 손진기의 주장은 좀 더 세련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고구려의 기원은 적어도 夫餘(貊)·夷·漢의 이 세 지류가 융합되어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고구려 5부는 각각 서로 다른 종족의 기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桂婁部和 絶奴部는 부여(맥)에서 유래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萬發拔子 문화는 順奴部의 유적일 가능성이 있으며, 夷 계열에 속한다. 消奴部 즉 沸流部 역시 夷 계열로서 高夷일 가능성이 있다. 灌奴部는 한인들로 구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세 민족이 융합하여 고구려 민족이 되었으므로, 어느 한 민족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민족을 배척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⁷⁾

손진기의 융합설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한국학자들이 주장하는 고구려와 신라·백제는 같은 민족이라거나 고구려는 고조선에서 발원하였다는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자 하는데 있다. 형식적으로는 맥족이 중심을 이루어 고구려민족을 형성하였고 고구려를 건국하였지만 일부 한족과 그 이외 만주지역의 제 민족도 융합되었기 때문에 고조선과 고구려, 고구려와 백제 및 신라와의 민족적 연관성이라는 것이 약하다는 것이다.

고구려 민족의 이동에 대해 손진기는 고구려 민족이 단일적으로 한국에 이동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계통이 있고 주로 중국의 각 민족에 귀속되었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이러한 견해에 대해 최근 들어 중국 내의 많은 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민족이동에 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고구려 멸망 당시는 69만여 호에 350여만 인구이다. 그 가운데 한인은 陳大德의 보고에 의하면 “殆將半焉”이라 하여 적어도 20여만 호가 있다. 고구려의 통치를 받았던 靺鞨의 각 部와 粟末·白山·越喜·拂涅 등이 10여만 호, 고구려 통치를 받았던 沃沮와 東穢 사람들이 수 만 호, 고구려 통치를 받았던 신라와 백제 사람들이 수 만 호, 그리고 이들과 함께 당연히 고구려 민족 또한 수 만 호가 있었다.

《三國遺事》권1에 “高句麗全盛之日, 二十一萬五百八戶”라고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당연히 고구려 민족의 인구수일 것이다. 고구려가 멸망한 후 고구려 통치하에 있었던 漢人 가운데 중원 지역으로 천거한 사람들 이외에는 옛 거주지에서 살다가 일부는 이후 隋唐·遼 등이 압록강과 대동강 이남을 신라 또는 고려에 하사해 줄 때 함께 지금의 북한(한국)에 귀속되면서 대부분이 이 곳에서 살게 되었다. 중국 동북의 靺鞨의 각 부는 고구려가 멸망한 후 잇달아 자립하여 중국의 한 민족이 되었다. 현재 북한(한국) 영토에서 원래 고구려 통치를 받던 沃沮·穢·신라·백제 사람들은 당연히 신라·고려·조선에 귀속하였으며, 이들의 구체적인 수

6) 여호규, 고구려의 족속기원과 건국과정, 「고구려 사 왜곡 대책 학술발표회 자료집」, 2003

7) 손진기, 중국 고구려 사 연구의 개방과 변영의 6년, 「2004년도 고구려 사 국제학술포럼 발표문」

자를 계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이 세 가지만은 분명하다. 첫째, 고구려 멸망 후 전체 유민이든 고구려 민족이든 막론하고 모두가 오늘날의 중국과 북한(한국) 두 나라에 나뉘어 귀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어떻게 계산하든 중국에 유입된 고구려 유민들이나 고구려 민족이 모두 많은 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 유민들은 모두가 이미 지금의 중국과 조선의 각 민족으로 융합되었으며, 또한 현재 중국과 북한(한국)의 각 민족의 총 인구에서 모두 적은 수를 점하고 있다. 어째든 이 세 가지 결론은 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동북공정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로 그 결과물이 완전히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심 학자들의 논문이나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고구려에 관한 내용은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곧 고구려사람이 바로 훗날의 고려인이고 오늘날의 북한(한국)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오늘날 북한(한국) 사람들 속에는 당시 고구려사람의 소수만이 계승되었을 뿐, 대부분의 고구려사람들은 중국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한 당시 고구려사람의 후예들은 오늘날의 북한(한국)인 중에서도 단지 소수에 불과하고, 오늘날 북한(한국)인의 주요한 기원은 신라와 백제이기 때문이다.

손진기는 이를 통해 일부 한국학자들이 고구려인의 주요 이동이 한반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정면에서 비판한다. 물론 그 중 소수이긴 하지만 일부가 북한에 유입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북한이 고구려를 부분적으로 계승하였다는 점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손진기의 주장은 一史兩用의 입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어찌 됐건, 고구려사의 귀속문제에 대한 중국 측의 내용은 상당부분 고구려민족의 기원 및 고구려의 건국, 그리고 민족의 이동과 흡수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고구려와 중국(황조)과의 관계

중국 측이 고구려사의 귀속문제에서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이동이 중국의 민족관과 민족정책에 연결되어 있다면 보다 더 역사적이며 사료적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고구려와 중국황조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중국학자들이 고구려와 중국과의 관계를 다룬 책들은 손진기·張春霞의 《高句麗國史》, 馬大正·李大龍의《古代中國東北高句麗歷史叢論》, 耿鐵華의《中國高句麗史》등이 있는데 이 책들의 기본적인 史實과 관점은 고구려가 중국 역대 皇朝의 정치적으로 예속된

관계로 중국의 일부분이었으며, 고구려 시기 중간에 반란과 할거의 국면이 있었다는 것이다.⁸⁾

「광명일보」논문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700여년동안 고구려는 동북 변방지역에서 독립하려고 하지 않았다. 고구려가 자신에게 스스로 부여한 위치는 중국 중앙왕조의 변방정권이었으며, 고구려는 중국이 3국시대와 양진시대(兩晉) 그리고 남북조 시대로 크게 분열돼 있을 때도 스스로 중국의 중앙왕조에 대해 종속관계를 유지하였고 책봉을 받았고 조공을 바쳤으며 질재(質子: 인질)를 보냈다는 것”이다.

또한 당나라가 고구려를 통일하자 당나라에 대해 망국의 한을 품지 않았으며 오히려 고구려인들은 당나라에 통합된 후 당나라의 통일 대업을 지키기 위한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 역사에 이름을 남기기까지 하였다고 한다. (천남생(泉男生)·고선지(高仙芝)·왕모중(王毛仲)·왕사례(王思禮)·이정기(李正己)가 신·구 ‘당서’에 전기가 기록돼 있다고 함) 이렇게 볼 때, 고구려와 당나라간의 전쟁은 통일전쟁의 성격을 갖는다는 최근 주장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여타 국가와의 관계가 조공-책봉 관계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고구려가 지방정권이였다는 주장은 일면 무리가 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갖지 않았던 국가는 없었으며 백제-신라-왜 마저도 중국과 조공-책봉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도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논리적 모순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다.⁹⁾ 손진기의 논문은 한국 연구자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의 성격을 지닌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고구려와 중국 중앙황제가 종주국과 번속국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책봉과 동시에 중국 중앙의 지방관직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단순한 外臣이 아닌 外臣과 內臣 사이에 있는 일종의 과도 형태이며 중국 지방민족의 자치정권이 정확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고구려가 중국 중앙 정부로부터 고구려왕이라는 책봉을 받는 동시에, 또한 중국의 중앙과 지방 관리인 征東大將軍·平州刺史 등과 같은 책봉을 받은 것은 바로 고구려가 역사상 중국에 예속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세계 역사상 한 국가의 수뇌가 스스로 다른 국가의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겸한 적이 없었으므로 독립된 국가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책봉을 받는 것이 곧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고구려 당시의 이러한 특정한 책봉 관계는 고구려가 중국에 귀속된 관계임을 증명한다. 그 후의 왕씨 고려와 이씨 조선은 단지 고려 국왕과 조선 국왕의 책봉만을 받았을 뿐, 중국의 중앙 혹은 지방 관리를 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때부터는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닌 것이다.」

8) 임기환, 중국과 고구려의 책봉-조공관계, 「중국의 고구려 사 왜곡대책 학술발표회」, 2003.

9) 한국 연구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며 반론의 중요내용이기도 하다.

손진기에 따르면 고구려와 그 이후의 한반도의 정권이 일반적으로 조공-책봉관계에 있었지만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인 이유는 고구려만이 중국의 지방관리로서의 책봉도 동시에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백제-신라도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동시에 수여받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손진기는 전체 역사 속에서 시기적인 문제를 주장한다. 백제-신라의 지방관직은 일시적이었고 고구려는 역사 전반 속에서 그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오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지방 정권은 때로는 복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반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복종을 위주로 하였는지 아니면 독립을 위주로 하였는지를 근거로 하여 그의 귀속을 정할 수도 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고구려의 전반 역사 속에서 귀속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라와 백제를 중국의 지방 정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한 동안 신라나 백제도 중국의 중앙과 지방의 관직을 수여 받기는 하였지만, 그건 단지 그들의 전체 역사 속에서 일시적인 현상이었기 때문이다.」

손진기는 한국 학자들이 고구려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자신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일정한 단계에 불과하며 전체적으로 신복한 것이 주를 이루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이에 덧붙여 설사 고구려가 소위 독립된 국가의 시절이 있었다 하여도 고구려는 중국의 영토 위에 건립되었으므로 어찌든 그 당시는 중국의 할거 정권의 하나라고 보아야 하며 한국사는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고구려와 한국(한반도 왕조)과의 관계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이동, 그리고 고구려와 중국과의 조공-책봉관계(손진기에 있어서는 일시적인 독립에도 불구하고 지방 관리로서의 책봉이 주조를 이룬다는 것)를 들어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파악하는 역사분석은 결론적으로 고구려사와 이후 한반도의 정권 즉 고려-조선과의 상대적인 무관성으로 연결된다. 특히, 초점은 신라이후 등장한 고려와의 관계이다.

「광명일보」의 논문이나 홈페이지 논문을 통해서 본다면 고구려와 이후 한반도 왕조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씨(王氏) 고려는 결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비록 왕씨 고려는 고구려의 칭호를 계승했지만, 고구려의 승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고 있다.

「서기 668년 당나라는 마침내 ‘고씨 고려’를 통일함으로써, 고씨 고려의 영토는 당나라 안동도호부(최초의 행정중심은 지금의 평양)에 의해 관할되었다. 그리고 몇십 년 후 고씨 고려가 관할하던 구역에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지방정권인 ‘발해’가 들어섰고, 고씨 고려가 관할한 다른 일부분 지역은 한반도 남부에서 일어난 신라 정권에 귀속되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부분은 여전히 안동도호부에 의해 관할되었다.

왕씨 고려가 건국한 것은 고씨 고려가 멸망한 때로부터 250년 후인 서기 918년이었다. 왕씨 고려는 서기 935년 한반도에 있던 신라 정권을 대치하였고 그 이듬해에 후백제를 멸망시켜 반도 중남부의 대부분을 통일하였다.¹⁰⁾

고려는 명칭만 그렇지 三韓을 이었다는 것이다. 그 후의 조선도 마찬가지가 되게 된다. 주요한 근거는 앞서서도 살펴본 것처럼, 민족구성에서 찾고 있다. 고씨 고려 관할지역 내의 주민은 고구려 족이 주력이었지만 왕씨 고려 관할지역 내의 주민은 삼한의 뒤를 이은 신라와 백제계 주민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라인은 한반도 남부지역에 있었던 진한과 변한 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고씨 고려 멸망 후 비록 일부 고구려인이 신라로 유입되기는 했으나 이들은 신라의 주력을 이루지는 못했다. 백제인은 대다수가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마한 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왕씨 고려는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삼한인(三韓人)’이 중심이 된 나라라고 할 수 있다.

수많은 역사서들은 왕씨 고려인과 중국의 옛 사람들이, ‘왕씨 고려는 삼한의 후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백년간 계속된 왕씨 고려 왕조의 역사 발전 속에서 구성원들은 점차 하나의 민족으로 융합되어가는데, 역사서와 학계에서는 이들을 ‘고려족’으로 부르고 있다. 왕씨 고려가 이씨 조선으로 이어졌으므로 조선은 민족 명칭이 되어 오늘날까지 사용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 광명일보는 왕씨 고려의 왕족도 고구려 족이 아니라 낙랑 귀족출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고구려-고려 간의 역사계승을 보다 근원적으로 단절시키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그 근거로 왕씨는 낙랑군의 명문 귀족이었고 가호가 많았던 점을 들 수 있다. 왕건은 임종 시에 남긴 가르침인 ‘십훈요(서기 943년 고려 태조 왕건이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열 가지 유훈. ‘훈요십조’라고도 한다)’에서 자신은 고씨 고려의 후예라고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건은 자신은 평민 출신이며 ‘삼한 산천의 보호에 의지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마한·진한·변한을 통일한 것이니 후계자들 또한 삼한을 소유하길 바랐던 것이다.

왕건이 고씨 고려의 후예였다면 그는 통치를 위해서라도 그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을 것이다. 이

10) 이후 인용은 「광명일보」 기사.

것은 아주 상식적인 이치인데 왕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왕씨 고려가 고씨 고려의 후예가 아니라는 좋은 반증이다.

왕씨 고려는 결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었다. 한대(漢代) 한반도에서 일어난 마한·진한·변한은 신라와 백제로 발전해갔고, 백제는 당나라에 의해 멸망하였으며, 신라는 왕씨 고려가 대신하게 되었다.

그후 이조가 왕씨 고려를 대신해 최종적으로는 이씨 조선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정권들의 강역(疆域: 영토) 범위는 한 번도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

삼한-신라-고려-조선으로서의 한국사의 역사계승을 결론화하면서 고구려-고려 간의 단절을 주장하는데, 이렇게 볼 때 중국 측의 당시의 인식 즉, 중국사서에 나타난 고구려의 계승이 고려라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논문은 결론적으로 왕씨 고려가 고구려를 계승하였다는 혼란을 초래한 원인으로 중국 역사서의 혼란을 지적하고 있다. 사서의 기록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실수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한국의 역사는 한반도를 벗어나본 적이 없으며 삼한-백제와 신라-고려-조선으로 이어져 왔고 중국의 동북지역은 다양한 지방민족 정권들이 할거하면서 결국 한족과 중국으로 융합되어 갔다고 결론 내리게 된다.

이는 고구려사가 중국사로 귀속된다는 결론이상으로 발해는 물론 고조선까지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고구려사에 대한 중국의 연구가 한국 측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중국의 고구려사에 대한 새로운 역사해석이 단지 고구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중국 측이 진행했던 고구려사의 중국사로의 편입과정을 보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쉽게 파악될 수 있다. 고구려를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1980년대에 시작돼 1990년대 들어 본격화됐다. 단국대 서영수 교수는 중국 고구려사 연구의 변화를 3단계로 설명했다. 1950년대부터 1980년까지(1단계)는 중국 각종 교과서에 고구려사가 한국사의 일부로 기술되는 등 전통적인 견해가 유지됐다. 하지만 1980년대(2단계) 들어 ‘일사양용’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고구려사의 한국사 귀속 문제를 비판하는 한편, 427년 고구려의 평양 천도 이전 시기를 중국사로, 천도 후를 고구려사로 구분하는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았다.

그러다 1990년대(3단계)에 접어들어 ‘모든 역사는 중원(中原)으로부터’라는 중원 중심의 민족사 연구인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이념화하고 고구려사를 전면적으로 중국사에

중국은 고구려를 중국 역대 皇朝의 정치적으로 예속된 관계로 중국의 일부였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또한 고구려 시기 중간에 반란과 할거의 국면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광명일보」 논문에서는 고구려가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원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까지 이어지고 있다.

편입하려는 시도가 노골화됐다.

1993년까지만 해도 중국 역사책은 고구려를 한국사라고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손진기 등 고구려사를 중국사 입장에서 연구하는 학자도 있었지만 중국 당국이 우방국가인 북한과의 관계악화를 우려해 이들의 발표를 제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중 국교 수립 후 1993년 8월 지안시에서 열린 ‘고구려 국제학술대회’에서 예상치 않게 이 문제가 불거졌다. 중국 한국 북한 일본 대만 홍콩 등 각국 학자들이 참석한 토론회에서 고구려 귀속문제를 놓고 당시 지안박물관 경태화(耿鐵華) 부관장과 북한의 원로 역사학자 박시형이 설전을 벌였다. 이어 손진기가 “역사상 고구려는 오랫동안 중국의 중앙 황조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구려인의 후예는 조선족이라 할 수 없고 대부분 오늘날 중국의 각 민족이 되었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측 입장이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손진기는 더 나아가 ‘동북민족사연구’(1994년)에서 한국사의 범위를 신라사로 한정하고, 만주 외에 한반도 북부까지도 중국 영토였다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 동북부 지역 대학마다 고구려 혹은 한국 관련 연구소들이 설치됐다. 1996년에는 아예 중국 국무원 산하 사회과학원이 앞장서 고구려 문제를 중점연구 과제로 선포했다.

1994년 헤이룽장성 발해박물관에 들렀던 경성대 한규철 교수는 발해사 연구자라는 이유만으로 입장이 거부됐다. 그 후 중국 답사 때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연락을 하고, 가급적 행선지를 정확히 알리지 않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었다. 그렇게 조심을 해도 허락 없이 답사를 했다고 벌금을 물거나 필름이나 카메라를 빼앗기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심지어 중국 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돼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다.

한·중 역사전쟁을 처음 실감한 것은 고구려가 아닌 발해사 연구자들이었다. 중국이 발해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는 20여 년 전부터 진행됐다. 20년 전 중국은 부여-고구려-발해로 이어지는 상고사 체계 대신 숙신-읍루-물길-말갈로 이어지는 계보도를 공식화했다.

엔벤조선족자치주 박물관 발해전시실 설명문에도 발해는 “(고구려인이 아니라)속말 말갈족을 주체로 하여 우리나라(중국) 동북지구(지역)에 세워진 지방봉건정권”이라고 명시했다. 설령 중국학자 중에 이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해도 논문 발표 기회를 주지 않는 등 공개적으로는 거론할 수 없었다.

중국은 한국 연구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한국의 발해사 연구가 객관성이 없으며 동아시아 전체로 볼 때 반(反)평화적이라고 매도하는 한편, 자신들은 1980~90년대 사이 발해사 연구를 집중 지원했다(중국 발해사 관련 논문의 90%가 이 시기에 나왔다). 이러한 연장선하에서 “2002년 발표된 ‘동북공정’은 발해사에 이어 고구려사, 고조선 사에 매진하겠다는 신호탄(한규철)이며 발해를 둘러싼 소유권 분쟁은 아주 복잡한데, 중국, 일본, 러

시아까지도 발해사를 자국 입장에서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친자확인소송’을 하고 있는 셈”, “고구려도 발해의 전철을 밟고 있다”(임상선)는 한국의 우려가 현실로 들어나고 있는 것이다. “만주지역 관련 한국 고대사로는 민족의 형성,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부여에 대한 논쟁이 없다는 것은 중국이 너무도 당연히 자기들 역사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며 “2003년 동북공정 연구 과제를 보면 고구려와 발해가 소홀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는 이미 전년도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에 제시된 과제들은 그 이후에 대한 포석”이라는 동북공정에 대한 분석¹¹⁾은 중국 측의 고구려사에 대한 접근이 동북지역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재구성

중화 민족관과 마르크스 민족관의 결합

중국당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추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국정부의 민족문제에 대한 국가이데올로기 및 정책을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양자는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족문제에 대한 접근의 원칙과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에 대한 재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역사내용의 분석에 있어서도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과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근거는 고구려민족의 기원과 이동에 관련하여 있다. 중국의 독특한 민족관과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있는 민족 국가적 특질이 중화민족관과 민족정책으로 이어졌고 이를 기반으로 역사문제를 해석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민족이론가들은 민족이란 “인간들이 역사적으로 형성시킨 하나의 공동언어, 공통지역, 공동경제생활, 공동 문화를 지닌 공동체”라는 스탈린의 정의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민족개념과 관련하여 오늘날 중국에서는 ‘중화민족’이라는 독특한 개념을 일반화하고 있다. 중국인은 시민권을 가진 국민으로 정의되었고 ‘중화민족(中華民族)’이라는 새로운 민족으로 개념화 되었다. 이 중화민족 아래에 하위 개념으로 민족이 규정되었는바, 그것은 바로 족(族)이라는 개념이다. 즉, 요약하면 중국이라는 국가는 56개의 민족으로 이루어진 통일적인 다민족국가로, 그 국가의 시민은 중화민족 즉 중국인이라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중국에는 오로지 새로운 민족인 중화민족만이 존재하며 새롭게 정의된 하위개념인 족은 서구 등의 근대 민족국가의 민족과는 다른 중국민족의 일부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11) 송기호, 중국 동북공정과 한국고대사 빼앗기, 『역사비평』65호, 2003년 겨울호.

하위그룹에게 또 다른 민족국가를 건설케 한다는 것은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은 독립된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중화 민족의 하나의 구성요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중화민족’이란 “현재 중국영토 내에 존재하고 있는 한족 및 소수민족뿐만 아니라 과거 중국 강역 내에 살아왔던 모든 민족 집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개념이다. 이것은 중국 역사가 “현재 중국 국경 내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의 역사를 총칭한다”고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민족에는 “지금의 중화민족뿐만 아니라 이들의 원조였던 고대민족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이러한 중화 민족관에 의해 중국민족의 역사는 지금의 중국 국경내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경 내 모든 민족역사의 활동범위 전체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현재 중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경내에 사는 한족을 포함한 56개의 모든 민족을 중국인 즉 중화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55개의 소수민족의 조상과 그들의 역사적 성취도 중화민족의 성취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학자들의 초기인식에서부터 이러한 중화민족관은 발전하여 왔다.

‘국토(國土)’와 ‘조국(祖國)’을 개념화하는데 두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왕조변천에 따른 역대 왕조의 영토를 역사적 영토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재 중국 영토를 중국의 기본 국토로 받아들이는 것이며 이로부터 모든 소수민족을 포함한 중화민족(中華民族)이 살고 있으므로, 중국역사는 현재의 영토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이러한 중화민족관은 중국역사를 연구하는데 기본적인 원칙이 되었다. 중국학자들은 한족과 다른 민족과의 역사적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연구를 시작하였다. 통칭, 오랑캐로 일컬어지던 변방민족의 왕조인 탁발씨의 위(魏), 여진의 금(金), 몽골의 원(元), 만주의 청(淸)도 중국 경내 안에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그 후 모두 중국 사회에 동화되거나 통합되었기 때문에 중국사의 일부분이라고 하였다. 심지어는 이런 오랑캐의 중국영토에 대한 ‘침략’도 부인되고, 단지 중국 내의 민족간의 전쟁이라고 재구성되었다.

중화민족의 발전사안에 동북변강지구의 민족을 포괄하게 되는 것이다. 중화민족관은 사실상 현대의 정치적 포섭이 전제된 목적성 있는 개념으로 이러한 중화민족관에 입각하여 고대종족을 민족개념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종족은 이미 언어와 문화에서 확연히 차별되는 이질적 존재이며, 민족을 개념화하는 전제로서 언어와 문화가 가장 기본요소이고 보면 각 종족과 중화민족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사실상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³⁾ 따라서 이에 더해 중국은 중화민족 관과 더불어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윤휘탁, 현대중국의 변강, 민족인식과 동북공정, 「역사비평」65호, 2003년 겨울호.

13) 조법중, 동북고대종족 및 고조선연구동향과 문제점, 「중국 고구려 사 왜곡 대책 학술토론회 발표문」, 2003.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 따라 중국 측은 수적으로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가 역사적 성격을 규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수 통치자의 원류를 가지고 전체 민족의 원류로 삼는 것은 마르크스의 기본관점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마르크스주의와 중화주의가 또다시 기묘하게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수 민족의 향배가 역사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다민족국가에 적용하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족이 언제나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¹⁴⁾

중국은 한국 연구자의 접근 자체를 봉쇄하고 한국의 발해사 연구가 객관성이 없으며 동아시아 전체로 볼 때 반(反)평화적이라고 매도하는 한편, 자신들은 1980~90년대 사이 발해사 연구를 집중 지원했다 (중국 발해사 관련 논문의 90%가 이 시기에 나왔다).

손진기의 논문과 광명일보에서는 이러한 관점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특히 민족의 이동 측면에서의 연구는 고구려유민의 유입정도를 수치화하여 제시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역사적 계승의식, 또는 왕조사의 계승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수 주민의 귀속문제라는 것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중국의 고구려사 인식이 최근 1,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것은 아니다. 좀더 그 연원을 살펴보면 1980년대 전반에 일반화된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까지 그 맥락이 닿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에는 55개의 소수민족이 다수민족인 한족과 더불어 살고 있다. 1990년 전국 인구조사는 이들이 중국 전체인구의 8.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수도 약 9천만(91,323,090)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 소수민족은 중국 전체영토의 60%에 달하는 지역을 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다양성은 지역뿐 아니라, 언어, 종교 등에서도 나타난다.

1954년 제정된 중국 헌법은 중국을 4단계의 행정구역으로 구분했는데, 같은 시기에 제정된 ‘민족구역자치법’에 따라 소수민족들은 각 행정단위에서 자치적인 조직을 이루고 있다. 1991년 통계에 의하면 소수민족은 5개의 자치구(내몽고, 서장, 영하 회족, 신강 위구르족, 광서 장족)와 62개의 자치주와 맹(盟) 그리고 589개의 자치현과 기(旗)로 이루어졌다. 한 예로, 연변의 조선족은 지구급인 연변 조선족 자치주를 성립시켰으며, 길림성의 장백 조선족 자치현은 그보다 아래인 현급의 기구이다.¹⁵⁾

14) 윤휘탁, 위의 글, 176쪽.

15) 조정남, 중국의 민족정책, 『민족연구』 9호, 2002.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중국의 국가이념(헌법전문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국가존립근거라 할 수 있다)은 이러한 중국의 민족현황과 지역적 분포라는 특징을 자기 내용으로 하고 있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은 “중국은 현재뿐 아니라 2000년 전부터 통일적 다민족국가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현재 중국 영역 내에 위치한 주변 소수 민족은 다민족국가인 중국의 구성원으로서, 중원 대륙의 통일, 분열에 관계없이 중원 완조와 항상 정치·경제·문화적으로 밀접한 연계를 가지며, 중국 영역의 일부를 구성하고 중국사에 공헌하였다”는 주장이다.¹⁶⁾

이 주장은 다수의 소수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현 중국의 정치적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과로 보이지만, 이러한 현재의 논리를 과거의 역사해석에 적용함으로써 심각한 역사왜곡의 폐해가 나타난 것이다.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개혁개방 후이다. 민족관계에 다민족 국가론을 그대로 연결하면 이민족이 세운 왕조들도 전통적인 조공제도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은 전통적으로 다민족 국가였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비록 그들이 중국을 통일시키고 중국의 체계를 받아들였으며 이때의 중국은 문화적 의미의 중국이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주장하는 신 중국과는 다르다고 하였다. 현대의 중국은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국명으로 사용했으며 그러므로 문화적 의미를 이어받은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파악한다고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학자들은 중국은 옛부터 다민족 국가였으며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민족은 중화민족이라는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다.

중국학계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 입각하여 현재 중국사회의 통합과 안정을 이루기 위하여 “古爲今用” 즉, 현재가 과거를 이해하는 기준이란 관점에서 역사범위의 설정과 역사해석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 가운데 중국학계는 고구려사 이전시기의 역사, 즉 고조선 및 고대 종족에 대한 연구에서도 이 같은 입장과 내용을 철저히 투영시켜 기존의 전통적 화이관에 입각한 중화와 오랑캐의 대립적 관점을 수정하고 이들 고대종족 및 고조선역사마저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켜 파악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중국학계에서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역사”라는 다민족통일국가론이 강조되면서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펼쳐졌던 이 주장이 최근 들어 더욱 공식화, 노골화되

16) 조법중, 위의글, 13쪽.

고 있는 것이다.

중화민족관이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범주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의 귀속권이 중국에 있다는 인식을 이루고 있다면 다민족 통일국가론은 근대이후 형성된 국경개념을 전 근대시기까지 소급하여 원래부터 나뉘어 있지도 않았던 영역을 자의적으로 구분하는 영토지상주의, 현대판 중화주의라는 비판¹⁷⁾이 가능할 것이다.

중국의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중국에서의 민족 연구는 민족학(民族學)으로 불리워진다. 1949년 공산중국 성립 이후, 모든 사회과학이 서구 부르조와 학문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마르크스주의적인 학문만 허용되어 민족학은 개혁 개방 전까지 연구 가능한 유일한 사회과학이 되었다. 또한 당의 요구에 맞게 민족학은 변용되어 당의 노선을 따르고 지지하는 논리를 개발하게 되는 정책학적 경향을 띠게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국가통합을 위해서 이들 소수민족에 대한 지식이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기초적 연구도 수행된 것이 적어서, 먼저 소수민족에 대한 분류 식별작업부터 수행하여야 했고 민족학은 이에 복무하였다. 그 후 이런 경향은 정부의 정책적 목표라는 좁은 틀 안에 민족학이 갇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중국에서의 민족학은 그 정치적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⁸⁾ 중국의 민족연구자체가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주목해보면 최근의 중국의 애국주의 열풍과 동북공정 연구 간의 상관성도 유추해 볼 수 있다. 중국의 민족관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과 더불어 이러한 역사해석의 배경으로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최근 중국에서 일기 시작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의 물결을 들 수 있다.

중국에서는 개혁·개방 이후 자본주의 가치관(자유주의·민주주의·물질만능주의 등)의 유입과 소련 및 동구 유럽의 몰락으로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현대화'를 국가의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세부 실천과제로 '사회주의 물질문명 건설'과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후자의 주요한 내용은 애국주의와 집체주의(集體主義)이다.

애국주의는 중국 내 각 민족의 단결과 '사회주의' 조국에 대한 사랑을 전제로 한 중화민족주의다. 이는 위기에 직면한 사회주의 이념의 대안적 이데올로기로서 일부 소수민족(특히 티베트족과 신장 위구르족)의 분리 독립 움직임을 차단하고 이완된 체제를 유지·강

17) 윤휘탁, 위의 글, 201쪽.

18) 이진영, 중국의 소수민족정책, 「민족연구」 9호, 2002.

화하기 위한 중국의 '국가주의' 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체제의 유지·강화 차원에서 애국주의 교육을 확산·심화하고 있다. 게다가 애국주의로 대표되는 중국의 국가주의는 최근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한층 높아진 세계적 위상과 맞물려 위력을 더해간다.

더군다나 영토문제에 있어서나 소수민족문제에 있어서 중국공산당은 이를 체제문제로서 가장 핵심적인 국가이익으로 상정하고 있는데 애국주의와 국가주의는 이러한 통합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는 민족단결과 사회 안정을 통한 사회주의 체제유지를 위해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제 민족을 아우르는 중화민족의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가치관을 '애국주의'로 포장한 채 전사회적으로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내 역사현실인식, 특히 민족관과 역사관은 과거 만주에 거주했던 제민족의 원류나 귀속성 등을 해석하는데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윤휘탁, 2003)

중국의 애국주의 열풍은 역사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 중국에선 이른바 '강건성세'(康乾盛世) 열풍이 본격적으로 불기 시작했다. 강희제로부터 시작해 옹정제를 거쳐 건륭제에 이르는 청나라의 최전성기인 '강건성세'가 200여년 만에 되살아나 중국 사회를 뒤흔들었다. 중국작가 이월하의 '제왕 3부곡'이 4억권이나 팔리는 슈퍼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다. 대학은 대학대로 갑자기 청나라와 세 황제에 대한 연구를 붓물 터지듯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건성세에 대해 중국의 역사가들이 주목하는 논점을 살펴보자. 이러한 역사해석은 동북공정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시기에 이른바 '국가 대통령적 국면'을 실현했다는 점을 역사가들은 강조한다. 오늘날 유지되는 중국의 영토가 사실상 이때 대부분 그 뼈대가 정해졌다는 인식이다. 특히 티베트의 달라이 라마 5세가 강희제의 아버지인 순치제 때 입조하기 시작한 뒤 사실상 이 시기에 티베트가 중국의 영향권에 안정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강조하는 분위기다. 이때부터 티베트는 중국에선 '서장'으로 불리기 시작한다. 둘째, 이때 중국의 인구가 3억 명을 돌파했다는 것이다.

역사상 남송 소희황제 시대에 처음으로 1억 명에 도달한 이후 약 1200년 만에 인구 3억 고지를 돌파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이 시기 황제들이 만주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대중국'의 관념을 관철시키고 있었다고 파악한다. 실제로 만주족과 한족의 융합과 화해를 상징하는 초대형 음식인 만한전석이 탄생한 것이 이 시기이며, '통일중국 균립천하'를 선언한 것도 이 시기의 황제 옹정제이다.

강건성세는 오늘날 중국의 영토를 사실상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세계 속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으로 자랑하는 인구라는 엔진을 확실하게 작동시키기 시작한 시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중국 지도부가 최우선적인 국가통합 이데올로기로 내세우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를 실현한 시기이다. 영토와 인구나 국가 이데올로기의 삼박자가 들어맞는 이 절묘한 시대를 대상으로 중국 지도부가 이른바 의도적인 이념사업을 벌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적인 면에서 중국민족에 대한 개념 속에 비 한족을 포함시키는 것은 중국역대 지도부의 숙제였다. 중국의 민족주의란 것이 반청, 반 만주족을 기반으로 하여 형성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최근 강경성세의 대대적인 애국열풍은 이론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중화민족을 완성했다는 중국지도부의 열광으로도 들린다.

한족의 민족주의는 공산주의 이론과 공산당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국가 민족주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국가민족주의를 개념화하기 위해서 중국과 중국인은 새롭게 정의되었다. 그리고 새롭게 정의된 국가민족주의의 개념은 종교적 신조와도 같이 국가 이데올로기로써 중국인들에게 반복 주입되었다.

중국 역사학계에선 이 사업이 역사상의 가상 영토를 겨냥한 역사전쟁으로 발전한다. 기본 전략은 “현재 중국판도 위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사에 귀속 된다”는 고위금융(古爲今用)의 이론체계라는 것은 앞서서도 지적한바 있다.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민족과 국가, 문명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사라고 규정해 버리는 식이다. 모든 민족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뉘버리고 중국에 존재하는 56개 소수민족의 역사가 송두리째 중국 역사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당연히 고구려문제 때문에 한민족(조선족)과 충돌할 수 밖에 없는 만주지역(중국으로 보면 동북지역)만이 아니라 잠재적 분리독립 세력인 티베트·몽고·신장위구르가 대상 지역이자 대상 민족이 된다.

1980년대 이후 중국학계에서 “현재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 중국역사”라는 다민족통일국가론이 강조되면서 고구려사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그동안 소극적으로 펼쳐졌던 이 주장이 최근 들어 더욱 공식화,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전략 분석

한반도 정세변화와 조선족에의 영향에 대한 대응

동북공정의 민족적 내용이 역사적 해석을 불러일으키는 기반이 된다면 이러한 역사해

석이 결과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정치적이다.¹⁹⁾ 정치적 의도를 차지하고서도 동북공정의 정치적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는 다양하다.

첫째, 논문이 실린 광명일보의 위상을 분석해 보자.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일반 공산당원을 상대하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라면 광명일보는 지식인 공산당원을 상대하는 공산당 기관지라는 차이가 있는데, 광명일보의 논설은 때로 중국공산당이 나아갈 미래에 대한 방향타 구실을 한다. 덩샤오핑(鄧小平) 집권 초기였던 1978년 광밍르바오가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實踐是檢驗真理的唯一標準)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한 것이 그런 예다.

이 논문은 중국공산당이 개혁 개방으로 갈 것임을 알리는 방향타 구실을 했고, 실제로 중국공산당은 그렇게 갔다. 파룬궁(法輪功)을 가장 먼저 비판한 매체도 광명일보인데, 그 직후부터 중국 공안당국은 세계적인 비난을 무릅쓰고 파룬궁 탄압에 나섰다. 이는 광밍르바오에 실린 어떤 글들은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치밀한 계획으로 작성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런 점에서 광명일보가 “고구려는 중국 동북지역에 있던 변방민족의 정권”이라는 논문을 게재한 것은 우연도 아니고 ‘벤중’(邊衆)이라는 필자 개인의 견해도 아니다. “중국 변방에 사는 민중”이라는 뜻의 벤중이 가공인물이라는 점이 더욱 의미심장하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에 실는 역사 관계 논문을 이름 있는 학자가 아닌 가공인물이 썼다는 사실은 이 논문이 특정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중국공산당 지도부 의중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둘째, 동북공정 취지문을 살펴보면,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아래의 동북공정의 취지문 그대로, 학술적 연구라기보다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 연구 활동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적시하고 있다.

「특별히 근 10여년 이래로 동북아의 정치와 경제의 지위가 날로 상승함에 따라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뜨거운 지역이 되었으니, 아국 동북의 변강지구는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하여 극히 중요한 전략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형세아래 일부국가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역사관계 등의 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소수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잘못된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리하여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연구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아울러 이 방면의 학술연구에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에 대한 연구 분야 건설 및 발전을 더욱 촉진시키고, 동북변강지역의 안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중앙의 허가를 받아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 3성이 연합하여 대형 학술과제인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을 2002년 2월에 정식으로 발족하

19) 윤취탁(위의 글, 2003)은 이와 관련하여 동북공정 프로젝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고구려 사 왜곡은 역사사관이 아니라 정치사관이라 명명하며 그것의 정치적 의도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을 한다.

였다....이 가운데 중요한 연구내용은 고대 중국 강역이론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 연구, 고조선, 고구려, 발해사 연구, 중조관계사 연구, 중국 동북변강과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경제관계사 연구, 동북변강사회 안정전략 연구, 한반도 정세변화 및 그에 따른 중국 동북변강 안정에 대한 영향연구 등이 있다.... 이번 공정은 직접적으로 국가의 장기구안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통일, 민족단결, 변강안정의 대목표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²⁰⁾

이러한 취지문을 분석해 볼 때, 중국의 정치적 의도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기 보다는 수동적인 대응의 성격도 띠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한중수교이후 한국의 정치가와 연구가들이 고토회복을 주장하거나 그 근거로 고구려를 되찾자라는 주장이 공공연히 제기되기도 하였고, 고구려유적답사가 하나의 유행으로 번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 측을 자극하였음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 한반도 통일이 이러한 움직임이 보고 공식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장기적인 정치적 포석을 위해서라도, 또한 제기될 수 있는 간도라는 영토문제에 확실한 선을 긋기 위해서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공정의 출현배경으로 “일부국가의 연구기구와 학자들이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역사연구 과정에서 사실을 왜곡하고 몇몇 정객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그릇된 논리를 공개적으로 펼쳐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은 동북변강지구의 안정을 유지하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의 관계에 관한 학술연구를 사회과학의 불가치한 책임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표현은 이러한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셋째, 동북공정의 조직체통을 분석해 보자.

동북공정의 조직체통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발견되는데 먼저 다른 변강지구의 연구나 활동은 주로 ‘변강중심’ 차원에서 그치는데 비해 유독 동북지구를 다루는 동북공정에는 ‘변강중심’ 과 중국사회과학원 예하의 조직들이 총망라됨은 물론 그 조직범위를 뛰어넘어 동북3성의 행정조직, 공산당조직, 관련 연구기관, 대학, 사회과학원 등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북공정의 추진체제 자체가 보다 분명한 정치적 의도와 결과에 따른 책임관계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구의 결과는 학술적인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직체통에 의해 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현하의 고구려사에 대한 역사재해석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과제의 특징을 보면 정치적 활용을 결론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 점은 연구과제 중에서 중국사회과학원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의 “한반도 형

20) 「신동아」 2003년 9월호.

세의 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정에 미칠 충격”에 관한 조사 연구 자료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한반도의 형세변화, 즉 남북통일이 동북지구 조선적 사회에 초래할 혼란을 사전에 막기 위한 필요성에서 동북공정이 비롯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하반기부터 중국 공안국 변경 부 및 동북 유관기관지하에 길림성의 중조변경지역에 대한 조사연구에 착수했다. 초기 작업에서는 변강중심을 비롯하여 길림성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동북사범대학 동북아연구중심, 길림사범학원 고적 연구소, 중국인민대학 청사연구소 등이 중심역할을 했다. 그리고 1998년 관련기관 공작자들이 중앙기관에 공작보고서를 연이어 제출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때 제기된 공작의 중점은 한반도 형세변화의 추이 조사연구와 중국과 한국사이의 역사상 논쟁점, 대규모 탈북자 출현가능성과 그 대책 등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조사연구 작업은 ‘변강중심’이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1999년 중국 중앙 및 지방 정책기관의 지원 하에 ‘변강중심’이 주관하던 연구를 바탕으로 중국사회과학원과 동북3성은 동북변강의 역사와 현상계열 연구공정(동북공정)이라는 대형과제를 연합으로 조직하여 2002년 2월부터 정식으로 활동에 들어갔다. 동북공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동북공정 영도 협조기구’를 조직했는데, 그 고문은 중공중앙 정치국 국원이자 중국사회과학원 원장 이철영과 중공중앙위원이자 재정부장 항회성이 맡고 있다.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해보면 중국 측의 정치적 의도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의 목적은 남북의 일부 지도자나 학자들이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둘러싸고 이들 왕조나 역사를 한국사의 일환으로 주장하며 동북변강지구를 한국의 고토라고 주장해 온데 따른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자칫 남북한의 역사논리가 중국 동북의 조선족사회에 초래할지도 모르는 민족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조선족의 이탈을 미연에 차단하여 동북사회의 안정을 꾀하려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정세변화, 즉 남북통일이 동북지구의 조선족 사회 혹은 동북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한 정세연구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동북공정은 한반도의 정세변화와 남북한의 학문적 정치적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동북공정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남북한에서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한국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논리들을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분석함과 아울러 기존의 관련 연구 자료를 발굴정리 분석하여 그러한 역사가 중국사의 일환임을 강변할 수 있는 대응논리를 개발하려는 데 있다. 게다가 동북공정은 자칫 남북통일 이후에 불거져 나올지 모르는 국경 영토분쟁에 미리 효율적으로 대비하려는 데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는 이러한 대응논리를 조선족사회에 주입시켜 그들의 민족정체성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에 중화민족 논

리를 재확립 강화하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동북공정은 변경 지역의 역사와 함께 그에 따라 ‘파생되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따라서 다루는 시대가 길고 폭이 넓은 거대하고도 종합적인 프로젝트이다. 중국의 역사왜곡, 동북공정의 주된 관심은 어찌 보면 역사 연구보다는 ‘파생되는 현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파생되는 현상’이 발생할 주무대는 한반도이고, 그 내용은 한반도의 정세변화다. 한반도의 정세는 극히 유동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양상으로 한반도의 정세가 전개될지 모르지만, 중국이 우려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없이 중국 동북지방에 직접 미치고, 그에 따라 만주지역의 조선족을 비롯한 주민이 동요하는 것이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주의가 격돌하는 충돌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의식하고, 그에 대비하는 안정화 전략을 세우는 차원에서 동북공정을 입안 추진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정황은 중국변강사지 연구중심에서 작성한 “한반도 형세의 변화가 동북지구의 안정에 미칠 충격”이라는 자료에서 잘 드러난다. 이 자료는 동북공정이 대규모의 북한 탈북자 문제와 조선족 문제에서 촉발했음을 시사해준다. 아울러 조선족의 밀집지구가자 한반도와와의 교류가 빈번한 연변조선족자치주와 단둥지구가 한반도의 형세변화(남북통일)로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음을 적시한다.

중국 정부가 우려하는 만주사회의 변화상은 남북통일로 인해 대규모의 북한사람들이 만주로 탈북 하는 것과, 코리아 드림을 실현하려는 조선족이 혼란기를 틈타 한반도로 몰려들 경우이다. 만주에서의 북한 탈북자와 조선족의 공존, 한반도에서의 한국인·북한사람·조선족의 잡거 상태는 일시적인 잡음을 야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탈북자·조선족·북한사람·한국인 사이의 민족적·혈통적 공감대를 확대하여 만주에 대한 한민족의 영향력을 제고할 것이다. 이는 한반도와 중국대륙의 단절을 통해 만주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중국 정부의 전략에 치명타를 안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불거진 만주에서의 소수민족 문제는 각 민족의 단절을 통한 체제 유지를 지상과제로 하는 중국 국정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역사학계에선 역사상의 가상 영토를 겨냥한 역사전쟁으로 발전한다. 기본 전략은 “현재 중국판도 위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사에 귀속된다”는 고위금융의 이론체계라는 것이다. 현재의 국경을 기준으로 모든 민족과 국가, 문명의 역사는 현재의 중국사라고 규정해 버리는 식이다.

체제안정을 위한 장기적 역사 전략

위의 분석이 중국측의 반사적인 대응의 성격이 있다면 이러한 역사논리와 분석이 전면화되었을 때 그것이 갖는 장기적인 성격으로서의 적극적인 정치적 전략을 읽을 수 있다.

동북공정이 상징해주듯이 중국 국가주의가 고개를 쳐들고 있는 가운데 만주에서는 수많은 북한 탈북자들이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국내에서는 조선족이 한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거나 강제추방 조치에 맞서 ‘한국국적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집회와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중국정부는 ‘재외동포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중국 국민’의 권리에 대한 내정간섭이라는 이유로 우리 정부의 조선족 관련 조치에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모두 ‘만주’와 관련돼 있다.

그렇다면 중국에게 ‘만주’는 무엇인가? 이 점은 해방전까지 사용되던 만주 명칭이 사라지고 ‘중국 동북지구’라는 지명이 대용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난다. 그 이유는 만주라는 용어가 일본의 괴뢰국 ‘만주국’을 환기시킨다는 점, 주변 국가에서 중국 관내와는 별개의 지명으로 만주 용어를 사용하면서 만주가 ‘중국의 온전한 영토’가 아님을 암시한다는 점 때문이다. ‘중국 동북지구’라는 명칭은 만주가 ‘중국의 동북에 위치한 확고부동한 지역’임을 웅변한다.²¹⁾ 중국쪽의 그러한 속내는 결국 동북공정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이와 같이 동북공정은 1차적으로 고조선사·고구려사·발해사를 한국사(혹은 조선사)라고 주장하는 국외의 논리들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존의 연구자료를 발굴·정리·분석해 그것을 중국사라고 주장하려는 데 있다. 2차적으로는 남북통일 이후에 초래될 수 있는 국경·영토 분쟁에 대비한 역사적·지정학적 논리를 마련하고 앞으로 남북통일이 조선족 사회에 미칠지 모를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미리 대처하려는 데 있다. 3차적으로는 동북공정 논리를 주입해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혼란을 예방하고 중화민족 논리를 재확립·강화해 만주에서 소수민족 문제의 돌출을 막으려는 데 있다. 이것은 다민족 통일국가인 중국의 체제 안정과 직결된 중차대한 정책 차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한다.

조선족의 동요차단은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체제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조선족자치주가 동요하면 시짱(西藏)자치구에 있는 티베트인과 신장(新疆·위구르)지구에 있는 회교도들도 술렁거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커지면 중국은 5대10국(5代10國) 이후 새로운 분열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 이후 수많은 분열을 겪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구려는 원래 중국사의 일부였다고 미리 강조함

21) 윤휘탁, 위의 글, 196-200쪽.

으로써 김정일 정권 붕괴기에 있을지도 모를 조선족의 동요를 차단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티베트문제와 동북공정의 유사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중국이 ‘영토문제’에서 자국의 논리를 관철시키려는 의도로 관변 역사학자들을 동원한 사례는 비단 ‘동북공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티베트(시짱) 역사에 대한 연구다. 베이징에 있는 장쉬에(장학)연구소는 전문적으로 티베트 문제를 연구하는 곳이다. 사실은 티베트 문제를 종합적으로 연구한다기보다는, 티베트가 언제 중국의 영토로 편입됐으며, 왜 티베트가 중국의 일부분인지를 연구하는 곳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다. 이 연구소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학술 업적을 보면 연구소 성격을 알 수 있다. <원나라 이래 시짱 지역과 중앙정부의 관계 연구>는 1986~90년 ‘국가철학사회과학연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획연구’로, “상세한 사료를 바탕으로 시장지역이 원나라 이래 줄곧 중국 중앙정부의 관할 아래 있어왔던 중국의 분리할 수 없는 영토임을 논증했다”는 평을 얻었다. 이 연구와 쌍벽을 이루는 성과가 <원나라 이래 시짱 지역과 중앙정부의 관계 문서·사료 집성>이라는 7권의 방대한 자료집이다.

이 또한 티베트에 관한 중국 정부의 논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변 문헌을 집대성한 것이다. 즉, 중국의 사활적인 이익으로 간주되고 있는 티베트 분리독립에 대한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는 관변사학계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적 내용을 통해 그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어져 왔다. 이러한 역사적 내용에 그 논리를 제공해주는 것은 바로 중화민족관과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이었다.

역사·문화적 방면이든 실제관계든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연관성을 부정하고 이 양자의 연결고리를 끊어 만주에 대한 한반도의 영향을 차단함으로써 체제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조선족을 ‘온전한 중화민족’으로 만들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는 것이다.

동북공정은 현대 중국의 ‘만주전략의 핵’이자 중국 국가주의의 전형적인 표상이다. 바야흐로 중국에서는 각각의 소수민족이든 개인이든 그들의 고유한 가치는 모두 ‘중화민족’ 혹은 ‘애국’이라는 국가주의, 혹은 ‘현대판 중화주의’의 그늘 속에 묻혀지는 것이다.

동북공정이라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필요적 관점, 즉 중화민족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국가사회적 통합과 그를 통한 체제의 유지안정이라는 거시적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동북아 역사를 재단하고 왜곡함으로써 역사적 문화적 귀속권을 둘러싼 한중간의 논쟁점이나 조선족에 대한 흡인요소, 영토관련 분쟁거리나 중화민족 단결에 해로운 논조를 송두리째 잘라내고 있다.

위에서도 지적한 것과 같이 “현재의 중국영토 내에서 중화민족의 각 민족이 이루어낸 역사는 모두 중국사”라는 현재적 편의의 사관이나, “현재의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했던 모

든 민족은 당연히 중국인이며 중국민족”이라는 민족관은 모두 현재의 영토를 기준으로 그 범주 내에서 활동했던 모든 민족의 귀속권을 일방적으로 강탈해간 영토지상주의 역사관(윤휘탁, 2003)인 것은 결국 소수민족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현존의 다민족 통일국가로서 체제안정을 꾀하려는 중국의 동북아전략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민족정치론의
체계화를 위한 정지작업**

현대정치와 민족문제

〈주요 목차〉

제 1 부

1. 새로운 정치환경과 민족문제
2. 개념 정의
3. 네이션
4. 내셔널리즘
5. 국민국가론

제 2 부

1. 중국 : 통일적 다민족국가의 건설
2. 華僑 : 落葉歸根에서 落地生根으로
3. 러시아연방 : 마트료시카적 중층성
4. 미국 : '멜팅 포트'에서 '샐러드 볼'로
5. 일본 : 단일민족 신화의 허구
6. 캐나다 : 다문화주의의 실천장
7. 북한 : 통일정책과 민족정책



교양사회
조정남 저 / 값 15,000원



역사적 진실 왜곡에 대한 비판과 반성

김 인 성 (한국민족연구원 연구위원)
< kis980117@yahoo.co.kr >

이 글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의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부 및 주변국가들의 반응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자는 1) 동북공정의 배경에 대한 한국 측의 다양한 시각들, 2) 동북공정을 통해 제시되는 중국 측 주장들에 대한 한국학계의 평가, 3)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정부에서 취하고 있는 대책들을 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중국 측의 시각이나 이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며, '동북공정'에 관련된 한국 측의 다양한 반응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동북공정'에 대한 균형잡힌 시각과 적절한 대책의 모색을 가능토록 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동북공정의 배경

한국의 언론들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한 것은 작년 하반기였으며, 작년 말부터 중국 측의 의도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계와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주목할 점은 동북공정의 배경에 대한 시각의 다양성과 상관없이 한국의 논자들은 한결같이 동북공정을 정치적 성격을 띤 프로젝트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¹⁾ 여기서는 '동북공정'의 배경의 입장과 관련된 논의들을 1) '공세론'으로 보는 시

1) 중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북공정'이 '일부 지방정부와 학자들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한국측은 중국정부가 동북공정에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주장하여 왔으나, 중국정부는 "중국은 역사왜곡의 의도가 없으며 동북공정은 지방정부의 일이며 통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중국 『헤이허일보(黑河日報)』의 2003년 8월 6일자는, "동북공정은 원래 동북변방역사 및 현재의 상황과 관련된 일련의 연구프로젝트로 후진타오 동지가 2000년 중국사회과학원에 지시해 승인한 사회과학 연구항목 가운데 하나"라는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한국 언론들은 중국최고위층이 '동북공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동북공정'이 지방차원의 학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국가차원의 정치적 프로젝트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표-1〉 '동북공정'의 배경에 대한 한국측의 시각

동북공정에 대한 시각	요 지
공세론	동북공정은 동북아질서 및 세계질서를 중국중심으로 재편할 의도로 추진되고 있음.
방어론	동북공정은 현 국제질서의 보존 혹은 중국내부의 불안정요소의 제거를 위한 것임.
반성론	중국의 역사편제에 대한 한국측의 이해부족이나 중국을 자극하는 한국측의 태도가 동북공정의 추진과 관련 있음.

각, 2) '방어론'으로 보는 시각, 3) '반성론'으로 보는 시각 등의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 한다.

공세론

한국의 학계·언론계 인사들 대부분은 중국의 '동북공정'을 공격적 프로젝트로 파악하고 있다. 이 시각은 동북공정이 학술적 성격을 띤다는 중국 정부의 해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동북공정은 현재의 동북아 질서, 세계 질서를 중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의도를 가지고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북공정의 배경에 대한 이들의 시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동북아와 아시아의 맹주 추구, 2) 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부

〈표-2〉 한국측이 바라본 '동북공정'의 공세적 측면들

동북공정의 목적	근 거
동북아와 아시아의 맹주 추구	- 동북지구의 전략적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동북공정의' 취지문. - 대동아공영론과 현 상황의 유사성. - 만주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 중요성. - 중국식 공산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세계적 패권국으로서의 부상	- 중국의 '종합국력' 신장을 위한 계획.
한민족의 중국문화권 편입	- 동북공정은 일본의 식민사관과 유사하게 한민족의 정체성을 상실케 하기위한 정치작업임.
북한정권 붕괴 후 '중국단독관리' 실현	- 동북공정은 한반도 북부가 중국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미국에 알리기 위한 것일 수도.
연해주 진출	- 연해주는 과거 러시아에 빼앗긴 지역. - 육지와 바다의 자원 풍부. - 지리적으로 중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전략적 활용	- 중국은 2001년 이전에는 고구려유적에 대해 관심 갖지 않음. - 북한 고구려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방해.



▲ 광개토태왕비

상, 3) 한민족을 중국문화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지작업, 4) 현 북한 정권 붕괴 후 '중국단독관리' 실현, 5) 연해주 진출, 6)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위한 전략적 활용.

동북아와 아시아의 맹주 추구

이 시각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중국이 동북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 공동체 내부에 중화중심의 질서를 구성하기 위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지는 동국대학교 윤명철 교수가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역사학계와 언론계의 많은 인사들이 이러한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의 논지를 종합해 볼 때, 중국이 동북아 중화적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목적

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설명될 수 있다: 1) 중국 측의 동북공정에 대한 설명, 2) '대동아공영론' 과 현 상황의 유사성, 3) 만주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 중요성, 4) 중국식 공산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중국 측의 동북공정에 대한 설명

중국사회과학원 산하 중국변강사지연구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의 인터넷 사이트(www.chinaborderland.com)에는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동북지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로 중대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일부 국가의 연구자와 기관’ 이 역사 사실을 왜곡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잘못된 이론을 선전하고 혼란을 야기했다. 이 때문에 동북변경에 대한 연구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으며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게 되었다.”²⁾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일부 국가들의 연구자와 기관’ 은 남북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동북공정의 주요 작업은 ▲고대중국영토연구 ▲동북지방사연구 ▲동북민족사연구 ▲고조선·고구려·발해사연구 ▲중·조(中·朝)관계사연구 ▲중국 동북변경 및 러시아 원동지구의 정치·경제 관계사연구 ▲동북변경의 사회안전전략연구 ▲조선반도 형세 변화 및 이의 동북 지역 안정에 미치는 영향연구 등이다. 한마디로 동북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으며, 이는 동북공정이 동북아 지역에서의

2) 「동북공정 핵심은 간도?」 『뉴스메이커』558호.

패권적 중화주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본다.

‘대동아공영론’과 현 상황의 유사성

윤명철 교수에 따르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동아시아의 패권자가 되려는 은밀한 수순으로써, 동아시아의 종주국 노릇을 할 근거를 미리 만들기 위해 주변 민족의 역사를 변방의 역사로 흡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100년 전 일본이 침략과 역사왜곡을 병행했던 사례와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일·조동조(日·朝同祖)론’, 만주를 집어삼키기 위해 ‘만선(滿鮮)사관’, 중국까지 지배하기 위한 ‘대동아공영론’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것이다. 일본은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 우리 민족의 역사인 발해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는데, 중국이 나라를 쪼개고 집어삼킨 몽골과 티베트, 위구르의 역사를 자국 변방의 역사로 흡수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윤 교수는 일본이 일찍부터 두만강 하구를 주목하고 1924년도에 이른바 ‘두만강 경략론’을 주장하는 등 만주의 중요한 가치를 간파했고, 그래서 일본의 대륙 진출과 발해사 연구가 긴밀한 연관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한다.³⁾ 현재 중국이 만주 지역의 경제적 중요성을 중시하고, 일제와 유사하게 동북지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동북공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주지역의 정치·경제·군사적 중요성

근래 들어 중국이 동아시아의 맹주가 되기 위해서는 동북지역이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다. 무엇보다도 먼저 지적할 수 있는 점은 유라시아 물류 이동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이 대국화 노선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북 3성을 개발, 동북아시아 경제허브와 정치군사적 요충지로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인천에서 가장 가까운 산둥, 장쑤, 저장성은 배로 10~12 시간 걸리지만, 동북 3성은 육로로 8시간 안에 닿을 수 있다. 한국 철도가 유럽을 향할 때도 동북 3성을 가로질러 시베리아 철도와 연결된다. 유럽에서 한일을 잇는 물류이동경로의 핵심에 동북 3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곳을 물류이동의 허브이자 새로운 생산기지로 탈바꿈시킬 때 중국의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⁴⁾ 게다가 남북한의 계획대로 TCR과 TSR까지 연결되면 모든 도로망이 물려들면서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된다. 대륙과 황해와 동해가 만나는 곳이자, 대륙경제권과 황해경제권, 동해경제권이 만나는 곳이다.⁵⁾

3) 윤명철, 「高句麗의 古朝鮮 繼承性和 東北工程의 背景」, 2004 고구려 기획전 특별강연회, 국학원.

4) 「고구려 사 흡수해 중국천하 만든다」 『말』(2004.2)

5) 윤명철, 앞의 글.

둘째, 만주지역은 향후 한자문화권에 속하는 국가들로 이루어질 동아시아 공동체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적인 현실로 미루어, 이러한 공동체는 정치·군사적 영토보다 문화영토 그리고 경제 영토 개념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동아시아 경제권 혹은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리적으로 근접성이 강하고, 가장 중요한 코드인 ‘漢字文化圈’이라는 공통점을 지닌 중국과 대만, 홍콩, 남북한이 하나의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들이 강하다. 미국과 유럽의 보호주의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전략이다. 이 경우에 만주 지역은 地政學的, 地經學的, 地文化的으로 매우 다양하고 역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으로서 다가올 세계 질서 혹은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모든 나라의 힘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특히 한민족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은 필연적이다.⁶⁾

동북공정을 추진하는 목적은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창출하는데 있다. 즉, 중국은 21세기 세계최고의 부강한 나라, 즉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중국식 공산주의의 제국주의적 성격

이 시각은 동북공정이 新中華 帝國主義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분축적 작업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데는 이데올로기가 작용한다고 파악한다. 먼저, 공산주의자로 알려진 마오쩌둥이 철저한 중화주의자였고, 공산중국에 이르러 가장 제국주의적인 성격을 지니게 되었고, 주변의 국가와 종족들을 억압하고 독립을 빼앗았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 왜곡의 근본배경과 추후의 전개과정에 대한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데, 중국 측의 이러한 의도는 고구려 혹은 주변지역들이 중국의 근원이라고 인식하는 周의 영토, 漢의 영토였음을 강조하는 데서도 나타난다.⁷⁾

다음으로, 중국의 민족갈등을 계급모순으로 연결시키는 시각도 존재한다. 공산 중국은 55개의 소수 민족과 한족으로 이루어져 다민족국가의 한계가 노정되고 있는 상태다. 내부에서 발생한 갈등 즉 종족 또는 민족 간의 갈등은 권력이나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진다. 대외관계 혹은 민족모순이 계급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복잡한 사연을 지닌 주민과 주변지역을 완전하게 지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정당성과 명분이 있어야하고, 지배

6) 윤명철, 앞의 글.

7) 윤명철, 「高句麗와 隋唐간의 전쟁에 대한 중국 東北工程의 시각」(http://www.kog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 &num=210&page=3&ftype=6&fval=&backdepth=1)

8) 윤명철, 「高句麗의 古朝鮮 繼承성과 東北工程의 背景」, 2004 고구려 기획전 특별강연회, 국학원.

받는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그럴듯한 논리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한족들에게는 중국이 한족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발전해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중화민족 또는 중화문명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 시급한 시점에서 과거 역사를 재정리하고 재편해, 명분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⁸⁾

셋째, 동북공정이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로서 활용되고 있다는 시각이다. 이 시각에 따르면 중국의 국가전략을 뒷받침하는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는 '중국공산당으로 일치단결'로서, 동북공정을 통해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것이다. 중국의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고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 기제가 흔들린다면 중국의 대국화 움직임은 큰 난관에 봉착할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은 변화에 순응하는 동시에 절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상 강화 운동을 펼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기에 영합하는 민주주의적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⁹⁾

세계적 패권국으로의 부상

이 시각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목적이 동아시아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 중심의 질서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본다. 중국은 21세기 세계 최고의 부강한 나라, 즉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초강대국을 꿈꾸고 있다는 것이다. 장쩌민과 후진따오의 전략은 '21세기는 중국의 시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는 '21세기 대국화신안보전략'과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기축으로 하는 '현대화된 종합국력의 신장'이다. 이 같은 '종합국력'의 신장을 향한 중국의 국가전략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21세기 대국화 신 안보전략, 둘째, 지속가능한 발전, 셋째, 국가통합과 국내안정을 위한 정치체제 안정과 통합이데올로기이다. '21세기 대국화 신 안보전략'의 목표는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강력한 중국건설, 그리고 미국을 넘어 동북아와 아시아의 맹주가 되는 것이다. 장쩌민의 권력승계가 완성된 1997년 15차 당 대회 이후 중국은 본격적으로 경제우선발전노선(선 경제, 후 군사)을 접고, 경제와 군사력을 동시에 신장시키겠다는 노선(균형발전론)을 수립한다. 이 노선에 경제적 성장에 힘입어 군사력을 강화, 명실상부한 세계강대국으로 발돋움하자는 현실주의적 시각과 국가주의적 견해가 녹아 있으며 현 동북공정 프로젝트는 이를 통한 국민통합 이데올로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각의 주장이다.¹⁰⁾

9) 「고구려 사 흡수해 중국천하 만든다」 『말』(2004.2)

10) 같은 글.

한민족을 중국문화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정지 작업

동북공정은 역사의 탈취를 통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며, 추후 한민족을 자국의 문화권에 편입시키려는 정지작업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윤명철 교수는 중국의 '동북공정'에서 제기되는 역사관을 일본의 식민사관과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인류의 일반적인 역사과정은 말해주듯이 역사적 집단이 계승성과 정통성으로 채워진 정체성을 상실하면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왜곡이 생기고, 내부의 인간들은 自由意志를 포기한 채 非主體的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며, 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대외적으로 평창을 지향하는 국가, 혹은 대외관계모순이 심한 국가가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새로운 해석을 가한 역사서가 편찬하는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¹¹⁾

북한 정권 붕괴 후 '중국단독관리' 실현

역사학자 이덕일은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북통일로 이어지지 않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의 대국에 의해서 관리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중국이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단독관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 주장한다.¹²⁾ 중국은 지금과 같은 경제 고속성장의 중요한 배경인 미국과의 협력이 북핵 문제 때문에 깨지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며, 나아가 미국이 이라크처럼 북한을 공격해 군사적으로 점령하는 상황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반도 북부는 중국사라는 내용의 대규모 동북공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견제하거나 남북통일 후 만주 중국교포사회의 동요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동북공정을 통해 한반도 북부사는 중국사라는 주장을 미국에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그는 중국이 미국의 목인 아래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고 북한 내 친중 군부세력 등을 파트너로 삼아 사실상 북한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연해주 진출

이 시각에 따르면, 동북공정의 목적 중의 하나는 만주의 일부분이자 고구려의 영토였던 연해주를 다시 되찾기 위한 것이다.¹³⁾ 중국은 고구려사를 왜곡, 연해주 침탈의 역사적 명분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 1860년에 중국은 불평등 조약인 북경조약으로 인하여 연해주 일대와 동해로 가는 出口를 러시아에 빼앗기고 말았다. 이로 인해 중국은 동해로 자기 세력을 확대할 수도 없고, 일본의 진출을 자력으로 견제할 수도 없게 되었다. 만약 중국이 연

11) 윤명철, 「高句麗의 古朝鮮 繼承성과 東北工程의 背景」, 2004 고구려 기획전 특별강연회, 국학원.

12) 이덕일, 「역사학자가 본 중국 東北工程의 진짜 속셈은?」, 『월간중앙』, 2004년 2월호.

13) 「역사 잃으면 민족생명 잃어」 『경향신문』(2004.7.20)

해주 땅을 되찾는다면 무궁무진한 육지의 자원은 물론, 바다의 자원들까지 가질 수 있다. 특히 타타르 해협까지 차지한다면 북태평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그 때문에 중국인들은 합법적인 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연해주에 건너와 자리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는 대미국 및 대일본전략 속에서 협력관계이자 동반자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이 국제질서의 변동 과정 속에서 연해주 지역의 수복을 노리고 있다면 동북공정의 목표는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때 동북공정에서 발해사에 이어 고구려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려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연해주에 대한 역사적인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명분을 축적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 등재 위한 전략적 활용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자국 영토에 존재하는 고구려 유산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노력이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에서 아니라, 중국의 패권주의에 기인하는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중국은 이전에는 고구려유적을 유네스코에 등록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첫째, 북한의 고구려 고분군이 단독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경우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가 무산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고려대 최광식 교수는 중국이 고구려유적의 등록에 대한 노력을 시작한 시점은 2001년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¹⁴⁾ 그의 주장에 따르면, 2001년 한국 국회에서 재중동포의 법적지위에 대한 특별법이 상정되자 중국당국은 조선족 문제와 한반도의 통일과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세우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 북한이 고구려의 고분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을 신청하자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기획하고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만약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역사로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질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신청한 고구려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방해하고, 2003년 봄 오히려 집안 시 주변의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한 것이다.

윤명철 교수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¹⁵⁾ 그에 따르면, 2003년 7월 파리에서 개최된 제27차 세계유산위원회(World Heritage Committee)에서 ICOMOS(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의 권고안을 받아들여 북한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신청한 고구려고분군의 등재를 보류하기로 결정된 바

14) 최광식,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BK21한국학 교육연구단 2004년도 동계공개강좌 자료집, 2004. 1. 12.

15) 윤명철, 「高句麗의 古朝鮮 繼承성과 東北工程의 背景」, 2004 고구려 기획전 특별강연회, 국학원.

있는데, 이 보류결정에 대하여 북한측에서 심사단이 충분한 실사를 하도록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고 보면서 중국인의 공작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 반면에 중국이 북한과 경쟁해야 한다는 개연성과 이미 2002년 7월 중국이 세계유산 등재신청서를 작성하고 있었다는 상황론을 덧붙이며 공작일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

둘째, 2000년 이전까지 중국은 고구려 유적들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도 고구려 유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시도의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0년 북한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잠정목록을 제출할 때만 해도 중국은 아직 고구려 유적을 신청할 의도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길수 교수는 중국이 고구려 유산은 될 수 있으면 부각시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지난날 많은 한국의 독지가들이 집안에 박물관을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중국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말한다.¹⁶⁾ 게다가 개혁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구려 유적은 여러 가지 치명적인 훼손을 입게 된다. 이를테면, 관리소홀로 인한 고구려 벽화의 도난·훼손이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국내성 유적 역시 수 십 년 동안 당국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어 왔었다. 이런 정황들은 중국이 고구려 유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더구나 세계유산에 등록할 계획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한다고 할 수 있다.

방어론

「동북공정」을 방어적인 프로젝트로 파악하는 시각들은 동북공정의 목적이 현 동북아 질서의 현상유지나 중국 내부 질서의 유지와 결부되어 있다고 보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이하 소개될 시각들 거의 모두가 동북공정은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에 의해 발표되는 논문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대부분의 논자들은 중국 측의 패권주의적 경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논지들은 국제관계에 있어 세력관계의 변화보다는 현 국제질서의 유지나 중국 내부의 불안정 요소의 제거 등을 동북공정의 목적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⁷⁾ 이 시각에 따르자면, 중국의 동북공정은 1) 중국 내 소수민족문제의 해결, 2) 통일 후 중국 동북지역의 안정유지, 3) 통일 후 간도 영유권 분쟁소지예방 등의 목적을 위한 프로젝트이다.

16) 서길수,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의 현황과 전망(토론회 발표문)」, 고구려 연구회(http://www.kog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num=214&page=3&ftype=6&fval=&backdepth=1)

17) 동북공정에는 2008년 올림픽을 겨냥하여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아 대대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의화를 벌여드리려는 경제적 목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지를 충분한 정도로 개진한 이가 없기 때문에 각주로 처리한다.

〈표-3〉 한국측이 바라본 ‘동북공정’의 방어적 측면들

동북공정의 목적	근 거
소수민족문제 해결	- 한반도 재통일은 중국주변에 최초의 부유한 국가출현 의미. 이는 소수민족의 이탈을 야기, 민족정체성에 혼동을 줄 수 있음.
중국 동북아지역의 안정유지	- 남북통일 후, 북한측의 난민으로 인해 동북지역의 안정에 부정적 영향 있을 수 있음.
간도영유권 분쟁소지 예방	- 통일한국 정부가 간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할 수 있음.

중국 내 소수민족문제 해결

지금의 중국은 전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중국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은 좡족(莊族) 만족(滿族) 후이족(回族) 먀오족(苗族) 위구르족(維吾爾族) 이족(彝族) 투자족(土家族) 명구족(蒙古族) 등이다. 조선족은 전체 소수민족의 2.6%, 192만 명으로 소수민족 중에서는 14번째로 많다. 현재 중국은 소수민족 우대 정책을 펼침으로써 소수민족의 독립 분규를 피해나가고 있다. 그런데 『신동아』의 한 기사에 따르면, 최근의 한반도정세의 변화가 중국의 소수민족문제를 복잡하게 하고 있다.¹⁸⁾ 중국이 육지를 통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는 러시아 북한을 포함해 14개국인데, 이 나라들은 하나같이 중국보다 가난하다. 그런데 최근 2차 북핵 위기가 높아지면서 미국의 힘에 의해 한반도가 한국 중심으로 재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통일된 한반도가 빠른 시간 내에 지금의 한국처럼 잘 살게 된다면, 중국 내의 소수민족들이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중국이 이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는 시론을 공산당 당보에 게재한 것이라 파악한다.

한편, 윤희탁 교수는 중국정부가 동북공정 논리를 주입해 조선족의 민족정체성 혼란을 예방하고 중화민족 논리를 재확립·강화해 만주에서 소수민족 문제의 돌출을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다민족 통일국가인 중국의 체제 안정과 직결된 중차대한 정책 차원에서 비롯되었음을 뜻하는데, 결국 중국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의 필요적 관점, 즉 중화민족의 정체성 강화를 통한 국가·사회적 통합과 그것을 통한 체제의 유지·안정이라는 거시적인 국가전략의 하나로 동북아 역사를 재단·외곽해 역사적·문화적 귀속권을 둘러싼 한·중 간의 논쟁점이나 조선족에 대한 흡인 요소, 영토 관련 분쟁거리나 중화민족 단결에 해로운 논조를 송두리째 잘라내고 있다는 것이다.¹⁹⁾

18) 「중국은 왜 고구려를 삼키려 하는가」 『신동아』 (2003. 9.)

남북통일 후 중국 동북 지역의 안정 유지

이 시각은 동북공정이 한민족의 동북 지방 유입 역사와 현황에 주목하고 있음에 관심을 갖는다. 변강사지연구중심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조선반도 형세 변화의 동북 지역 안정에 대한 충격」이라는 문건은 “조선반도의 형세 변화는 특히 연변조선족자치주 등에 큰 충격파를 줄 수 있다”며 “연구의 주안점은 첫째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 조선반도의 동란과 난민들의 동향, 둘째 현재 길림성 중-조 국경의 현황”이라고 명시한 바 있다. 19세기 후반과 일제 시대를 거치며 많은 조선 사람이 만주에 들어갔고 이는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으로 이어졌는데, 중국은 한반도 유사시 또다시 많은 북한 난민이 동북 지역으로 들어오고 이 지역이 ‘한민족 근거지화’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현재 동북 지역에 조선족이 1백만 명 이상, 탈북자가 수십만 명이 있는데 여기에 더해 만약 남한 주도로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북한 공산당 및 군부의 강경 세력들이 ‘무기’를 들고 동북 지역으로 들어갈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중국은 일제 시대 때 만주가 독립운동의 기지가 됐던 것처럼 남북통일 뒤 이 지역이 한민족의 또다른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의 56개 소수민족 가운데 조선족은 2백만 명의 인수로 중국 밖에 모국이 있고 어느 정도 국력이 있는데, 중국 정부는 이를 대단히 두려워²⁰⁾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통일 후’ 동북지역 안정을 위해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이 이 시각의 입장이다.

남북통일 후 간도 영유권 분쟁소지의 예방

이 시각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간에 비밀리에 체결된 간도협약에 대해 한국의 통일정부 문제가 제기할 것에 대비하는 데 동북공정의 목적이 있다. 동북프로젝트의 공개된 5개의 연구방향 가운데 간도 문제는 동북 지방사 연구라는 항목 아래 2003년 중점 연구 방향으로 선정되어 있다. 초기에 선정된 27개 과제는 직·간접적으로 간도 문제와 관련 있으며 중국이 간도를 중국령으로 고착시키는 논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학술연구에 속하는 것들이다. 1712년 정초 청 강희제가 ‘백두산 정계비’를 세움으로써 토문 강 이동 북간도 지역이 조선의 땅으로 획정된 것처럼 되었지만, 19세기말 10여 차례의 군사적 충돌을 동반한 간도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바 있다. 이 분쟁은 러·일전쟁으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1909년 간도협약에 따라 간도는 중국에 넘어가게 되었다. 이 시각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 간간이 제기되고 있는 간도영유권 문제에 대해 그 여지를 완전히 뿌리 뽑자는 데 동북공정의 목적이 있다.

19) 윤휘탁, 「만주와 조선족을 다시 보자」 『한겨레신문』(2003.11.26)

20) 「동북공정 핵심은 간도?」 『뉴스메이커』 558호.

반성론

일반적으로 동북공정을 중국 팽창주의의 발현이자 고구려사의 왜곡이라는 시각이 한국 학계와 언론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극히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학자와 언론인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역사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이해 부족과 중국을 자극하는 한국 측의 행태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국사편제에 대한 몰이해

광운대 김희교 교수는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중국의 국사편제에 따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학계가 이를 과도하게 확대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²¹⁾ 그는 동북공정을 중국 팽창주의의 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구체적 분석이 결여된 것이라 주장한다. 좀 더 냉정하게 보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일은 '신중화주의'의 표출이나 대외팽창을 위한 사전포석이기 이전에 중국의 국사편제에 기인한 것이다. 민족사를 국사의 편제로 삼고 있는 우리와 달리 국가사를 국사의 편제로 삼고 있는 중국이 언젠가는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되는 일이었다는 것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사를 일시에 중국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처럼 보는 것도 얼마간 곡해된 감이 있다. 이를테면 공산당 집권 이후만 봐도 1930년대에 이미 김육불이 고구려를 중국의 고대민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후 1985년에 장박천은 『동북지방사』에서 고구려를 지방민족정권으로 기술하고 있고, 1987년 동동이 편찬한 『중국동북사』에서도 고구려 건립 이후 멸망까지를 자국사에 포함시키고 있다. 1991년 설홍과 이주전이 편찬한 『중국동북통사』도 고구려를 중국 경내 하나의 민족정권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자국 영토 내에서 펼쳐진 역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 하는 것은 중국의 '신중화주의적 팽창주의'와 상관없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온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김교수는 주장한다.

〈표-4〉 한국측이 중국측을 곡해했거나 자극했다고 보는 입장

내 용	근 거
중국의 국사편제에 대한 몰이해	- 중국은 민족사가 아닌 국가사를 역사편제의 기초로 삼고 있음.
한국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	- 간도와 만주에 대한 한국측의 수복 논의.
조선족 문제로 중국정부 자극	- 조선족의 국적회복운동 등.

21) 김희교, 「중국의 '동북공정' 과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 『역사비평』, 2004년 봄호.

한국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

한국 학계에서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중국의 팽창주의적 의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김희교 교수는 미래의 중국이 아닌 현실의 중국은 오히려 반팽창주의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²²⁾ 이는 첫째, 한반도 문제에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통하여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동북공정’에 눈을 대고 ‘역사전쟁’에 몰두하며 중국의 잠재적 팽창주의에 대한 경계심과 반 중국정서를 고취하는 동안, 중국은 한반도 위기극복을 위한 반팽창주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반도의 전쟁위기 해소에 중개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북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4자회담을 주도했고, 현재 6자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활발한 막후 조정 작업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에 가하는 팽창주의적 성향의 외압 크기가 다소 과장되어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북공정’을 시급하게 실시하는 이유 중에는 통일 이후 등장할 수도 있는 한반도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도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만주 열풍’에 대한 경계가 주요 요인이었다. 중국은 현재 한국에서 일고 있는 만주열풍이 학문적으로는 식민지시대 일본의 동양사론에서 시작되어 일부 관련학회를 거치면서 확산되어 왔고, 실천적으로는 박정희 군사정권시절의 ‘만주수복론’이 지금 재야의 ‘고토수복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통일은 그것을 가열시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는 남북간 이념 차이에도 불구하고 만주를 고토로 생각하는 공통의 민족주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냉전 종결 이후 조선반도에서 통일과정 중에 ‘대고려 민족주의’ 사조가 출현”하여 “‘민족’이라는 구호 아래 뭉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민족주의 정서가 합쳐질 곳이 ‘고구려 열’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가 “통일만 되면 금상첨화이다”라고 주장하며, ‘을사조약과 간도협약을 무효화시켜 그 지역을 우리 땅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소수만이 공개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만주 땅을 우리 땅’으로 간주하고 그곳을 되찾자는 정서는 제법 퍼져 있으며, 그런 정서를 바탕으로 한 연구 성과도 꽤 있다. 김교수는 이런 물밑 정서가 이번 사태 확산에 기여하였다고 지적한다. 또한 그는 이런 종류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대두될 경우 그 파장이 중국의 경계심에 미

‘동북공정을 시급하게 실시하는 이유 중에는 통일 이후 등장할 수도 있는 한반도의 ‘팽창주의적 민족주의’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도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한국의 ‘만주열풍’에 대한 경계가 주요 요인이었다.

22) 김희교, 같은 글.

칠 영향은 클 수밖에 없으며, 지금 우리의 정치·군사적 힘을 고려할 때 이런 팽창주의적 경향은 만주지역을 되찾기는 고사하고 중국의 팽창주의적 경향을 강화시키거나 더 강경한 한반도 대응책을 모색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한다.

‘조선족 문제’로 중국정부 자극

『창작과 비평』 여름호에 「고구려의 역사와 동북아의 현실」이란 글을 실은 인하대 이영호 교수는 92년 한중 수교 이후 한국인의 조선족 사회 진출이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을 지향하는 중국을 긴장시켰다는 점을 지적한다. 게다가 ‘고토 회복’을 외치며 고구려·발해 유적에 대한 대대적 답사까지 이뤄지는 상황은 “정치목적으로 여러 여론을 선전해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을 형성했다”는 중국 쪽 인식을 부추겼다. 고구려 문제를 “민족사의 영역으로 ‘탈환’ 해오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좁은 시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이교수는 이야기한다.²³⁾

보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에 거주하는 한인교포들에 대한 한국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 단체들의 활동이 중국정부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 단적인 사례가 ‘재중교포들의 중국국적 포기과 한국국적 회복운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헤이룽장 출신,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대표(현재는 10기)를 지낸 이동춘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²⁴⁾ “거기 가 있는 조선족들은 소박한 사람들입니다. 중국국적 포기 같은 것은 생각조차 못 한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농민 출신들인데 정치를 어떻게 알겠어요? 운동을 이끄는 사람과 운동에 참여한 조선족들은 사실 서로 이용하고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운동은 괜히 중국이라는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거예요. 스스로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이 사안은 사실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의 집 서울센터를 이끌고 있는 김해성 목사는 다음과 같은 강한 우려를 표명한다. “국적포기를 하면 한·중 관계에 마찰이 생깁니다. 대부분 중국동포들도 불이익을 받아요. 동포들의 90%는 반대하고 있어요. 가족들 전화 속에서 벌써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한편, 2001년 12월6일 ‘한중포럼’에서 리빈(李濱) 주한 중국대사는 “재중 조선족은 핏줄로는 한국 국민의 동포이지만,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56개 민족 대가정의 일원”이라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문제는 대만 독립 문제와 함께 가장 민감한 사안이라는 의미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떤 민족이든 균열이 생기는 것을 극도로 꺼려한다. 그런 와중에 ‘조선족 빼내기’를 시도하려는 한국 측의 행태가 중국정부로 하여금 중국의 한인교포들에 대한 ‘삼관교육’, 더 나아가서는 ‘동북공정’

23) 「고구려문화로 학계 술렁」 『한겨레신문』 (2004.5.27).

24) 김경일, 「중국 조선족의 절규」 『월간중앙』 (2004.1).

을 추진케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시각을 가진 이들의 주장이다.

동북공정의 논리에 대한 대응양태

‘동북공정’의 논리에 대한 한국측의 반응은 비판론, 대안론, 자성론의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 시각은 대다수 사람들이 고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중국의 논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대응논리를 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시각은 중국과 한국학계의 역사해석상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내놓고 있고, 세 번째 시각은 한국학계의 역사연구의 부실함이 중국측에 역사침탈의 빌미를 주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판론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동북아 지역 고대사, 특히 고구려사와 관련된 제반 논의들에 대하여 한국사학계의 대다수 학자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중 학자들간 논쟁이 되고 있는 주요 주제들과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다음의 <표-6>과 같다.

고구려사의 귀속문제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의한 여러 논문들에 따르자면, 고구려사는 한국사가 아니라 중국사에 속한다. 만약 고구려사가 한국사가 아니라면 우리는 삼국시대가 아니라 신라와 백제의 이국시대라고 불러야 될 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과거의 역사서들이 삼국의 존재에 대해 기술하고 있음을 들어 중국 측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고구려를 우리 역사 속에 함께 인식한 것은 이승휴의 帝王韻紀와 이규보의 東國李相國集 동명왕편에 나타나 있다. 이러한 사서를 통하여 우리는 고구려를 신라와 백제와 함께 삼국으로 인

<표-5> 중국측 논리에 대한 한국측의 입장

한국측 입장	내 용
비판론	- 중국측 주장에 반론 제기.
대안론	- 새로운 역사해석법 제시.
자성론	- 한국 역사학계의 잘못으로 ‘동북공정’ 빌미 줌.

식하고 삼국시대라 부른다. 한편 三國遺事에는 紀異 2권에 우리의 역사 체계속에 인식하고 있는 왕조의 조목이 기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古朝鮮, 衛滿朝鮮, 馬韓, 二俯, 72 國, 樂浪國, 北帶方, 南帶

〈표-6〉 역사해석과 관련된 쟁점별 중국과 한국의 주장

쟁 점	중국측 주장	한국측 주장
고구려사 귀속문제	- 고구려는 중국에 속함.	- 많은 고대역사서들, 고구려·백제·신라를 ‘삼국’이라 언급.
고구려의 독립성	- 고구려지역은 중국의 전통적인 영토.	- 삼국지 등 중국역사서는 고구려를 타민족의 역사로 기록. - 고구려는 제천대회를 개최. -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국가간 경계. - 고구려는 독자적 연호 사용.
중국과 고구려간 조공·책봉의 성격	- 고구려는 중국의 신속국.	- 조공·책봉은 국가간 외교적 형태의 하나.
수당과 고구려간 전쟁의 성격	- 중국통일전쟁.	- 동북아질서 재편 전쟁.
고구려의 기원	- 고구려 선조는 중원민족.	- 중국측 가설은 사료와 논리의 측면에서 설득력 없음. - 고구려인은 예맥 계통임.
고구려와 고려와의 관계	- 고려왕조는 ‘고’ 씨 아닌 ‘왕’ 씨. 고려와 고구려는 별개의 국가임.	- 국가계승성은 왕족관계로만 파악할 수 없음. - 고려의 고구려 계승성에 대해 기록한 중국의 수많은 역사서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
기자조선과 조선과의 관계	- 중국인이 건국한 ‘기자조선’을 ‘이씨조선’이 도용함.	- 중국측은 ‘고조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 ‘기자’ 이전에 ‘조선’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음.

方, 靺鞨 渤海, 伊西國, 五伽倻, 北夫餘, 東夫餘, 高句麗, 弁韓 百濟, 辰韓 등이 기록되어 있어 삼국유사 찬술 당시 하나의 역사 속에 체계화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더구나 동부여와 북부여와 아울러 고구려를 졸본부여로 인식하고 백제의 경우 남부여라고 하여 부여계통의 공통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⁵⁾

또한 김부식이 올린 進三國史記表를 보면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의 삼국이 정립하여 능히 예로서 중국과 교통한 때문에 범엽 한서라든가 송기의 당서에 다 그 열전이 있지만, 그 사서는 자기 국내에 관한 것을 상세히 하고 외국에 관한 것은 간략히 하여 자세히 실리

25) 최광식, 「고구려 사의 정체성 문제」, 『중국 역사왜곡 공개토론회 자료집』,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2003. 10.31).

지 아니 하였고,…”라고 하여 신라와 고구려 및 백제를 포함하여 삼국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삼국은 중국과 다른 외국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三國史記 권 50중 新羅本紀는 12권, 高句麗本紀는 10권, 百濟本紀는 6권으로 편성하여 삼국의 역사를 하나의 역사 체계속에 인식하여 서술하고 있다. 列傳에서도 을지문덕, 을파소, 명림답부, 창조리, 연개소문 등 고구려의 인물을 신라와 백제의 인물과 함께 입전하고 있다. 또한 제후국에서 사용하는 世家라는 표현이 아니라 중국사서에서 사용하는 本紀라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⁶⁾

그리고, 중국에서 발간된 고지도가 고구려를 외국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연세대 김우준 교수에 따르면 최근 입수한 「중국고대지도집(中國古代地圖集)」 영인본과 「중화고지도진품선집(中華古地圖珍品選集)」 영인본 등 2종의 문건에 고구려가 백제·신라와 함께 외국으로 표기된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중국 고대지도집에 수록된 지도 중 청나라 때 제작된 「동남양각국沿革도(東南洋各國沿革圖)」는 한반도에 대해 ‘조선’ 표기와 함께 옛 왕조 명칭인 고구려·백제·신라를 병기했다. 중화고지도진품선집에 수록된 송나라시대 지도의 경우도 우리나라를 중국 영토가 아닌 ‘동이(東夷)’로 표기했으며 그 안에 고구려·백제·신라를 함께 표기했다. 김 교수는 이들 지도 외에 「대청제국 지도」도 공개했는데, 김 교수에 따르면 “중국이 한반도를 자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주장하는 등 역사 왜곡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중국에서 발간된 지도에 한반도가 독립국가로 표기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²⁷⁾

또한 서구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고지도들 역시 남만주 일대가 중국 영토가 아닌 조선의 영토였음을 증거하고 있다. 우선 청의 강희제 때 만들어진 「황여전람도」는 요동의 봉황성 경계까지를 ‘COREA’로 표기하고 있다. 유럽인들이 실측해 만든 지도이기 때문에 당시 남만주 지역의 관할권이 조선에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지도를 원형으로 한 1700년대 유럽지도들은 남만주 지역을 조선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1894년 조선을 다녀간 독일인 에른스트 폰 헤쎄-바르테크의 『Korea』라는 책에도 비슷한 시각이 담겼다고 알려지고 있다. 중국 사신들이 봉황성문과 의주 사이를 왕래할 때는 조선측이 관할했다는 기록이 그것이다. 에른스트는 19세기 중엽, 열강의 중국침탈이 본격화되면서 보상심리가 발동한 청나라가 무력으로 압록강 대안지역의 대부분을 빼앗았다는 기록도 남겼다. 이런 자료들은 당시 청나라는 남만주 일대를 조선 영토로 묵인·인정했다는 점을 증거한다.²⁸⁾

26) 최광식, 같은 글.

27) 「中서 '고구려' 외국 표기 송·청대古지도 발견」 『서울경제』(2004.06.10)

28) 「〈간도를 되찾자〉 동북공정에 반격 시작됐다」 『뉴스메이커』(577호)

마지막으로, 한국의 학계·언론계 인사들은 현대중국정부의 공식적 입장이 담긴 다양한 간행물들과 영향력있는 중국측 인사들의 발언이 동북공정의 시각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중국의 역사교과서, 백과사전, 정부공식 홈페이지, 민간의 대규모 인터넷 사이트 등은 ‘고구려사’를 ‘한국의 고대사’에 속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주은래(周恩來) 전 중국 총리가 1963년 6월 28일 조선과학원 대표단 접견시 중국과 조선과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밝혀졌는데, 이 발언은 ‘조선의 독립성’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한국 측의 주목을 받고 있다.²⁹⁾ 주은래 총리는 “역사연대에 대한 두 나라 역사학의 일부 기록은 진실에 그다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중국역사학자나 많은 사람들이 대국주의, 대국쇼비니즘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한 것이 원인이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총리의 언급은 현재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과 많은 부분에서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는 사료와 유물 등을 근거로 조선민족이 요화가 송화강 유역, 도문강 유역에서 살아왔고, 발해인들은 조선족의 한 지파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조선족이 “기자자손(箕子之后)”이라는 주장은 역사왜곡이며, 다른 나라가 중국에 보내는 선물은 ‘조공’, 사절을 보내는 것을 ‘알현’, 전쟁 후 강화조약을 맺은 것을 ‘신하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국쇼비니즘’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한국의 언론과 인터넷에서 상당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를테면 어느 중앙 일간지는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³⁰⁾: “물론 그의 발언은 40여년 전에 한 것이다. 당시는 민족이나 국가보다 사회주의 이념이 중시됐고, 또 냉전이 진행 중인 시기였다.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보더라도 그의 발언은 타당하며 존중받아 마땅하다. 인류가 가꾸어 나가야 할 덕목인 합리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의도나 배타적 민족감정에 의해 역사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그의 지적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이다.”

또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동북공정’의 논리에 비판적인 중국학자들의 입지가 대폭 축소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유명 평론가가 ‘중국사학계의 역사 조작’에 대한 글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언론의 관심을 받기도 하였다. 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에서 발간되는 시사지 ‘난평창(南風窓)’과 광명일보(光明日報) 산하의 ‘광명관찰(光明觀察)’은 7월 1일과 13일 각각 평론가 주다커(朱大可)의 글을 게

29) 원문은 (http://kr.ks.yahoo.com/service/wiki_know/know_view.html?dnum=AAA&tnum=153934) 참조.

30) 「(사설) 周恩來 ‘고구려·발해는 한국역사」 『경향신문』(2004.08.13)

재했는데, 이 기사에서 주다커는 동북공정 등의 프로젝트를 “대(大)한족(漢族) 중심론에 입각한 황가(皇家) 역사학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중국의 역사학계는 중국 고대사의 ‘하(夏)·상(商)·주(周) 시대 구분(斷代) 공정’ 작업을 벌이기 위해 30개 단체 200여 명의 전문가를 동원해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고 있는데, “이들이 벌이는 작업의 궁극적 목표는 사전에 이미 설정한 정치적 목표, 즉 중국 문명의 한족 중심론을 증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주은래 중국총리는 조선족이 “기자자손(箕子之后)”이라는 주장은 역사왜곡이며, 다른 나라가 중국에 보내는 선물은 ‘조공’, 사절을 보내는 것을 ‘알현’, 전쟁 후 강화조약을 맺은 것을 ‘신하로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대국쇼비니즘’으로서 시정되어야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언론은 주다커가 고구려사 왜곡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가 ‘단대공정’을 중국의 영역과 연대를 확대해 현재의 중국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문명을 중국 문명으로 포섭하려는 시도로 파악하고 있고, 이는 고구려사 왜곡의 바탕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의 논의가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³¹⁾

고구려의 독립성

중국 광명일보의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은 “한나라로부터 당나라 때까지 고구려에 대한 중국 각 왕조의 관리 방식은 각기 달랐지만 중국의 통치자들은 고구려의 활동지역을 중국의 전통적인 영토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 시론의 주장이 중국의 일부 사료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한 억지주장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三國志』는 고구려사를 중국사가 아닌 타민족의 역사로 인식하고 있다. 『三國志』권 30 魏書 烏丸鮮卑東夷傳에는 오환과 선비 및 동이에 대한 기록이 입전되어 있다. 소위 東夷傳에는 夫餘, 高句麗, 東沃沮, 濊, 馬韓, 辰韓, 弁辰, 倭에 대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이는 삼국지에서 陳壽는 오환과 선비 및 동이를 삼국사(중국사)가 아닌 다른 민족의 역사로 인식하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이뿐만 아니라 南蠻·北狄·西戎 모두 중국사가 아닌 이민족사로서 인식하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을 가지고 만약 고구려가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한다면 오환과 선비 및 동이뿐만 아니라 남만과 북적 및 서융

31) 「중국 유명 평론가, 고대사 재구성 ‘자아 비판」 『중앙일보』(2004. 8. 11).

이 모두 중국사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동이전에 입전되어 있는 고구려와 아울러 부여, 동옥저, 예, 마한, 진한, 변진, 그리고 왜(일본)까지도 중국사의 일부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삼국지 동이전의 기록 방식은 晉書, 宋書, 南齊書, 梁書, 魏書, 周書, 南史, 北史, 隋書, 舊唐書, 新唐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周書의 경우는 고구려와 백제가 異域列傳에 입전되어 있다.³²⁾

둘째, 고구려에서는 중국의 황제만이 주관할 수 있는 제천대회가 행하여졌으며, 이는 고구려가 스스로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부여, 고구려, 예, 마한의 경우 祭天大會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북쪽에 위치한 부여와 고구려 및 예와 아울러 남쪽에 위치한 마한의 경우에도 제천대회를 하였다는 것은 한반도의 남쪽 사회와 북쪽사회가 문화적으로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이들 사회에서 하늘(天)에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은 중국의 경우 제후는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없고 오직 황제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수 있다는 입장에서 볼 때 제후국이 아닌 다른 독자적인 정치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천의례를 지낸 고구려와 부여, 그리고 예와 마한은 중국과는 다른 천하관을 가진 독립 국가였다는 것이 중국인이 남긴 당시의 기록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다.³³⁾

셋째, 『삼국지』에 따르면, 손권은 고구려로 사신을 보내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중국변방의 소수민족도 아닌 동북아시아의 제국 중 하나였음을 알 수 있다. 오의 손권은 234년 사자 사굉, 중서, 진순을 고구려에 보내 동천왕을 선우에 책봉하고 예물을 보낸다. 오나라 손권이 동천왕을 선우로 인정했다는 것은 고구려의 위상과 특성을 설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국의 천자를 자임하는 손권이 고구려왕을 선우라 칭하며 협력하자고 사신을 보냈다는 것은 고구려의 위상이 흉노의 수장급이란 것을 의미한다. 중국의 손권이 이미 인정하였듯, 고구려는 중국에 종속된 변방 소수세력이 아니었다. 즉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의 변방사로 끼워 넣으려는 시도에 원천적인 문제점이 있음을 바로 중국인이 기록한 사료가 제시한 셈이다.³⁴⁾

넷째,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중국에 대한 방비를 견고히 하기 위한 양국간의 국경이었다. 중국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만리장성 이남을 자기의 역사 영역으로 하고 있다.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한족이 자리 잡고, 북쪽에는 북방민족이 자리 잡고 역사를 영위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북방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중원을 차지하여 중국의 역사를 주도하기도 하였지만 중국인의 기본적 인식에는 북방민족을 막기 위한 정책이 만리장성인 것이

32) 최광식, 「고구려 사의 정체성 문제」, 『중국 역사왜곡 공개토론회 자료집』, 일본교과서바로잡기운동본부 (2003. 10.31).

33) 위의 글.

34) 「동북아시아 호령한 고구려는 중국도 인정한 흉노의 왕」, 『신동아』(2004.6)

다. 한편 고구려에는 천리장성이 있어 중국과 경계를 하고 당나라의 침입을 막고자 하였다. 천리장성은 중앙정권과 지방정권 사이를 구별하기 위해 쌓은 것이 아니라 국가(고구려)와 국가(당나라) 사이의 경계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³⁵⁾

다섯째,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 고구려가 영락과 연가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고구려가 중원의 조공 국이 아니라 중원왕조에 대응하는 동방의 패자임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³⁶⁾

마지막으로, 서영수 교수는 한나라가 고구려를 직접 지배하였다는 중국 측의 주장은 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중국 측에 따르면, 고구려 정권건립초기 서한은 의연히 고구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접관리를 하였다. 심지어 고구려의 평양천도를 염두에 두고 한군현의 지배력을 확대 해석하여 한반도 서북부의 연고권을 주장하고 고구려의 발전이 모두 중국군현 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고구려는 중국사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 측은 이와 같은 논리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국지』 「위서동이전」의 ‘한나라 때 고취와 기인을 하사하였으며 항상 현토군에서 의적과 조복을 받아갔으며, 고구려현령이 이들의 명적을 관찰하였다’는 기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토군은 광역의 식민지군현으로서 기능하였다기보다는 흥기하는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창구 역할을 하는데 지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같은 조의 ‘고구려인이 군현의 동쪽 경계에 溝라는 소성을 쌓아두고 거기에서 의적을 가져갔다’는 기사는 현토군이 고구려를 직접 지배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한이 군현을 통해 고구려에 대해 유희외교책을 전개한 것은 오히려 ‘염철론’의 ‘좌장군 순체가 조선을 정벌하였으나, 연제가 예맥에게 곤욕을 당하였다’는 기사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흥기하는 고구려를 무마하기 위한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요컨대 현 중국 영토 안에서 건국된 고구려는 중국 영토 안에서 건국하였기에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파악하는 한편, 평양천도 이후의 고구려는 고대중국의 영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중국사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상반된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 자체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³⁷⁾

중국과 고구려간의 ‘조공·책봉’ 관계의 성격

중국의 고구려귀속 논거의 대표적인 견해가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신속국이란 것이다.

35) 최광식, 「동북공정의 배경과 내용 및 대응방안」, 고려대학교 BK21한국학 교육연구단 2004년도 동계공개강좌 자료집, 2004, 1, 12

36) 위의 글.

37) 서영수,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인가? (고구려연구회 토론회 자료)」(http://www.kog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num=209&page=3&ftype=6&fval=&backdepth=1)

중국학계에서는 고구려가 처음부터 중원왕조에 신속된 존재이며 건국이후 시종일관 중원 왕조와 종속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사료의 ‘조공·책봉’ 관계를 그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영수 교수는 조공·책봉관계야말로 중국학계에서 가장 자신 있게 제기하는 이론이라 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서 중외관계의 전형으로 거론되어왔던 조공·책봉관계에 대한 연구는 오히려 한국과 일본에서 많은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연구사적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은 오히려 후발국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조공관계란 정치적 신속을 전제로 경제적 종속과 연호의 차용등 의례적 행위가 수반되는 항속적 관계를 이르는데, 실제 그 이상과 실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보다 빈번하며, 외교관계의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고구려와 중원왕조와의 경우 그러한 점이 현저하다. 남북조시기 고구려와 북위와의 관계에서 ‘조공외교’의 표현이 가장 빈번하나 장수왕과 문자명왕의 봉어 후에 북위 황실이 오히려 거액을 하였다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외교의 진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³⁸⁾

임기환 한신대 교수는 책봉·조공을 둘러싼 중국과 고구려간의 이념상의 차이가 양측간의 충돌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본래 책봉과 조공은 중국 내부의 정치질서로서, 책봉이란 중국의 황제가 주변국가의 군장에게 특정한 관작과 물품을 수여함으로써 그의 지위를 공인하여 신속시키는 형식이지만, 국가간의 하나의 외교 형식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조공·책봉관계의 성격은 각 시기마다 상이한 모습을 띠었으며, 조공·책봉관계의 실상이 본래 그것이 내포하였던 이상적 관념과 일치하는 것도 아니었다. 특히 남북조시대에 중국 세력이 분열되어 주변 국가에 대한 규제력이 약화된 상황에서는 조공·책봉이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중국의 제왕조가 맺는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남북조와 고구려, 백제가 맺고 있는 책봉·조공관계는 외교형식상 일정한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다양한 층위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책봉국과 피책봉국의 상호관계만이 아니라, 책봉국과 피책봉국 각각이 갖는 서로 다른 전략과 인식에 의해 규정된 결과였다. 책봉이나 조공이 갖는 현실적인 기능도 서로 다르고, 이에 따라 조공·책봉 관계에 대한 서로의 인식도 차별적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차별적 인식을 전제로 남북조 시대의 조공·책봉이란 외교형식이 전개되고 있었다. 그리고 수·당의 등장과 이들 왕조가 조공·책봉의 형식을 통하여 관철하려는 세계질서는 기존에 고구려가 갖고 있던 조공·책봉관과는 현저히 달랐다. 여기서 이념적으로 고구려와 수의 정면충돌이 시작되었던 것이다.³⁹⁾

38) 위의 글.

수당과 고구려간 전쟁의 성격

광명일보의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은 중국과 고구려는 원래 한 나라였던 것으로 파악하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와 벌인 싸움을 ‘이민족 정복전쟁’이 아닌 ‘통일전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예컨대 같은 민족인 고구려와 백제·신라가 상대를 흡수하려고 벌이는 전쟁은 ‘통일전쟁’이라고 하고 이민족을 흡수하려는 전쟁은 ‘정복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는데, 이 시론은 정복과 통일을 의도적으로 혼동시켰다는 것이 한국 측의 주요 반응이다.⁴⁰⁾

윤명철 교수는 수당과 고구려간의 전쟁을 당시 동북아 국제질서의 재편을 위한 전쟁으로 파악하고, 이 전쟁은 신라의 삼국통일로 종결된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隋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면서 남북조 시기의 다원적 세력균형이 깨어지고, 역학관계의 기본구도가 붕괴되면서, 교섭하는 주체의 성격과 관계가 없이 주변 국가들이 南北朝를 대상으로 펼쳤던 對中 등거리외교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봉쇄되었다. 이와 같은 동아시아 외교환경의 변화는 신질서의 중심축이며, 지각변동의 진앙지인 수나라로 하여금 능동적인 정책을 취하게 하였다. 수나라는 그 동안 명분으로 존속해 오던 중화질서의 개념을 현실적으로 실현코자 했다. 이러한 국제질서의 재편과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황해연안의 질서에도 變動이 일어났다. 한편 고구려는 동아시아의 중심부에서 후퇴하여 국제적 위상의 저하를 가져왔고, 한반도에서의 견고한 패자지위가 도전받게 되었다. 오랫동안 해양활동과 多核(重)放射狀外交를 활용해서 동아시아의 중심축을 차지하고 있었던 고구려는 국내정책은 물론 대외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고구려와 수간의 정치 군사적인 충돌을 중심으로 재편을 시작하던 동아시아는 결국 신라와 백제가 수와 연결되었고, 백제는 왜·수와 연결되었으며, 왜는 역시 백제 및 수와 연결되었다. 그리고 북방의 돌궐 및 契丹 등은 결코 고구려에 도움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부분적으로 수에 연결되었다.

또한 수는 주변종족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해양활동 능력

조공·책봉관계의 실상이 본래 그것이 내포하였던 이상적 관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남북조시대에 조공·책봉은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와 중국의 제왕조가 맺는 외교관계의 한 형식에 지나지 않았다.

39) 임기환, 「고구려 족속의 기원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고려대학교 BK21한국학 교육연구단 2004년도 동계 공개강좌 자료집 (2004. 1. 12).

40) 「중국은 왜 고구려를 삼키려 하는가」 『신동아』(2003. 9.)

의 약화로 인하여 수를 배후에서 견제하거나 대륙과 황해에서 四面包圍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할 수가 없었고, 역으로 포위당한 채 對隋戰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전쟁은 고구려의 승리로 끝이 났고, 수는 질서재편작업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후유증으로 멸망에 이르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역학관계가 복잡해졌으며, 각국들은 동아시아중해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였다. 결국 이 전쟁의 기본구도는 고·당 전쟁을 중간단계로 하여 삼국통일전쟁으로 이어짐으로써 동아시아중해의 질서재편이라는 단초를 낳았다.⁴¹⁾

고구려의 기원

중국학계에서는 199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고구려족의 기원을 맥족이나 부여족으로 보면서 중국 동북지방의 소수민족임을 강조하여 왔는데 근래에 들어 고구려사를 한국사와 완전히 단절하기 위해서 고구려의 족원에서부터 한국계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서영수 교수에 따르면, 고구려의 족원에 대한 중국학계의 견해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진다.⁴²⁾ 1) 예맥족, 또는 맥족(이전복, 손옥량, 유영지 등), 2) 부여족의 일부(왕건군, 양소전 등), 3) 炎帝, 瑯高陽氏, 高夷(경철화, 유자민, 김악, 장벽파, 양지룡, 이덕산, 마대정 등), 4) 商人의 후예(장박천, 범리, 경철화 등). 1), 2)의 견해는 전통적 견해를 계승한 견해로 일견 우리 학계의 논의와 같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예맥족을 우리의 이해와는 달리 중국 여러 민족의 한갈래로 보는 점이다. 3), 4)의 견해는 최근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새로이 제기, 강화된 견해로 고구려의 선조를 예맥족에서 떠나 오제시대의 전설이나 기자동래설을 빌려 중원내의 민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다. 전통적인 견해를 계승한 예맥기원설이나 부여기원설은 중국민족의 한 갈래로 보아도 그 고유성을 강조할 수 밖에 없고 한국사와의 관련성을 완전히 단절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러한 반성위에 고구려의 중원민족과의 관련성을 보다 강조한 3), 4)의 견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 선조가 상인(商人)에서 분리되었다는 가설과 관련하여, 한신대 임기환 교수는 사료를 들어 중국 측의 논리를 비판하고 있다. 중국학자들은 『일주서』에 나오는 ‘고이’를 중국 전설상의 인물인 전욱 고향씨의 후예로 설정하면서 고구려 왕실이 고향씨의 후예임

41) 윤명철, 「高句麗와 隋唐 간의 전쟁에 대한 중국 ‘東北工程’의 시각 (고구려연구회 토론회 자료)」(http://www.kog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num=210&page=3&ftype=6&fval=&backdepth=1)

42) 서영수, 「고구려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인가? (고구려연구회 토론회 자료)」(http://www.kog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num=209&page=3&ftype=6&fval=&backdepth=1)

을 자처하여 ‘고’를 성씨로 삼았다고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일주서』는 현재 편찬자와 편찬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많은 문제점을 가진 역사서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므로 『일주서』의 사료를 근거로 하여 고구려의 족원을 설정하는 최근 중국학계의 주장은 이미 사료 비판이라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임교수의 지적이다.

특히 고구려 가운데 ‘고’는 본래의 족속 명칭에는 없다가 나중에 첨가된 글자이다. 『한서』지리지에 따르면 무제가 설치한 현도군과 낙랑군은 모두 ‘조선·예맥·구려만이’였다고 한다. 또한 왕망이 고구려를 ‘하구려’로 격하하여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고구려가 본래 ‘구려’로 불렸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따라서 ‘고’를 매개로 고이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이다. 다음 전옥 고양씨는 전설상의 인물로서 실존 여부조차 명확하게 판별되지 않은 상태이다. 설령 전옥 고양씨를 실존 인물 또는 족속 명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를 『일주서』 「왕회해편」의 ‘고이’와 직접 연관시킬만한 논거는 없다. 더욱이 전옥 고양씨는 서기전 2500년경, 고이는 서기전 10세기경으로, 양자 사이에는 무려 1500여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다는 점도 중국 측의 가설이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거한다.⁴³⁾

한편, 외대 여호규 교수는 문화적으로 고구려는 만주에서 흥기한 다른 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면모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가령 고구려 성곽은 대부분 돌이나 돌·흙을 섞어서 쌓은 산성(山城)인데 비해 요(遼)나 금(金)의 성곽은 흙으로 쌓은 평지토성(平地土城)이다. 고구려는 고조선이나 부여와 마찬가지로 예맥(濊貊) 계통이다. 예맥족은 일찍부터 돌로 무덤을 조영하였는데 고구려인들도 적석묘(積石墓)를 조영하였다. 또한 압록강 중상류는 만주 대평원이나 초원지대와 구별되는 산간지대로서 고구려인들은 압록강변의 크고 작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였다.

고구려인들은 만주 곳곳으로 진출한 다음에도 돌 다루는 솜씨를 활용하여 대평원 안쪽의 산지에 성곽을 쌓고 그 주변의 하곡(下谷)평지를 다스렸다. 광활한 만주 대평원을 발판으로 중국 대륙으로 진출한 요나 금과 뚜렷이 대비되는 면모이다. 더욱이 고구려는 대제국을 건설한 다음에도 요동평원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고 한반도 남쪽 깊숙이 진출하였다. 고구려는 어디까지나 우리 조상인 예맥족의 문화를 밑바탕으로 삼아 만주와 한반도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다.⁴⁴⁾

고려와 고구려의 관계

중국 광명일보의 「고구려 역사 연구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시론」에 따르면, 왕건이 세

43) 임기환, 「고구려 족속의 기원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 고려대학교 BK21한국학 교육연구단 2004년도 동계 공개강좌 자료집 (2004. 1. 12).

44) 「〈한국·중국〉 고구려·발해 사 총돌」 『주간조선』(2002.09.26).

은 고려는 고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와 전혀 상관이 없다. 시론은 당나라의 통일전쟁 성공으로 고구려는 다시 중국의 품 안으로 들어왔는데 한반도에서 고구려의 후손임을 주장한 왕건이 고려를 세움으로써 다시 고구려사를 뺏아갔다고 주장한다. 시론은 그 근거로 고구려는 중국 역사서에 ‘고려’로 나오는데 왕건이 이를 도용해 한반도에 세운 나라를 ‘고려’로 명명했다고 지적한다. 또 고구려는 고씨가 왕위를 이어간 ‘고씨 고려’이고 왕건의 고려는 ‘왕씨 고려’로 분명히 다르다고 전제한 뒤, ‘왕씨 고려’의 고려가 ‘고씨 고려’를 이려면 왕건은 왕씨가 아닌 고씨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건이 진짜로 고씨 고려를 이었다면 후손에게 십훈요(훈요십조)를 남길 때 “나는 고씨 고려의 후예다”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그 같은 말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왜 국가를 왕족 관계로만 보느냐”는 문제를 일으킨다. 시론은 아마도 유(劉)씨 성으로 이어지던 한나라(前漢)가 멸망했다가 다시 세워졌을 때, 후한(後漢)의 황제가 전한과 같은 유씨였다는 중국적 특징에서 이러한 논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는 왕실의 성이 같아야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수나라의 황실은 양(楊)씨 성을 썼고 당은 이(李)씨 왕조였다. 그러나 지금 중국은 수와 당이 모두 중국의 법통을 이어온 국가라고 주장한다. 우습게도 시론은 지금의 한국 또한 왕씨 성의 고려와 이씨 성의 조선을 이어온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왕건은 고구려 왕실의 피를 이은 것이 아니라 그 법통을 이었다는 의미로 고려를 건국했는데 시론은 이 점을 간과하고 있다.⁴⁵⁾

다른 한편, 역사학자 이덕일 씨는 고구려와 고려는 전혀 별개의 나라인데, 역대 중국 사서들이 동일한 계통의 국가로 보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시론」의 주장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구오대사·신오대사·송사 등의 중국 역사서들은 고려를 고구려의 계승국가로 서술하는 큰 오류를 저질렀다는 광명일보의 주장이 얼마나 무리인지는 그런 잘못된 인식을 가진 역사서가 위의 책들에 그치지 않는 데서 명확해진다고 지적한다. 구오대사·신오대사·송사·요사·금사·명사가 모조리 고구려사를 잘못 기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중국 역사서들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중국 역사서들이 잘못되었다는 광명일보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 결론짓는다.⁴⁶⁾

‘기자조선’과 ‘조선’과의 관계

광명일보의 「시론」은 ‘명나라 황제는 이성계를 조선왕에 책봉함으로써 조선이라는 국호를 하사하였다. 조선이라는 이름 때문에 고려의 후예인 이씨 왕조는 중국인이 건국한 기

45) 「왜 중국은 고구려를 삼키려 하는가」 『신동아』(2003. 9.)

46) 이덕일, 「역사학자가 본 중국 東北工程의 진짜 속셈은?」 『월간중앙』(2004. 2.)

자조선(箕子朝鮮)· 위만조선(衛滿朝鮮)· 한사군· 고구려에 그 맥을 대게 되었다. 여기에 왕씨 고려가 고씨 고려를 도용해간 것이 보태짐으로써, 중국이 기자조선 이후 동북지역에서 만들어진 역사가 몽땅 한국사로 넘어가게 되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시론은 중국역사서에 나오는 고조선을 단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복생(伏生)이 편찬한 중국의 역사서인 『상서대전(尙書大傳)』에 보면 “주(周)나라 무왕(武王)이 은(殷)을 멸망시키고 감옥에 갇힌 기자를 석방시키자 그는 이를 탐탁찮게 여겨 조선으로 달아났다. 무왕은 이 소식을 듣고 기자를 조선왕으로 봉하였다”는 내용이 있다. 『한서(漢書)』 지리지 연조(燕條)에도 “은나라가 쇠하자 기자가 조선에 가서 예의와 농사·양잠·베짜기 기술을 가르쳤다”는 내용이 있다. 『상서대전』과 『한서』의 묘사대로라면 기자가 오기 전 이미 중국 동쪽에 ‘조선’이 있었다는 것이 되는데, 시론은 단 한 번도 고조선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유리한 사료만 인용하고 불리한 사료를 배제한 시론 저자의 태도는 이 시론이 특수 목적을 위해 쓰여졌음을 여실히 보여준다.⁴⁷⁾

구오대사·신오대사·송사·요사·금사·명사가 모조리 고구려사를 잘못 기술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 모든 중국 역사서들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는 이 모든 중국 역사서들이 잘못되었다는 광명일보의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중국연구의 신빙성

위의 논의들과는 별개로, 한국의 다수 학자들은 중국 측의 연구 성과의 신빙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중국학자들의 활동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치적 간섭이 심하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첫째, 중국학자들의 논문은 연구 인력과 성과가 많은 반면 논문으로서 완성도가 떨어진 것들이 많다는 지적이다.⁴⁸⁾ 1) 확실한 전거를 대지 않은 것들이 많다. 주를 확실히 달지 않기 때문에 누구 논문이 원본인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 2) 저명한 논문집에도 논문 형식을 취하지 않고 마치 수필처럼 쓴 것들이 많다. 3) 같은 논문을 여기저기 중복해서 실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귀속문제만 보더라도 새로운 연구 성과라기 보다는 똑같은 내용이 여러 책에 수도 없이 반복해서 나온다. 4) 중국학자들은 극히 일부 번역본을 빼놓고는 외국 의(특히 한국어 자료) 연구 성과를 거의 도외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객관적인

47) 「왜 중국은 고구려를 삼키려 하는가」 『신동아』(2003. 9.).

48) 서길수, 「고구려 정체성(귀속문제)에 대한 중국의 연구 현황과 논리」, 고구려연구회(http://www.koguryo.org/old_board/board.cgi?db=board2&mode=read&num=211&page=3&ftype=6&fval=&backdepth=1)

연구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5) 고구려사를 연구하면서 연구 성과를 통해 귀속문제를 다루는 학자보다 귀속문제를 다루기 위해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더 많을 정도로 학술적인 객관성이 부족하다. 6) 고구려만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⁴⁹⁾

둘째, 폐쇄적인 연구 분위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 힘들다. 앞으로 한국, 일본, 몽골, 러시아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적어도 동아시아 각국이 인정하는 보편타당성 있는 역사기술이 필요하다. 중국은 아시아의 수많은 국가들과 국경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역사 인식은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와 같은 중화사상 위주의 학문 연구는 아시아사나 세계사에 크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궁극적으로 중국 자체에게도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⁵⁰⁾

셋째, 중국에서의 연구 활동의 정치적 성격을 지적할 수 있다. 중국의 학자들은 정부의 입장을 거스르는 논문을 내놓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따라 중국학자들 가운데도 최근의 연구결과에 회의를 가지는 사람이 있지만 공개적으로는 거론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 버렸다. 단적인 예로, 어느 중국 연구자는 학술지에 기고한 글에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면도 있다고 언급했다가 입장을 바꾸라며 원고를 되돌려 받았다고 한다. 또한 작년 봄에 한 연구자가 국내 일간지와 인터뷰를 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있다. 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발해사 연구 소홀할 땐 다른 나라 역사될지도 몰라」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낸 것을 보고 출국일자를 한 달간 미루면서 정정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다른 신문에서 「발해사 정치적 해석 안타깝다」는 인터뷰 기사를 낸 뒤에 돌아갈 수 있었다고 한다.⁵¹⁾

대안론

한국사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중국과 한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역사전쟁’이 역사 해석상의 잘못된 접근법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면서 양측 모두를 비판하는 한편,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학자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국사해체’나 ‘역사공유’라는 틀을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민족주의 역사학의 해체

역사해석의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하는 많지 않은 시도들 중에 가장 큰 반향을 얻고 있

49) 한국에서 고구려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은 14명이지만, 중국에는 한 명도 없다고 한다. (주간동아, 2004.7.1, 441호)

50) 서길수, 앞의 글.

51) 송기호, 「중국의 한국고대사 빼앗기 공작」 『역사비평』(2003년 겨울호).

52) 이하 「邊境에 가면 세계사가 보인다」 『신동아』(2004. 6) 참조.

는 논의가 ‘국사 해체’를 주장하는 일군의 학자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해체론’의 대표적인 학자로서는 한양대 임지현 교수, 서울대 이영훈 교수, 서강대 김한규 교수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임지현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는 올해 4월 23~24일 국제심포지엄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邊境)’을 개최, 한·중·일·유럽의 학자들과 함께 ‘변경’의 역사를 ‘민족·국가중심’이 아닌 나름의 ‘역사공동체’로 파악해야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⁵²⁾

이 심포지엄에서 임교수는 기초발제 논문 「국가주권과 역사주권 사이에서」를 통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역사전쟁은 “근대 민족·국민국가의 패러다임을 동북아시아 공통의 먼 과거에 투영하는 시대착오주의에 기초해 있다”며 한·중 양측을 모두 비판한다. 그에 따르면 56개 민족이 통일된 다민족국가인 중화인민공화국은 그 영토적 통합성을 신성불가침의 원칙으로 간주함으로써 동북아시아 공통의 과거로서 ‘변경’을 말살한다. ‘동북공정’의 역사해석에서 잘 드러나듯이, ‘변경’에 대한 ‘국경’의 폭력적 전유(專有)는 ‘국가·국민주권’ 개념이 역사해석에 개입하는 것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에 대해 한국의 역사학계는 ‘역사주권’을 무기로 반격한다. 고구려인은 한민족의 조상인 ‘예맥(穢貊)’족이며,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만주(요동)가 문화적·형질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는 주장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 교수는 ‘국가·국민주권’과 ‘역사주권’은 국제적 현실정치에서 힘의 관계가 달라질 때마다 뒤바뀌는 동전의 양면이라고 비판한다. 이는 또한 동북아시아에서만 목격되는 현상이 아니다. 국제적 역학 관계와 국경선이 바뀔 때마다, 변경지역에 대해 서로 번갈아가며 ‘국가·국민주권’과 ‘역사주권’의 해석을 주고받았던 독일·폴란드, 폴란드·리투아니아, 폴란드·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러시아 등의 논쟁들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0세기 동북아시아의 근대 역사학은 ‘기원주의’, ‘영토순결주의’, ‘시대착오주의’로 특징지어지며, 그것은 정치적 기획으로서의 ‘내셔널 히스토리’의 성격을 잘 드러내준다. 문제는 그것이 단순히 역사인식의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는 국가권력의 헤게모니를 강화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적대적 긴장관계를 조장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연대를 해치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라고 임 교수는 지적했다. 따라서 ‘변경연구’를 통해 ‘국경’에 갇힌 ‘변경’을 구출함으로써, 관제이데올로기로 변질된 동북아시아 민족주의·국민주의의 ‘적대적 공범관계’를 해체해야 한다고 결론짓는다.

이 심포지엄의 마지막 발표자였던 김한규 교수는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이-요동과 티베트의 역사공동체적 위상」에서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이는 현재의 중국

인에게는 ‘변강’에 지나지 않겠지만, 전통시대 동아시아 세계에서는 중국과 엄연히 구별되는 독립된 역사공동체들이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중국’은 역사적 경험과 역사의식을 공유하는 공동체, 즉 역사공동체의 명칭이며,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의 이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더 엄격히 말하면 ‘중국’은 1912년 이후 ‘중화민국’이나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도 사용되었지만, 그 이전의 전통시대에는 역사공동체의 명칭으로만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사이’에는 개념상의 차이뿐만 아니라 공간적 간격도 존재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는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역사공동체도 통합, 지배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오랜 정치적 통합으로 인해 이들 역사공동체들의 정체성이 많이 희석되었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인해 과거의 사실이 굴절될 수는 없다는 것이 김 교수의 주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 교수는 한·중 역사전쟁 과정에서 한국의 학계와 언론계가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을 규탄하면서 “고구려사는 오로지 한국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의 전형이라고 비판한다. 역사가 사물을 형성하는 과정의 서술임을 인정한다면, 고구려 역사가 현재의 한국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인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중국을 형성하는 과정의 일부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냐고 그는 반문한다. 역사전쟁은 가능한가, 고구려사가 중국사인가 한국사인가 하는 문제는 처음부터 논쟁거리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쟁거리로 삼아서 이른바 ‘역사전쟁’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구려사가 한국사의 일부임과 동시에 중국사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사실로부터 고의적으로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라는 ‘국가’와 한국, 혹은 중국이라는 ‘역사공동체’의 개념을 구별하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고구려가 어느 역사공동체에서 건립한 국가인지, 혹은 어느 역사공동체를 지배한 국가인지 하는 문제를 설정한다면, 그 답은 한국도 중국도 아닌 제3의 요동 국가다. 더 엄격하게 표현하면, 고구려가 요동의 동부에서 건립되어 요동의 중심부로 발전해나간 전기에는 순수한 요동 국가였다고 해야 할 것이고, 고구려가 그 발전의 방향을 남쪽으로 선회하여 평양으로 천도하고 한강 일대를 점령하는 후기에 이르러서는 요동과 한국 일부를 아울러 지배한 통합국가로 발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체계상으로 확인한다면, 고구려사는 한국사의 일부일 수도 있고 중국사의 일부일 수도 있지만, 한국사나 중국사에서는 주변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해, 요동사에서는 핵심적 가치와 위상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자기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세계사적 관점을 견지할 수 있다면 동아시아사, 특히 중국사나 한국사의 역사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새로운 시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론이다.

‘국사 해체론’의 시각을 공유하는 학자들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테면 경기대 김기봉 교수는 2003년 12월 『교수신문』에 기고한 「이슈: 역사전쟁 부르는 한·중 고구려사 논쟁에 부처」라는 글에서 “시대착오적 역사해석에서 탈피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의 역사에 대해 민족사의 관점에서 중국학계에 반격을 가하는 것은 결론 없는 소모전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사가 일본사와 중국사와 충돌하는 것은 한국사를 한민족의 역사로 보는 기존 한국사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해결 방안은 역사를 ‘국사’로 보는 민족주의 역사학의 해체”라고 주장한다.⁵³⁾

이른바 ‘역사전쟁’ 운운하는 사람들은 고구려사가 한국사의 일부임과 동시에 중국사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사실로부터 고의적으로 눈을 돌렸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라는 ‘국가’와 한국, 혹은 중국이라는 ‘역사 공동체’의 개념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있다.

만주지역의 배타적인 역사 점유 탈피

한양대의 국제 심포지엄에서 와세다대 이성시 교수는 「동북아시아 경계영역의 역사인식-배타적 점유로부터의 해방을 향하여」에서 발해사에 대한 각국의 역사인식의 유래를 밝히고, 나아가 현재 중국과 한국 간에 일어난 ‘고구려 논쟁’의 문제점을 부각시킴으로써 ‘경계영역’에 대한 역사인식의 과제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을 검토한다. 그에 따르면, 근대 프런티어(변경)로서 동북아시아는 근대 민족·국민국가들의 모순이 한데 모여 있는 장소이다. 그 때문에 발해사의 무대로서 각국의 변경이 된 ‘만주’ 지역의 역사를 검토할 때는 특히 근대사를 우선적으로 문제 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발해사를 자국사에 편입시키려고 부심하는 각국에게 ‘만주’의 대지는 프런티어였다. 과거의 ‘진출, 식민’ 과정을 살펴본다면 각국이 이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경시해왔는가를 통감할 수 있다. 멀리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해에 대해서만 뜨거운 시선을 돌리는 데 비해 발해 멸망 후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 대한 냉담한 자세는 두드러진 콘트라스트를 보여주고 있다. 각국의 발해사 연구를 통해 말할 수 있는 것은 근대사의 망각 혹은 기억의 소산인데, 고대와 현재를 직결하는 논의에 근대의 매개항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발해사 연구에 나타난 각국의 공통점은 근대 이후 이 지역에 집단이주의 역사가 있었

53) 「민족사, 올해의 최대화두로」 『한겨레신문』(2004.1.12).

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토지에 예로부터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자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것에는 열심이나 원래 이 지역에 거주한 민족에 대한 관심은 적고, 있다 해도 감화시켜 문명화해야 할 대상으로 밖에 보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각국의 발해사 연구는 확실히 ‘근대 체험’의 반복이다. 여러 국가의 발해사 연구는 각국의 근대 프런티어에 대한 욕망과 상관이다. 따라서 과거의 배타적 점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국·자민족의 근대사를 응시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이성시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서 한·중 간 ‘고구려사 논쟁’도 풀어 나가야 한다고 이야기한다.⁵⁴⁾

아시아 지역공동체주의

‘서남동양학술총서’를 통해 발간되는 일련의 서적들은 동아시아 담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총서 제10호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와 제20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가 그것이다.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담론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동아시아를 이미 주어져 있는 실체로 보는 속설에 반대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동아시아를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는 지금까지의 동아시아론이 국가와 민족 단위로 이뤄지면서 국가중심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기획됐다. 각 국민국가 안의 소수 민족과 지역, 예를 들어 대만, 티베트, 오키나와, 재일조선인, 한국 내 화교 등 마이너리티의 시선으로 바라본 동아시아론이다.

전형준 교수는 “지금까지의 아시아 담론은 일본의 대동아공영론, 중국의 신(新)중화주의에서 보듯 자기 내부의 질서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잘못 활용되기도 한다”면서 “서구민주주의에 함몰되지 않고, 자민족주의에 휩쓸리지 않으면서 동아시아의 민족과 국가를 객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최원식 교수는 “최근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망언과 같은 국가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실험적 거점으로 주변을 설정, 향후 동아시아론은 아시아 지역공동체를 지향해야 할 것”이며, 담론의 장에 일본·중국 등의 학자 역시 참여시킬 것이라 밝히고 있다.⁵⁵⁾

중국과 역사 공유

김희교 교수는 양국의 역사관과 사실의 해석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 ‘역사전쟁’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양국간의 역사공유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⁵⁶⁾ 그가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실은 ‘역사전쟁’이 바로 ‘민족주의’의 이름 하에 이루어지고 있

54) 「邊境에 가면 세계사가 보인다」 『신동아』(2004. 6)

55) 「동아시아 담론 이끄는 새로운 시각」 『경향신문』(2004. 1. 19).

56) 김희교, 「중국의 '동북공정'과 한국 민족주의의 진로」 『역사비평』(2004년 봄호.)

다는 점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보수와 진보 그리고 학계와 시민운동단체가 해방 이후 거의 처음으로 공통의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희귀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두고 상호 극단적으로 대별되는 시각을 드러내던 『조선일보』와 『오마이뉴스』가 “아. 고구려!”라는 구호 아래 뭉쳤고, 미국의 패권주의가 민족의 생존권마저 위협하는 순간에도 순수학문을 외치고 있었던 보수 학술단체와 진보를 표방하는 『한겨레신문』이 공동의 진영을 꾸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민의 자위적 저항 민족주의 정신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지만, 어떠한 보편적 이념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견지하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틀에 맞추어 사실을 왜곡하거나 침소봉대해서는 안 되며, 민족주의도 마찬가지로 객관성을 상실하고 감상적으로 변해갈 때 민족의 이름으로 민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고 김교수는 지적한다.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 언론과 일부 관련 연구자들의 태도이다. 그들은 중국이 ‘동북공정’을 실시하는 원인과 중국 측 주장을 일면만 보여주며 여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인데, 예를 들면 그들은 독자들에게 중국이 고구려사 전체를 중국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중국의 전유물로 간주하려는 것처럼 느끼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고구려사는 당연히 조선사의 일부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하나의 역사를 공유하자”고 제안하고 있고, 고구려사 연구 작업의 최고책임자인 마대정은 ‘동북공정’의 결과물 중 하나인 『고대중국고구려역사독론』(2003)을 통해 “양국의 고구려사 연구가 다른 관점에 서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 관점을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을 것”이며, “학술규범과 국제관례에 부합하여 정상적인 학술교류와 논쟁을 지속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고 김교수는 말한다. 결론적으로 그는 중국이 원대사를 몽골인민공화국과 별다른 마찰 없이 공유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한국 역시 중국과 고구려사를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반성론

한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국 사학계의 잘못으로 인해 ‘동북공정’과 같은 사태가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동북공정’의 논리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면서도, 시간상으로는 ‘단군’ 및 ‘단군이전사’까지, 공간상으로는 ‘만주’까지를 우리 민족의 역사로 끌어안지 않은 한국 사학계가 중국 측에 역사침탈의 빌미를 주었다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단군조선을 인정하자

단국대 윤내현 교수는 ‘동북공정’의 논리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군조선-기자조선-위만조선-한사군-열국시대-삼국시대-통일신라로 이어지는 고대사 체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한다. 기자조선과 위만조선, 한사군을 우리 역사로 인정하면 무려 1400 여 년 간 중국의 지배를 받은 것이 돼 자칫 중국에게 우리 역사를 내주는 빌미가 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에 따르면 기자조선, 위만조선,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중국의 지배세력과 단군조선이 동서로 대치하고 있었다. 즉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은 별개의 국가였으며, 고조선의 주 무대는 요서지역이었다는 것이다.⁵⁷⁾

이와 관련하여 역사학자 이덕일씨는 단군조선을 인정할만한 근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⁵⁸⁾ “단군조선’은 공간과 시간의 문제다. 공간은 단군조선의 영토가 어디까지였나 하는 것인데, 만주에까지 뻗어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단군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인 고인돌이 그 증거다. 고인돌은 중국 요령성에서부터 정약전 선생의 유배지였던 흑산도까지 널리 분포돼 있다. 같은 장례 풍습을 가진 집단이 중국 만주에서부터 한반도 남단까지 살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민족이 만주까지 진출했다는 소리다. 만주 이상의 지역에서는 더 이상 고인돌이 발견되지 않는다. 단재 신채호 선생도 단군조선이 만주 일대까지 분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이후 식민사학의 영향을 받은 역사가들이 학계의 주류를 이루면서 단군조선이 평안도 일대로 축소되고 말았다. 더욱 큰 문제는 건국 시기다. 일연도 BC 23세기라고 주장했고, 실제로 만주 지역에서도 BC 23세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청동기 유물이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주류 사학자들은 이것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고조선은 ‘3조선’으로써 단군·기자·위만조선을 총칭하는 개념인데 굳이 단군조선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군이 우리 민족의 시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보통 한국 사학계에서 고조선이라고 일컫는 것은 단군조선을 제외한 위만·기자조선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기자조선은 실제 존재 여부를 두고도 상당한 논란이 있다. 단군조선을 인정한다는 것은 2천 년간 만주지역에 우리 민족이 세운 국가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이후 중국에서 온 위만이 잠시 고조선을 찬탈했다 해도 ‘우리 민족의 첫 국가는 고조선’이라는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이덕일 씨의 입장이다.

57) 「중국판 문화 패권주의와 정면대결」 『신동아』(2004. 6).

58) 「단군조선 인정않는 사학계가 중국의 역사침략 불렀다」 『말』(2004. 212호).

분단지향 역사학 탈피해야

성신여대 오종록 교수는 고구려의 남진정책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온 한국 사학계의 관행이 '동북공정'에 휘말리게 되는 빌미가 되었다고 주장한다.⁵⁹⁾ 그의 말에 따르면, 오랫동안 고구려의 평양 천도는 고구려의 남진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며, 따라서 현재의 국사 교과서가 고구려의 남진정책 굳이 평양 천도와 결부시키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성인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평양을 천도나 남진정책이 낳은 결실로 이해하고 있다. 이 문제의 검토를 위해서는 우선 광개토태왕과 특히 장수왕이 실제로 남진정책을 확정해 시행했는가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사실 이는 역사 사실에 대한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한다.

또한 오교수는 고구려가 장수왕 때 남한강 상류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한 것이 사실이기 는 하나, 다른 지역으로의 영토 확장을 포기하거나 유독 한반도 중부 지역을 중요시하며 애착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고 말한다. 장수왕의 영토 확장 업적 중에는 흥안령산맥 부근의 초원지대를 장악해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 세력 및 실크로드로 이어지는 교역로의 문호를 확보한 것도 포함된다. 따라서 고구려는 시종일관 요동 지역을 매우 중요시했으며, 수(隋)와 당(唐)이 중국을 통일한 뒤 전쟁을 도발할 때마다 계속 요동을 영토로 유지하고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다.

반면 한강 유역이남 지역은 전력을 기울여 방어하기보다 순순히 백제나 신라에 내어준 듯한 인상을 풍기는데, 장수왕이 대군을 동원해 백제 한성을 공격하고 개로왕을 전사시킨 사건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오교수는 말한다.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배경에는 개로왕이 고구려를 선제공격한 일, 북위(北魏)에 외교문서를 보내 고구려를 토벌해 달라고 요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장수왕의 대대적인 백제 공격은 일관된 남진정책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백제가 대제국 고구려와 그 대왕을 경멸한 데 대한 보복의 성격이 더 컸다는 것을 뜻한다.

오교수는 그동안 고구려의 남진정책이 불변의 진리로 간주되면서 평양 천도의 의미까지 이에 맞춰 규정했던 것은 분단 지향 역사학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남북한이 적대시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 사이의 대립과 항쟁을 강조해온 결과이며, 삼국의 문화가 어떻게 서로 다른가를 찾아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삼국의 문화가 어떤 공통성이 있는지는 무시하고자 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라는 것이다.

삼국의 문화는 주변 세력의 문화와 비교하면 한눈에 공통성이 크다는 것을 찾아낼 수

59) 오종록, 「역대 帝王들은 왜 천도를 단행했나」 『월간중앙』(2004. 7).

있음에도 삼국의 차이만 강조했다던 결과가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에 휘말리며 고구려사가 민족사의 범주에서 제외될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니, 그 원죄는 분단 지향 역사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오교수는 이야기한다.

‘반도중심사관’으로부터 ‘만주중심사관’으로

이 입장은 고구려사를 중국사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려는 중국동북공정계획에 대응해, 반도중심 고대사 인식틀을 극복하고 부여-고구려를 잇는 만주 중심으로 고대사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⁶⁰⁾ 이러한 논의는 올해 5월 24일 '단체 신채호선생 기념사업회'가 주관한 학술회의에서 제기되었다.

이 학술회의에서 성균관대 김삼웅 교수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역사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회의를 갖게 한다”며 “이것은 곧 한국고대사 연구의 1인자이며 근대적인 민족사관을 정립한 단체 신채호 선생에 대한 연구와 대접을 어떻게 해왔는가와 연계된다”고 주장한다.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 소장은 “신채호에 이르러서야 한국 고대사 인식 틀이 삼한정통론에 따른 ‘반도중심사관’을 극복하고 단군조선-부여-고구려를 잇는 ‘만주중심’ 고대사 틀로 전환했다”고 이야기한다. 이소장은 “단체 이전 한국 고대사 인식체계는 기자(箕子), 위만(衛滿), 삼한, 신라 중심으로 연결하는 것이었다면 단체는 기자, 위만 이전의 대단군왕검(大檀君王儉)이 건국자인 우리 상고-고대사가 부여-고구려로 계승된다는 인식체계를 확립했던 것이다”며 “이는 반도 중심의 고대사 인식체계를 거부하고 만주중심의 고대사 인식체계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한국 상고 고대사 인식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이었다고 지적한다.

단군이전사 연구 필요

단군이전사는 만주 지역에서 흥기했던 요·금·원·청 등의 국가들 및 말갈·여진·만주족 등의 민족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이족들로서 우리 민족에 포함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가 이들을 우리 역사에서 제외함으로써 중국 측에 역사침탈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것이 이 시각의 핵심이다.

이와 관련하여 박정학 ‘치우학회’ 회장은 ‘치우’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⁶¹⁾ 인류학에 따르면, 역사 기록이 시작된 시점은 국가사회가 형성되었던 4,500년 전이지만, 인간이 정착하면서 부락생활을 시작한 것은 1만 년 전, 부락연맹사회가 형성된 것은 6천

60) 「한민족 고대사 인식에서의 '신채호 혁명」 『말』(2004, 5, 29).

61) 박정학, 「동아시아 고대사의 열쇠 '치우천왕' 논쟁」 『신동아』(2004, 6)

년 전의 일이다.

여기에서 박정학 회장은 국가사회 이전의 역사는 창세신화를 비롯한 다양한 신화와 전설의 형태로 전해지고 있으며,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도 고조선이라는 국가 이전에 마을이나 고을사회 단계가 있었을 것이며, 이와 관련한 신화나 전설이 구전이나 무가(巫歌) 형태, 또는 야사로 남아 전해졌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학계는 단군 이전 시대를 역사화하는 데 관심이 없었으며 아예 역사에서 지워버림으로써 그 속에 포함된 치우의 역사도 당연히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다.

중국 역사책에 ‘치우가 동이족이며, 고구려의 임금’ 이라고 적혀 있는 만큼, 만약 그 때를 우리의 고을사회 역사로 해석해 현재 위서라는 이유로 학계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환단고기’ 나 ‘규원사화’ 의 내용으로 이를 보완한다면 훌륭한 단군 이전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이지만, 시도도 해보지 않고 우리 스스로 한민족의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가져왔다고 박회장은 지적한다. 이를테면, 만주지역에 있던 요·금·원·청은 고조선과 고구려의 영토에서 일어났으며, 중국 고대사에서 동이로 분류되던 민족이 세운 나라들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따라서 우리 겨레의 역사에 포함시킬 수도 있으나 우리는 말갈, 여진, 만주족이라며 오랑캐로 몰았고 우리의 역사에서 제외시킨 대신, 중국은 “지배를 받았지만 문화로 흡수했다”는 논리로 자국 역사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의 단적인 예로써 박회장은 대조영이 세운 나라 또한 처음에는 ‘진’ 이었으나 당나라가 멋대로 ‘발해국왕’ 에 봉하자 나라 이름도 발해로 바꾸었고,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 부른 이름 ‘진’ 보다는 ‘발해’ 라고 부르고 있으니, 중국은 이를 근거로 ‘발해가 당의 지방정권’ 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국내 학자들은 한반도 밖의 한민족 청동기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데, 일부 학자들이 고조선 영토로 거론하기도 하는 산동반도와 만주 요령성의 경우 기원전 25세기까지의 청동기 유물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의 문화로 인정받지 못했으며, 북한이 주장하는 대동강 유역의 기원전 30세기 청동기 유물이나, 양수리에서 출토된 기원전 24세기 청동기 시대 유물들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이렇듯 민족의 형성기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의 청동기 시기가 기원전 10세기 설에 묶여 있으니, 그 이전 인물인 치우는 물론 단군조차 역사적 인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만주지역과 산동반도 지역은 수천년 전에도 중국 땅이었고, 한족이 거주하고 있었다’ 는 오랜 고정관념을 버리고 우리를 고대사를 다시 써야 한다는 것이 박정학 치우학회 회장의 주장이다.

시민사회의 대응 양태

사이버 공간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 특히 고구려사 왜곡을 저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시도가 인터넷 공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로는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http://www.prkorea.com>), ‘고구려 지킴이 카페’ (cafe.daum.net/Goguryeoguard), 우리역사문화연구모임(<http://cafe.daum.net/alhc>), ‘국학원’ (www.kookhakwon.org) 등이 있다. 이들은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응하는 다양한 자료들을 게재하고, 인터넷상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뿐만 아니라, 서명운동, 외국의 기관들에 이메일 보내기 운동 등을 펼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오프라인에서의 여러 가지 행사들을 기획하기도 한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1만 3천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당히 규모가 큰 사이트 공간이다. ‘반크’가 ‘고구려 부흥 프로젝트’를 착수한 것은 지난 해 11월인데, 이 프로젝트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맞서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⁶²⁾ 이 프로젝트는 서기 993년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거란을 ‘고려는 고구려의 땅’이라는 주장으로 철수시킨 서희 장군을 기려 ‘21c 대한민국 서희 찾기’로 명명하였다. 반크는 전 세계 역사학자와 유네스코 세계 유산 학자 1만 3천여 명에게 중국의 역사왜곡의 부당함을 e-메일과 우편으로 전달, 답장을 통해 관심을 나타내는 학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고구려사를 담은 영문 브로슈어와 광개토대왕릉비가 새겨진 엽서를 제작해 보내는 계획도 추진한 바 있다. 반크는 “대한민국의 영토 상실 위기는 대한민국의 영토 확장의 기회”로 규정하면서, “네티즌들이 모두 한 마음이 돼 중국의 역사왜곡을 막는데 앞장 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실제로 반크의 노력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구려 멸망 후 삼국이 통일된 668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소개했던 해외 유명 인터넷 사이트 12곳 중 11곳이 국내네티즌들의 의

62) 「중국의 고구려 사 왜곡 저지운동 본격화」 『한겨레신문』(2003.12.29)

견을 수용, 관련 내용을 고치기도 하였다. ‘반크’의 게시판에 따르면, 고조선은 물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사를 누락한 채 통일신라 이후의 역사만을 소개했던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12개 사이트 가운데 ‘야후’를 제외한 11개 사이트가 한국사 서술부분을 바로잡았다. 이들 11개 사이트는 ‘한국은 668년 국가가 최초로 형성된 이후’라고 기술했던 부분을 ‘한국이 668년 문화적으로 통일된 이후’로 수정하고, 한국사 서술 시작 부분에 ‘한국의 뿌리는 기원전 4천년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는 내용을 덧붙였다고 한다.

고구려 지킴이 카페

‘고구려 지킴이 카페’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되었는데, 개설 한 달 만에 회원수 1천명을 돌파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에 나서고 있다.⁶³⁾ 스스로를 ‘사이버 의병대’라 칭하는 카페 회원들은 “중국 주장대로 고구려사가 중국역사라면, 한강 이북 지역은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고 우리에게 남은 것은 5천년의 역사가 아닌 일본 역사보다도 짧은 2천년의 역사를 지닌 나라, 지역도 한강 이남으로 축소된 역사와 전통이 없는 보잘 것 없는 민족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주장한다. 또한 ‘고구려는 기원전 37년부터 7백여 년간 한국의 고대 국가였다’는 제목으로 중국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영문 서한을 작성해 ICOMOS와 세계 주요 언론사 등에 보내기도 했는데, ICOMOS 집행위원 모하만 하만 위원으로부터 “파리 회의 전에 글을 읽었고 메일의 내용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더 자세한 자료를 부탁한다”는 답신을 받기도 하는 등의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우리역사문화연구모임

‘우리역사문화연구모임’은 ‘고구려사에 특색 있는 한국사 연구모임’을 목표로 두 명의 회원으로 시작, 2년 만에 2,500명이 넘는 회원이 활동하는 대규모 모임으로 발전해 왔다.⁶⁴⁾ 이 모임의 활동은 주로 자료실을 통한 정보 교환과 토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자료실 정보는 삼국 시대 각 나라의 인물전부터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이르기까지 분야도 다양하고 분량도 많은 편이다. 학습 자료실에는 중·고생의 학습을 돕기 위한 각종 연표와 총괄평가문제까지 올려져 있을 정도다. 관심 분야도 다양해서, ‘후백제 장군의 명단’이나 ‘고구려인은 키가 큰 편이었을까’ 등 진위 여부를 떠나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도 많다고 한다. 요즘 들어서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관한 내용도 많이 올라오고 있으며, ‘고구려연구재단’ 설립 등 한국 측의 대책과 관련한 의견도 많이 개진되고 있다. 회원들의 활동은 인터넷에 국한되지 않는다. 두 달에 한 번씩 역사탐방 오프라인 모임을 갖기도 하고, 정

63) 「네터즌 ‘고구려 지킴이 운동’ 빛본다」『중앙일보』(2004.01.25)

64) 『뉴스메이커』(564호).

기적으로 역사학자를 초빙해 강연회도 개최한다.

국학원

국학원은 인터넷 사이트 ‘국학부흥과 민족정신의 교육’을 표방하는 학술단체이다. 학술세미나, 자료발간 등 학술적인 활동 이외에, 국학원의 인터넷상에 우리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게재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망라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국학원은 ‘동북공정 저지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는데, “한·일 네티즌들의 사이버전쟁이 치열했던 지난 1월10일부터 온라인에서 서명하는 네티즌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12일에는 5분에 600~700명이 서명해 서버가 다운될 정도”였으며 “정확한 집계는 아니지만 목표인 100만 명을 초과한 118만 명 정도가 서명했는데, 서명 용지만 A4박스로 70개가 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학원 측은 온라인에서의 ‘동북공정 저지 100만 서명운동’과 함께 1, 2차로 나누어 전국 30개 지역에서 길거리 서명 운동도 전개한 바도 있다.

지나친 대응 자제해야한다는 시각

한국 네티즌들 적극적인 활동의 의의는 인정하지만, 이들의 감정적인 대응에 대해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를테면 파리의 외신기자인 이훈범 씨는 “중국의 ‘동북공정’ 사업은 우리 정부나 학자뿐 아니라 온 국민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고 저지해야 마땅”하지만, “국내 일부 시민단체나 네티즌들의 움직임은 보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보다 흥분부터 하고 보는 측면이 엿보여 안타깝다.”⁶⁵⁾ 무엇보다 세계문화유산 지정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데, 중국이 신청한 고구려 유적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되기라도 하면 고구려 역사를 통째로 중국에 빼앗기기나 하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며 자제를 촉구한다. 무엇보다도 파리의 유네스코 관계자들은 자기들 눈에 ‘제3국’인 한국에서 집단으로 날아드는 항의 메일에 영문을 몰라 곤혹스러워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세계유산은 민족이나 국가의 소속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이기자는 지적한다. 이를테면 프랑스의 세계문화유산 28개 중 남부 아를과 오랑주의 유적, 퐁 뒤 가르(수도교) 등은 프랑스가 신청했지만 엄연한 로마 유적이며, 스페인의 문화유산인 알함브라 궁전이나 코르도바 역사유적은 이슬람권 무어족의 것이다. 예루살렘처럼 영토분쟁 중인 지역은 이웃나라 요르단의 신청으로 구시가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물론 중국의 신청 의도가 단순한 문화재 보호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는 문화유산이 아

65) <http://news.joins.com/opinion/200401/18/200401181819197471100010101015.html>

나라 동북공정이며, 따라서 항의 시위나 집단 e-메일보다 고구려사를 한 줄이라도 더 읽어 중국에 맞설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게 낫다고 여기자는 충고한다.

시민단체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단의 시민단체들이 결성되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 ‘국학원’,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국학운동시민연합’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서명운동을 위시하여, 캠페인, 항의 집회, 성명서 발표, 국내외 관련기관에 항의서한이나 의견서 제출, 중국대사관 방문 시위, 심지어 집단 삭발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

‘고구려 역사 지키기 범민족 시민연대’는 흥사단, 3.1 운동기념사업회, 광복회 등 10여 개 사회단체가 참여하여 결성된 단체로서 ‘중대한 역사적 침략행위’를 자행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응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⁶⁶⁾ 이들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저지를 위한 범국민운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 자리에서 “중국은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통해 자국의 고대사서에서도 명백하게 인정하고 있는 한민족의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의 역사로 편입시키기 위해 역지를 부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정부와 학계, 민족 및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정보 부족 등으로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민족사 지키기 활동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의 주요 활동 계획은 1)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문제의식 확산을 위해 전국과 해외에서 고구려 역사 지키기 캠페인과 1천만 명 서명운동 전개, 2)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분석과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각종 강연회와 시민토론회를 개최, 3) 정부와 국제단체의 정책에 여론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오는 2월중 주한중국대사관, 4대 정당대표, 정신문화연구원, 유네스코 등 국제단체와 외교통상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정부기관에 공식 의견서 전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⁶⁷⁾

국학원

국학원은 온라인상에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적극적인 反동북공정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프라인상에서의 대표적인 활동들은 다음과 같다. 1) 항의집회. 올해 초, ‘국학원’은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천안에서 시민 수백 명이 참석한 가

66) 「시민연대 “중, 고구려 사 왜곡은 역사적 침략행위”」『한겨레신문』(2003.12.29).

67) 「중국의 고구려 사 왜곡 저지운동 본격화」『한겨레신문』(2003.12.29).

운데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 항의집회’를 개최했다.⁶⁸⁾ 이 자리에서 국학원 측은 중국이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사·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이 주변국과 평화·우호관계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 서명운동. 국학원이 주도한 ‘고구려사 왜곡저지를 위한 100만인 국민서명운동’은 인터넷과 길거리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120여만의 참여를 얻은 바 있다. 3) 중국 대사관 항의 방문. 국학원 측은 ‘100만인 서명운동’을 통해 수집된 서명용지를 중국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하여 방문하기도 하였다.⁶⁹⁾ 4) 고구려사 역사 홍보 캠페인. 올해 1월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목천읍에 소재한 국학원에서 ‘고구려지킴이 역사캠프’를 갖는 한편, 2월초에는 천안을 비롯한 전국 5개 도시를 순회하며 ‘고구려 유물·유적 사진 순회전시회’를 열기도 하였다.⁷⁰⁾

동북공정에 대한 연대투쟁

“우리역사 바로알기 시민연대”와 “국학운동시민연합”을 포함한 시민단체 회원 80여명은 올해 7월 19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포함시키려는 동북 공정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삭발식을 가졌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라는 자국 이기주의 논리로 고구려사를 비롯해 고조선사,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뿌리에서부터 흔들고 있다”며 “역사 침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는 날조된 사실을 인터넷을 통해 세계에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식민주의 사관 등에 의해 벌어진 3차례의 교과서 왜곡과동의 피해를 한국과 함께 경험한 중국의 이런 행동은 주변 국가와의 평화, 우호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근시안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한국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위해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촉구했다.⁷¹⁾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

동북공정에 대응하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학계의 시도는 1) 학자들의 개별적인 논문·저서의 출간, 2) 각종 학술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역사학계 인사들이 공동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작년 11월 19일 ‘한국고대사학회’와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가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응, ‘중국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칭)를 발족하겠다고 밝힌

68) http://www.newstown.co.kr/newsbuilder/service/article/mess.asp?P_Index=13057

69) <http://historyworld.org/bbs/view.php?id=story0002&no=89>

70) <http://www.inews.org/Snews/articleshow.php?Domain=ngonews1&No=4024>

71) 「시민단체 회원 6명, 중국의 고구려 역사 침탈에 항의 삭발」『오마이뉴스』(2004. 7. 19).

바 있다.⁷²⁾ 같은 해, 12월 9일에는 ‘한국고대사학회’를 포함한 17개 한국사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공동대책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되었다. 위원회는 공동대표인 최광식, 한규철 교수를 포함하여 고구려사를 전공하고 있는 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한국사연구회, 한국역사연구회 등 한국사관련 학회와 연대하여 중국의 고구려사 귀속에 대한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다.

중국정부가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전에 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동북공정’은 학술적 문제라는 데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한국정부의 시각 및 대책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 ‘동북공정은 학술적 문제’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실상이 한국에 전해지기 시작한 2003년 후반 이후 지금까지 한국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동북공정은 학술적인 문제로서 외교문제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올해 1월의 기자간담회에서 박홍신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은 “중국 측은 동북공정은 학술적 문제인 만큼 정부가 개입, 정치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술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고 “중국이 정부차원에서 제기하기 전에는 외교문제화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 국장은 “우리 공관원들이 접촉한 바에 따르면 중국 소장 역사학자들이 변방사를 정리하려는 프로젝트를 냈고 중국 정부가 이를 승인한 것”이라며 “보도된 것처럼 중국 정부차원에서 역사왜곡 의도를 갖고 시작했던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박 국장은 “사회주의 체제하의 연구기관이 정부체제하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학자들이 정부정책 통제 하에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동북공정(東北工程)프로젝트’의 정치성에 대해 부인하고, 프로젝트에 중국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정부 지원 연구사업일 경우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이름을 넣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측의 한국인 고구려 고분 접근 금지나,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실패 등도 중국의 방해 때문이 아니라 기술적인 요인 때문으로 이야기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고구려 지역이 통일신라시대 이후에는 계속 중국변방 영토 안에 있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중국이 자국 영토 역사를 연구하고 발표할 자유는 있다”는 의견을 피

72) 『경향신문』(2003. 11. 29).

73) 『중국에 ‘고구려 사 편입 우려’ 전달』 『한겨레신문』(2004.1.9).

력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였다.⁷³⁾

한편, 올해 7월, 고구려 유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결정된 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인민일보』가 “고구려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보도하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의 한국을 소개하는 코너에 “서기 1세기 전후 한반도 일대에 신라, 백제 등의 할거정권이 출현했다. 서기 7세기 통일신라 정권을 형성했다”며 ‘고구려’를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에 따라 한국에서는 중국정부가 한국의 고대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정부가 전에 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취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동북공정은 ‘학술적 문제’라는 데서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 박홍신 문화외교국장은 “정부는 고구려 역사가 한반도와 불가분한 역사의 일부분으로 어떤 경우에도 이를 훼손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기본입장”이며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중국 정부에 공식입장이 무엇인지 확인을 요청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중국 언론의 보도는 중국학자의 주장을 인용해서 보도한 것으로 보고받았으며 이는 ‘동북공정’과 관련한 중국학자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우리도 민간차원에서 만들어진 고구려연구재단을 중심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학술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나갈 방침”이라고 함으로써,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정치적·외교적 문제로 비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⁷⁴⁾

동북공정에 한국정부 대응책: 외교적 갈등회피와 민간지원 통한 간접대응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동북공정’ 프로젝트의 성격이 ‘학술적’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으로 인해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고 있지만, 중국학자들의 최근 논문들과 중국 언론의 기사들이 우리 민족의 역사, 특히 고구려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측 정부의 대응은 주요하게는 중국정부와의 직접적인 갈등의 회피와 민간지원을 통한 간접 대응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이외에 국내의 역사의식 제고를 위해 공무원 임용시험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국사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채택하고, 초·중·고 국사교육을 강화시키며, 텔레비전 드라마와 특집을 통해 홍보를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중국정부에 우려 표명

‘동북공정’ 프로젝트가 한국에 알려지기 시작했던 작년 말부터 한국정부는 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할 것임을 시사하여 왔다. 작년 12월 12일자 한 신문보도는 한국정부가

74)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한국·북한 소개에서 고구려 삭제」『오마이뉴스』(2004.07.09).

외교부를 통해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왜곡이 자칫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중국 측에 전달하는 것을 고려중이라고 쓰고 있다.⁷⁵⁾ 또한 올해 1월 초반에 이미 한국정부는 최근 중국 정부에 고구려사 편입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당시 박홍신 외교부 문화외교국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중국 측에 몇차례 이 문제가 양국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며 “중국 측 여러 요인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달했으며 우리 측 언론보도에 대해 중국이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고 말했다.⁷⁶⁾

그러나 올해 중반이전에 한국정부가 양국간의 직접적인 외교채널을 통하여 항의의사를 표명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공정’과 관한 한 한국정부는 지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올해 1월 하순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의도에 대해 당당하고 단호하게 대처 하겠다”고 밝히고, “고구려는 우리 민족사의 불가분의 일부라는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중국 문화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 한국역사와 관련하여 ‘고구려’가 삭제되는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 ‘중국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계획’ 혹은 ‘주중대사관을 통해 의견 전달’ 등 이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떠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한국정부는 국내의 비판적 여론과 중국과의 외교관계 악화라는 두 가지 정치적 압력 사이에서 상당한 정도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는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 단계에서 외교 문제화하는 것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우려가 있으나 국내 여론을 고려, 중국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⁷⁷⁾

한편, 올해 7월 중순 중국의 관영 매체인 『신화통신』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규정하고,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서기 1세기를 전후해 한반도에 출현한 세 정권 가운데서 고구려를 삭제함으로써 고구려사 논쟁을 학술 차원에서 관리한다는 한·중 간 합의가 깨짐에 따라, 한국정부가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정부에 항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한국정부는 일단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것처럼 보인다. 7월 13일 김하중 주중대사를 통해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명의의 항의를 중국 당국에 전달한 데 이어, 14일에는 리빈 주한중국대사를 외교부로 불러들여 경위를 따졌다. 또한 그동안 문화외교국에서 다뤄온 고구려사 문제를 아시아태평양국으로 넘긴 것은 이 사안에 대한 정부간 협상필요성이 커

75) 『경향신문』(2003. 12. 12).

76) 『중국에 ‘고구려 사 편입 우려’ 전달』 『한겨레신문』(2004.1.9).

77) 『경향신문』(2004. 1. 28).

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외교통상부 박준우 아시아·태평양 국장이 중국의 외교부 닝푸쿠이 한반도문제 담당대사와 오찬을 하는 자리에서 “한국정부는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외교부 홈페이지를 원상회복하고 왜곡조치를 시장하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닝 대사는 “한국정부의 우려를 관계부서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⁷⁸⁾

그러나, 중국정부는 왜곡시정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지만, 한국의 외교부 당국자가 “이 문제가 확대되는 것은 두 나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공감대가 있다”⁷⁹⁾고 언급한 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정부는 이 문제가 한중간 첨예한 외교마찰로 발전하는 상황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당위와 중국의 전향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현실로 인해 여전히 적극적인 대응책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하여 주요 언론, 정당, 네티즌들 사이에서 점차적으로 비판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8·15 경축사에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언급이 누락되면서 한국정부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이 지나친 신중론에 기반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24일 최영진(崔英鎭) 외교통상부 차관과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아시아담당 부부장이 ‘5대 양해 사항’에 합의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역사왜곡 중단요구에 대해 중국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기도 하였다. 양측간의 구두양해사항에서 중국은 역사교과서 왜곡과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을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이 밖에도 ‘중국정부는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간 중대 현안으로 대두된 점을 유념’하고 ‘양국은 역사문제로 우호협력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며’, ‘고구려사 문제를 조속한 학술교류를 통해 해결한다는 내용도 포함 됐다.’⁸⁰⁾

그러나 양측의 합의 “추상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것이 학계·언론계의 반응이다. 이를테면,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인 최광식(崔光植) 고려대 한국사학과 교수는 “중국 외교부의 홈페이지를 바로잡거나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사 왜곡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야 한다”며 “구두합의인데다 내용도 추상적이어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⁸¹⁾ 또한 윤명철 동국대 교수는 “중국의 역사왜곡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학술 교류만으로는 결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절대 안심해서는 안 되고, 향후에도 정치·외교적인 대응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⁸²⁾

78) 「중 외교부 홈페이지 고구려사 부분, 정부 “왜곡 시정하라” 요구」『한겨레신문』(2004. 8. 3).

79) 「〈고구려〉중국 ‘신사협정’ 깨」『한겨레신문』(2004.07.14)

80) 「中 외교부 홈페이지 원상회복은 거부」『경향신문』(2004. 8. 25)

81) 「韓-中 ‘고구려사 왜곡’ 해결 5개항 구두합의」『동아일보』(2004. 8. 25)

민·관의 협조 통한 대응책 모색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한 외교적인 대응에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중국의 프로젝트에 상응하는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보다는 민간단체와 역사학계에 대한 지원 및 이들과의 협조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이미 작년 12월 12일의 정부당국자가 “고구려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차원의 충실한 연구와 함께 학계·민간·정부간 유기적 협조가 중요하다고 보고 정부가 이를 전면 지원하기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언급한데서도 잘 드러난다.⁸³⁾ 이 관리는 주요한 정부의 지원책으로 교육인적자원부와 정신문화연구원에 고구려사를 포함한 고대사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한중역사공동연구회를 각각 설립하고 남북한, 중국, 일본, 몽골 학자가 참여하는 동북아역사공동연구위원회를 만드는 것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대책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는 ‘고구려연구재단’의 설립과 ‘고구려 역사왜곡에 관한 대책 태스크포스’ 두 가지가 있다. ‘고구려연구재단’은 올해 3월 출범하였고, 6월 10일 개원식을 가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하였다. 정부는 재단 설립을 위해 모두 50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17명의 이사진과 20여명의 연구·행정직원의 인적구성을 갖춘 고구려연구재단은 고구려역사·고구려문화·고조선사·발해사·동북아관계사·민족문제 등을 핵심주제로 하는 6개의 연구팀을 가동하여, ‘중국의 역사왜곡 보고서 발간’, ‘고구려사 관련 중국·일본·러시아·북한 자료 수집 및 발간’, ‘관련 학회 및 학술지 발행 지원’ 등을 주요한 사업내용으로 삼고 있다.⁸⁴⁾

한편 ‘태스크포스’는 문화관광부가 학계, 시민단체와 민·관 합동으로 중국정부의 고구려사 왜곡움직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기로 한 기구이다.⁸⁵⁾ 태스크포스팀에는 문화부,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와 고구려사 연구자, 국제박물관협의회(ICOM) 서울 총회 조직위원회, 문화연대 등이 참여하며 격주마다 회의를 열어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역량 지원방안과 국제 홍보 전략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팀은 또한 북한 쪽과의 공동 대응책 모색, 정부 안 관련 부처들이 구성된 고구려사 실무대책협의회 및 고구려연구재단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의 기능 등도 맡을 것이라 한다. 즉, 태스크포스팀은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민간단체들과 정부기구들 간 더 나아가서는 북한과의 협력체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82) 「역사학자 “中 시정여부 지켜봐야”」『한국일보』(2004. 8. 25)

83) 「정부, 중국 고구려 역사왜곡 법정부적 대처키로」『한겨레신문』(2003.12.12).

84) 「고구려연구재단 문열어」『한겨레신문』(2004. 6. 10).

85) 「중 고구려 사 왜곡’ 민·관 대책반 구성」『한겨레신문』(2004. 8. 4).

주변 국가들의 반응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의 반응

동북공정에 대한 시각

북한은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조선으로 이어져 왔다고 파악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조선에 정통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이러한 역사인식은故 김일성 주석의 교시로서 『김일성전집』에도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언론매체에서도 꾸준히 이 같은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를테면, 제일 북한 측 신문인 『조선신보』는 “조선의 역사학자들은 동방의 천년강국 고구려의 역사정립에 대하여 말할 때 김일성주석께서 쌓아올리신 업적을 강조하군 한다. 김일성주석께서는 민족사연구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주체적인 견해를 밝히시고 역사학자들의 활동을 직접 이끌어 주시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오늘도 김일성주석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역사에서 제일 강한 나라 고구려사의 정립과 관련한 김일성주석의 령도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 우리 민족사에서 고구려가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한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⁸⁶⁾

이러한 인식 하에서 북한에서도 ‘동북공정’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다. 북한의 한 신문은 평양의 룡악산지구에서 발굴된 유적유물들이 “고구려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라고 하면서 고구려중심의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들을 다 부인하는 일부 주장의 허황성을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고 쓰고 있다. 한편, 올해 5월초, 북한에서 열린 ‘고구려건국 2280돐 기념 전국학술토론회’에서 ‘동북공정’을 겨냥한 다양한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조선신보』에 따르면, 이날의 토론자들은 “모든 사회과학자들이 우리 민족사를 외곡말살하려는 제국주의어용사기들과 그 추종자들의 궤변을 짓부시고 조선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내외에 널리 선전하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높여주는 데 기여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다”고 한다.⁸⁷⁾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제국주의 어용사기’, ‘대국주의사기’, ‘우리역사의 왜곡말살’ 등의 강도 높은 단어들 사용되고 있지만, 북한 측 언론매체에서 ‘중국’이나 ‘동북공정’ 등의 단어들 직접 거론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동북

86) 「고구려 사 정립의 과정에서 령도자가 띄워준 과학적 안목」 『조선신보』(2004. 3. 17).

87) 「고구려건국 2280돐기념 전국학술토론회 평양에서 진행 - 고구려는 조선중세력사의 천년강국」 『조선신보』(2004. 5. 5).

공정' 프로젝트로 인한 문제가 불어지기 시작했던 2003년 하반기 이후 『노동신문』과 『조선신보』등에서 중국과의 '우호'와 '친선'에 대한 기사들이 거의 매일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북한 역시 중국과의 외교문제로 인해 '동북공정'에 대한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유적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직후 게재된 『조선신보』의 한 기사에서 '중국의 동북공정'이 직접 언급되기도 하였다.

이 기사에는 『신화통신』이 "고구려는 역대 중국왕조와 연속관계를 맺어왔으며 중국의 지방정권"이었다고 쓰고 있고, 『인민일보』는 고구려에 대해 중국의 '고대소수민족'이라고 주장했으며, 중국의 과학원이 발행하는 홈페이지나 기타 신문들도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강조하고, "고구려와 고려는 무관하다"고 한 사실들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이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까지를 큰 틀에서 중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북공정"의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서 조선민족에게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로골적인 역사외곡이다"고 평가하고 있다.⁸⁸⁾

고구려가 중국 역사의 일부라고 강조하고, "고구려와 고려는 무관하다"고 한 것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까지를 큰 틀에서 중국사에 포함"시킴으로써, "동북공정"의 본질을 드러낸 것으로서 조선민족에게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로골적인 역사외곡이다"고 북한측은 평가하고 있다.

동북공정의 논리에 대한 대응

북한의 고대사 연구가 오랫동안 깊이 있게 진행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동북공정'과 관련하여 북한 학계가 어떠한 대응논리를 지니고 있는 가를 체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다만, 올해 7월 말 김일성종합대학 역사학부 강좌장이나 부교수인 김은택 박사가 『조선신보』에 게재한 논문⁸⁹⁾의 내용이 북한 학자들의 대응논리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동안 내신과 외신 기사들을 통하여 짧게나마 언급되었던 북한 학자들의 논지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김박사의 글을 중심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북한 측의 대응논리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88) 「세계유산과 력사외곡」 『조선신보』(2004. 7. 15).

89) 『조선신보』(2004. 7. 21).

고구려는 고조선의 계승국

고조선은 우리 민족의 원시조 단군에 의하여 B.C. 30 세기 초에 동방에서 제일 먼저 형성되어 근 3천년간 발전한 고대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나라였다. 우리나라에는 B.C. 3 세기 초부터 A.D. 1세기까지 노예소유자사회가 봉건사회로 넘어갔는데 봉건사회 첫 시기인 삼국시기에 고구려가 고조선전통과 문화를 계승하였던 것이다.

첫째, 영토적인 측면을 들 수 있다. 고구려는 우선 고조선의 영역과 주민들을 차지하여 그 계승국임을 명백히 하였다. 고구려는 부여국에서 갈라져 나온 주몽세력이 구려국에 내려와 구려국을 대신하여 세워진 우리나라의 첫 봉건국가이다. 옛 기록에 ‘맥족’으로도 알려진 부여와 구려국의 주민들은 고대시기 조선민족의 일원이었고 따라서 고구려의 기본 주민이었다. 그리고 그 후 고구려가 소국통합과 고조선의 옛 영토를 모두 되찾은 4세기부터는 고조선의 옛주민들을 거의 포섭하여 고구려주민으로 만들었다. 고조선의 영역과 주민을 차지한 고구려가 고조선의 계승국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둘째, 평양천도 역시 고구려가 고조선을 계승하였음을 증거한다. 고구려는 특히 427년에 3천년간 고조선의 수도이고 원 시조 단군의 고향인 평양에 천도하여 200여년이나 있었다. 이것은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위해 남방진출을 위한 거점을 마련한데도 있었지만 주되는 목적은 평양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서 고조선의 계승국임을 뚜렷이 한다는데 있었다.

셋째는 정치체제인데, 정치분야에서 통치기구를 보면 고구려에서 왕 밑에 대보(후에 국상, 막리지)를 수석으로 하고 중앙관료들을 총괄하게 한 중앙통치체제는 고조선의 왕 다음에 호가를 두고 국가의 모든 사업을 보게 한 통치체제를 이어받은 것이었다.

넷째 경제분야에서는 두 나라가 다 농업을 위주로 하는 나라였고 소, 말을 많이 키워 농업생산과 국력강화에 이용한 사실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는 고조선의 돌무덤을 계승하여 고구려가 돌각담무덤, 돌간흙무덤을 발전시킨 무덤풍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는 우리 민족사의 흐름 주도

고구려가 우리 민족사의 흐름을 주도한 나라였다. 첫째, 고구려는 옛 구려지방에 봉건제도를 확립하였다. 고구려는 부여노예소유자국가를 무너뜨리고 이 지역에 봉건적 통치 질서를 수립하였다. B.C. 219 년에 고구려가 부여에 대한 총 공격전을 벌렸는데 고대부여국은 전쟁 후 얼마 안되어 종말을 고하였고 그 남부지역은 고구려의 지배 밑에 들어가게 되었다. 한편 부여의 북부지역에서도 봉건화의 영향이 미쳐 기원전 2세기 초에는 독자적인 봉건국가 후부여가 성립되게 되었다.

둘째, 고구려는 한반도 남부의 봉건국가들 성립에 큰 영향을 미쳤다. 고구려에서 B.C.

3세기 중엽에 갈라져 내려간 온조 세력이 마한의 북부지역에 들어와 세력을 확장한 백제가 점차 자라나 B.C.1세기말에 독자적인 봉건국가로 되어 A.D. 1세기 초에 마한을 붕괴시켰다. 백제의 성립과 마한에 대한 공세는 노예소유자국가 진국전체의 붕괴과정을 촉진시켰다. 이것은 더 나아가 진국령역안에서의 봉건관계의 장성과 신라, 가야의 성립에 유리한 객관적 조건을 지어주었다.

셋째, 고구려는 삼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밀고 나갔다.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 인민들의 투쟁은 4세기후반기로부터 본격화 되었고 특히 광개토왕시기 급속히 추진되어 남방진출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 되었다. 이리하여 고구려는 5세기말~6세기 초에 삼국통일을 거의 완성단계에 올려 세워 남쪽으로 아산만과 동해안의 영일군청하계선(후에 삼척군)까지 진출하였다. 이때 고구려는 당시 우리나라 령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삼국통일과정에서 세 나라 사이의 접촉이 잦아지기 시작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고구려의 발전된 제도와 성과들이 백제와 신라에 깊숙히 침투되었다.

넷째, 고구려는 삼국시기 민족의 자주권 고수 투쟁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삼국시기 반침략투쟁에서 고구려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고구려는 근 1000년 존재하는 기간 한, 위, 연, 수, 당 등 중국의 역대봉건국가들의 수십 차례 걸치는 대규모적인 침공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튼튼히 지켜냈다. 이 투쟁은 고구려자체를 지켜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백제와 신라의 안전을 지켜줌으로써 우리 민족 전체를 보위하는데 이바지하였다. 이것은 민족사건지에서 큰 의의를 가지었다.

발해는 고구려의 전통문화 계승국

668년 신라봉건통치배들이 외세의존과 당나라침략자들의 무력침공으로 고구려가 멸망하는 참사가 빚어졌다. 그러나 고구려 옛 땅에는 당나라침략자들을 반대하는 고구려 옛 주민들의 투쟁과정에 698년에 발해가 성립되었다. 이리하여 고구려 멸망 후 우리나라에는 두개의 주권국가 발해와 후기신라가 병존하게 되었다.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첫째, 발해는 대조영을 비롯한 고구려 옛 주민들에 의하여 고구려 옛 땅에 세워져 그 령토와 주민을 거의 차지한 고구려 계승국가였다. 그리고 발해는 대내외적으로 자기를 고구려 계승국이라고 선언하였다. 예를 들어 727년 발해의 제2대왕 무왕은 일본왕에게 보낸 편지에서 발해가 “고려(고구려)의 옛 령토를 회복”하였다고 강조하고 제3대왕 문왕은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 자기를 고구려국왕이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일본왕의 답서는 고구려국왕 앞이라 되어 있다.

둘째, 또한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국이라는 것은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많이 이어 받았기 때문이다. 수도를 전체 성으로 둘러막고 그 안을 몇 개로 구분한 것, 왕궁건축에서 남

쪽중심축을 정하고 기본건물들을 그 좌우에 배치한 것, 살림집건설에서 온돌을 놓거나 무덤건축에서 돌칸 흙무덤을 사용하고 그 안에 벽화를 그린 것 등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와 풍습을 이어받은 사실의 일단을 보여준다. 이것은 고구려가 발해의 성립과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민족 첫 통일국가 고려는 고구려 계승

10세기 초에 우리나라에는 첫 통일국가 고려가 성립되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국임은 첫째, 918년 태봉국을 뒤집어엎고 왕이 된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하고 고구려 때 강력히 추진시켜온 국토통일을 완성한데서 알 수 있다. 둘째, 고려는 동쪽의 나라로 찾아들어오는 발해와 옛 주민을 많이 포섭하고 왕세자 대광현을 맞이함으로써 사실상 발해왕조의 주권을 편입시켰다. 셋째, 그 후 고려는 고구려-발해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갔다. 넷째, 고려는 첫 통일국가로서 고구려-발해의 문화와 풍습을 많이 계승하였다.

리조는 고려의 계승국

1392년 고려가 멸망한 후 그 뒤를 이룬 리조는 고려의 령토와 주민 그리고 그의 정치, 경제, 문화를 이은 나라였다.

결론적으로 김박사는 우리 민족의 정통국가는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리조라고 주장하고, 고구려는 발해 이후 고려와 리조의 역사발전에 큰 영향을 미쳐 그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민족사의 기본흐름을 주도한 나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논문에 ‘동북공정’이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와 관련하여 김박사는 “다른 나라의 일부 대국주의 사가들이 고구려의 역사와 우리 민족국가의 전통과 지위를 말살하려는 갖은 책동”이라 파악하고 있으며, “그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역대국가들의 지방정권, 소수민족국가라고 외곡함으로써 고구려중심의 우리 민족의 전통국가들을 다 부인하고 조선반도 남부지역에서만 우리 민족이 생활하고 발전하였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것은 지난시기 일제어용사가들이 떠들던 우리 민족말살책동의 연장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망동”이라 주장한다.

동북공정에 대한 외국의 반응들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를 다룬 외국 언론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과 대만의 일간지들이 이와 관련한 기사를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동북공정’의 내용에 대한 짤막한 설

명에 그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시각을 드러내지는 않고 있다. 서구의 언론들은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유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관하여 많은 기사를 내놓고 있지만, 이 역시도 사실 보도의 수준을 크게 넘지 않고 있다. 다만, 몇몇 서구 언론이 ‘동북공정’이나 ‘세계문화유산등재’를 둘러싼, 한-중 간 갈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올해 7월 5일자 “Financial Times”는 ‘China and the Koreans spar over dynasty’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개의 한국과 중국이 고대 국가가 자신의 역사의 일부 분이라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 간에 격렬한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중 갈등과 관련하여 이 기사는 “일부 사람들은 고구려 왕국에 대한 이 분쟁이 한반도와 중국 북동부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전투의 제 1단계라고 파악하기도 한다”며 앞으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동북공정’에 대한 양측의 입장에 대하여 “베이징에게 있어 고구려에 대한 남북한의 요구는 중국 동북부에 거주하는 2백만 조선족들 사이에 분리주의적 정서를 부추길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남북한에게 있어 베이징의 이러한 태도는 통일된, 강력한 한국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과 한반도를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를 의미 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과 일본, 한국 사이에 수세기에 걸쳐 여러 차례 분쟁에 개입되어 온 사실을 지적하며,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증대, 그리고 한반도의 통일로 인해 이들 간의 오랫동안의 라이벌관계가 재등장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7월초의 “Irish Examiner World”의 기사 역시 고구려사를 둘러싼 한중간 갈등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⁹⁰⁾ 이 기사는 “지도에서 사라진지가 1천3백년이 지난 고구려가 현재 중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중국 측은 고구려가 중국문명의 유산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반면, 북한은 고구려 문화는 한국에 속해있다고 말 한다”고 쓰고 있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고구려 유적들을 모두 세계유산에 포함시키기로 한 ICOMOS의 결정은 한·중 양측 모두를 만족시키는 결정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올해 1월 22일자 『워싱턴 타임즈』는 ‘동북공정’을 둘러싼 한국 측의 분위기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⁹¹⁾ 이 신문은 중국의 고구려 역사 편입 시도와 일본 측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한 한국의 분노와 대응을 비교적 자세히 신고 남북이 이들 현안을 둘러싸고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한국인의 민족감정”이 고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지난 668년 패망해 역사의 뒷전으로 사라졌던 강력한 왕조 고구려가 최근 역사의 전면에 돌연 등장했다면서 “이는 중국 관변학계가 고구려가 고대 중국 왕조의 일부였다는 문서를 내놓

90) ‘Nine Sites join World Heritage List’, “Irish Examiner World”(2004. 7. 2).

91) <http://www.yonhapnews.co.kr/news/20040123/040206010020040123000450K7.html>

으며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을 시도하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 측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한국과 북한은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에 한국의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중국의 그 같은 시도는 평양정권 붕괴 시 북한 측 난민의 대규모 국경유입을 우려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한국 학자들의 말을 인용, 중국 당국의 그 같은 주장은 북한과의 국경분쟁 및 난민 유입과 향후 남북통일에 대비한 영토분쟁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면서 고구려의 중국사 편입 시도를 둘러싼 중국 학계의 움직임과 이에 대한 한국 측 대응을 자세히 소개했다. 신문은 “최근 들어 고구려 문제만큼 한국민의 민족적 분노를 불러일으킨 현안은 없었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는 범국민적 운동으로 들끓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8월 중순, 외국 언론들 중에서 유일하게 『타임』지 아시아판이 중국의 동북공정 프로젝트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밝히고 나서서 한국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⁹⁰⁾ 이 주간지는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은 한반도 통일 후 발생할 영토분쟁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타임』은 “612년 중국 왕조의 수백만 군대가 고구려를 침공했지만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패배했다”면서 “고구려를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한국인들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이 승리를 아직까지 귀중한 민족적 자부심으로 간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 기사는 “그러나 그때로부터 약 1400년이 흐른 오늘날 중국 학계는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동북공정에 따라 고구려를 소수민족이 세운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며 ‘교묘한 영토 가로채기(subtler land grab)’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 지방까지 영토를 확장했었으며 여기에는 현재 200만 명의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며 “중국은 남북한이 통일된 뒤 조선족들이 고구려를 한반도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분리운동을 벌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고 이 기사는 분석했다. 하버드대 박사과정을 마치고 한반도 역사책을 저술 중인 마크 바이팅턴의 말을 인용해 “통일 한국은 고구려 영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이고 있는데, 바이팅턴 박사는 “중국을 이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분명히 이데올로기적인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고구려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타임지는 쓰고 있다.

한편, 한국의 몇몇 언론은 외국 학자들이 ‘동북공정’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올해 6월말 『조선일보』의 한 기사에서는 6월 28일 ‘고구려연구회’와 ‘한국청년회의소’가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고구려의 정체성’에 발표자로 참석한 아 오치르 몽골국립역사박물관장이 “몽골인들이 세운 원(元) 제국은 중국이 아니라 몽골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한국인이 세운 고구려 역시 한국의 역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라고 말

90) 「[기자수첩] 몽골학자도 “고구려는 한국史”」 『조선일보』(2004. 06. 28).

91) 「‘침탈의 시대’, 어떻게 할 것인가」 『말』(2004. 1. 7).

했다고 보도했다.⁹⁰⁾ 또한 올해 초 『말』지의 기사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 게리 레드야드는 20년전 이미 중국의 고구려사 침탈을 예상했다고 한다.⁹¹⁾ 그는 지난 1986년 지린성 창춘의 역사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박물관장이 “427년 고구려가 수도를 지안현(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옮겨 더 이상 중국 역사가 아니다”라며 그 이후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말에 놀랐다는 것이다. 한편, 이 기사는 또한 러시아에서도 역사침탈의 징후를 일게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 러시아의 유리 바닌 동방학연구소 한국사 교수는 올해 초 모스크바대 기자회견에서 발해가 러시아 역사일 수 있다는 역사 논쟁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마치며

우리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한국 측의 반응을 개략적이거나 총체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글의 말미에 즈음하여 지적하고 싶은 점은 ‘동북공정’에 우리들 자신이 제기하고 있는 제반 논의들과 대응양태를 체계적으로 정리·분류하는 시도는 본고를 통하여 이제 겨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를 감안할 때, 동북공정과 관련된 한국에서의 제반 시각들에 대한 본고의 분석들은 많은 점에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과학이 요구하는 정밀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각을 스스로 평가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가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

92) 「타임 아시아판 “中, 통일이후 조선족 분리운동 우려”」 『동아일보』(2004.08.17).

논 단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분석 - 江振昌

포커스

구 유고제국에 날뛰는 민족주의의 그림자 - J.A.디란스

민족학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 언어정책 - 이유신
국제적 양자결연을 위한 다국간 룰을 강화하라 - A.카프스타인

Archive

❖ 민족일지(2004.2.~2004.7.)



중국의 동북진흥정책 분석

- 찬스와 과제 -

江 振 昌 (대만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연구원)

동북아시아에는 4가지의 '特'과 '老'가 존재한다. 4가지의 '特'이란 국유기업이 특히 많고, 중공업의 비중이 특히 크고, 역사의 나쁜 유산이 특히 무겁고, 도시기능이 특히 단일적인 것이다. 4가지의 '老'란 기업의 노구화, 노동자의 노화, 간부의 노화와 도시의 노구화라는 것이다.¹⁾

동북진흥에서는 '三太' 현상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데, 이는 심각한 관료의 부패, 심각한 생각의 지체, 심각한 경직적인 체제이며, 또 '흑룡강'이란 말도 있는데 이는, 관료가 가장 '黑'(악질)이고, 정부가 가장 '龔'(귀머거리)이며, 또 체제가 가장 '僵'(경직적)이라는 뜻이다. 동북3성은 총 면적이 80만 km², 인구 1억 여 명으로, 중국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역사 있는 공업기지도이며, 경제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개혁, 개방정책이 진전되는 가운데, 동북지구는 계획경제에서의 전진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도 역사의 나쁜 유산으로 변해, 발전의 찬스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왔



▲ 천지폭포

다. 중국경제 전체의 안정적 발전, 특히 珠江 델타, 長江델타, 북경, 천진지역의 급속한 발전과 비교할 경우, 그 쇠퇴는 명백하다.

동북의 낮은 공업기지의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해 자주 다음과 같은 수치가 인용된다. 즉 개혁, 개방정책초기에는 요령성의 공업생산액만으로 광동성의 2배였으나, 현재는 동북3성을 합쳐도 광동성의 그것만 못하다. 공업의 쇠퇴는 노동자의 실업을 의미한다.

현재 요령성만으로 조기 퇴직자 290만 명, 도시 등록실업자 1백만 명, 일시 휴직자로 노동계약기간이 끝난 사람(실질 실업자) 150만에 달한다. 또 수입이 있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160만 명 가까이 도시 최저생활보장(생활보호) 표준을 하회하는 수준에 있으며, 노동자의 쟁의, 스트라이크가 각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동북지구의 경제발전 지체

는 정부당국으로서는 두통꺼리다.

5년 전에는 '서부 대 개발'이 국가정책의 대상이 되었으나, 작년 2003년에는 경제전략 전체로 새로운 움직임이 있어, 胡-溫 신체제는 '東北振興'을 국책프로젝트로 추가했다. 2003

1) <經濟日報> (대만) 2003년8월16일 자.

년, 溫家寶는 노후화한 공업기지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세 번에 걸쳐 동북지구를 시찰, “동북진흥과 서부 대 개발전략은 상호 관련하는 동서의 두 바퀴이며, 전국적인 경제 전략에서의 중요한 두 가지의 문제다. 현재는 동북진흥을 돌출한 위치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2004년 3월의 卞人代, 정치협상회의 기간 중, 동북진흥은 토론의 중심적 의제가 되었으며, 거기서 나타나는 전략은 향후 5년간에 胡錦濤의 경제활동의 중점이 되고, 호 정권은 행정적인 업적을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동북진흥전략이 제기된 배경, 정책의 내용,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고찰해 보고 싶다.

‘동북진흥’ 정책의 배경

중국정부가 작년 ‘동북진흥’ 정책을 제기한 배경에는 세 가지의 요인이 있다. 첫째는 개혁, 개방 이래 형성돼온 지역간의 불균형한 발전을 조정할 필요가 생긴 것이며, 둘째는 개혁, 개방 이래의 경제시장화와 WTO가맹에 의한 영향으로 동북지구의 공, 농업이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이다. 셋째는 胡錦濤, 溫家寶의 신체제가 전임자와는 다른 경제정책을 제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나 이것이 최대의 배경인지 모른다.

불균형한 지역경제발전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발전에서는 선진적인 지역과 후진적인 지역이 생기고, 일종의 지역적 이중구조(Regional Dualism) 상황이 된다. 일부 도상 국에서는 초기에는 경제성장률을 추구, 빈곤에서의 탈피를 기도하기 위해, 제한된 공공자금을 비교우위에 있는 지구에 투입한다. 발전 잠재력이 있는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상당기간동안에는 지역적 균형

이 붕괴된다. 일정기간이 지나 지역적 빈부 격차가 확대, 불균형발전이 국가전체의 발전을 제약할 단계가 되면, 국가는 지체된 지역에서의 투자, 보조를 확대, 지역간의 균형을 유지하려 한다.

정책과 중점적 발전지역 관계에서, 중국에서는 과거 20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조정, 변동이 반복되어 왔으나, 그것은 대체로 다음 두 단계로 나뉘볼 수 있다. 제1단계(1979-92) - 중국경제전체의 성장을 목표로, 동부 연해지역을 중점으로 한 정책이 실시된 결과, 주장 및 장강 유역의 경제성장이 촉진돼 동서지역간의 빈부의 차가 확대됐다. 제2단계(1992년부터 현재) - 정책목표는 지역간의 협조적 발전에 두었다. 1992년에는 ‘서부 대 개발’ 정책이 실시됐고, 2003년에는 ‘동북진흥’ 정책이 책정되었으나, 이들은 지역간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일련의 정책에 근거한 것이었다.

두 번의 ‘동북현상’ 과 그 충격

1990년대 초, 시장경제화로 향한 국유기업개혁의 과정에서, 동부지구 공업에는 ‘기업경영이 곤란하고, 경제효과가 저하, 체제전환도 어렵다’ 등의 환경 부적응 증상이 출현했다. 당시에는 이것을 ‘(구)동북현상’ 이라고 칭했다. 이 동북현상은 일반적으로 일대 넓은 공업기지의 공업생산이 현저하게 쇠퇴하는 것을 나타내나,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됐다. 그것은 1. 경제의 발전 속도가 완만, 2. 공업생산의 하강, 3. 자원의 고갈과 대체산업의 부족 4. 인프라의 미정비가 공업의 발전을 제약 5. 사회효율의 저하와 노동자의 임금수입의 격감 6. 생태환경의 경시와 환경오염의 악화 - 등이다. ‘구 동북현상’의 만연에 의해 동북지구에서는 국유기업의 도산, 노동자의 실업, 임금의 부족 등의 현상이 빈발, 수만 명의 노동자가 가두에서 항의 데모를 하는 등 사회불안은 확대됐다.

동북지구에서는 공업이 시장경제에 적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농업에도 유사 증상이 발견된다. 특히 중국의 WTO가맹(2002년) 전후부터, 동북지구에는 '대량의 식량재고의 발생, 농업품의 판매난, 노동력이전의 곤란과 농민수입의 감소' 등 생산, 판매 면에서의 난제가 출현하고 있으며, 이는 '신 동북현상'이라고 불려지고 있다. 중래의 식량시장의 안정기로서의 역할을 해온 동북지구의 농산품은, 오늘날에는 산해관에서 출하되는 것마저 곤란하다. 농민들은 '중산하더라도 증수는 없다'는 상황에서 생활난에 빠져 있다. '구 동북현상'이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서 '신 동북현상'이 내습한 결과, 동북지구경제는 공업의 쇠퇴와 농업 생산 면에서의 이중의 중압에 직면하고 있다. 정세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조급하게 위기 구제책을 강구할 필요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胡-溫체제의 신 정책

두 번의 동북현상은 오래된 문제로, 江澤민 시대에도 어느 정도 노후 공업 지구의 국유기업 구제책은 채택되었다. 그러나 대대적으로 새로운 진흥책이 제기된 것은 胡-溫체제가 되어서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江澤민이 장강델타 전략에 두었던 중심을 동북지구로 옮기는 것이었다.

1980년대의 胡耀邦, 趙紫陽시대에는 연해지역과 주강델타의 개방이 경제정책의 중점이었다. 그 후 江澤민, 朱鎔基가 권력의 자리에 있었던 1990년대는 경제발전의 중점은 장강유역, 즉 상해를 중심으로 한 장강델타로 옮겨졌다. 본래, 오랫동안 걸쳐 서북지구에서 활약해 온 胡錦濤에 있어, 서부 대 개발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정책적 과제였으나, 전임자가 이미 착수했던 것이다. 따라서 동북지구는 신지도자들에 있어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영역이 되었다.

오랫동안의 정국과 사회 안정의 위협이 되어 온 지역간의 불균형발전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

해, 당 중앙은 동북진흥정책을 책정, 그것을 신세기에서의 소강사회건설의 '중대한 역사적 임무'의 일환으로 위치 지우고 있다. 동북진흥은 총서기 胡錦濤, 총리 溫家寶가 집정 이후 제기한 최초의 중요한 지역개발계획이며, 그 위치는 胡, 趙 시대에 제기된 연해개발전략이나 강, 주 시대의 서부 대 개발전략과 같은 높다.

동북진흥정책의 개요

동북진흥정책이 제기된 것은 2002년 11월의 제16차 당 대회였다. 대회보고에서, 동북지구의 낡은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조를 가속시키는 것을 지원, 자원개발을 축으로 한 도시와 산업의 결합을 지원, 일정수의 구체적이고 특징 있는 경제지역을 형성하는 것이 금후 5년간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이 명시되었다.

2003년 3월의 제10기 전인대의 정부활동보고에서는, 유효한 시책에 의해 동북지구의 노후 공업기지의 조정과 개조를 가속하는 것으로 동북지구의 구비할 전략적 위치가 재차 강조되고 있다. 정책책정에 향해, 溫家寶는 반 년간에 3번(3, 5, 8월)이나 동북지구를 조사연구로 방문, 현지에서 의견청취를 하고 있으나 이것이 국내외 미디어의 주목을 받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3년 8월3일, 溫家寶는 장춘시에서 개최된 '동북 노 공업기지진흥 좌담회'에 참가하고 있다. 이것인 근년 동북지구에서 개최된 가운데서는 최고 수준의 회의였으나, 거기서 溫家寶는 다음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1. 동북지구의 진흥을 가속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히 앞장서서 사상을 해방, '四新'(네 가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는 것이다. '사신'이란 발전에는 신사고가 필요하며 개혁에는 신독파구가 필요하며 개방에는 신국면이 필요하며 활동에는 신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자력갱생을 주로 하나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한다. 국가의 정책 자금 면에서의 지원은 시장경제의 규율을 존중 효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

3. 새로운 안전은 적게 하며 입구는 지나치게 넓게 하지 않으며 기존기업의 개조, 개조에 힘을 넣어 기존자원의 결합을 중시 생산요소의 사용효율을 인상해야 한다.

4. 실제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산업구조, 소유제구조, 국유경제구조 등의 경제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또 취업기회와 사회보장제도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다.

2003년 9월 29일, 胡錦濤는 중앙정치국회의에서 동북 노 공업기지의 진흥을 지원하는 것은 신세기에 전면적 소강사회를 건설함에 있어 '중대한 역사적 임무' 라고 했다. 회의 후에 통달된 중앙11호 문건에서는 동북지방의 부체를 경감, 조직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동북진흥정책을 실현키 위해서 국무원에 동북지구노공업기지조정개조지도소조판공실, 약칭 '東北辦'을 설치, 정책책임이나 조직 간의 조정 에 책임을 지게하고 있다. 구체적인 업무실시기구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약칭 '發改委')에 설치된 '東北辦'의 주임에는 '發改委'의 부주임인 장국보가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가을, 동북진흥프로젝트를 추진키 위해 '발개위'는 동북진흥에 관한 최초의 안전 100항목을 정했다. 투자총액은 610억 원이나, 그 대부분이 국가용자로 이자우대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전별 배분을 보면, 중공업기지가 집중한 요령성이 최대로 52항목, 투자액 440억 위엔으로 투자총액의 72.5%를 점하고 있다. 흑룡강성은 37건, 길림성은 11건이었다. 대상 업종은 기본적으로 장비제조(설비)공업, 원재료 산업 및 농산가공품(고도가공)산업의 3 분야였다. 이는 중앙정부의 동북지구 산업발전

의 위치부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북지구의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명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2004년 1월 2일자 <經濟觀察報>(북경)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즉 중앙정부는 심양시에 '동북진흥은행'을 설립할 예정이다. 자본금은 50억 위엔으로 중앙재정, 동북3성의 재정 및 민간자본의 공동출자가 된다. 6월에는 설립준비가 완료, 9월부터 정식으로 영업을 개시한다. '개발위'는 동북진흥은행안의 설립의 전 과정에 참가하게 되어 있는 듯 하다. 1월8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북경에서 신문기자를 초대했으나, 거기에는 요령성장 薄熙來, 길림성장 洪虎, 흑룡강성장 張左己가 동석, 동북 노 공업기지에 관한 정책, 구체적 시책 및 진척상황 및 동북진흥에 전력을 기울릴 것에 대한 소개를 했다.

상대적으로 봐, 溫家寶의 '東西互動'(동부, 서부를 다같이 개발한다)의 전략사상은 서부대 개발을 계속하고, 동북은 노 공업기술 진흥, 동부는 계속 양호한 상황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다. 동북진흥과 서부 대 개발에 각각 다른 처방전이 준비되었다. 과거의 연해개발이 정책을 부여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서부개발은 자금을 주는 것이며, 동북개발은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동북진흥정책은 작년 큰 여론을 불러일으켰으나, 2004년3월의 전인대에서의 비준을 거쳐, 전면적인 실시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동북진흥과 발전 찬스

2003년 여름, 동북진흥정책에 관한 내외 미디어보도가 많아짐에 따라, 동북각성의 관료, 전문가 및 민중의 다수는 중앙정부가 동북최대의 계획경제의 요새를 파괴, 시장경제로 유도할 것을 기대했다. 그것은 동북지구가 주강 델타, 장강델타, 북경, 천진, 당산의 環渤海地區에 이어 중국 제4의 경제성장지구로서의 신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다. 동북 노·공업기지가

발전할 기회는 주로 이하의 각 방면에서의 구체화 되었으나, 거기에는 중앙의 강력한 지원, 지구자원의 충분한 이용, 근린과의 협력에 의한 효력의 발휘, 계획경제의 타파와 지방정부의 주도 등이 포함된다. 상세한 것은 다음과 같다.

중앙정부의 배려가 최대의 지원

동북개조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앙(당, 정부)의 호의적인 관심과 지도력이다. 동북의 낡은 공업기지의 진흥은 제16차당대회에서 명확히 제기돼, 현재의 호-온체제에서는 집권당의 의견으로서 국책, 즉 신세기의 경제발전에서의 중대하고 또 긴급한 임무로 위치 지워져 있다.

동북진흥은 금후 5년간에 호온체제의 집정의 중점이나, 발전의 전도는 유망하다. 현재, 중국 공산당의 고위지도자, 예컨대 정치국상무위원 이장춘, 증경홍, 황국 등도 동북지구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국제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호, 온 수뇌가 공개 장소를 이용하여, 주변 각국이나 선진국 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예컨대 2003년 10월 7일, 溫家寶는 발리섬에서 개최된 ASEAN+3회의 등에서 일본, 한국과 공동으로 동북지구를 개발하자는 제의를 하고, 또 동월 하순에 오스트랄리아와 뉴질랜드를 방문한 胡錦濤도 동북지구에서의 상담의 기회를 만들려고 활동하고 있다.

공·농업 기반이 두텁고, 인재들도 풍부

동북지구는 중국대륙의 다른 지구, 특히 서부 지구 등과 비교, 독특한 우위성과 발전의 잠재력이 있다. 동북 3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40여종의 광물자원의 매장량에서 전국에서 제3위다. 과거 수차례 5개년계획의 실시로 충분한 공업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며 원유, 목재, 자동차 및 조선의 생산량은 각각 전국 생산량의 40%, 50%, 25%와 33%를 점하고, 공업전체 수준도 상위이며 대량의 기계 설비를 공급하고 있다.

또 동북지구는 농업기반에서도 혜택을 받고 있으며, 토양은 비옥하고 생산물도 많다. 동북3성의 경지면적은 중국전체의 20%, 삼림면적은 40%를 점하고 있다. 1인당 경지면적은 중국의 평균면적의 2배로, 중요한 상품화 식량기지가기도 하다. 그 밖에 동북지구는 고도한 도시화와 과학기술분야에서의 인재의 풍부함도 특징이다. 도시는 집중하여 상호 간격이 좁고, 산업관련은 밀접하여, 공업 집적도도 높다. 과학기술, 교육수준이 높아 인재도 많다. 심양, 장춘, 대련 하르빈 등의 제 도시에는 고등학부와 과학기술 연구소가 있다. 2001년의 통계로는 동북3성의(고등학교, 대학교 및 국유기업)의 전문기술자의 수는 각각 전국의 11.59%, 11.98%, 9.9%를 점해, 전국 제1위다. 이 훌륭한 인적자원능력을 충분히 활용하면, 동북진흥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리적 위치와 교통면에서의 우위

동북경제지구는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며, 또 연해지역에 위치한다. 인근 일본, 한국, 러시아, 몽골 등과 북경, 천진의 환 발해만 경제는 상호 인접, 지리적 우위성을 가지고, 후배지도 넓다. 어떤 연구자는 세계경제의 분업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瀋陽市는 중-일-한 3국이 핵이 되어 형성된 동북아시아무역권에 있을 뿐 아니라, 그 중심적인 위치를 점한다고도 보고 있다. 2002년 UN보고서에 의하면, 심양시는 중국에서 발전이 유망 시 되는 25개 도시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동북3성은 또 교통망의 밀도가 높아, 근대화된 수송망이 발달, 도로, 철도, 해운의 모든 교통망이 정비되어 있다. 동북지구의 철도밀도는 중국의 평균수준의 2.1배로, 그 가운데서도 遼寧省은 전국에서 가장 철도밀도가 높은 성이다. 동 성은 철도와 고속도로의 거리에서도 전국에서 제4위, 5위이며, 동북경제구의 핵이 될 조건

을 구비하고 있다. 또 흑룡강성은 러시아와 철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2성의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도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있다.

3성의 지도층이 그리는 청사진

합리적인 동북진흥계획을 작성하기 위해, 현재 동북3성의 지도층은 대단한 노력을 거듭, 각성의 초보적인 발전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遼寧省의 薄熙來 성장의 설계도는 '하나의 解消, 5개의 形成'이다. 그것은 역사의 나쁜 유산을 해소하고, 신흥 지구 산업, 심양, 대련의 2대공업기지, 자원부족지역의 신흥 산업, 전방위로서의 개방국면 및 다각적인 경제발전을 형성하는 것이다. 흑룡강성 성장은 금후 5개년 간에 기계설비, 석유화학, 에너지, 식품 및 의약품의 5대산업기지를 건설할 것을 제기하고 있다. 길림성 당서기는 8년간에 3단계를 나눠, 신행 공업기지를 건설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청사진이 실현될지의 여부는 자기들의 노력과 외부로부터의 협력의 우위를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 상대적으로 볼 때, 동북진흥의 성공여부는 먼저 제도적 개혁에 있으며, 진흥의 효과적인 추진은 민영경제를 발전시키는 시장시스템과 제도적 환경이 단기간에 육성될 수 있을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위기는 즉 전기다'는 말과 같이, 동북경제는 곤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그것을 충분히 인식, 외부의 지원을 받아드려 대대적인 개혁을 행하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할 수도 있다.

동북진흥이 직면한 과제

동북지구의 개종과 조정은 개혁, 개방이후 계속되고 있는 것이나 직면한 체제전환, 사상의 경직화, 오직 불평등이 방해가 돼, 결과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의치 않다. 지금 한꺼번에 중국 최후의 계획경제의 요새를 돌파하려고 하

더라도, 그것은 용이치는 않다. 개괄하면 동북경제의 세 가지의 나쁜 유산은 구 체제적인 사고 채무 및 잉여인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돌파구는 자금(고용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와 신체제이나,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다음에서 같은 이유에서다.

신체제는 '項目怪圈' 타파할 수 있을까

소위 '項目怪圈'이란 다음과 같은 상태를 표현한 것이다. 즉 계획경제체제에 대응하여 동북지구 지방정부는 오랫동안 대형 프로젝트에 의해 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열심이었다. 그러나 생산개시 후는 시장의 변화에 추종되지 않고, 곧 생산을 정지, 노동자를 '下崗'(일시귀휴, 실질실업)하여 진정, 데모 등의 사회불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국 연구자들은 '項目怪圈'은 동북 노·공업기지의 경제, 정치 및 사회형세를 악화시키는 중대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작년 말 이래, 동북의 낡은 공업기지의 진흥에 있어 신규 프로젝트를 실시할 것인가 여부가 민감한 화제가 되어 있다. 溫家寶는 '長春83講話'에서 '소수의 신 안전을 견지 한다'는 것을 제창하였으나, 그것은 '項目怪圈'의 두 가지 측면을 연출하는 것을 두려워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은 최종적으로는 600억 위엔의 투입과 100항목의 프로젝트의 추진을 결정, 일정규모의 증량에 의해 제도개혁을 견인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溫家寶가 지적하는 안전은 종래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것이기는 하나, 중앙은 대상안전과 국유기업 개혁과를 연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의 안전은 동북지구의 사람들에 의해서는 생각키 싫었던 것으로, 지금까지 그것이 '생물을 구하는 약'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項目怪圈'이란 계획시대의 대형 프로젝트 우선에 따라, 예산을 낭비하나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형 프로젝트 예산을 요구하는 일종의 '악 순환'을 야유

■ 중국 省·市 별 정부고관 오직사건(2003년)

성 시	오직건수	관여인원(명)	현금이상의 간부(명)	경제적 손실액(億元)
遼寧	8,486	-	735	4.80
河北	2,749	2,709	63	1.17
黑龍江	2,327	-	160	1.70
湖北	1,687	1,833	277	2.24
湖南	1,394	1,775	100	0.90
廣西	1,394	1,485	70	1.12
北京	324	375	82	2.80

〈출처〉 2004년1월30일자 新華網에서 작성.

http://news.xinhuanet.com/legal/2004-01/30/content_1291613.htm

한 표현)

고관의 부패가 사회풍기 문란

정부의 프로젝트에의 개입은 부패를 초래하기 쉽고, 근래 동북지구에서의 대형프로젝트에서는 모두 배후에서 부패문제가 출현하고 있다. 예컨대 중앙정부를 진감시킨 흑룡강성 완화시 당위 서기의 '馬德案件'이 있다. 목단강의 '대유 C' 프로젝트에 개입,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이 발각된 사건이었다. 또 할빈시의 '國貿城案件'의 예는 전 부시장인 주승문이 뇌물을 받아 중형에 처해졌다. 당시 흑룡강성의 당위서기였던 서유방과 성장이었던 전봉산은 작년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직했다. 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북지구의 관계에서는 뇌물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말까지 있으나 이는 최종적으로는 체제 외로 배제된다. 2004년 1월 30일, 정부계의 新華인터넷은 "2003년에 일부 성시 정부 관료의 범죄" 자료를 공포하고 있다. 요령성의 뇌물사건이 8486건, 뇌물금액 4.8억 위엔으로 전국에서 제1위였다. 흑룡강 성에서도 많은 부패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외자 이용함으로 비로소 발전

과거 5개년계획에서 정부의 서부지구에 대한 투자액은 2100억 위엔이었다. 중국 정부에 이

렇게 많은 자금을 다시 동북지구에 투입할 여력은 없다. 溫家寶도 언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동북지구의 진흥에서 중앙이 부여하고 있는 것은 '기회'이며 돈이 아니다. 따라서 외자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는 남은 공업기지재생의 주요과제다. 그러나 채무, 잉여인원을 포함한 기업이 정부의 역할을 행한다는 세 가지의 나쁜 유산에 직면하고 있는 현상으로, 외자를 유치할 수 있을 가 없을 가가 의문이다. 어떤 대만 기업가는 동북지구의 자원, 노동력이 타 지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3대 나쁜 유산 때문에 외자를 낙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들 장애를 어떻게 떨쳐 버리는가가 외자도입의 열쇠다. 3성의 성장들이 다같이 제기하고 있는 '물이 나오는 수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채무의 정리와 곤란

동북3성에서의 기업, 국유은행의 불량채권은 전국에서 첫 번째다. 채무액이 너무 커 동북지구 최대의 문제다. 요령성에서만 채무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고 있는 기업이 400여 기업도 있다. 이들 기업에서는 자산총액 185억 위엔에 대해, 부채총액이 260억 위엔에 달해, 평균부채률은 140%로 높다. 흑룡강성에서도 지방 국유기업 6000여개의 순자산액 421억 위엔에 대해

서, 불량자산이나 회수 불능 액이 860억 위엔에 달하고 있다. 성 정부는 무엇인가 기업을 도산시키지 않도록 지탱하고 있으나, 자산의 유실이 일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의 연구자는 동북지구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4대 산업은행의 불량채권을 심사처리, 금융시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불량채권 정리에는 방대한 자금이 필요하며, 중앙정부의 재정자금력을 초과하고 있다.

혼란요인으로서의 잉여노동력

국유기업의 인원정리에 의해 일시 귀휴자, 실업자의 발생이 불가피하고, 생활수단이 없는 대량의 노동자의 발생이 사회의 긴장을 높인다. 실업자의 급격한 증가가 현재화한 것에 의해, 사회보험비의 징수율이 저하, 보건기금부족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동북3성에서의 도시 실업자는 435만 명에 달하며, 3성에서는 양노보험, 실업보험, 일시귀휴자 기본생활보장, 도시 최저생활보장 등 4개의 사회보장제도에서의 기금부족은 100억 위엔을 넘는다. 이들 실업, 빈곤 등의 문제는 사회치안이나 정치의 안정에 의해 위협이 되고 있다. 사회구제조치의 필요성이 동북지구의 조정, 개조를 지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문제의 대처방법을 그릇치면, 동북지구의 경제는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관·분위 사과 국면타개 장애요인

‘민영기업은 왜 요령에 들어오지 않는가’ 이것은 2003년 12월 5일에 심양에서 개최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회의장에서 요령성위 서기의 발언이었다. 계약은 100억 위엔 정도 달했으나, 국내기업가는 이 때를 이용하여 과거의 문제를 호소, 동북의 유약한 투자환경을 비판, 정부기능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 남방의 민영기업가는 동북지구의 현상

을 축구에 비유, 그곳은 ‘정부 그라운드’로 ‘시장’은 아니라고 평했다. 정부를 주체로 하는 관본위의 의식과 전통이 투자를 바라는 사영기업들을 망설이게 하는 것이다. 동북지구에서는 오랫동안 정부가 기업의 주위를 돌았으나 기업은 반대로 몇 차례나 좌절을 맛봤다. 시장이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한다면 동북지구의 정부는 동맥경화에 걸린 손 정도라고 말해지도 한다.

오랫동안 계획경제체제의 가운데 경제운영을 해 온 동북지구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생각을 전환하는 것은 곤란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체제에 의 의존 중에 걸려있다. 일반노동자로부터 간부, 국유기업에서 민영기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정부 의존 증으로 취업은 정부에 발전은 정책에 의존한다고 하는 ‘기다리고, 의존하고, 요구하는’ 습관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 결과 동북지구에서는 개혁, 개방 이래 몇 차례나 중대한 찬스를 살리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변혁함에 있어서도 여의지 않았던 것이다.

기대되는 근린성과 협력 강화

동북의 낡은 공업기지의 구조는 어디에서도 같은 상황으로 소유제가 서로 비슷할 뿐 아니라, 지지산업도 근사적이다. 산업투자는 중공업이 중점으로 많은 공업기지가 형성되어 있어 협조보다 경합이 승한 듯이 보이나 실제로는 중복투자가 심해, 지역적인 특색, 비교우위나 협업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다.

중앙정부가 ‘동북진흥’ 정책을 제기, 장래의 구조조정이나 발전계획도 책정하고 있으나 3성 모두 기존의 산업을 근거로 계획책정에 열심히, 개조나 확장계획에도 시장의 요구가 그다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앞으로는 시장요구에 근거한 자원의 최적배분의 관점에서 지역경제협력을 강화, 각 지역의 발전계획을 조정할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동북지구의 국유기업의 저투자효율을 개선할 중요한 일보가 될 것이다.

동북진흥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고정 관념의 타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중앙정부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책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것들은 어느 것이나 완전한 것은 아니다. 관념(사고)은 환경의 산물이며, 선전만은 변화하지 않고, 실제로 시장경제를 행함으로써 비로소 변혁 가능한 것이다. 낡은 국유기업의 노동자를 스스로 시장으로 향하게 하는 것은 곤란하며, 먼저 임금배급의 노적을 청산, 일시귀휴노동자의 진정데모 등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개혁 개방후의 10수년간, 중국에서는 지역적인 불균형발전정책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연해 지구는 발전, 동북3성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저하하게 되었다. 그 후 동북지구에서는 계획경제의 후유증 등의 요인도 있고, 두 번에 걸친 소위 '동북현상' 이 출현, 일시귀휴 노동자들의 진정 데모가 계속 발생했기 때문에, 중앙정부도 동북 문제를 중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호-온체제의 동북진흥정책은 발전의 기회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희망에 가득차있다. 동북 지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해 고정자산도 충분하고, 교통, 수송도 발달, 과학기술의 수준도 높은 등, 4가지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 과거부터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한 지구였으며, 이번에는 또 중앙정부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 일련의 정책이 책정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를 중국 제4의 경제고도성장지역으로 하려는 목표의 실현도 안전에 박두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도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경우, 동북의 낡은 공업기지의 개조임무는 곤란에 가득 차 있으며 직면하는 모순과 문제는 여전히 돌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것은 석탄, 석유, 목재, 철광석 등의 자원이 급속히 고갈, 전통적인 공업의

우위가 차례로 저하고 있는 것이다. 또 국유기업에서는 부채율이 보편적으로 높아 개조자금도 궁핍하다. 국유경제가 주도적 지위를 점한다고 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현저해 그 때문에 민영경제의 발전은 많은 곤란에 직면하고 있다. 더욱이 신규로 창출된 취업기회가 적어 빈곤층인구가 많기 때문에 사회보장예의 압력이 큰 것 등의 문제도 있다. 동북경제의 진흥은 어느 관점에서 보더라도 그 필요성과 긴급성에서 보면 당연하나 중앙정부의 책정한 '동북풍' (동북중시의 자세)이 동북지구의 공업과 농업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는 낙관을 허락지 않는 상황이다.

수년전, 중국은 '서부 대 개발' 정책을 대대적으로 내세웠다. 발전의 중점을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 그 가운데서도 경제발전 수준의 낮은 서부지구로 옮겨 경사적 정책을 활용하여 당해 지구에의 외자도입량을 증가할 것을 제창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국제자금을 대량으로 투입하면서도, 그것이 기대하는 것과 같은 민간자금이나 외자도입의 유인이 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서부지구의 경제성장은 과거 수년간도 '敬陪末座' (말석에 앉다)체로였다. 당시 강렬했던 '서북풍'도 지금은 나날이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대지에 새롭게 불기 시작한 '동북풍'의 세력이 어디까지 지속할 것인가.

동북의 낡은 공업기지진흥의 나팔소리는 우렁차나 개괄하면 찬스보다도 과제가 많다. 지금은 어디서 오는가, 잉여 노동력은 어디에 흡수되는 것인가, 체제는 어떻게 개혁되는 것인가 이들 문제들이 동북진흥의 성패의 열쇠를 쥐고 있다. 동북개조 프로젝트는 지금 당장은 사상의 혁신, 잉여인원의 재배치 및 체제의 전환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으나 그러면서도 호-온체제의 동북의 낡은 공업기지 진흥정책은 초보적인 성과를 얻고 있는 듯 하며 장기적인 발전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구 유고제국에 날뛰는 민족주의의 그림자

잔 아르노 디란스 (Jean-Arnaud Derens, 저널리스트)

발칸제국에서의 민주화의 기대는 사라져 버렸다. 세르비아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정치적 위기에 빠져있고, 자그레브는 민족주의 정당 크로아치아 민주동맹(HDZ)이 2003년 11월23일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에서는 2002년10월에, 여당의 자리에 있었던 민주 파 세력들의 불안정한 연합을 세 개의 민족주의 정당이 분열시키려 하고 있다.

1990년대를 통해 유럽에서 높은 평가를 얻은 발칸제국의 민주계 야당들은 민족주의와 인연을 끊고, 자국을 '정상화' 하고, 유럽연합(EU)과의 접근이라는 궤도에 올라타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세르비아의 신 여당연합에는 일찍부터 분열조짐이 보이고, 코슈토니자 대통령의 세르비아민주당(DSS)은 진지치 수상의 민주당(DS)과 일찍부터 적대했다. 정권을 잡자마자, 세르비아의 민주 파 세력은 과거 10년이 넘는 대립을 재연시키는 듯 했다. 2003년12월28일의 선거에서 나타난 것은 그것이 민족주의정당 세르비아급진당(SRS)을 이롭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DSS와 DS의 항쟁에서는 구유고 국제전법 법정(ICTY)과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가 초점이 되었다. 코슈토니자 대통령이 국제법정과의 전면적인 협력을 거부, 괴변을 펼친 것은 국제법정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에서다. 즉 세르비아인은 지금까지 계속 '집단으로서' 역사의 희생자였으며, 전쟁범죄의 가해자일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범죄를 의심한 개인들을 재판

에 회부하는 것 자체, 세르비아민족에 주어진 집단책임의 의심을 불식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지치 수상마저, 이러한 것을 말하려 하지 않고, ICTY와의 협력이 세르비아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의무이며, 국제사회에의 복귀와 귀중한 원조의 획득을 위한 치러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쳤다.

예컨대 미국은 원조의 조건으로서 세르비아인 용의자의 체포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몇 차례나 최후통첩을 보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의치 않았다. 미로세비치가 2001년 6월 28일에 바쿠에 이송됐고, 거의 모든 세르비아인 용의자들도, 무라지치 장군을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은 운명을 답습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비아에 실제로 제공된 용자는 당초 약속의 금액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러한 위협이나 논리로는 세르비아의 여론이 국제법정의 역사적인 의의를 납득 할 수 없었다. 그것도 ICTY는 세르비아만을 눈앞의 적으로 하고 있는 듯 비쳤다. 2003년 봄, 전범문제를 담당하는 미국의 프로스파 무임소 대사는 무라지치와 카라지치의 체



포를 다시 요구했으나, 이것은 다른 나라의 용의자들에게는 일종의 '恩赦'가 부여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ICTY의 델 폰티 주검검찰관은 다음 기소에서는 '모든 민족 집단'이 대상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코소보의 알바니아계 주민들에 대한 수사도 '많은 곤란에 부딪치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있다. 이 지역에 전개되는 NATO의 부대가, 코소보 해방군(UCK)의 전 켈리라 병에 관한 수사에 전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듯도 하다.

배경에 있는 경제부진

크로아치아의 경우, 2000년1월부터 2003년11월까지 정권은 담당했던 라찬 사민내각은 ICTY와의 협력에 동의한다고 하는 원칙론을 주장한 것에 불과했다. 2002년10월에는 참모총장이었던 보벤토코 장군이 기소돼, 크로아치아 정부와 ICTY 사이에 중대한 위기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정부와 민족주의 야당은 한 덩어리가 돼 인도를 거부했으나, 그가 사망함으로써 위기는 지나갔다. 라찬 수상은 '배반자'로 불릴 것 이 두려워, 크로아치아 군에 의한 범죄를 논하기도, 1991년부터 95년의 '애국전쟁'의 재평가를 거절했다. 크로아치아 사회에서도 세르비아와 똑같이, ICTY의 요구를 계기로, 현재로부터 오래되지 않은 과거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려는 기운이 생겨나지는 않았던 것이다.

2000년에 정권을 잡은 민주 파 세력은 민족주의 엘리트에 의한 '약탈경제'가 초래한 참상에도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발칸제국의 경제는 지금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세르비아에는 연금생활자가 100만 명, 취업자가 100만 명, 실업자가 100만 명이다. 평균임금은 월 150유로에도 미치지 않고, 연금은 그 절반이다. 관광수입이 있는 크로아치아는 조금 나은 편이나, 그것도 실업자가 1/3에 달하고 있

으며,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대외채무를 내포하고 있다.

크로아치아의 라찬 수상의 당이나 세르비아의 진지 수상(고인)의 당은 사회민주주의를 간판으로 하고 있으나, 이들 정권은 경제면이나 사회면에서의 정책이념을 결여하고 있다. 이행경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소리는 어느 정당에서도 대변되지 않는다. 세르비아에서는 미로세비치의 사회당이 좌파정당으로의 변신을 주장했으나,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민족주의 극우가 이러한 공백에 침투하려 하고 있다.

확실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역내관계의 분야에서만은 아니다. 2003년 봄 이래, 크로아치아와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합이 각각 국민은 비자를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 동년 가을에는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연합의 마로비치대통령이 전쟁범죄에 대해서 크로아치아의 메시치대통령과 사죄를 교환, 또 보스니아에서도 사죄를 표명했다. 구 유고슬라비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관계구축이 시작, 경제교류에 의해 촉진되고 있는 듯이 생각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이러한 정상화에서도 무슨 역할도 하지 않고 있다.

역사는 이상하게도, 2004년의 민족주의세력은 1991년의 그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크로아치아의 사나딜 수상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신생' HDZ가 90년대에 보였던 과격화와는 절연한 것을 강조한다. HDZ는 유럽의회의 회 파인 유럽인민연합을 맞아들여지고 있다.

이상한 것은, 사나딜 내각은 그전 사민당 내각에 비해, ICTY에 기소된 크로아치아 인 용의자를 체포하기 쉬운 입장에 있다. 사나딜 수상이 '나쁜 크로아티아 인'이라고 비난받게 되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로아티아의 신경권에 있어서, 이 도박은 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국제법정과 잘 협력하는 것은 크로아치아가 2007년, 2009년, 혹은 2010에, 다른 발칸 제국을 기다리지 않고 EU에 가입을 단행키

위해 지볼해야할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다.

국제보호가 장애라고 하는 모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민주 파 세력도 EU 가입을 기대한다고 표명하고 있으나, 그 입장은 크로아치아 정도로 확실치는 않다. 2003년 6월에 디사로니키에서 열린 EU 수뇌회의에서는 '서 발칸제국', 즉 2004년 5월의 가맹이 결정되고 있는 슬로바키아를 제외한 구 유고제국, 및 알바니아의 '유럽통합은 하늘이 정' 했다고 언명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제국에 대한 구체적인 가맹 일정은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다. EU 가입의 목표실현이 불확실 한 가운데, 가일층의 경제적인 희생을 국민들에게 요구, ICTY와의 협력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세르비아와 보스니아의 경우, 앞으로 국가의 성질과 형태가 불명확한 것이, 유럽연합의 전도에 검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EU는 코소보문제를 당분간 '동결' 해 두기 위해, 유고연방에 대신하여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연합의 창설을 강요했다. 2003년 2월 5일에 발족한 동 연합은 3년간의 '시한부 국가'에 지나지 않으며,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의 개혁정책의 장애가 되고 있다. 양자가 각각 별도로 EU가입으로 향해 정책을 정할 것인가도 알 수 없으며, 코소보의 최종적인 지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통합에 대해서 논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보스니아에서는 디톤 협정의 개정은 이미 타브는 아니다. 컨설팅 기관들은 현재의 국가체제의 발본적

인 개정을 제언하고 있다. 특정하게 정해진 두개의 '구성주체'에 대신하여 12개의 준 주와 세르바이 인 공화국, 볼케코시로 분할한다는 것이다. 이 안은 세르비아 계, 크로아치아 계, 무슬림 계 각각의 민족주의 세력들에게서 큰 반발을 사게 되었다.

2002년에는 민주행동당(SDA), 세르비아민주당(SDS), 크로아치아 민주동맹(HDZ)의 3개 민족주의 정당이 정권에 복귀, 자기들의 정치적 독점에 제동을 걸려는 개혁을 전면적으로 저지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국제적인 보호조치가 보스니아의 유럽통합에 대한 주된 장애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디톤 협정에서 8년을 거친 현재도, 국제사회에는 발칸 지역에 대해서는 명료하고 현실적인 로드 맵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마케도니아와 보스니아에서는 NATO 부대의 축소와 병행하여 유럽경찰부대의 주둔이 진전돼, 안전보장의 권한이 EU에 이양되고 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나 코소보, 혹은 몬테네그로에서도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만약 사나딜 수상이 약속을 이행할 수 있다고 하면, 크로아치아는 적어도 '서 발칸제국'의 속박에서 벗어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제국은, EU 속에 산재하는 만성적인 저개발지역이 되고 말 우려가 높다. 민족주의 세력이 더욱 힘을 강화하게 되더라도 놀랄 일은 아니다. 이들 국가들은 오직과 범죄조직에 의해 침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경하고 있는 구미제국에 접근키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할 불법이민 예비군들이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Le Monde diplomatique, 2004년 3월호)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정책

이 유 신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

소연방 해체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1980년대 말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카자흐스탄은 "주권국가" ("sovereign state")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시도의 하나로 그리고 1991년 말 소연방 해체 이후엔 자국의 여러 민족을 통합하려는 시도의 하나로 단일국가언어를 구축하려 하지만 이 노력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¹⁾ 이 글은 왜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시도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지 분석해 보는데 있다. 이 분석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을 획득한 여러 후식민국가들 (post-colonial countries)에서 시도된 단일국가언어 구축 실패의 역사적 경험에서 얻어진 가설들을 카자흐스탄에 적용해 볼 것이다.

우리가 카자흐스탄과 후식민국가들을 비교해 보는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두 가지이다. 첫째, 이 모든 국가들이 민족분포의 심각한 고려 없이 제국들의 소위 “분열하여 지배하라” (“divide and rule”)라는 정책에 의해 생겨난 나라들이고, 이로 말미암아 모든 국가들은 건실한 독립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자국의 여러 민족을 통합해야 했기 때문이다. 둘째, 소련 민족정책 전문가 존 암스트롱 (John Armstrong)에 의하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정책은 지배민족 러시아인과 피지배민족 중앙아시아인이 인종적으로 달랐다는 점과 중앙아시아가 러시아에 인력공급의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점에서 식민 (colonial)통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²⁾ 이 비교연구는 단일국가언어 구축에 있어서

카자흐스탄과 후식민국가들과의 유사성과 차이점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의 실패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밝힐 것이다. 여러 학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후식민국가에서 시도된 단일국가언어 구축의 실패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고 있는데 이 다양한 원인은 다음의 네 가지 중요 요소로 압축될 수 있다. 첫 번째 요소는 다민족으로 구성된 후식민국가에서 어떤 특정 민족의 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족간 분쟁의 위험성이고, 두 번째 요소는 어떤 특정 민족의 언어가 공식어로 지정되고 난 후 이를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서의 재원의 문제이고, 세 번째 요소와 네 번째 요소는 후식민국가의 토착어 (indigenous or non-colonial language

1) 여기서 단일국가언어란 다민족 국가에서의 공통의 언어 (common language)를 뜻하는 말이고 이 논문에서는 다민족 국가의 대다수 교육기관 및 정부기관에서 어떤 특정의 한 언어가 활용될 때 공통의 언어가 구축되었다고 정의한다.

2) John Armstrong, "The Ethnic Scene in the Soviet Union: The View of the Dictatorship," in Erich Goldhagen, ed., *Ethnic Minorities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Washington, and London: Frederick A. Praeger, 1968), pp. 24-25, 28. On this point, see also Geoffrey Wheeler, *The Peoples of Soviet Central Asia* (London: Bodley Head, 1966), p. 113; Gregory Gleason, *Central Asian States: Discovering Independence*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7), pp. 9-10.

〈표-1〉 카자흐스탄의 민족분포, 1926-1994년

년도	1926	1939	1959	1970	1979	1989	1994
총인구(천명)	6,193	6,139	9,295	13,009	14,685	16,463	16,870
카자흐인	58.5	37.6	29.8	32.6	36	39.7	44.3
러시아인	20.4	40	42.7	42.4	40.8	37.8	35.8
기타민족(%)	21.1%	22.4%	27.5%	25%	23.2%	22.5%	19.9%

자료: M. Suzhikov, *Mezhnatsional'nye Otnosheniia v Kazakhstane: Teoriia i Praktika Regulirovaniia* (Almaty: Gylm, 1993), p. 52; *Demograficheskii Ezhegodnik Kazakhstana* (Almaty: Kazinformtsentr, 1994), p. 55.

〈표-2〉 중앙아시아의 토착인(Indigene)과 러시아인 분포(%)

	1959		1970		1979		1989	
	토착인	러시아인	토착인	러시아인	토착인	러시아인	토착인	러시아인
카자흐스탄	30	42.7	32.6	42.4	36	40.8	39.7	37.8
키르기즈스탄	40.5	30.2	43.8	29.2	47.9	25.9	52.5	21.5
타지키스탄	53.1	13.3	56.2	11.9	58.8	10.4	62.3	7.6
투르크메니스탄	60.9	17.3	65.6	14.5	68.4	12.6	72	9.5
우즈베키스탄	62.1	13.5	65.5	12.5	68.7	10.8	71.4	8.3

자료: Robert Kaiser,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in Russia and the USS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p. 174.

〈표-3〉 카자흐스탄의 민족분포, 1992년과1994년

	1992년 1월		1994년 1월	
	총인구 = 16,891,613		총인구 = 16,870,362	
	인구	퍼센트	인구	퍼센트
카자흐인	7,073,072	41.9	7,474,478	44.3
러시아인	6,257,084	37	6,041,586	35.8
우크라이나인	889,795	5.2	6,041,586	5.1
독일인	786,101	4.7	856,665	3.6
우즈베크인	356,408	2.1	613,820	2.2
타타르인	336,599	2	371,584	2
백러시아인	186,712	1.1	177,615	1.1
아제르인	97,954	0.6	101,950	0.6
기타민족	910,888	5.4	902,002	5.3

자료: *Demograficheskii Ezhegodnik Kazakhstana* (Almaty: Kazinformtsentr, 1994), pp. 54-55.

ges) 중에 하나가 공식어로 채택되었을 때 발견 되는 요소로, 이 공식어에 대한 후식민국가 국민들의 부정적 견해와 이 공식어를 잘 알지 못

하는 후식민국가 엘리트들의 조직적 저항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위의 가설들을 카자흐스탄에 하나하나 적용해 볼 것이다.



카자흐스탄의 민족과 언어분포 현황

위 분석에 앞서 우리는 카자흐스탄의 민족분포 현황과 언어분포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련붕괴와 더불어 완전독립을 획득한 카자흐스탄은 자국민족의 수가 과반수가 넘지 않는 유일한 구소련 공화국이었다³⁾ (표-1, 2, 3 참조). 독립당시 카자흐인이 카자흐스탄 인구의 41.9 퍼센트를 차지한 반면에 러시아인은 카자흐스탄 인구의 37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1994년에도 위의 수치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표-3 참조). 카자흐스탄 대다수의 국민이 카자흐어보다는 러시아어에 능통해 있었는데 다음의 몇 가지 정황은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약 140,000명의 카자흐인이 살고 있는 카자흐스탄의 구수도 알마티(Almaty)에 카자흐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중등학교(secondary schools)

가 2개 뿐이었고 1989년 당시 파블로다르구(Pavlodar Oblast) 인구의 3분에 1이 카자흐인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7퍼센트의 카자흐인 학생만이 카자흐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다녔다.⁴⁾ 그리하여 마르타 올cott(Martha Olcott)는 1989년 카자흐스탄 전체로 볼 때 러시아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다닌 학생의 수 (2,000,000)가 카자흐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에 다닌 학생수 (930,000)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지적하고 있다.⁵⁾ 여러 학자에 의하면 카자흐인중의 40 퍼센트만이 자민족의 언어를 알고 있었고 1 퍼센트 미만의 러시아인이 카자흐어를 알고 있었다고 한다.⁶⁾ 이것은 아마도 구소련 공화국 중 카자흐스탄이 가장 러시아화(Russified)된 공화국 중에 하나였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민족간 분쟁의 위험성

후식민국가 전문가들은 이 나라들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소로 민족간 분쟁의 위험성을 꼽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다민족으로 구성된 후식민국가가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민족의 언어를 공식어로 지정해야 되는데, 이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대다수의 경우 소수민족)의 정체성에 위협을 가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정치·경제 활동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민족간 분쟁이나 국가의 분할을 야기할 수 있는 위

3) Martha Olcott, "Kazakhstan: A Republic of Minorities" in Ian Bremmer and Ray Taras, eds., *Nation and Politics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 313.

4) William Fierman,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Formulations in Policy Documents 1987-1997,"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2) (1998), p. 175.

5) Olcott, "Perestroika in Kazakhstan," *Problems of Communism* 39(4) (1990), p. 68.

6) Bhavna Dave, "National Revival in Kazakhstan: Language Shift and Identity Change," *Post-Soviet Affairs* 12(1) (1996), p. 54; David Laitin, "Language and Nationalism in the Post-Soviet Republics," *Post-Soviet Affairs* 12(1) (1996), p. 6. 다른 학자들은 카자흐어를 알지 못하는 카자흐인은 이 민족의 25 내지 40 퍼센트라고 말한다. Fierman,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Formulations in Policy Documents 1987-1997," p. 175; Pal Kolsto, "Is Kazakhstan Being Kazakhified?" *Analysis of Current Events* 9(11) (1997), p. 3.

협성을 띄고 있다는 것이다.⁷⁾

사실 20세기 중반 파키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시도는 이러한 사태를 낳았다. 파키스탄 서부지역의 우르두어(Urdu)를 말하는 민족이 자민족의 언어를 파키스탄의 공식어로 지정하려 했을 때 파키스탄 동부지역의 벵갈어(Bengali)를 말하는 민족은 1948년부터 위의 조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시위를 시작했고 1971년에 와서는 자민족의 언어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방글라데시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다.⁸⁾ 언어관련 분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소웨토라는 지방에서도 1976년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통용어로 영어대신 네덜란드어(Afrikaans)를 사용한다는 조치에 반대시위하면서 일어났다. 이 시위 진압과정에서 1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이 사건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로 하여금 소웨토에서의 사태는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게 하였다.⁹⁾ 이와 같은 민족간 분쟁의 위협성은 공식어를 선택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공식어가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의 실현화를 저해한다는 것이다.¹⁰⁾

이 가설은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과정에도 적용된다. 물론, 대다수의 후식민국가와 달리 카자흐스탄은 자국의 공식어를 채택하는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카자흐스탄이 소련이 붕괴되기 전인 1989년 9월에 카자흐어를 공식어로 채택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러시아인이 주축인 소련중앙정부가 카자흐스탄에 대해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였기에 카자흐어의 공식어 채택은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는 그리 큰 의미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공식어 선택이후 이를 단일국가언어 구축으로 실현하는 것은 카자흐스탄의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분쟁의 위협성을 의미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민족간 분쟁의 위협성 때문에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했다. 1990년 6월 카자흐스탄 정부는 "2000년까지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카자흐어와 다른 민족 언어 발전에 관한 국가 계획" ("State Program on the Development of the Kazakh Language and Other National Languages in the Kazakh SSR

7) Ngozi Caleb Kamalu, "Language Planning and Nation-Building in Africa: The Kenyan Example," *Scandinavian Journal of Development Alternatives* 15 (March 1996), pp. 62-63; Samuel Obeng and Efurosibina Adegbija, "Sub-Saharan Africa" in Joshua Fishman, ed.,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364-365; Jyotirindra Das Gupta, "Ethnicity, Language Demands, and National Development," *Ethnicity* 1(1) (1974), p. 71; Donald Horowitz,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p. 223; Herbert Kelman, "Language As an Aid and Barrier to Involvement in the National System" in Joan Rubin and Bjorn Jernudd, eds., *Can Language Be Plann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1), p. 35.

8) K. M. de Silva, "Language, Ethnicity and Politics in South Asia," *Ethnic Studies Report* (14)(1) (1996), p. 3; Das Gupta, "Language, National Unity, and Shared Development in South Asia" in William Beer and James Jacob, eds.,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Unity*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5), p. 201.

9) Kamalu, p. 57.

10) Hans Dua, "The National Language and the ex-Colonial Language as Rivals: The Case of Ind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4(3) (1993), p. 296; Roland Breton, "The Handicaps of Language Planning in Africa" in David Marshall, ed., *Language Planning: Focusschrift In Honor of Joshua A. Fishman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Vol. III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1), p. 166.

11) Olcott, "Democratizat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azakhstan"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Conflict, Cleavage, and Chang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p. 215.

in the Period Up Until 2000")을 채택했다. 이 계획은 정부기관과 기타 직장 등에서의 언어를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스케줄을 다루고 있었는데, 카자흐스탄 정부는 자국의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분쟁의 위험성 때문에 위 계획을 실현할 수가 없었다.¹²⁾

이와 비슷한 상황은 카자흐스탄이 완전독립을 한 이후에도 계속 전개되었다. 이는 카자흐스탄이 독립국가 최초헌법에서의 언어의 법적 지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잘 드러났다. 1992년 당시 많은 카자흐 민족주의자들은 자국의 헌법은 카자흐어만이 공식어임을 천명해야 하고 구소련당시 러시아어에 부여된 민족간 소통어 (language of inter-ethnic communication)의 애매 모호한 법적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시위를 주도한 반면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어가 카자흐스탄의 공식어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외쳐댔고 일부의 러시아인들은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러시아 자치구역 설정을 요구했다.¹³⁾ 이와 같은 카자흐인과 러시아인의 첨예한 이해대립은 이 두 민족간의 충돌 위험성을 의미했고, 이 위험성은 1993년에 카자흐스탄 정부가 1992년의 헌법초안을 수정하게 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친 듯 했다. 1992년의 헌법초안은 러시아어에 부여된 민족간 소통어 법적지위에 대한 조항을 없앴는데 1993년에 실제로

채택된 카자흐스탄의 헌법은 러시아어에 부여된 민족간 소통어 법적지위에 대한 조항을 그대로 유지시켰다.¹⁴⁾ 이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족간 분쟁의 위험성을 우려하여 단일국가언어 구축의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1990년대 후반 카자흐스탄이 자국의 언어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목격된다. 법률초안에 따르면 카자흐인은 2001년 1월까지 자국의 공식어 카자흐어를 습득해야 하고, 러시아인 및 타민족은 2006년 6월까지 카자흐어를 습득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종 법안이 1997년 채택되었을 즈음엔 위의 조항은 사라졌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러시아인들의 법률초안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었다.¹⁵⁾

이 반발은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98년 초 카자흐스탄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이 주축이 된 슬라브 민족들은 러시아 공동체 (The Russian Community)라는 조직을 결성하는데 이 조직의 중요목적중 하나는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고 카자흐스탄 내에서의 러시아어의 우위를 지키는 것이었다.¹⁶⁾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데이비드 라이틴 (David Laitin)은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의 가능성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¹⁷⁾

12) Fierman,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Formulations in Policy Documents 1987-1997," pp. 176, 181.

13) Kolsto, *Russian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 1995), p. 247; Rober Kaiser and Jeff Chinn, "Russian-Kazakh Relations in Kazakhstan," *Post-Soviet Geography* 36(5) (1995), p. 264; Bess Brown, "Russian Speakers Demonstrate in Kazakhstan," *OMRI Daily Digest*, December 8 1992; Mikhail Alexandrov, *Uneasy Allianc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Kazakhstan in the Post-Soviet Era, 1992-1997* (Westport CO: Greenwood Press, 1999), pp. 112-116; *Krasnaia Zvezda* June 1 1994; *Karavan*, January 6 1995, p. 7 in *FBIS-SOV-95-010-S: Moscow Interfax*, November 20 1996 in *FBIS-SOV-96-226*.

14) Kaiser and Chinn, pp. 268-269; *Kazakhstanskaia Pravda*, February 2 1993, p. 3; Fierman,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Formulations in Policy Documents 1987-1997," p. 181.

15) Kolsto, "Is Kazakhstan Being Kazakhified?" p. 3; Merhat Shaipzhanov and Charles Recknagel, "Kazakhstan: New Language Law Allows Use of Kazakh and Russian," *RFE/RL Weekday Magazine*, April 3 1997.

16) *Interfax-Kazakhstan*, April 29 1988 in *BBC Worldwide Monitoring*, May 1 1988.

재원의 문제

후식민국가에서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재원의 문제이다. 단일국가언어 구축이라는 것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이기는 하지만, 단기간적으로 학교건축, 선생님 교육 및 인건비, 그리고 새 교과서 발행 등의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아프리카 많은 국가들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사업이 중도에 중단되었다는 것이다.¹⁸⁾

이 가설 또한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시도는 소련방 해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1980년 말 곧 새로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도취 속에 시도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에 들어가게 될 비용에 대한 철저한 고려 없이 시작되었다.¹⁹⁾ 이 비용의 문제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되면서 더욱 더 심각해진다. 소련의 붕괴는 중앙정부의 보조금 시스템, 공화국간 무역, 그리고 교통체계 등의 마비를 불러왔고 이는 다시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모든 구소련 공화국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가했다. 이 경제적 피해는 카자흐스탄이 중앙통제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더욱 커졌고 1997년에 와서 카자흐스탄의 경제규모

는 1989년과 대비해 반으로 줄어들었다.²⁰⁾

이러한 경제적 상황은 단일국가언어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어려움을 의미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의 많은 학교가 건물을 유지하는 비용조차 정부로부터 받지 못했으며 카자흐어로 된 교과서는 거의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²¹⁾

철도연구소에서 경리로 일하며 카자흐어를 배우고 있는 베라 니코라예브나 (Vera Nikolaevna)는 카자흐어 교과서의 수준에 대해 언급하며 "이런 교과서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카자흐어의 습득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다.²²⁾ 설상가상으로 이 교과서조차 카자흐스탄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예전의 50퍼센트 밖에 발행되지 못했다.²³⁾

카자흐어를 가르칠 선생님의 부족은 위의 문제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도시지역에서의 선생님 부족현상은 더욱 심각해 1995년과 1996년 사이엔 러시아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서의 10 퍼센트가 카자흐어 수업을 아예 개설하지도 않았다.²⁴⁾

그리고 1996년 통계에 의하면 전체교육 기관 중 23 퍼센트의 초등학교 이전의 기관 (preschool institutions)에서, 40퍼센트의 일반교육기관 (general education school), 27.3 퍼센트의 중등·전문교육기관

17) Laitin,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p. 130.

18) Beban Chumbow, "Toward a Language Planning Model for Africa," *Journal of West African Languages* 17(1) (1987), p. 15 cited in Fierman, *Language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Uzbek Experience*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1), p. 26; Breton, p. 165.

19) Fierman,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Formulations in Policy Documents 1987-1997," p. 176.

20) Alexandrov, p. 138.

21) Fierman, "Inside Kazakstan's Educational System: Linguistic Kazakization and Economic Realities," *ISRE Newsletter*, No. 2 (Fall 1996), p. 6.

22) Laitin,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p. 156에서 인용.

23) Fierman, "Inside Kazakstan's Educational System: Linguistic Kazakization and Economic Realities," p. 6.

24) *Ibid.*, p. 8.

(secondary specialized educational institutions), 그리고 34.3 퍼센트의 고등교육 기관 (higher education)에서만 모든 수업이 카자흐어로 진행되었다.²⁵⁾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자흐어로 수업을 가르칠 선생님을 배출해야 할 정부는 재원의 문제 때문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연히 몇몇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의 단일 국가언어 구축 시도에 회의적이다.²⁶⁾ 카자흐인은 2001년 1월까지 자국의 공식어 카자흐어를 습득해야 하고, 러시아인 및 타민족은 2006년 6월까지 카자흐어를 습득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1997년의 법률 초안을 언급하며, 카자흐스탄 기자 빅토르 베르크 (Viktor Verk)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 하에서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시도는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 시도는 단지 카자흐스탄 국민의 대다수를 괴롭히고 끝날 텅 빈 형식에 불과하지 않는가?... 실행되지도 못할 법을 제정하려 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실제로 카자흐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많은 학교가 문을 닫고 있고 카자흐어 교과서도 부족한 상황에서 카자흐스탄 정부가 정말로 위의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단일국가언어를 구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나는 지금의 경제적 상황에서 재원의 문제를 고려해 볼 때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은 불가능하다고 본다.²⁷⁾

토착 언어(Indigenous Languages)에 대한 부정적 견해

후식민국가에서 토착 언어중의 하나가 공식어로 지정되었을 때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도 중요한 비중을 갖는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대다수의 후식민국가들은 제국언어(colonial language)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고 ‘언어독립’이라는 정책을 통해 그들 존재의 정당성을 높이려 했다. 일례로, 나미비아의 여러 민족주의자들은 자국의 공식어로 영어를 채택하는 것은 신식민(neo-colonial)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극구 반대했다.²⁸⁾

이 ‘언어독립’ 정책은 자국의 국민들로 하여금 제국 언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었다.²⁹⁾ 실제로 탄자니아 정부는 자국의 국민이 제국 언어인 영어를 사용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shameful’) 것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³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후식민국가 국민들의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등장했다. 이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이 언어가 교육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주로 일어나는데, 만약 토착어가 용어(terminology) 등의 부재로 전문화된 고등교육이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학생들의 사회적 지위의 수직상승을 막

25) Kazakhstankaia Pravda, June 11 1996 in FBIS-SOV-96-113-S.

26) *The Economist*, February 15 1997, p. 29.

27) Quoted in *Karavan*, April 24 1996, p. 3.

28) Robert Philipson and others, "Namibian Educational Language Planning: English for Liberation or Neo-Colonialism?" in Bernard Spolsky, ed., *Language and Education in Multilingual Settings*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Ltd., 1986), p. 92 cited in Fierman, *Language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Uzbek Experience*, p. 22 에서 인용.

29) Laitin, *Language Repertoires and State Construction in Af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pp. 91-92.

30) Wilfred Whiteley, "Some Factors Influencing Language Policies in Eastern Africa" in Joan Rubin and Bjorn Jernudd, eds., *Can Language Be Plann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1), p. 151.

을 수 있고 이런 상황은 당연히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야기한다는 것이다.³¹⁾

이러한 예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었다. 데이비드 고든(David Gordon)에 의하면 알제리에서 완전 아랍화(total Arabization)의 정책이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육 지도자들이 알제리 학생들이 불어를 사용함으로써 현대 과학과 기술을 습득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많은 학생들이 불어의 습득이 그들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에 불어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³²⁾ 이와 비슷한 상황은 인도에서도 발견된다. 인도의 공식어 힌두어는 주로 초·중등 교육기관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사용된 반면 영어는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고등 교육기관에서 사용되었다. 한스 두아(Hans Dua)는 이러한 인도의 상황은 영어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힌두어의 지위를 저하시켰다는 것이다.³³⁾

이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의 가설도 카자흐스탄 단일국가언어 구축의 실패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카자흐스탄에서도 자국 국민들의 카자흐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이 언어가 교육시스템에서 차지하고 있는 역할 때문에 주로 발생했다.

카자흐스탄의 구수도 알마티의 러시아어로 수업이 진행되던 유명한 15번 학교에서 수업들이 하나 둘씩 카자흐어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러시아인 어머니와 카자흐인 아버지를 둔 갈랴(Galia)라는 수학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 학교는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수업의 기초가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대한 고려 없이 학교가 1994년 가을에 저학년부턴 수업을 진행하는 언어로 카자흐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수업들은 잘 정리된 프로그램 혹은 좋은 교과서도 없는데 말이다. 나는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기초를 학교가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러한 조치는 학생들만 희생자로 만들 것이다.³⁴⁾

이러한 교육의 문제점은 고등교육기관에서도 발견된다. 윌리엄 피어만(William Fierman)에 의하면 오직 소수의 전문가들만이 과학·기술과 관련된 카자흐어 교과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문화된 수업을 위한 카자흐어 교과서는 적을 수 밖에 없고, 카자흐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를 다닌 카자흐인 교수들조차도 과학·기술과 관련된 수업을 카자흐어로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³⁵⁾ 당연히 교육의 질은 떨어지고 많은 학생들이 카자흐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에 가는 것을 꺼린다는 것이다.³⁶⁾

이러한 상황은 카자흐스탄 국민들로 하여금 카자흐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갖게 했다. 이 부정적 견해는 러시아가 문자화된 카자흐어(literary Kazakh language)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 때문에 러시아인들 사이에 더욱 팽배해 있다. 많은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어를 문자도 없었던 하나의 방언(dialect)으로 간주하며 이 언어를 습득하는 것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³⁷⁾ 실례로, 한 러시아인은 '민속학

31) Breton, p. 171.

32) David Gordon, "The Arabic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in William Beer and James Jacob, eds.,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Unity*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5), p. 138.

33) Dua, p. 302.

34) Laitin,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p. 136에서 인용.

35) Fierman, "Inside Kazakstan's Educational System: Linguistic Kazakization and Economic Realities," p. 7.

36) Dave, p. 68.

에만 어울릴 법한 카자흐어를 과학의 언어로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며 이 언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³⁷⁾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러시아말을 모국어로 하는 카자흐인들에게도 발견된다. 러시아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교를 다니는 9학년 카자흐인 학생 올자스(Olzhass)의 인터뷰는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학교에서 카자흐어를 배우느냐는 질문에 올자스는 "우리는 카자흐어 수업 몇 개를 들어야만 하는데... 우리가 왜 그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가? 모든 학생들이 그 수업을 싫어한다"라고 대답한다. 그리고 "왜 학생들이 카자흐어 수업을 싫어하는가?"라는 질문엔 올자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선생님은 자기 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다만 우리들에게 지겨운 카자흐어 교과서만 번역하라고 하신다. 학생 모두가 사전을 보며 기계적으로 번역만 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D" 학점을 받기 때문이다... 나는 왜 러시아인들이 카자흐어를 배워야 하는지 모르겠다... 거의 모든 국민이 러시아어를 알고 있는데 왜 카자흐어를 따로 배워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구시대 언어인 카자흐어를 배워야 하는가?³⁸⁾

다른 카자흐인들도 비슷한 견해를 피력한다. 카자흐인 정치학학자 누르부라트 마사노프(Nurbulat Masanov)는 카자흐스탄 단일국가 언어 구축을 반대하면서 그 이유는 "카자흐어는

낙타를 묘사하는데 필요한 12가지의 단어가 있지만 현대과학과 기술에 대한 단어는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⁴⁰⁾ 브하브나 데이브(Bhavna Dave)는 이와 같이 대다수의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인들이 자민족의 언어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는 한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⁴¹⁾

엘리트들의 조직적 저항

후식민국가에서 토착 언어중의 하나가 공식어로 지정되었을 때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는 요소로 몇몇 학자들은 이 공식어에 대한 엘리트들의 조직적 저항을 꼽고 있다. 이 가설에 의하면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후식민국가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지휘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그들의 토착어를 잘 알지 못하는 엘리트라는 것이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라이틴(Laitin)은 머리스 치심바(Maurice Chishimba)의 문구를 인용하고 있는데 이 문구는 다음과 같다: "아프리카의 엘리트들은 너무나도 유럽화(Europeanized)되어 있어서 그들은 자민족의 토착어가 메뚜기의 여러 기관들을 묘사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⁴²⁾ 일례로, 알제리 독립 당시 많은 엘리트들이 프랑스 교육의 산물로 유럽화된 사람들이었고 이중 알제리 제헌의회 구성원이 된 대다수가 아랍어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했다.⁴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언어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기 때

37) Ibid., p. 62.

38) Ibid., p. 54. 에서 인용

39) Ibid 에서 인용.

40) The Economist, February 15, 1997, p. 34에서 인용.

41) Dave, p. 59.

42) Maurice Chishimba, "Language and Education in Zambia," *International Educational Journal* 1(1986), p. 170 cited in Laitin, *Language Repertoires and State Construction in Africa*, p. 95에서 인용.

43) Salih Altoma, "Language Education in Arab Countries" in Joshua Fishman, ed., *Advances in Language Planning* (The Hague: Mouton, 1974), p. 289.

문에 토착 언어중의 하나가 공식어로 지정되었을 때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⁴⁴⁾

캐롤 스코튼 (Carol Scotton)은 이러한 엘리트들의 조직적 저항이 세네갈에서 공식어가 불어에서 토착어 중의 하나인 우로프어 (Wolof)로 바뀌지 못한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⁴⁵⁾ 인도에서도 영어를 구사하는 대다수의 엘리트들이 대학교 교육을 영어에서 힌두어로 진행하려는 시도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두아 (Dua)에 의하면 이것은 엘리트들의 기득권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가 인도에서 계속 사용되게끔 하였다는 것이다.⁴⁶⁾

이러한 토착어에 대한 엘리트들의 조직적 저항은 카자흐스탄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데이브 (Dave)는 이 이유를 인도와 비교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도의 엘리트들 중 특히 정부 관료들은 실력에 의해 선발된 가장 영국화된 집단으로서 정치적 상황에 크게 영향 받지 않을 정도로 인도사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한 반면에, 카자흐스탄의 정부 관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데이브 (Dave)에 의하면, 소련시절 카자흐스탄의 정부 관료들은 실력보다는 공산당 가입여부, 계급성분 및 부족과의 연관 관계 등에 의해 선발된 집단들로서 정권의 이동에 따라 쉽게 재조직될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카자흐스탄은 인도와 달리 정치 권력자가 관료들을 임용하고 해임하는데

있어 매우 자유스럽다는 것이다.⁴⁷⁾ 그리고 데이브 (Dave)에 의하면 카자흐스탄의 경제체제 전환과정에서 실력을 갖춘 많은 사람들 (주로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카자흐인)이 정부를 떠다 보다가 많은 보수를 보장하는 사기업을 택하면서 이 빈 자리를 카자흐어를 말하는 카자흐인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⁴⁸⁾

이런 상황 속에서 카자흐 엘리트들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카자흐스탄 정부는 단일국가언어 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카자흐어 교육의 확산을 목적으로 구 (Oblast) 단위에 카자흐 킬리 (Kazakh Tili or Kazakh Language Revival Society) 라는 조직을 만들었다.⁴⁹⁾ 카자흐어의 확산 노력은 때로는 러시아어의 활용을 저지하는 형태로도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많은 지방, 도시 그리고 거리의 이름이 러시아어에서 카자흐어로 바뀌었고 카자흐스탄에서의 모스크바 방송 방영시간이 축소되었다.⁵⁰⁾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노력은 카자흐 엘리트들의 조직적 저항대신 러시아어를 구사하는 다수의 카자흐인들의 저항에 부딪힌다. 데이브 (Dave)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살고 있는 3분의 2의 카자흐인들이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노력은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¹⁾ 라يتين (Laitin)도 러시아어

44) Carol Scotton, "Learning Lingua Francas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Evidence from Africa" in Robert Cooper, ed., *Language Spread: Studies in Diffusion and Social Chan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pp. 69-70; Harold Schiffman, "South and Southeast Asia" in Fishman, ed.,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 439.

45) Scotton, p. 69.

46) Dua, p. 304.

47) Dave, p. 60.

48) Ibid.

49) Ian Bremmer, "Nazarbaev and the North: State-Building and Ethnic Relations in Kazakhsta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4) (1994), pp. 623-624.

50) Dave, "Kazakhstan Launches a Uniform Policy on Naming Places," *OMRI Daily Digest*, March 19 1996. For details, see Alexandrov, p. 101; *Selskaia Zhizn*, October 10 1996, p. 4.

어를 말하는 카자흐인들이 쉽게 그들의 언어습관을 바꿀 것 같지 않고 이는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⁵²⁾

결론

단일국가언어를 구축하는데 있어 카자흐스탄과 후식민국가는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였다. 유사성의 측면에서는 이 모든 국가들이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민족간 분쟁의 위험성, 재원의 문제 그리고 토착어에 대한 부정적 견해라는 3가지 난관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에서는 후식민국가와 달리 엘리트들, 특히 정부 관료들의 토착어에 대한 조직적 저항은 없었다. 대신에 카자흐스탄에서는 러시아말을 구사하는 많은 카자흐인들이 자민족의 언어를 습득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카자흐스탄에서 단일국가언어 구축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위의 판단은 단일국가언어 구축에 다소 성공한 몇몇 후식민국가를 살펴보면 더욱 더 확고해진다. 케냐, 탄자니아,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는 단일국가언어 구축에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케이스이다. 여러 학자들은 이 나라들에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중립어’ (‘neutral language’)의 역할을 꼽고 있는데 이 중립어란 다음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 공식어가 모든 민족이 엇비슷하게 잘 구사하지 못하는 “언어적으로 중립적” (“linguistically neutra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아 (Dua)에 의하면 언어적 중립은 비록 다음의 방법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공식어로 제국 언어를 선택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케냐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케이스로 독립당시 영어를 공식어 (official language)로 지정했으며 이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커다란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다.⁵⁴⁾

둘째, 공식어는 어떤 특정민족의 우위적 위치를 확고히 하려는 시도로 비추어지지 않게 “정치적으로 중립적” (“politically neutral”)이어야 한다는 것이다.⁵⁵⁾ 탄자니아는 이와 같은 방법을 선택한 케이스이다. 알라민 마즈루이 (Alamin Mazrui)와 알리 마즈루이 (Ali Mazrui)에 의하면 탄자니아에서는 스와힐리어가 다른 민족들의 커다란 저항 없이 공식어로 채택되었는데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스와힐리어를 사용하는 와스와힐리 (Waswahili) 민족의 인구수가 적어 탄자니아의 민족간 권력정치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⁵⁶⁾ 이와 비슷한 경우가 인도네시아이다. 유진 니다 (Eugene Nida)와 윌리엄 윈더리 (William Wonderly)는 만약 독립당시 인도네시아에서 소수민족의 언어 바하사어 (Bahasa)대신 다수민족의 언어 자바어 (Javanese)가 공식어로 채택되었더라면 인도

51) Dave, p. 52.

52) Laitin,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p. 134.

53) Dua, p. 299.

54) Kamalu, p. 68. 케냐에는 영어와 스와힐리어가 “공식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영어는 “공식어” (“official language”)이고 스와힐리어는 “민족어” (“national language”)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Laitin, *Language Repertoires and State Construction in Africa*, pp. 104-105.

55) Eugene Nida and William Wonderly, “Communication Roles of Languages in Multilingual Societies” in W. Whiteley, ed., *Language Usage and Social Chan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p. 28.

56) Alamin Mazrui and Ali Mazrui, “Dominant Language in a Plural Society: English and Kiswahili in Post-Colonial East Afric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4(3) (1993), pp. 280-281.

네시아 언어정책은 실패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⁵⁷⁾ 물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어의 선택만이 위 두 나라에서의 언어정책 성공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두 나라에서의 공식어가 각 나라의 다른 민족의 언어와 깊이 연관된 말이었기 때문에 배우기 쉬웠다는 점도 성공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⁵⁸⁾

그러나 카자흐스탄은 "언어적으로 중립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많은 후식민국가와 달리 카자흐스탄은 자국을 지배했고 자국의 30 퍼센트가 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인들과 함께 단일국가언어를 구축하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어는 분명히 카자흐스탄의 "언어적으로 중립적"인 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언어도 없는 듯해 보인다. 물론 카자흐스탄이 우즈벱어, 아제리어, 혹은 한국어와 같은 자국의 소수민족 언어

를 공식어로 채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카자흐어나 러시아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두 언어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연관도 없는 말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후식민국가와 달리 카자흐스탄은 자국을 지배했던 러시아 바로 옆에서 (in the shadow of its occupier, Russia) 단일국가언어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⁵⁹⁾ 러시아는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들을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카자흐스탄의 언어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고 이것 또한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저해하고 있다.⁶⁰⁾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카자흐스탄은 그 어떤 후식민국가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단일국가언어 구축을 시도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카자흐스탄의 단일국가언어 구축 성공여부에 매우 회의적인 이유이다.

참고문헌

- Alexandrov, Mikhail, *Uneasy Alliance: Relations Between Russia and Kazakhstan in the Post-Soviet Era, 1992-1997* (Westport CO: Greenwood Press, 1999).
- Anderson, Barbara and Brian Silver, "Equality, Efficiency, and Politics in Soviet Bilingual Education Policy, 1934-1980,"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8(4) (1984) reprinted in Rachel Denber, *The Soviet Nationality Reader: The Disintegration in Context* (Boulder: Westview Press, 1992).
- _____, "Some factors in the Linguistic and Ethnic Russification of Soviet Nationalities: Is Everyone Becoming Russian?" in Lubomyr Hajda and Mark Beissinger, eds., *The Nationalities Factor in Soviet Politics and Society* (Boulder: Westview Press, 1990).
- Ahmed, Samina,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Ethnicity in Central Asia," *Regional Studies* 13(2) (1995). Ahsan, Syed Aziz-al, "Soviet Nation-Building in Central Asia (1917-1979)," *Canadian Review Studies in Nationalism* 14(2) (1987).

57) Nida and Wonderly, p. 26.

58) Ibid; Kelman, p. 45.

59) Mark Beissinger, "State-Building in the Shadow of an Empire-State"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The End of an Empire?: The Transformation of the USS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rmonk, NY: M.E. Sharpe, 1997), p. 112.

60) Kirill Nourzhanov and Amin Saikal, "The New Kazakhstan: Has Something Gone Wrong," *The World Today* 50(12) (1994), p. 228; Vladimir Socor, "Mikitaev Warns CIS, Baltic States," *OMRI Daily Digest*, December 13 1994; Moscow Interfax April 26 1995 in FBIS-SOV-95-081, p. 24; Moscow Interfax, November 23 1996 in BBC Summary of World Broadcasts, November 27 1996; *Nezavismaia Gazeta*, July 10 1997, p. 5; *Financial Times*, June 17 1998, Survey Edition, p. 3.

- Akiner, Shrin, *The Formation of Kazakh Identity: From Tribe to Nation-State* (The Royal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 1995).
- _____, "Melting Pot, Salad Bowl – Cauldron?: Manipulation and Mobilization of Ethnic and Religious Identities in Central Asia," *Ethnic and Racial Studies* 20(2) (1997).
- Altoma, Salih, "Language Education in Arab Countries and the Role of the Academics" in Joshua Fishman, ed., *Advances in Language Planning* (The Hague: Mouton, 1974).
- Arenov, Murat and Sergei Kalmykov, "Sovremennaia Iazykovaia Situatsiia v Kazakhstane," *Sotsiologicheskie Issledovaniia*, 22(12) (1995).
- Armstrong, John, "The Ethnic Scene in the Soviet Union: The View of the Dictatorship," in Erich Goldhagen, ed., *Ethnic Minorities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Washington, and London: Frederick A. Praeger, 1968).
- Beissinger, Mark, "State-Building in the Shadow of an Empire-State"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The End of an Empire?: The Transformation of the USSR in Comparative Perspective* (Armonk, NY: M.E. Sharpe, 1997).
- Bekmakhanova, M., *Mnogonatsional'noe Naselenie Kazakhstana i Kirgizii v Epokhu Kapitalizma (60 gody XIX v. – 1917g.)* (Moskva: Nauka, 1986).
- Bennigsen, Marie, "Comrade Muslims!" *Wilson Quarterly* 16(3) (1992).
- Bilinsky, Yaroslav, "The Soviet Education Laws of 1958–9 and Soviet Nationality Policy," *Soviet Studies* 14(2) (1962).
- Brass, Paul,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Soviet Union and India" in Alexander Motyl, ed., *Thinking Theoretically About Soviet Nationalities: History and Comparison in the Study of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Bremmer, Ian, "Nazarbaev and the North: State-Building and Ethnic Relations in Kazakhstan," *Ethnic and Racial Studies* 17(4) (1994).
- Breton, Roland, "The Handicaps of Language Planning in Africa" in Devid Marshall, ed., *Language Planning: Focusschrift In Honor of Joshua A. Fishman On the Occasion of His 65th Birthday*, Vol. III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1991).
- Connor, Walker, "Nation-Building or Nation-Destroying?" in Connor, *Ethnonational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Conquest, Robert, *Nation Killers: The Soviet Deportation of Nationalities* (New York, Macmillan, 1970).
- Crisp, Simon, "Soviet Language Planning 1917–1953" in Kirkwood, ed., *Language Planning in the Soviet Union* (New York: St. Martin's Press, 1990).
- Das Gupta, Jyotirindra, "Ethnicity, Language Demands, and National Development," *Ethnicity* 1(1) (1974).
- _____, "Language, National Unity, and Shared Development in South Asia" in William Beer and James Jacob, eds.,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Unity*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5).
- Dave, Bhavna, "National Revival in Kazakhstan: Language Shift and Identity Change," *Post-Soviet Affairs* 12(1) (1996).
- de Silva, K. M., "Language, Ethnicity and Politics in South Asia," *Ethnic Studies Report* 14(1) (1996).
- Dua, Hans, "The National Language and the ex-Colonial Language as Rivals: The Case of Indi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4(3) (1993).

- Esenova, Saulesh, "Soviet nationality, identity, and ethnicity in Central Asia: historic narratives and Kazakh ethnic identity," *Journal of Muslim Minority Affairs* 22 (1) (2002).
- Fierman, William, "Changing Urban Demography and the Prospects of Nationalism in Kazakhstan," *Canadian Review of Studies in Nationalism* 27(1/2) (2000).
- _____, "Inside Kazakhstan's Educational System: Linguistic Kazakization and Economic Realities," *ISRE Newsletter*, No. 2 (Fall 1996).
- _____, "Introduction: The Division of Linguistic Space," *Nationalities Papers* 23(3) (1995).
- _____, "Language and Identity in Kazakhstan: Formulations in Policy Documents 1987-1997," *Communist and Post-Communist Studies* 31(2) (1998).
- _____, *Language Planning and National Development: The Uzbek Experience* (Berlin and 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1).
- _____, "The Soviet 'Transformation' of Central Asia" in Fierman, ed. *Soviet Central Asia: The Failed Transform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 Fishman, Joshua, "Sociolinguistics and the Language Problems of the Developing Countries" in Fishman and others, eds., *Language Problems of Developing Nations* (New York, London, Sydney, and Toronto: John Wiley & Sons, Inc., 1968).
- Gellner, Ernest, *Nations and Nationalism*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1983).
- Gleason, Gregory, *Central Asian States: Discovering Independence*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7).
- Gordon, David, "The Arabic Language and National Identity" in William Beer and James Jacob, eds., *Language Policy and National Unity* (Rowman & Allanheld Publishers, 1985).
- Hanks, Reuel, "Directions in the Ethnic Politics of Kazakhstan: Concession, Compromise, or Catastrophe?,"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15(1) (1998).
- Horowitz, Donald, "Democracy in Divided Societies," *Journal of Democracy* 4(4) (1993).
- _____, *Ethnic Groups in Conflict*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5).
- Isaacs, Harold R, *Idols of the Tribe: Group Identity and Political Change* (Cambridge, MA and London, England: Harvard University Press, 1975).
- Kaiser, Robert,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in Russia and the USSR*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 Kaiser and Jeff Chinn, "Russian-Kazakh Relations in Kazakhstan," *Post-Soviet Geography* 36(5) (1995).
- Kamalu, Ngozi Caleb, "Language Planning and Nation-Building in Africa: The Kenyan Example," *Scandinavian Journal of Development Alternatives* 15 (March 1996).
- Kelman, Herbert, "Language As an Aid and Barrier to Involvement in the National System" in Joan Rubin and Bjorn Jernudd, eds., *Can Language Be Plann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1).
- Kerimbaev, S., *Sovetskii Kirgizstan v Velikoi Otechestvennoi Boine 1941-1945* (Frunze: Izdatel'stvo Ilim, 1980).
- Kho, Songmoo, *Koreans in Soviet Central Asia* (Helsinki: Studia Orientalia, 1987).

- Kirkwood, Michael, "Glasnost', 'The National Question' and Soviet Language Policy," *Soviet Studies* 43(1) (1991).
- Kolsto, Pal, "Is Kazakhstan Being Kazakhified?" *Analysis of Current Events* 9(11) (1997).
- _____, "Nation-Building in the Former USSR," *Journal of Democracy* 7(1) (1996).
- _____, *Russians in the Former Soviet Republics*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p. 1995).
- Kreindler, Isabelle, "A Second Missed Opportunity: Russian in Retreat as a Global Language,"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4 (3)(1993).
- _____, "Forging a Soviet People: Ethnolinguistics in Central Asia" in Fierman, ed., *Soviet Central Asia: the Failed Transform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1991).
- Kuzio, Taras, "Nationalist Riots in Kazakhstan," *Central Asian Survey* 7(4) (1988).
- Laitin, David, *Identity in Formation: The Russian-Speaking Populations in the Near Abroad*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Language and Nationalism in the Post-Soviet Republics," *Post-Soviet Affairs* 12(1) (1996).
- _____, *Language Repertoires and State Construction in Afric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Laitin and others, "Language and the State: Russia and the Soviet Un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in Alexander Motyl, ed., *Thinking Theoretically About Soviet Nationalities: History and Comparison in the Study of the USS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2).
- Lipovsky, Igor, "The Russian Problem in Central Asia," *Orient* 36 (March 1995).
- Masanov, N., "Kazakhi v XX Stoletii: Etnicheskoe Razvitie i Istoricheskie Sud'by," *Rasy I Narody* Vol. 22 (1992).
- Mazrui, Alamin and Ali Mazrui, "Dominant Language in a Plural Society: English and Kiswahili in Post Colonial East Africa,"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14(3) (1993).
- Muiznieks, Nils, "Latvia: Restoring a State, Rebuilding a Nation in Ian Bremmer and Ray Taras, eds., *New States, New Politics: Building the Post-Soviet N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Nida, Eugene and William Wonderly, "Communication Roles of Languages in Multilingual Societies" in W. Whiteley, ed., *Language Usage and Social Change*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 Nourzhanov, Kirill and Amin Saikal, "The New Kazakhstan: Has Something Gone Wrong," *The World Today* 50(12) (1994).
- Obeng, Samuel and Efurosibina Adegbiya, "Sub-Saharan Africa" in Fishman, ed.,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Olcott, Martha, "Democratization and the Growth of Political Participation in Kazakhstan" in Karen Dawisha and Bruce Parrott, eds., *Conflict, Cleavage, and Change in Central Asia and the Caucas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 _____, "Kazakhstan: A Republic of Minorities" in Ian Bremmer and Ray Taras, eds., *Nation and Politics in the Soviet Successor Stat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_____, "Perestroika in Kazakhstan," *Problems of Communism* 39(4) (1990).

- Rakowska-Harmstone, Teresa, "Islam and Nationalism: Central Asia and Kazakhstan Under Soviet Rule," *Central Asian Survey* 2(2) (1983).
- _____, "Soviet Legacies," *Central Asia Monitor*, No. 3 (1994).
- Rustow, Dunkwart, "Transition to Democracy: Toward a Dynamic Model," *Comparative Politics* 2(3) (1970).
- Rywkin, Michael, "The Impact of Socio-Economic Change and Demographic Growth on National Identity and Socialization," *Central Asian Survey* 3(3) (1984).
- Schiffman, Harold, "South and Southeast Asia" in Fishman, ed., *Handbook of Language and Ethnic Identity* (New York 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Schatz, Edward, "The politics of multiple identities: lineage and ethnicity in Kazakhstan," *Europe-Asia Studies* 52(3) (2000).
- Scotton, Carol, "Learning Lingua Francas and Socioeconomic Integration: Evidence from Africa" in Robert Cooper, ed., *Language Spread: Studies in Diffusion and Social Chang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2).
- Shur, Shimon, "Language as a Crucial Socio-Political Factor in Nation-Building," *International Problems* (Tel Aviv) 32(3/4) (1993).
- Smith, Anthony, *The Ethnic Origins of Nations* (Great Britain: Basil Blackwell, 1986).
- Suny, Ronald, "Provisional stabilities: the politics of identities in post-Soviet Eurasia," *International Security* 24(3) (1999/2000).
- Suzhikov, M., *Mezhnatsional'nye Otnosheniia v Kazakhstane: Teoriia i Praktika Regulirovaniia* (Almaty: Gylym, 1993).
- Wheeler, Geoffrey, *The Peoples of Soviet Central Asia* (London: Bodley Head, 1966).
- _____, "The Turkic Languages of Soviet Muslim Area: Russian Linguistic Policy," *Middle Eastern Studies* 13(2) (1977).
- Whiteley, Wilfred, "Some Factors Influencing Language Policies in Eastern Africa" in Joan Rubin and Bjorn Jernudd, eds., *Can Language Be Planned?*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71).

Periodicals and Electronic Sources

- BBC Summary of World Broadcasts.*
- BBC Worldwide Monitoring.*
- The Current Digest of the Post-Soviet Press.*
- Demograficheskii Ezhegodnik Kazakhstana* (Almaty: Kazinformtsentr, 1994).
- The Economist.*
- FBIS Daily Report(Central Eurasia).*
- Kazakhstanskaia Pravda.*
- OMRI Daily Digest.*
- RFE/RL Daily Report.*
- Statistical Handbook 1996: States of the Former USSR* No. 21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 Universal Database of Russian Newspapers.*



국제적 양자결연을 위한 룰을 강화하라

아산 카프스타인

(Ethan B. Kapstein, 유럽경제대학원 (INSEAD) 정치경제학부 교수)



국제적 양자결연과 인신매매

아이들은 인간에 있어 가장 귀중한 '자산'이며, 그 만큼 다른 귀중한 자원과 같이,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있다. 근래 십 여 년간 외국태생 유아를 양자로 받아드리는 양부모들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의 '아이들 시장'은 급속하게 확대하고 있다. 2001년에는, 약 3만 4천명의 아이들이 아시아, 중앙-동부유럽에서 서 유럽이나 북미의 가정으로 양자 결연되고 있다. (표-1)

개발도상국 고아원에서 9백 50만 명의 아이들이 애처롭게도, 국제적 양자결연에 의해 새로운 가정을 만나, 팔려갈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그러나 잘 사는 나라의 어른들이 가난한 나라의 유아를 원한다고 하는 구도가 악덕 중개업자에 의해 부정을 초래, 국제적 양자결연의 구조를 왜곡시키고 말았다. 그러한 업자가 빈곤한 가정에서 유아들을 사거나 탈취하여 양자를 절망하는 양친들에게 팔아넘기는 경우마저 있다.

고아들의 양자결연을 지원하면서, 이것에 수반하는 부정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균형이 취해진 정책이 필요하다. 물론 유아들의 자유무역 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유아들은 비싼 값으로 팔리나 결코 이들은 상품이 아니다. 그러나 알선조직의 활동을 용인하고 있는 나라로부터의 국제적 양자결연을 금지시키게 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예컨대 캄보디아와 루마니아에서 양자결연이 일시적으로 금지 된 적이 있으나 결국 양 국의 고아들이 새로운 가정에 인도될 기회를 찾아가 양자결연의 수요가 러시아나 중국 등 새로운 '송출국'으로 발걸음을 돌렸을 뿐

이었다.

특정국과의 양자결연을 금지, 국제적인 양자결연을 규제할 다국간의 법적조치를 강화하는 쪽이 보다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세계 54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양자결연에 관한 아이들의 보호 및 국제협력에 관한 조약' (헤이그조약)은 가맹국들에 국제적 양자결연의 원활화를 요구함과 동시에, 이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아들이 행복하게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증가를 계속하고 있는 양자결연을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해서는 이 레짐의 강화가 불가결하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신매매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외교압력과 대외원조를 확대하는 등,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처해 가기 위해 보다 강력한 정치적인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국제적 양자결연 증대 이유

역사적으로 국제적 양자 결연은 전쟁이 끝나면 급증하는 경향이 있다. 제2차세계대전후 미국 가정은 주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유럽으로부터의 고아를 양자로 받아들였고, 한국전쟁 이후는 황폐한 한반도의 아이들을 받아들였다. 1975년에 베트남전쟁이 끝나자, 베트남의 아이들도 약 3천명이 '베비 리프트 작전'에 의해 외국의 양부모들에게 인도되었다. 베트남 정부는 83년에 국제적 양자결연의 정지를 일시 선언했을 정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아 송출국들은 전쟁의 참화의 경험과는 관계없이 상대국의 경제, 사회정책의 전환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냉전의 종결에 의해 중앙, 동유럽에 시장경제가 도입되자, 사회·공산주의시대의 제도가 붕괴, 고아가 급증했다. 예컨대 루마니아에서는 89년 국제양자결연은 30건밖에 안되었으나, 차우세스쿠 정권 붕괴 후는 1만 명이상의 아이들이 국외로 양자 결연되고 있었다.

1980년까지는 외국에 아이들을 송출한 일이 없었던 러시아도 지금은 미국 가장의 '양자수요'의 약 40%를 충당하는 최대의 고아 송출국이 되었다. 80년대 중반까지 국내의 고아를 국제적 양자결연 시키는 것에 난색을 표하던 중국도, 지금은 세계 두 번째의 송출국이 돼, 러시아의 수위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정책'에 더해 중국의 부모들이 남자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탄생한 여자 아이들의 일부는 외국의 양친에게 팔려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실제 중국에서 송출되는 양자의 2/3는 여자아이들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제국에서 외국 태생의 아이들에 대한 양자결연 수요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는 것은, 첫째, 가족이라는 관념에 대한 인식이 다양화하는 등, 사회적 가치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결혼연령기가 높아지고, 태어나는 아이들의 수도 감소, 양자 입양으로 가정을 이어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증가하고 있다. 동일한 경향이 독신 남녀나 동성애 커플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아이들을 가지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 양자를 찾는 것은 점점 어렵게 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양자로 내보내지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에서는 양자 결연되는 미국인 아이들은 전체 수요의 1/2, 2/3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요인의 결과 국제적 양자결연은 일대 붐이 되었다. 국경을 초월한 양자결연의 건수는 1988년부터 2001년 사이에 약 1만 9천에서 3만 4천 건으로, 거의 2배로 증가되고 있다. 2001년을 보면, 미국에서만 1만 9천2백37건의 양자결연이 행해져 이것은 세계전체의 국제적 양자 결연수의 반을 넘는 숫자다. 결연건수의 신장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공업국에서도 보다 높

〈표-1〉 국제적 양자결연의 주된 수입국과 수입인원

수입국	미 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독 일	벨 기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호 주	스위스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영국	합계
1988년	9,120	2,441	2,078	1,075	875	662	582	577	523	516	492	232	93	78	-	19,344
2001년	19,237	2,850	2,127	1,044	1,789	-	721	-	383	289	-	1,874	3,428	-	326	34,068

〈출처〉: 유니세프. (-)는 불명.

랄만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캐나다의 국제적 양자결연은 232건에서 1,874건으로 증대, 스페인에서는 겨우 93건에서 3,428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국제적 양자결연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대해 갈 것이다. 그 이유는 양자결연이 이미 단순한 전쟁이나 인도적 위기의 산물이 아닌 것을 들 수 있다. 행인지 불행인지, 양자를 둘러싼 수요가 공급을 불리일으켜, 수요와 공급의 신장은 그치지 않고 있다. 또 에이스의 세계적인 만연에 따라, 양자로 내보내지는 고아들도 한층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에이스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수는 이미 약 1천3백만 명에 달하고 있다. 유니세프에 의하면, 그 수는 2010년까지 2천5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병으로 만들어진 고아들의 대다수는 문화적, 종교적 이유에서 지금까지 국제적 양자결연의 주요한 송출지역이 아니었던 사할린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그러나 에이스 피해가 점점 늘어나, 친척들에 의한 양육이라는 종래의 대처가 기능하지 못하면, 이러한 지역도 이미 국제적 양자결연에 소극적일 수는 없게 될지도 모른다. 이미 에티오피아 등 일부의 아프리카 제국은, 국제적 양자결연에 적극적이 되어가고 있다. 에이스가 동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확대하면, 이들 지역에서도 고아들이 증가할 것이다. 고아의 수가 증가하면, 국내에서 이들을 데려갈 가정을 찾는 것도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신매매의 악몽

국제적 양자결연이 규제되게 된 것은, 1980년대부터 90년대에 걸쳐 아이들의 인신매매가 국제적 미디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돼, 정치적 조치가 취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넓게 확산되고 있는 걱정스러운 일은 유아들의 인신매매다. 알바니아에서 인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현금, 텔레비, 카메라, 손목시계와 교환조건으로 아이들을 업자들에 내다 파는 부모들도 있고, 고아원도 있다.

최근 〈뉴욕 타임스〉는 생후 1개월의 여자아이를 20달러에 ‘인근 마을에서 온 여성’에 판 인도의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다. 이 여성은 자기아이를 고아원에 팔고, 고아원이 국제적 양자결연의 연결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가장 악질적인 것은, 유아를 유괴하여 매매하는 것이다. 90년대 초 혼드라슈의 정부고관이 빈곤한 가정에서 아이들을 유괴하는데 거들여, 외국에 매매했다고 여겨지는 케이스가 보도되었다. 2000년의 UN보고서에 의하면, 세계적 양자결연을 위한 아이들의 송출국인 과테말라에서는 “국제적 자결연의 과정으로 아이들의 인신매매, 문서위조, 유괴 등이 행해져, 그러한 아이들이 수용시설에 감금 되는 등, 다양한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법거래를 중단시키는 것은 간단치 않다. 시장을 지배하는 경제적 동기는 예컨대 거래 대상이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커다란 힘을 가진다. 진짜 부모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극 소수이기는 하

나, 여하튼 실제로 유아들은 5천-2만5천 달러로 매매되고 있으며, 가난한 나라들의 입장으로 이는 대단한 액수다. 수입국의 양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를 받아 드릴 때, 사례금을 지불한다. 받아드리는 양부모들은 이들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을 하게 해 주고 싶은 마음은 한결같으나, 자기들의 행동이 인신매매를 부추길지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

합법적인 양자결연과 아이들의 인신매매를 분간하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있다. 관념적으로는 명확하게 구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정도로 확실치 않은 경우도 많다. 예컨대 1990년대 러시아 아이들 6백 명의 양자결연을 한 미국의 업자는 일을 쉽게 하기 위해 러시아의 한 고아원에 의류나 의학 품 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업자는 고아원에 금전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러시아인에게서 ‘아이들을 사 온’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아이들을 매수하는 것은 위법이나 결연이 이뤄지기까지 상대에게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나 실제 이 두 가지 사이의 경계는 애매한 것이며, 친 부모가 실제로 아이들은 팔았다고 고백하지 않는 한, 양자결연 관계 당국이나 입국관리 당국이 아이들의 매매를 입증하는 것은 어렵다.

양자송출 측 국가에서는 위법행위가 발각될 경우는, 그러한 국가들로부터의 양자결연을 금지시

〈표-2〉 미국의 국제적 양자결연수

송출국(지역)	1990년	송출국	1998년	송출국	2002년
한 국	2620	러시아		중국	5053
콜롬비아	631	중국		러시아	4939
페루	440	한국		과테말라	2219
필리핀	421	과테말라		한국 *	1779
인도	348	베트남		우크라이나 *	1106
칠레	302	인도		카자흐스탄 *	819
파라과이	282	루마니아		베트남 *	766
과테말라	257	콜롬비아		인도	466
브라질	228	캄보디아		콜롬비아	334
혼두라스	197	필리핀		불가리아	260
루마니아	121	우쿠라이나		캄보디아 *	254
멕시코	112	멕시코		필리핀	221
코스타리카	105	불가리아		하이티	187
엘살바돌	103	도미니카		벨라루시	169
타이	100	하이티		루마니아	168
폴란드	66	브라질		에티오피아	105
대만	66	에티오피아		폴란드	101
하이티	64	타이		타이 *	67
에콰도	59	폴란드		페루	65
도미니카	58	라트비아		멕시코	61

〈출처〉: 미 국무성, * 표는 헤이그조약에 조인하지 않은 나라 (2003년 8월 현재).

킬 경우도 있으며, 상대국에 상황을 개선할 것을 요구, 그동안은 고아의 입국이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인 조치는 문제를 다른 장소로 돌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국가에서 이에 대한 제재를 하더라도 '시장'은 새로운 공급선을 찾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90년대 이후, 루마니아에서 국제적 양자결연에 나선 아이들의 수는 급격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것은 루마니아에서 양자결연에 대한 일시적 금지조치가 발동되고 해제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1년, 루마니아에서 782명의 아이들이 미국 가정의 양자가 되었으나, 다음해 새로이 일시금지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 수는 168명으로 감소했다. (표2) 그러나 같은 시기, 러시아로부터의 미국에의 양자결연의 수도 약 350건 증가했다. 이것은 수천 명의 아이들과 수십 개 국가가 관계되는 국제적 양자결연을 규제하기에는, 단독 혹은 양국간의 재제로는 유효한 조치가 취해질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 1건의 양자결연에 복수 국의 사법권이 관계될 경우도 있다. 예컨대 아일랜드에 사는 양부모가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싱가포르에서 거래, 영국을 거쳐 아일랜드로 귀국할 경우도 있다.

헤이그조약의 성과와 한계

이러한 결점을 인식한 UN은 1980년대 후반에 국제적 양자결연의 규범을 정립하기 위한 다국간협의를 개시했다. (그때까지도 미 대륙 제국, 서유럽, 북 유럽 제국 등에서는 지역 수준의 국제적 양자결연의 규제를 시도했으나, 양자결연이 글로벌한 규모가 된 이상, 지역적인 대응책이 유효치 못한 것은 이미 분명해 졌다) 이 다국간 협의의 결과, 89년에는 '아이들의 권리조약'(CRC)이 체결되었다. CRC는 아이들의 인신매매와 합법적 양자결연의 법적인 경계선을 두어, 양자결연에 의해 그 관계자들이 부당한 금전수입을 얻는 것을 금지했다. 또 CRC는 친부모에게 아이들을 양육할 힘이 없을 경우나, 국내의 양부모가 적절하게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적 양자결연을 양육에 관한 또 하나의 선택지로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CRC는 국제적 양자결연을 규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기는 하나 잠정적인 일보에 지나지 않았다. CRC는 '부당한 금전수입'이 무엇인가를 정의하지 않고, '허용되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수뇌'를 구분할 기준을 명확히 하지도 않았다. 또 '국제적 양자결연에 있어서가 아니라, 국내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나타냄으로써 CRC는 양자를 송출할 국가에 고아원이나 양자결연제도를 정비할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 정부는 그러한 책임을 질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아이들의 국제적 거래를 커다란 이익이라고 보는 국가들이서는 국내의 양자결연을 장려할 동기는 희박하다.

CRC는 국제적 양자결연은 규제하지 않으나 192개 조약체결국에 대해서, 필요한 국내법을 정비하여 국제적 양자결연의 수속을 투명 화하는 '다국간 조약, 혹은 국제협약'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이 과제에 뛰어난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1993년에 국제적 양자결연에 관한 조약안을 체결국에 제출, 동 안은 신속하게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하여 채택된 헤이그조약은 국제적 양자결연의 법적기반이 되고 있다. 헤이그조약은 CRC의 정신을 답습하여, 국제적 양자결연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며, 그 기본적 권리가 잘 지켜지도록 함과 동시에, 아이들의 유괴, 매매 및 거래를 저지키 위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체결국에게 요구하고 있다.

“잘 양육되고 있는 한, 아이들은 자기가 태어난 모국에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을 CRC가 나타내는데 대해 헤이그조약은 모국에서 ‘알맞은 가정’을 찾을 수 없을 경우의 국제적 양자결연을 전향적으로 용인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이 두 가지의 문서는 정반대의 전제에서 성립되고 있다. 헤이그조약은 CRC가 내거는 국내에서의 양육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입장을 중시하지 않고, 잘 양육을 받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국내의 고아원에 있는 것보다도 외국의 양부모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헤이그조약은 아이들의 인신매매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간협력체제의 도입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아이들의 인신매매는 테러나 마약거래와 같이 다국간협력을 얻지 못하면 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최후로 헤이그조약은 조약의 원칙과 가이드라인과의 일체성을 구현하기 위해 국내의 양자결연 네트워크를 일소하고 인신매매된 아이들의 수취인에 대한 단속을 둘러싸고 송출국과 수입국 쌍방에 신규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양자를 송출하는 나라는 그러한 아이들이 법적으로 양자결연 가능한 것을 증명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 ‘출신 국 관리’라고도 불리는 규정은, 서로 다른 사회배경을 가진 양자결연에 대해서도 아주 커다란 다른 견해를 가진 체격 국들 간을 서로 조정기 위한 필요한 타협이었다. 예컨대 이슬람 세계에서는 일종의 양부모 제도는 인정하고 있으나, 양자결연은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인도도 힌두교도의 아이들을 인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힌두교도에만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헤이그조약은 체결국정부가 조약의 가치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양자결연에 대한 법률은 많은 국가에서는 아직 잘 정비되지 않고 각국의 재판소는 양자로 내몰리는 아이들도 친 부모, 양부모 그리고 양부모의 아이들과의 법적관계를 어떻게 판단하는 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유연성이 각국에게 요구되고 있다.

헤이그조약의 커다란 특징은 체결국에 대하여 각 국에 양자결연문제를 담당할 당국을 설치하여, 새로운 국내법에 근거한 국내에서의 양자결연 수속을 감독, 타국과의 결연수속을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상의 요청에 응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특히 양자결연이 정부가 아니라 주의 관할 사항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과 같은 연방 국가는 더욱 문제다. 2000년에 국제적 양자결연법이 미국 의회를 통과 빌 클린턴대통령이 서명한지 3년이 지났으나, 미국에서 헤이그 조약의 요청에 대응할 수 있는 법령은 지금도 제정되지 않고 있다.

국제적 양자결연의 원활화를 위해

어쨌든 헤이그조약은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커다란 돌파구다. 이 조약은 양자로 나서는 아이들에게 최대의 이익을 확보할 것을 기준으로 양자결연을 규제해 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국내의 고아원보다도 국제적 양자결연 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아이들을 송출하는 나라에 양자결연의 적절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국제적 양자결연 수속의 간소화를 시도했다. 당연히 헤이그 조약의 확장과 효과적인 실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자를 받아드리는 미국은 헤이그조약의 강화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워싱턴은 캄보디아, 하이티, 카자흐스탄, 한국,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 조약에 조인하지 않고 있는 주된 양자 송출국에 외교적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 EU도 이 점에서는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국제적 양자결연에 관여하고 있는 나라는, EU에의 가맹 또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열망하고 있으며 브뤼셀이 권고하면 받아드릴 가능성도 있다. 국제적 양자결연에 관계하고 있는 나라들과 경제교섭을 할 경우 EU는 상대국들에게 양자결연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헤이그조약에 의한 레짐으로 상당히 상황을 진전시킬지 모른다. 그러나 조약만으로는 국제적 양자결연의 확대에 수반하여 점점 증대해 갈 양자결연 수속 과정에서의 위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헤이그조약의 한계는 국내에서의 양자결연 네트워크의 규제를 각국 정부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점이다.

예컨대 부패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는 지역에서는 ‘출신국 관리’ 라고 하는 입장은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월급이 적은 공무원들이 주차위반 티켓을 없애는 것으로 돈을 챙기거나, 또 외국에서 직접투자를 들어올 때 부정한 보수를 받거나 하는 지역에서는 정부의 공무원들이 아이들의 인신매매에서 이익을 만들어 내려고 하더라도 이상스럽지 않다.

양자송출국가운데서도 ‘깨끗한’ 나라에서도, 고아 학대를 단속하거나, 고아원을 개선, 교육과 의료를 지원할 자금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고아가 처해 있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더라도, 그에 필요한 자금이 없는 나라를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제적 양자결연을 옹호하는 지도적인 인사들도 ‘보다 심각한 문제를 포용하고 있는 나라가 가까운 장래에 헤이그조약을 비준할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양자결연과 고아의 복지문제에 특화된 대외원조가 행해 지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기존의 양자결연 수속을 간소화하여 선의를 가지고 활성화시킨다고 한다면, 보다 실속 없는 정책이라도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2002년, 미국정부는 아이들을 받아드리는 측에 있어서 시간적으로도, 비용 면에서도 커다란 부담이 될 양자결연 수속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양자에 대한 아이들의 고아로서의 인정을 상대국에 요구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에 근거, 미국 입국관리국은 폴란드, 시에라레온, 하이티, 혼드라스, 필리핀에서 고아들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양자결연이 가능한가, 미국에의 이주가 가능한가를 심사하게 되었다. 이것은 건강상의 문제, 혹은 양자결연 도중에서 인신매매 그 밖의 위법행위에 얽혀있기 때문에 이미 받아드려도 좋았을 아이들이 양자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수속의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여, 국제적 양자결연을 촉진할 것이 증명되면 의회에서 적절한 예산을 얻어 다른 양자송출 국에도 이 프로그램을 확대적용 해 가야 할 것이다.

미국과 유럽 제국의 정부,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관, 그리고 비정부조직(NGO)이 원조대상이 될 수 있는 조직에 대해서 질 높은 정보를 제공, 그 조직이 위법행위에 관여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보증을 한다면, 그러한 걱정도 불식될 것이다. 또 각 국 정부는 양부모에 우대세제조치를 인정 그 관용한 활동을 도와야 할 것이다. 국제적 양자 결연을 시장경제에 맡겨도 부정이나 학대가 없어질 수는 없다. 오히려 일부 여성은 아이들을 팔 것을 목적으로 임신하려 할지도 모른다. 헤이그조약에 의해 설정된 전향적인 다국간 전략을 외교압력과 타당한 정책 그리고 적절한 자금을 가지고 지탱해 갈 필요가 있다.

국제적 양자결연을 위한 다국간 레짐이 구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늘날의 외교정책상의 커다란 문제로서 취급되는 일은 없다. 국제적 양자결연의 행방에 의해 국가안전보장이나 경제적 번영이 위협받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적 양자결연은 세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조속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국제적 양자결연 레짐이 확립되면, 함께 가족이 되고 싶다고 바라는 수많은 아이들도 양부모를 만나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와 같은 시대에서 그것은 국제사회에 있어 커다란 낭보일 수 있다.

(Foreign Affairs, 2004/5-6월 호)

정리 : 송중호
(2004년 . 2월 ~
2004년 . 7월)

2월 4일

中 교과서도 “고구려사는 한국사”

중국의 초·중등 교과서와 대외 공식 문서에서는 아직 고구려사를 자국 역사 범주가 아닌 고대 한반도의 정권, 나아가 세계사의 일부로 파악하고 있음이 밝혀짐. 중국 현지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만들어져 2003년에 두 번째로 인쇄한 인민교육출판사 간행 중국 중등학교 역사 교과서에는 수(隋)와 당(唐)왕조 연간에 한반도와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각주 부분에 “당시 한반도에는 고구려와 백제, 신라 등 3개국이 있었다”고 설명.

2월 5일

英 불법체류 中노동자 19명 익사

영국의 중서부 한 개펄에서 조개잡이를 하다 익사한 중국인 불법노동자들이 ‘노예’ 수준의 처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국이 외국인노동자 문제로 들끓고 있음. 지난 5일 밤 영국 중서부 랭커셔주 모어컴 만에서 중국인 불법노동자 19명이 조개를 줍다 빠르게 밀려드는 바닷물에 휩쓸려 익사한 사건이 발단.

2월 18일

이라크 폴란드軍기지 차량폭탄 연쇄 피습

18일 오전 이라크 바그다드 남쪽 힐라에 위치한 폴란드군 기지에 연쇄 차량폭탄 공격이 가해져 적어도 11명의 이라크 민간인이 사망하고 연합군 병사를 포함해 102명이 다치는 피해가 발생. 힐러리 화이트 연합군 대변인은 힐라 소재 캠프 찰리에서 2건의 차량폭탄공격이 잇따라 발생했다면서 이번 공격으로 헝가리와 폴란드, 미군 병사 58명과 이라크인 44명이 부상했다고 밝힘.

2월 21일

우간다 난민촌 200명 피살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21일 무장 반군세력인 “신의 저항군(LRA)” 소속 게릴라들이 북부 리라 지역의 난민촌을 습격, 최대 200여 명을 학살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 LRA는 소총과 유탄발사기 등을 난사해 주민을 학살했으며, 집안으로 몸을 숨긴 난민들은 불을 질러 태워 죽였다고 목격자들은 전함.

2월 23일

英 “유럽통합돼도 이민자는 안 돼”

오는 5월 구 동구권 및 지중해 국가 10개국이 새로 유럽연합(EU)에 가입하면 이민자들이 폭증할 것에 대비한 포석으로 영국 정부는 23일 EU 확대를 계기로 동구권 8개국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량 유입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근로자 등록제”를 실시키로. 이는 일자리를 얻지 못한 근로자들은 최소 2년간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세금을 내지 못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영국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강경한 조치.

3월 4일

日…독도우표 1월에 이미 발행

일본우정공사가 민간인의 신청을 받아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竹島) 사진을 넣은 우표를 지난 1월부터 3차례에 걸쳐 이미 발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파장.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우정공사는 지난 1월 23일과 29일, 2월 19일 등 3차례에 걸쳐 도쿄(東京)의 한 우표, 동전수집업자가 신청한 독도사진이 들어간 우표를 발행. 독도우표가 처음 발행된 1월23일은 한국 우정사업본부가 독도우표를 발행(1월16일)한 지 1주일만에 발행한 것.

3월 7일

이스라엘軍 팔 난민촌 급습 95명 사상

이스라엘군이 탱크와 헬기를 동원,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 캠프 2곳을 공격해 소년 3명을 비롯한 팔레스타인인 14명이 숨지고 81명이 부상. 이날 공격은 2002년 10월 이스라엘군이 칸 유니스 난민 캠프를 공격, 19명을 사살한 이후 최악의 참사.

3월 10일

美대사관된 이라크 ‘대통령궁’

미국 국무부는 현재 연합군 임시행정처(CPA) 본부로 쓰고 있는 바그다드 대통령궁을 이라크 주권 이양 이후에 자국 대사관 건물로 활용기로 결정했다고 아랍어 일간지 아자만이 10일 보도. 이 신문은 “미국은 표면적으로 치안 문제를 내세워 대통령궁을 대사관 후보지로 확정했다”면서 “앞으로 대사관 상주 직원이 4000명에 달해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설명.

3월 20일

이라크戰 1년 “美, 이제 점령 끝내라”

이라크전 1주년(20일)을 맞아 미국 정부에 이라크 점령을 끝낼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19일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전쟁저지와 인종차별주의 종식을 위해 이제 행동하자(Act Now to Stop War and End Racism)’는 뜻의 반전연맹 “ANSWER”의 더스틴 랭글리 대변인은 “동부 뉴욕에서 서부 샌프란시스코, 알래스카의 앵커리지에서 플로리다의 피터스버그에 이르기까지 미국 전역 200개 도시에서 반전운동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함.



3월 22일

하마스 지도자 야신 이스라엘 軍에 피살

팔레스타인 최대 저항운동단체 하마스의 창설자이며 정신적 지도자인 셰이크 아흐마드 야신(67)이 22일 새벽(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했다고 하마스측이 발표. 하마스는 이날 야신을 부축하던 경호원 2명과 인근을 지나던 행인 등 5명이 함께 숨지고 그의 두 아들 등 17명이 부상했다고. 야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유혈충돌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표적공격으로 살해된 최고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지도자.

3월 29일

日, 외국인 노동시장 빚장푸나

4월부터 본격화할 일본과 타이·필리핀 등 아시아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 협상에서 최대 쟁점은 노동시장 개방 문제. 필리핀과 타이의 요구사항은 일본 제품에 대해 시장을 활짝 열테니 자국에서 자격을 탄 간호사, 노인복지사, 보육사, 맞사지사 등의 취업을 허용하라는 것.

4월 1일

이주노동자 사망 타파 강제출국 당해

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보호소에 감금돼 있던 사망 타파(32·네팔)가 1일 새벽 2시 김포공항으로 이송,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출국 됨. 사망은 지난해 말부터 명동성당에서 여러 이주노동자들과 더불어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 강제추방 반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위해 농성단 대표로 농성을 이끌다가 연행되어 지금까지 여수출입국관리소에 구금(이로써, 사망타파는 이주노동자 노동운동지도부로서 첫번째 강제출국 됨).

4월 4일

연합군, 이라크 시아파 시위대에 발포...220여명 사상

이라크 시아파의 성도(聖都)인 나자프에서 연합군이 4일 스페인 주둔군 부대로 접근하던 시아파 시위대 수천 명을 향해 발포해 최소 24명이 숨지고 200여명이 부상. 시아파는 이라크 국민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이번 발포사건이 어떻게 비화될지 주목. 나자프 지역 보건담당책임자인 하산 알 둘라미 박사는 “경찰관 2명을 포함해 최소한 민간인 20명이 사망했고 부상자 200여명이 시내 6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함.

4월 16일

EU확대 최대 불안요소는 역내 노동이동

5월1일 15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되는 유럽연합(EU)이 기존 회원국과 새 가입국 사이에 노동시장 개방을 둘러싼 마찰 조짐. 특히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실업률이 높거나 지리적으로 중·동 유럽과 가까운 나라 일수록 새 회원국 노동자들의 유입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현재 중·동 유럽 노동자의 임금은 서유럽 노동자의 4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

4월 18일

스페인 “이라크서 15일내 철군”...美 큰 타격 예상

이라크에 1300여명의 병력을 파견한 스페인 정부가 18일 “15일 이내에 이라크 주둔 병력을 철수 하겠다”고 밝혀 미국의 이라크정책에 큰 타격. 스페인의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 신임 총리는 이날 TV방송에 출연해 “호세 보노 국방장관에게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스페인군을 철수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함.

4월 21일

후세인 전범재판소 이라크에 구성

미군에 의해 구금중인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전 바트당 간부들의 재판을 위한 전범재판소가 구성. INC는 이라크과도통치위원회(IGC)가 이날 살람 찰라비 변호사를 전범재판소의 총책임자로 임명하고 판사 7명, 검사 4명을 함께 전범재판소에 배정. 살렘은 미국에서 교육을 받은 변호사로 친미성향인 아흐메드 찰라비 INC 의장의 조카.

이라크 억류후 풀려난 한재광 씨 “한국군 파병됐다면 난 죽었을지도…”

“만약 나시리아에 한국군이 파병돼 있었다면 제 목숨도 보장받지 못했을 겁니다” 이라크 파병 논란이 국내 외에서 재 점화한 가운데 4일 이라크 나시리아에서 시아파 민병대에 억류됐다 풀려나 한국에 돌아온 ‘지구촌 나눔 운동’의 한재광 사업부장(33)은 불안한 현지 상황을 전함.

5월 5일

美軍, 이라크 여성포로 성학대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 아부 그레이브 교도소에서 일어난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사건은 성적 학대를 포함한 가혹행위가 이뤄졌다고 LA 타임스가 3일 보도. LA 타임스가 입수해 공개한 53쪽 분량의 비밀보고서에 따르면, 미군들은 이라크인 포로들에게 성행위를 하는 듯한 자세를 강요하고, 여성 포로들까지도 알몸 상태로 비디오촬영과 사진 촬영.

5월 7일

“日 독도상륙 시도, 한반도에 선전포고 한 것”〈北 웹사이트〉

북한은 7일 일본 극우단체인 ‘니혼시도카이(日本土道會) 회원 4명의 독도 상륙 시도와 관련, 이는 “우리 민족에 대한 선전포고나 같은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주장.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총리의 연초 독도 영유권 주장 망언과 독도우표 발행에 이어 극우단체가 독도 상륙 시도를 주장한 것에 비난.

5월 9일

외국인 보호소 23명 집단탈주

강제출국 대기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일시적으로 수용하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외국인들이 집단으로 탈주하는 사건이 발생. 9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외국인보호소에서 강제출국 대기 중이던 불법체류 외국인 23명이 담을 넘어 도주.

5월 10일

체첸 카디로프 대통령 암살

지난 9일 러시아연방 내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에서 발생한 카디로프(52) 체첸공화국 대통령 암살사건은 지난 2월 카타르에서 러시아 정보기관이 안다르비예프 전 체첸반군 대령을 살해한 데 대한 보복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더 타임스가 10일 보도. 이 신문은 테러 수법이 알 카에다 수법의 전형이라고 지적하며, 체첸 반군과 알 카에다 조직과의 연계 가능성도 제기.

미군 이라크전역서 고문자행

미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행위가 이라크 전역에서 자행됐으며 수법도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잔혹했던 것으로 드러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10일 이라크 내 군 수용소에서 저질러진 각종 학대 행위를 적나라하게 묘사한 보고서를 발간. ICRC가 밝힌 대표적인 학대 유형은 칠흑같이 캄캄하고 텅 빈 방에 포로를 완전히 발가벗긴 채 수일씩 홀로 집어넣는 행위.

5월 11일

미국인 55% “이라크 철수”- 인디펜던트지 여론조사

미국의 최대 동맹국인 영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오는 6월 30일 이라크 주권 이양 전까지 자국군 8천여 명 전원을 이라크에서 철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인디펜던트지는 지난달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가 영국군의 이라크 철수에 찬성했다고 10일 보도.

5월13일

동남아 노동자와 결혼 ‘코시안’ 1만명

최근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코시안(Kosian)이 폭발적인 증가추세. 1990년대 후반부터는 취업을 위해 입국한 동남아시아의 노동자들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과 국제 결혼한 건수는 2만5천6백58건. 2002년(1만5천9백13건)에 비해 61.2%나 급증한 수치.

5월 19일

유엔 안보리 이스라엘軍 비난 결의안

이스라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난 결의안 채택에도 불구하고 팔레스타인 난민촌 안에서 무차별한 군사작전을 지속. 유엔안보리는 19일 이례적으로 기권한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14개국의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 앞서 이스라엘군이 이날 가자지구 남부에서 2,000명 규모의 팔레스타인 평화 시위대를 향해 미사일 등을 발포.

5월 20일

이스라엘, 시위 군중에 미사일 쏘…팔레스타인인 10명 사망

이스라엘군 헬기가 19일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인 가자지구 내 라파 난민캠프에서 시위를 벌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 미사일 공격을 가해 최소한 10명이 숨지고 약 50명이 부상. 이스라엘군은 라파 난민캠프 내 가옥 파괴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던 1000명 가까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한 것.

5월 27일

일본 언론인 2명 이라크서 피격사망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교외에서 27일 오후 일본인 저널리스트 2명이 탄 차량이 무장괴한의 총격을 받아 두명 모두 사망.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하시다 신스케(61)와 그의 조카 오카와 고타로(33) 등 일본인 저널리스트 2명과 통역, 운전사 등 4명이 탄 차량이 바그다드 남쪽에서 30km 떨어진 마함디아 인근 도로에서 괴한의 총격을 받은 뒤 폭발해 화염에 휩싸였다고.

이라크인 69% “美에 협력맨 보복 당할것”

이라크인 10명 중 7명은 “미군정에 대한 협력이 보복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 미군에 협력하는 것이 이라크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이라크인도지난 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조사. 갤럽이 이라크인 34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중 69%는 미군 주도 연합군 임시행정처(CPA)에 협력하는 것으로 발견될 경우 본인 또는 가까운 친척들이 위협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

5월 28일

재중 한인 오늘 두번째 사형집행

내연 관계에 있던 조선족 자매를 살해한 죄로 한국인 남성이 중국 산둥성 칭다오의 교도소에서 사형이 집행. 한국 정부는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후 외교통로를 통해 다각도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죄질이 중한데다 중국 당국의 사형집행 의지가 확고했다고 주중 대사관 관계자는 전함.

6월 4일

미 관리, 탈북자 처리 중국 비난

북한 난민 처리에 대해 미국이 여러 차례 중국에 문제 제기를 했으나 만족스런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랜들 슈라이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중국의 태도를 비난. 미 하원 청문회에서 슈라이버 부차관보는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과 국제구호단체들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중국 정부가 허용해야 하며 난민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잔인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

2004년 6월 5일

美 '북핵 3단계방안' 수용

미국이 북핵 해결방안과 관련, 한국이 제안한 '3단계 해법'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짐. 한국이 지난 2월 북핵 2차회담에서 제의했던 이 방안은 북한의 '선 핵폐기'를 고수해온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핵폐기 의사표명 및 동결-검증-완전폐기와, 안전보장 논의-에너지 지원-항구적인 안전보장 등을 순차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골자. 미국은 "한국이 지난 2월 제기한 3단계 해결방안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설명.

6월 9일

美, 이라크포로학대 정당화 보고서 파장

미 국방부가 지난해 이라크 침공을 앞두고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법률적으로 고문행위를 정당화하는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밝혀짐. 여기에는 고문을 한 혐의로 기소될 경우, 2차 대전 직후 나치 전범들이 주장한 것처럼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진술하라는 등의 '조언'까지 담겨 있어 충격.

6월 12일

이라크전 참전 여파... 英 노동당 지방선거 참패

10일 영국에서 실시된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선거에서 이라크전쟁 비판여론에 몰린 집권 노동당의 참패. AP통신에 따르면 166개 주의회 가운데 105개 주의회의 개표 마감 결과 토니 블레어 총리의 노동당은 271개 의석을 잃은 반면 야당인 보수당은 135석, 자유민주당은 94석을 더 얻어낸 것으로 집계. 선거 결과가 예측대로 간다면 사상 처음 집권당이 제3당으로 추락. 존 프레스콧 부총리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전쟁이 이번 선거에 먹구름을 드리웠다"고 밝혀 이라크전 참전이 집권당 추락의 직접 원인이 됐음을 시사.



6월 23일

피랍 김선일씨 끝내 피살... 시신 발견

이라크 무장 단체에 납치됐던 김선일씨가 결국 살해. 김선일씨의 시신이 처음 발견된 것은 우리 시간으로 어젯(22일)밤 10시 20분쯤, 바그다드에서 팔루자 방향으로 35km가량 떨어진 지역. 미군이 발견했을 당시 김씨 시신에는 폭발물인 부비트랩이 설치돼 있었고 차

량에서 내던져진 것처럼 보였다고 CNN 방송이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 아랍계 위성방송 알 자지라가 공개한 살해 직전 비디오테이프에는 김씨가 복면을 한 무장세력 앞에서 오렌지 색 옷을 입고 눈을 가린 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모습이 담김.

6월 27일

인도-파키스탄 외교관계 완전 복원

인도와 파키스탄은 각각 뭄바이와 카라치에 영사관을 다시 개설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도 완전히 복원한다는데 합의. 양국은 27-28일 이틀간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고위 당국자 협상을 갖고 외교관계 복원과 어부 등 억류중인 상대국민간인 조기 석방, 미사 일 발사실험 사전 통지 등에 합의.



인도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6월 28일

대통령은 수니파, 총리는 시아파로 '권력분점'

28일 전격적으로 주권을 이양 받은 이라크 임시정부의 최고 실력자들은 친미(親美) 성향. 임시정부 대통령과 총리는 이슬람 양대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가 나눠 차지. 임시정부를 이끄는 최고 권력은 시아파인 이야드 알라위(59) 총리가 행사. 이라크 임시정부는 이원집정제 형태로,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그치고 총리가 실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

6월 30일

소말리아 억류 한국인 귀환 서둘러야

(주모즈코사 소속 새우잡이 트롤어선 '베라3호'가 지난해 7월28일부터 소말리아 키스마이요항에 억류돼 있으며, 이 배의 선원에는 선장 오봉기(53)씨 등 한국인 3명이 포함돼 있음.이 배는 억류 17일전 기상악화로 키스마이요항에 피항해 있던 중 현지 선박 대리점 측에 부두이용료 등 각종 비용 10만 달러(1억2천여만원)를 지급치 못해 억류.

7월 1일

"우리가 속국이나"... 시라크 대통령 미·영에 독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최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를 향해 작심한 듯 독설을 쏟아내면서 프랑스와 미국·영국의 관계가 당분간 회복되기 어려울 지경으로 급냉. 영국 <인디펜던트>는 1일 유럽연합 주요 문제를 둘러싸고 역내 3대국인 "영-프-독간 협의·공조의 틀이 완전히 깨졌다"면서 영국 정부 고위인사의 말을 따 "(무리에서 떨어져 헤매는) 광포한 코끼리 때문"이라고 보도.

7월 7일

콩고민주공, '피그미족 말살' 의심

한 국제인권단체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콩고민주공화국의 피그미족 말살정책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고 BBC 인터넷 판이 7일 보도. 국제소수자인권그룹이라는 이 단체는 콩고민주공화국에서 피그미족에 대한 대량학살과 식인, 강간의 증거들을 수집했으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



7월 10일

한국선박 공격... 해운업계 비상

아랍의 한 인터넷사이트에 우리 선박에 테러를 하겠다는 위협계재. 정부는 특별대책반을 가동하며 안전을 당부하고 나섰지만 해운업계는 이번 파장으로 화주들이 우리 선박을 기피하지 않을까 우려. 중동을 오가는 우리선박은 모두 49척. LNG, LPG 운반선이나 유조선의 사고는 대형폭발로 이어질 뿐 아니라 주변 환경을 오염 시킬 수 있어 해운업계에는 비상상태.

7월 12일

필리핀 “가능한 빨리 이라크서 철군”

필리핀 정부가 필리핀 인질의 보호를 위해 철군날짜를 앞당길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힘. 라파엘 수지 필리핀 외무부 장관은 12일 알자지라 방송을 통해 가능한 한 빨리 철군하겠다고 성명서를 발표. 그는 이 방송을 통해 “성명서를 보고 납치자들의 마음이 바뀌길 희망 한다”며 “이슬람이 평화와 자비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해, 필리핀 인질을 보호하기 위해 철군 입장을 밝힌 것.

7월 15일

이라크 저항세력 공세 최고조

미군정으로부터 주권을 넘겨받은 이라크 과도정부의 연착륙을 방해하려는 저항세력의 공격이 계속돼. 정정불안을 목적으로 한 요인 암살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제테러리스트 아부 무사브 알 자르카위는 이야드 알라위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거듭 협박. 15일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州) 하디타의 경찰서 인근에서 차량 폭발로 적어도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침. 이날 또 중부도시 카르발라에서는 이라크 경찰에 쫓기던 폭탄테러 용의자 3명이 자폭해 사망.



7월 20일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됐던 필리핀인 풀려나

이라크에서 납치됐다 2주 만에 풀려난 필리핀인 트럭 운전자 안젤로 드 라 크루즈(왼쪽)가 20일(현지시간) 바그다드 주재 필리핀 대사관에 인도. 필리핀 정부가 납치범들의 요구에 따라 19일 이라크에서 조기 철군을 완료하자 무장단체는 20일 필리핀인 인질을 석방한 것. 이와 관련 이라크 수니파 지역 민족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셰이크 자말 알 둘라이미는 자신이 무장단체에게 인도주의적 처사를 간청한 것이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

7월 23일

중외교부 흠피 ‘임나일본부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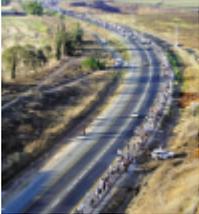
중국 외교부가 최근 홈페이지(www.fmprc.gov.cn) 일본 국가개황에서 일본이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説)을 그대로 소개해 외교적 파장이 예상. 중국 외교부는 일본사를 설명하면서 “야마토(大和) 민족이 일본을 통일해 노예제국가인 “야마토국”을 건설, 일본을 300여 년간 통치. 5세기 초에 야마토국은 세력이 융성해져 조선반도 남부까지 미쳤다”라고 왜곡·기술.

이라크에서 이집트 외교관 피납

23일 이라크에서 이집트 외교관이 납치. 무장단체가 외교관을 납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 검은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인질을 위협하고 있는 무장 세력. 그 앞에 이집트 외교관이 무릎을 꿇은 채 앉아 있고, 이 납치 단체는 이집트가 이라크에 치안 유지 전문 인력을 파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알 자지라 방송이 보도.



7월 25일

88km 이은 ‘인간띠’ 이스라엘 10만여 명 ‘가자 철수’ 반대시위

아리엘 샤론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지구 철수계획에 반대하는 정착촌 주민 등 10여만 명이 25일 가자지구에서 예루살렘까지 인간 띠잇기 운동을 벌임. 전국에서 모여든 정착촌 지지자들과 일방적 점령지 철수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동참한 이날 인간 띠잇기는 가자지구 북부 정착촌 니사니트에서 동예루살렘 ‘통곡의 벽’까지 88km 구간의 도로를 따라 거의 빈자리 없이 이어짐. 샤론 총리는 내년 말까지 가자지구 21개 정착촌과 요르단 강 서안 4개 정착촌에서 군대와 정착민을 철수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반대하는 극우계 민족종교당 소속 각료들은 지난달 연정(聯政)을 탈퇴.

“北 과녁은 南 아닌 미침략군”〈북한 노동신문〉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선군(先軍)의 총대는 남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미제 침략군’을 과녁으로 삼고 있다고 북한 노동신문이 25일 밝힘. 북측이 남측의 주적론에 해당하는 ‘과녁론’을 거론하면서 과녁의 대상이 남측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것은 이례적. 이날 노동신문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담보해 주는 애국애족의 선군정치”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우리 당이 틀어 쥐 선군의 총대는 남조선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고 온갖 불행을 강요하는 민족 공동의 철천지원수 미제 침략군을 과녁으로 한 민족수호의 총대, 정의의 총대”라고 강조.

7월 26일

지방분권 반대” 마케도니아 시위

26일(현지시간)마케도니아의 시위자들이 수도 스코페의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반정부 구호를 외침. 야당연합은 현재 의회에서 검토 중인, 알바니아 민족에게 더 많은 힘을 실어주게 될 지방분권 법안 반대에 나서 2만 명에 이르는 큰 시위집단을 조직.

탈북자 대부분 여성, 함경도 출신

동남아에서 집단 입국했거나 할 460여명 탈북자들의 면면은 최근 탈북자들의 추세와 탈북 후 한국 입국까지의 어려움을 고스란히 노출. 먼저 이들 가운데 여성이 70%, 남성이 30%로 여성비율이 상당히 높고 어린 이들도 전체의 20% 수준. 이는 가족단위 탈북이라는 최근 추세를 반영. 직업은 대부분 농업이고, 여기에 탄광 노동자와 평양예술대 학생 등도 포함.

7월 28일

北 TV에 南 신문 만평 등장

북한 텔레비전 방송에 주한미군 흥기 난동 사건을 주제로 이라크 추가 파병 조치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담은 남측 신문 만평이 해설 자료로 사용돼 눈길. 조선중앙TV는 28일 밤 한국의 이라크 추가 파병에 대한 시사 해설을 방영하면서 지난 5월 17일자 경향신문 만평을 등장시켜 “남조선 당국이 진정 제 민족을 위하고 또 평

화를 원한다면 추가 파병을 철회하고 미군 강점으로 인한 남조선의 혼란상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

이라크 북부서 차량폭탄 테러… 30여명 사망



이라크 북부 바쿠바시에서 차량을 이용한 폭탄 테러가 발생해 30여명이 사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 블룸버그가 인용한 알아라비아 방송에 따르면 폭탄을 실은 차량이 바쿠바시의 한 경찰서 인근에서 폭발했으며, 이 사고로 30명 가량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 바쿠바시는 바그다드에서 북동쪽으로 48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수니파로 구성되어 있음. 수니파는 소수 민족으로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집권 기반.

7월 30일



이슬람 군대 이라크派兵 조율

이슬람 국가들의 이라크 파병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30일 이라크 바그다드를 전격 방문. 저항세력들은 파병 예상국에 대한 보복공격을 다짐. 저항세력의 근거지인 팔루자에서는 미군과 저항세력 간의 교전으로 이라크인 13명이 사망. 스페인·필리핀군 등이 이라크에서 철수한 데다 현재 이라크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병력이 절실하기 때문.

7월 31일

러 역내 민족 분리움직임에 골치

그루지야와 몰도바 내 친러 자치공화국들이 잇따라 분리 움직임을 가속화하면서 러시아가 중재노력을 한층 강화. 러시아내 체첸 공화국의 독립 열기로 전쟁까지 치르는 흥역을 겪었던 러시아가 다른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내 민족문제에도 중재에 나서는 등 골치를 앓고 있는 것.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30일 그루지야-남오세티야 군대 간에 다시 총격전이 발생해 8명이 부상하는 사태가 발생. 러시아는 양국 간 지체 없는 협상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친미 성향을 보이고 있는 그루지야 중앙정부에 보다 비판적인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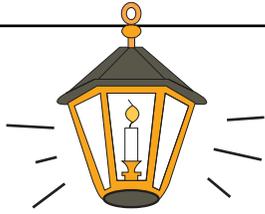
독도, 대마도 조선에 귀속을… 中 문서 ‘패전 일본’에 요구

중국은 2차 대전에 패전한 뒤 연합군 점령 하에 있는 일본에 대해 독도는 물론 쓰시마(對馬島)의 조선 귀속을 요구한 바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베이징발로 보도. 신문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950년 5월15일자(연합군의) 대일 평화조약과 관련한 영토 부문의 문제와 주장에 대한 요강초안이라는 문서에서 일본의 주변 섬들이 군사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 이같이 밝힘.

明.淸시대 “중-한 주종관계”〈중잡지〉



중국이 다시 고구려사 왜곡 논쟁에 다시 불 지피며, 한국 국민들 분노. 그런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의 주간잡지 삼련생활주간(三聯生活周刊)이 “명.淸(明.淸)시대에 중-한은 주종관계였다”며 다시금 논쟁에 불을 지핀. 중국의 인터넷 포털 ‘썬우후’(搜狐)가 31일 인용해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제목은 “중-한 정부, 고구려사 논쟁 학술차원서 해결기로 합의”라고 달았지만 본문에서는 한국 학자들의 생각을 억지라고 폄하하고 역사적으로 중-한이 주종관계였음을 부각 하는 데 지면 대부분을 할애했.



민족연구 · 시대의 논리 정기구독 안내

<교양사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고품격 국제정보지 『민족연구』와 민족문제 전문지 『시대의 논리』의 정기구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민족연구」· 「시대의 논리」는 모두 정기구독제입니다.
- 정기구독자들에게 한해 직접 개별 주소로 우송되며 서점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과월 호는 재고가 있을 때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절차

1. 아래 <정기구독 신청서>에서 정기구독 희망 잡지를 <구독희망>란에 표시(○)
2. 해당하는 구독료를 <우체국 012187-01-002824> (예금주: 교양사회)로 입금.
3. 아래의 <정기구독신청서>를 <교양사회>로 우송하거나 E-mail로 보내 주십시오.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연 락 처

<저널 편집실>

-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우편번호:142-881)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T E L : 010-4716-3616 / F A X : 02-907-3617

교양사회

<절취선>

정기구독 신청서

교양사회

구분	저널명	간별	구독 권수	금 액	구독희망	기타
잡 지	민족연구	반년간 (연2회)	4권(2년분)	₩ 40,000		
			8권(4년분)	₩ 70,000		
	시대의논리	계 간	4권(1년분)	₩ 40,000		
			8권(2년분)	₩ 70,000		
구 독 자	구독자명(기관)				E-mail	
	주 소	우편번호			전화	

한국민족연구원

한국민족연구원은 새로운 시대환경의 도래와 더불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종과 민족 그리고 민족주의의 문제 등에 대한 학문적이며 실제적인 연구 조사 활동을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연구원은 민족문제에 관한 전문 연구지인 『민족연구』를 연간 2회 발행·보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http://www.cncho.pe.kr/krce>)를 통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인적구성

원 장 : 趙政男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연구위원 : 葛振家 (중국 북경대 교수), 金炳鎬 (중국 중앙민족대학 교수) 金秀雄 (한일문화교류기금 이사), 明 드미트리(알마티 국립대 교수) 保坂祐二 (세종대학교 교수), 洪敏植 (강원대학교 교수), 우평균, 김인성
 연구원 : 조화성, 김용찬, 고병국, 김태영, 강권찬, 박지원, 유정석, 안 석, 이태욱, 송종호

연락처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 010-4716-3616
 Fax : 925-3906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

원고모집

한국민족연구원이 연 2회 발간하는 『민족연구』는 세계의 민족과 민족주의를 중심적인 연구과제로 하고 있으며 현대 제반 민족문제의 근원적 실체와 이의 발전적 해결을 도모하는 성격을 가진 연구지입니다. 이 연구지는 민족주의 이론, 각 지역과 개별국가의 민족 문제와 민족정책, 소수민족 현황 등과 관련된 원고를 편집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은 학계와 연구기관 연구자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보내실 글은 논문과 르포 등 다양한 형식을 가져도 무방합니다. 보내실 원고는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보내신 원고는 반환하지 않으며 『민족연구』 심사진의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원의 편집 방향 및 기준에 따라 게재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원고는 '한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옆의 E-mail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보내실 곳

한국민족연구원 Korea Research Center of Ethnology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282-10
 전화번호 : 010-4716-3616
 Fax : 02-925-3906
 E-Mail : goodsociety123@hanmail.net

원고집필 요령

1. 원고의 분량은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80-120매(A4용지 15-20매)정도로 하고, 르포 형식의 글은 200자 원고지 150-200매(A4용지 30-40매)정도로 합니다.
2. 한자와 외국어의 표기가 필요할 경우 첫 번째의 경우에 한해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하도록 합니다.
3. 논문의 경우 각주는 아래의 작성 양식에 따릅니다.
 - (1) 저서의 경우
 조정남, 『러시아민족주의의 연구』(서울:고려대학교 출판부, 1996), 292쪽.
 - (2) 논문의 경우
 조정남, "중국의 화교정책 분석", 『민족연구』 제5호(2000), 150-151쪽.

<h1 style="margin: 0;">민족연구</h1> <h2 style="margin: 0;">13</h2> <p style="margin-top: 20px;">ISSN 1229-2796</p>	<p>편집인 : 조정남 주 소 : 서울시 강북구 수유 4동 282-10 (☎ 010-4716-3616)</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발행인 : 최철호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295 영동빌딩 507호 (☎ 02-727-0936)</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발행일 : 2004년 9월 1일(연 2회 간) 발행처 : 교양사회(☎ 02-727-0936) ◆ Homepage : http://www.goodsociety.co.kr</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 style="text-align: right;">값 10,000원</p>	<h3 style="margin: 0;">편집위원</h3> <p style="margin-top: 10px;">김경숙 金炳鎬 김인성 김용찬 이기완 조정남 호사카 유지</p>
---	--	--